

정책보고서 2021-68

발 간 등 록 번 호
2-1071800-000004-01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20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장인수

정찬우·이소영·이도훈·김세진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on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연구진

연구책임자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정찬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도훈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제출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20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제1장 서론	1
제1절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성과평가 방법	5
제3절 성과평가 결과 활용	10
제2장 실적 평가(기초평가)	11
제1절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분야 실적 평가	13
제2절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분야 실적 평가	87
제3절 인구변화 적극 대비 분야 실적 평가	135
제4절 실적 평가 결과 종합	145
제3장 핵심성과지표 평가	169
제1절 개요	171
제2절 핵심성과지표 정성평가	172
제3절 핵심성과지표 개선 방향	199
제4장 예산 분류 체계 개선 방향	203
제1절 서론	205
제2절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예산 현황	206
제3절 저출산 정책 예산 분류	210
제4절 소결: 예산 분류 체계 개선 방향	216
제5장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향후 평가 개선 방향	221
참고문헌	243
부 록	247

표 목차

〈표 1-1〉 2020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대상	5
〈표 1-2〉 2020년 중앙부처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과제 및 예산 현황	6
〈표 1-3〉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성과 지표 현황	7
〈표 2-1〉 1세 미만 아동 의료비 제로화 추진실적	14
〈표 2-2〉 임신·출산 의료비 경감 추진실적	15
〈표 2-3〉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확대 추진실적	16
〈표 2-4〉 난임 지원 확대 추진실적	17
〈표 2-5〉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 추진실적	19
〈표 2-6〉 고위험 출산 진료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 및 의료 접근성 훼손 방지 방안 마련 추진실적	20
〈표 2-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추진실적	21
〈표 2-8〉 예방접종 지원 확대 추진실적	22
〈표 2-9〉 아동수당 지원 확대 추진실적	23
〈표 2-10〉 다자녀 기준 완화 추진실적	24
〈표 2-11〉 고용보험 미적용 취업 여성 대상 출산지원금 지급 추진실적	25
〈표 2-12〉 기간제 노동자 출산휴가급여 보장 추진실적	25
〈표 2-13〉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지원확대 검토 추진실적	26
〈표 2-14〉 출산 친화적 세제 개선 추진실적	27
〈표 2-15〉 임신·출산기 근로시간 단축 추진실적	28
〈표 2-16〉 육아·돌봄 근로시간 단축 추진실적	28
〈표 2-17〉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등 근로시간 유연화 기반 마련 추진실적	29
〈표 2-18〉 남성 육아휴직·출산휴가 사용 확산(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강화) 추진실적	31
〈표 2-22〉 남성 육아 참여 확대 조기 정착 추진실적	34
〈표 2-23〉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 강화 추진실적	36
〈표 2-24〉 다양한 근무형태 활성화 추진실적	37
〈표 2-25〉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공공부문 근무환경 조성 추진실적	38
〈표 2-26〉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초기 집중 지원 추진실적	39
〈표 2-27〉 육아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 최저보험료 부과 추진실적	39
〈표 2-28〉 보육의 공공성 강화(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추진실적	40
〈표 2-29〉 직장 어린이집 확대 추진실적	42
〈표 2-30〉 종일보육 내실화 추진실적	43
〈표 2-31〉 보육품질 향상 추진실적	44
〈표 2-32〉 수요자 맞춤형 보육지원 추진실적	45
〈표 2-33〉 보육시설 안전 및 건강한 환경 조성 추진실적	47
〈표 2-34〉 국·공립 유치원 확대 추진실적	48
〈표 2-35〉 유아 학습권 보호 추진실적	49
〈표 2-36〉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 추진실적	50



〈표 2-37〉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체계 안정적으로 정착 추진실적	53
〈표 2-38〉 아이돌봄서비스 확충 및 내실화 추진실적	54
〈표 2-39〉 돌봄서비스 이용자 편의 제고 추진실적	54
〈표 2-40〉 지역 사회 내 돌봄여건 확충 추진실적	58
〈표 2-41〉 지역단위 양육·돌봄서비스 종합플랫폼 구축 추진실적	60
〈표 2-42〉 국가 중심 아동보호체계 개편 추진실적	61
〈표 2-43〉 아동 안전 교육 강화 추진실적	63
〈표 2-44〉 가족 제도와 관련된 불합리한 법제 개선 추진실적	65
〈표 2-45〉 자립지원 강화 추진실적	67
〈표 2-46〉 임신·출산·아동 존중 추진실적	70
〈표 2-47〉 다양한 가족 포용 추진실적	73
〈표 2-48〉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추진실적	74
〈표 2-49〉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추진실적	75
〈표 2-50〉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신규) 추진실적	76
〈표 2-51〉 임금격차 개선 추진실적	77
〈표 2-52〉 채용 성차별 및 유리천장 해소 추진실적	78
〈표 2-53〉 고용평등 추진 체계 정비 추진실적	79
〈표 2-54〉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 지원프로그램 확대 등 추진실적	80
〈표 2-55〉 다양한 청년주택 공급 확대 등 추진실적	82
〈표 2-56〉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분양주택 공급 확대(임대) 등 추진실적	85
〈표 2-57〉 아이키우기 좋은 주거 인프라 조성 추진실적	86
〈표 2-58〉 교육부담 경감 및 교육기회 보장 강화 추진실적	86
〈표 2-59〉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 추진실적	87
〈표 2-60〉 기초연금 내실화 추진실적	88
〈표 2-61〉 1인 1국민연금 확립 추진실적	90
〈표 2-62〉 1인 1국민연금 확립 추진실적	91
〈표 2-63〉 퇴직·개인연금 확산·정착 / 활성화 추진실적	92
〈표 2-64〉 농지연금 확산 추진실적	93
〈표 2-65〉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기 추진실적	95
〈표 2-66〉 소 근로자 대상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제공과 재취업촉진 추진실적	98
〈표 2-67〉 퇴직자 일자리 기회 확대 추진실적	100
〈표 2-68〉 신중년 새출발 지원인프라 추진실적	102
〈표 2-69〉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 추진실적	104
〈표 2-70〉 고령세대의 여가 기회 확대 및 인프라 개선 추진실적	106
〈표 2-71〉 고령자 교육 기반 확충 추진실적	107
〈표 2-72〉 건강보험 강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보장 추진실적	110
〈표 2-73〉 건강노화를 위한 예방적 관리 강화 추진실적	115
〈표 2-74〉 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 사업 추진실적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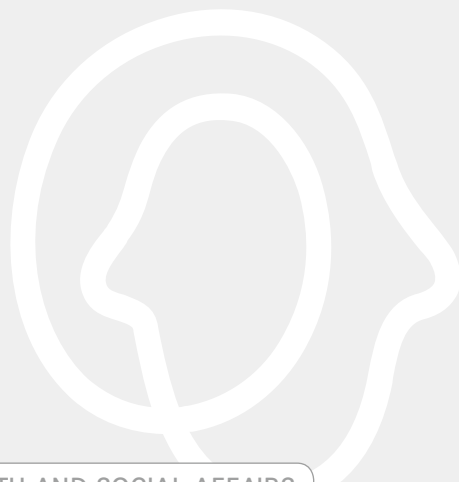
〈표 2-75〉 돌봄의 예방적 기능 강화 추진실적	119
〈표 2-76〉 장기요양시설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 추진실적	120
〈표 2-77〉 이용자 중심 서비스 연계 추진실적	121
〈표 2-78〉 안전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추진실적	125
〈표 2-79〉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지역사회 물리적 여건 조성 추진실적	129
〈표 2-80〉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 다양화 및 전문기관 인력 양성 추진실적	131
〈표 2-81〉 연명의료 제도의 안정적 정착 지원 추진실적	132
〈표 2-82〉 고령자 정신건강관리 강화(민관협력 노인자살예방사업 집중 추진) 추진실적	132
〈표 2-83〉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강화(자살예방 게이트키퍼 100만명 양성, 노인대상 자살예방프로그램 개발) 추진 실적	133
〈표 2-84〉 자살시도자, 유가족 사후지원 추진실적	135
〈표 2-85〉 소관 분야 중장기 계획을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개편 추진실적	136
〈표 2-86〉 재정의 인구구조 변화 대비 강화 추진실적	138
〈표 2-87〉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 구현 추진실적	139
〈표 2-88〉 근거 중심 인구정책 추진체계 구축 추진실적	140
〈표 2-89〉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홍보 강화 추진실적	141
〈표 2-90〉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 추진실적	145
〈표 2-91〉 2020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분야별 평가대상 제외 과제 목록	146
〈표 2-92〉 2020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분야별 과제의 목표달성도	147
〈표 2-93〉 2020년도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분야 중영역별 과제의 목표달성도	149
〈표 2-94〉 2020년도 기본계획 저출산 분야 과제별 목표달성도	151
〈표 2-95〉 2020년도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분야 중영역별 과제의 목표달성도	154
〈표 2-96〉 2020년도 기본계획 고령사회 분야 과제별 목표달성도	155
〈표 2-97〉 2020년도 인구변화 적극 대비 분야 중영역별 과제의 목표달성도	157
〈표 2-98〉 2020년도 인구변화 적극 대비 분야 분야 과제별 목표달성도	158
〈표 2-99〉 2020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분야별 평가대상 과제의 예산집행률	160
〈표 2-100〉 2020년도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분야 예산집행실적	161
〈표 2-101〉 2020년도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분야 중소영역별 과제의 예산집행실적	161
〈표 2-102〉 2020년도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분야 예산집행실적	163
〈표 2-103〉 2020년도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분야 중소영역별 과제의 예산집행실적	163
〈표 2-104〉 2020년도 인구변화 적극 대비 분야 예산집행실적	164
〈표 2-105〉 2020년도 인구변화 적극 대비 분야 중소영역별 과제의 예산집행실적	165
〈표 2-106〉 2020년도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소영역별 최종예산	166
〈표 2-107〉 2020년도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분야 소영역별 최종예산	167
〈표 2-108〉 2020년도 인구변화 적극 대비 분야 소영역별 최종예산	167
〈표 3-1〉 핵심성과지표와 관련 영역별 세부과제	171
〈표 3-2〉 신혼부부 임대주택 수혜율	172
〈표 3-3〉 청년고용률	174



〈표 3-4〉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율	175
〈표 3-5〉 국공립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177
〈표 3-6〉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	178
〈표 3-7〉 사교육비 부담	180
〈표 3-8〉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	182
〈표 3-9〉 노인교통사망률	184
〈표 3-10〉 여성고용률	185
〈표 3-11〉 고령자고용률	187
〈표 3-12〉 핵심성과지표(2014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실측치, 2020년 목표치)	188
〈표 3-13〉 핵심성과지표에 대응되는 해외지표 목록 업데이트 가능 여부	189
〈표 3-14〉 국제비교를 위한 합계출산율 및 노인인구비율에 따른 국가군	190
〈표 3-15〉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핵심성과지표와 국제비교 가능, 업데이트 가능 지표	191
〈표 3-16〉 청년 고용률 국제비교	192
〈표 3-17〉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 국제비교	193
〈표 3-18〉 노인상대빈곤율 국제비교	194
〈표 3-19〉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 국제비교	195
〈표 3-20〉 노인교통사망률 국제비교	196
〈표 3-21〉 2020년 기준 여성고용률 국제비교	197
〈표 3-22〉 고령자고용률 국제비교	198
〈표 3-23〉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성과지표, 핵심성과지표 개선(안)	199
〈표 3-24〉 제시된 대체 핵심성과지표 내용 및 관련 근거(사유)	200
〈표 4-1〉 조사 전문가 특성	206
〈표 4-2〉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분야별, 연도별 예산 규모 현황	207
〈표 4-3〉 각 분야별 예산 규모에 대한 조사대상 전문가 견해의 분포	210
〈표 4-4〉 2021년 기준 OECD 분류별 중앙부처 저출산 분야 세부 예산 현황	210
〈표 4-5〉 저출산 분야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OECD 분류에 의한 직/간접지원 기준 예산 구분에 대한 조사대상 전문가 견해의 분포	212
〈표 4-6〉 저출산 분야의 직/간접 지원별 예산현황	213
〈표 4-7〉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의 각 분류된 예산 규모 변화(증가)에 대한 조사대상 전문가 견해의 분포	215
〈표 4-8〉 OECD 사회정책 분야 지원유형별 공공, 민간 의무 프로그램 분류	216
〈표 4-9〉 저출산/고령사회 예산 분류 체계 개선안(1)	218
〈표 4-10〉 저출산/고령사회 예산 분류 체계 개선안(2)	219
〈표 4-11〉 저출산·고령사회 예산 분류 체계 개선안(3안: 1+2안 절충안)	220

그림 목차

[그림 1-1]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추이(2000~2019년)	3
[그림 1-2]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절차	9
[그림 3-1] 핵심성과지표: 신혼부부 임대주택 수혜율의 실측치와 목표치	173
[그림 3-2] 핵심성과지표: 청년고용률의 실측치와 목표치	175
[그림 3-3] 핵심성과지표: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율의 실측치와 목표치	176
[그림 3-4] 핵심성과지표: 국공립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의 실측치와 목표치	178
[그림 3-5] 핵심성과지표: 국공립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의 실측치와 목표치	179
[그림 3-6] 핵심성과지표: 사교육비 부담의 실측치와 목표치	181
[그림 3-7] 사교육비 추이(2010~2019년)	182
[그림 3-8]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 추이(2012~2018년)	183
[그림 3-9] 핵심성과지표: 노인교통사망률의 실측치와 목표치	185
[그림 3-10] 핵심성과지표: 여성고용률의 실측치와 목표치	186
[그림 3-11] 핵심성과지표: 고령자 고용률의 실측치와 목표치	188
[그림 3-12] 2020년 기준 청년고용률 국제비교	192
[그림 3-13] 2020년 기준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 국제비교	193
[그림 3-14] 2018년 기준 노인상대빈곤율 국제비교	194
[그림 3-15] 2019년 기준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 국제비교	195
[그림 3-16] 2019년 기준 노인교통사망률 국제비교	196
[그림 3-17] 2020년 기준 여성고용률 국제비교	197
[그림 3-18] 2020년 기준 고령자고용률 국제비교	198
[그림 5-1] 증거영향 정책의 공식화 및 실행에 대한 개념적 모형	227
[그림 5-2] 정책 연쇄 주기(policy chain cycle)의 예	233
[그림 5-3] 통계청 통계빅데이터센터 개념도	242



제 1 장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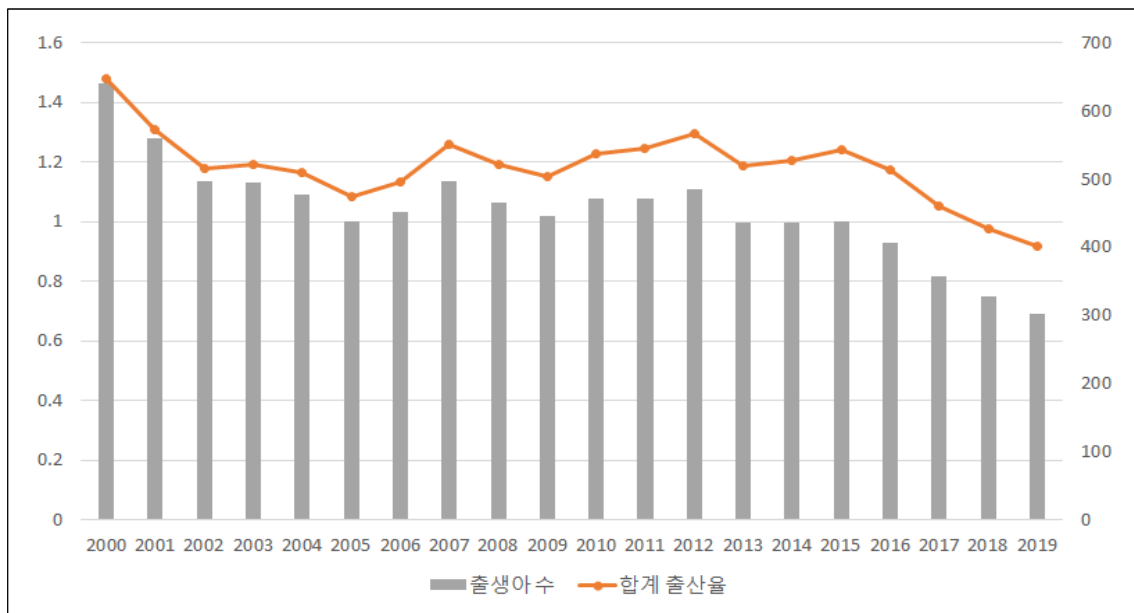
- 제1절 배경 및 목적
- 제2절 성과평가 방법
- 제3절 성과평가 결과 활용

제 1 장 서론

제1절 배경 및 목적

- 출산율 및 출생아 수의 급격한 하락에 대응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인 종합 정책이 추진됨.
 -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8에서 2001년 1.309, 2002년 1.178,..., 2005년 1.085까지 하락하였으며, 출생아 수 역시 2000년 640.1천 명에서 2005년 438.7명까지 하락함(통계청, 2020a).
 - 이러한 인구 변화에 적극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 시행하였고, 동 법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정부합동으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시작하였음.

[그림 1-1]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추이(2000~2019년)



자료: 통계청(2020a). e-나라지표. 합계출산율.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8에서 2021. 7.1. 인출하여 재작성.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하여 매 5년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범국가적 중장기 계획인 기본계획이 추진되고 있음.
 - 현재까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이 수립·추진되고 있음.
 - 2021년부터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가 추진 중임.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은 제1조 목적에서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고자 함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21조 및 시행령 제3조)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기반으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법 21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된 시행계획의 내용을 종합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 후 시행계획이 확정됨(「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3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21조)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수립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법 21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함.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지난해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 법적 근거에 의한 정책평가와 함께, 일반적으로 우리는 정책의 성과평가를 통하여 정책의 추진 과정에 대한 점검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추구함.
 - 본 연구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에 기초하여 중앙부처가 수립한 2020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2절 성과평가 방법

1. 성과평가 대상

- 성과평가 대상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됨.
 - 첫째, 2020년 시행계획에 포함된 전체 사업에 대하여 각각 추진과정과 추진 성과를 평가함.
 - 둘째,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13개 성과지표의 달성 정도에 대하여 평가함.
- 2020년도 시행계획 상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평가 대상 과제는 다음과 같음.
 - 2020년 중앙정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은 3대 분야(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분야 97개 과제(59.5%),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분야 56개 과제(34.4%), 인구변화 적극 대비 분야 10개 과제(6.1%))로 총 163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중 시행계획 내 성과지표(목표) 부재에 따른 목표달성률 산출 불가, 예산 해당없음으로 인한 예산집행률 산출 불가, 既 사업 종료 등의 사유로 총 31개 과제가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총 132개 과제가 2020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대상이 됨.

〈표 1-1〉 2020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대상

구분	평가대상 과제 수	평가대상 제외	최종 평가 과제 수
전체	163	31	132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분야	97	18	79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분야	56	12	44
인구변화 적극 대비 분야	10	1	9

주: 평가대상 제외 과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 보고서의 2장 4절 실적 평가 결과 종합 분야 참조

- 당초 제3차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핵심 성과지표는 총 13개로 저출산 분야 7개 지표, 고령사회 분야 6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중 산출이 불가능한 “고령친화산업 비중”과 2020년도 기준 갱신이 불가능한 “임신유지율”, “노인 상대빈곤율”을 제외한 총 10개의 지표를 평가대상으로 하였음.

2. 성과평가 내용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0년 시행계획에 대한 성과평가는 각 분야별 세부과제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기초평가)와 핵심성과지표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 추진실적 평가

○ 2020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상 과제에 대한 실적 분석

- 시행계획 수립 시 해당부처에서 과제별로 설정한 성과지표와 성과지표의 목표치에 근거하여 각 부처별 자체 평가보고서, 결산보고서 등을 토대로 목표치의 달성 정도(목표달성률)와 예산 대비 집행 수준(예산집행률)을 평가

○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예산집행률 등을 집계한 결과, 성과 부진 과제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히 검토함.

〈표 1-2〉 2020년 중앙부처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과제 및 예산 현황

구분	분야	과제수(비율)		예산(억원)(비율)	
1.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비용)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19	97 (59.5%)	38,779	401,906 (64.12%)
	(시간)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화	19		16,764	
	(돌봄)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24		132,331	
	(문화) 모든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	18		4,082	
	(기반) 2040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 조성	17		209,950	
2.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소득)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	9	56 (34.4%)	172,198	224,734 (35.86%)
	(준비) 新중년 새로운 인생 출발 지원	10		4,363	
	(참여)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4		25,578	
	(건강)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돌봄 환경 조성	26		22,367	
	(마무리) 성숙한 노년기를 위한 기반 마련	7		227	
3. 인구변화 적극 대비	(사회시스템·지역) 인구구조 변화 대비 및 지역정책 패러다임 전환	5	10 (6.1%)	0	115 (0.02%)
	(대응기반 강화) 인구변화 대응기반 강화 및 국민 인식개선	5		115	
합계		163(100.0%)		626,755(100.0%)	

자료: 대한민국정부(202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 p.54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핵심성과지표 분석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13개 중 평가 가능 대상 10개 핵심성과지표 산출

- 업데이트 가능한 지표의 2014년-2020년 실적치와 목표치(2020년)간 비교를 통한 시계열적 추세 분석

○ 각 핵심지표와 관련이 있는 시행계획 각 사업들의 내용을 검토하고, 시행계획의 내용이 핵심 성과지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였는지 등을 함께 검토함.

〈표 1-3〉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성과 지표 현황

성과지표	현재 (2014년)	목표 (2020년)	출처	설정근거	측정방법	관련과제
신혼부부 임대주택 수혜율	4.8%	10%	국토부 행정통계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정책효과	국민임대, 5년 10년 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신혼부부 지원 물량/ 연간 초혼부부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확대 신혼부부 주택자금지원 현실화
임신유지율	77.6%	82%	보사연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 조사	연평균 유산, 임신중절비율 두 배 이상(1.1%p) 감소 목표	유배우 부인 임신자수 - 유산, 임신중절 등 규모/15~44세 유배우 부인 임신자수 *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위험 산모 신생아 의료지원 확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 생명존중 분위기 확산
청년고용률	40.7%	48%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OECD 평균치	15~29세 청년 취업자/ 청년 경제활동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고용대책 노동개혁 과제 일 학습 병행 등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율	5% (2015.7)	15%	고용부 고용보험 D/B	최근 증가세, 정책효과 반영	(남성육아휴직자/ 전체 육아휴직자) ×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육아휴직제도 내실화 남성육아참여 문화 확산
국공립 등 민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26%	37% (2025년까지 45%)	복지부 보육정책 D/B	정책 목표치	평균 국공립 등 민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평균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개혁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	2,057시간 (2014년)	1,800 시간대	OECD 통계	OECD 평균수준 도달	연간 전체 근로시간/전체 근로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가정양립 지원·홍보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사교육비 부담	18.2조 원	17조 원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결과	매년 2천 억 이상 감소	초·중·고생 총 사교육비(명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교육 경감 공교육 정상화 능력중심사회 구현
노인 상대빈곤율	49.6%	39%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기초연금, 국민연금 성숙, 주택연금 등 역모기지 확산 효과 반영	중위소득 50%이하 노인 수/전체 노인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 1연금체계 구축 기초연금 내실화 퇴직·개인연금 활성화 주택·농지연금 활성화 노후준비 여건 조성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	8.4년 (2012년)	7.5년	통계청 생명표 및 WHO 건강수명	건강수명 증가추세, 정책효과 등 반영	0세에서의 기대수명-건강수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 신체활동 증진 고령자 질병예방·관리강화 노인의료·돌봄 체계 내실화 장기요양보험제도 고도화 치매에 대한 체계적 대응
노인교통사망률	28.4명	20명	경찰청 내부자료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수 총량 감소 수준 설정	65세 이상 교통사고 사망자수/ 65세 이상 인구수 × 10만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운전자 안전 강화 고령보행자 안전 환경 조성
여성고용률	55.4%	62%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OECD 평균 수준 도달	15~64세 여성고용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 재취업지원 시간선택제 일자리, 유연근로 활성화 등
고령자 고용률	65.6%	70%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매년 1%p 증가 목표	고령자 취업자/ 고령자(55-64세) 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제도 개선 고령자 재취업 지원 과제 전반
고령친화산업 비중	5.4% (2013년)	10%	연구기관 발표자료, 신규 통계 생산 필요	일본 수준 목표	실버산업 관련 총 생산/G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친화산업 생태계 조성 유망 산업·서비스 육성 R&D 종합지원체계 구축

자료: 대한민국정부(2015). 2016~202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p.44.

□ 저출산·고령사회 예산 분류체계 구축

○ 2021년부터 시행되는 제4차 기본계획 및 2021년 시행계획 내 세부사업에 대한 일관성 있는 평가 체계 기반 구축을 위하여 각 영역별 예산 분류를 수행하고, 이러한 특징을 토대로 향후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 제4차 기본계획 및 2021년 시행계획 내 각 영역별 예산 구성과 특징(예산 구성비 등) 검토
- 예산 분류체계 구축의 기준 검토(타 사업 심층평가 등 국내외 문헌 검토) 및 정책화 방향 모색
- 정책 목표 유사성을 바탕으로 각 영역별 정책 사업의 유형화 및 각 유형별 구조 분석
- 유형별 예산 규모, 구조(구성)의 특징 분석 및 정책 방향 도출

□ 제4차 기본계획 평가 효과성 제고 정책 방향(평가 체계, 평가 틀) 제시

○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평가 체계 구축 가능성 탐색 및 방향 제시

- 정책 평가의 범위, 종합적인 평가 틀(프레임) 구축 가능성 검토: 제4차 기본계획(시행계획) 성과평가의 간명성, 종합성을 견지한 전반적 평가 체계(3차 기본계획의 13개 핵심성과지표 대체 평가 프레임의 성격) 구축 가능성
- 정책과 결과 간 연관성(원인 및 결과변인, 명확한 인과관계 설정) 측면에서의 정책 평가 체계 검토 및 개선 방향 도출

3. 성과평가 절차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평가 절차는 기본적으로 법적 근거를 따라 추진함.

○ 즉, 법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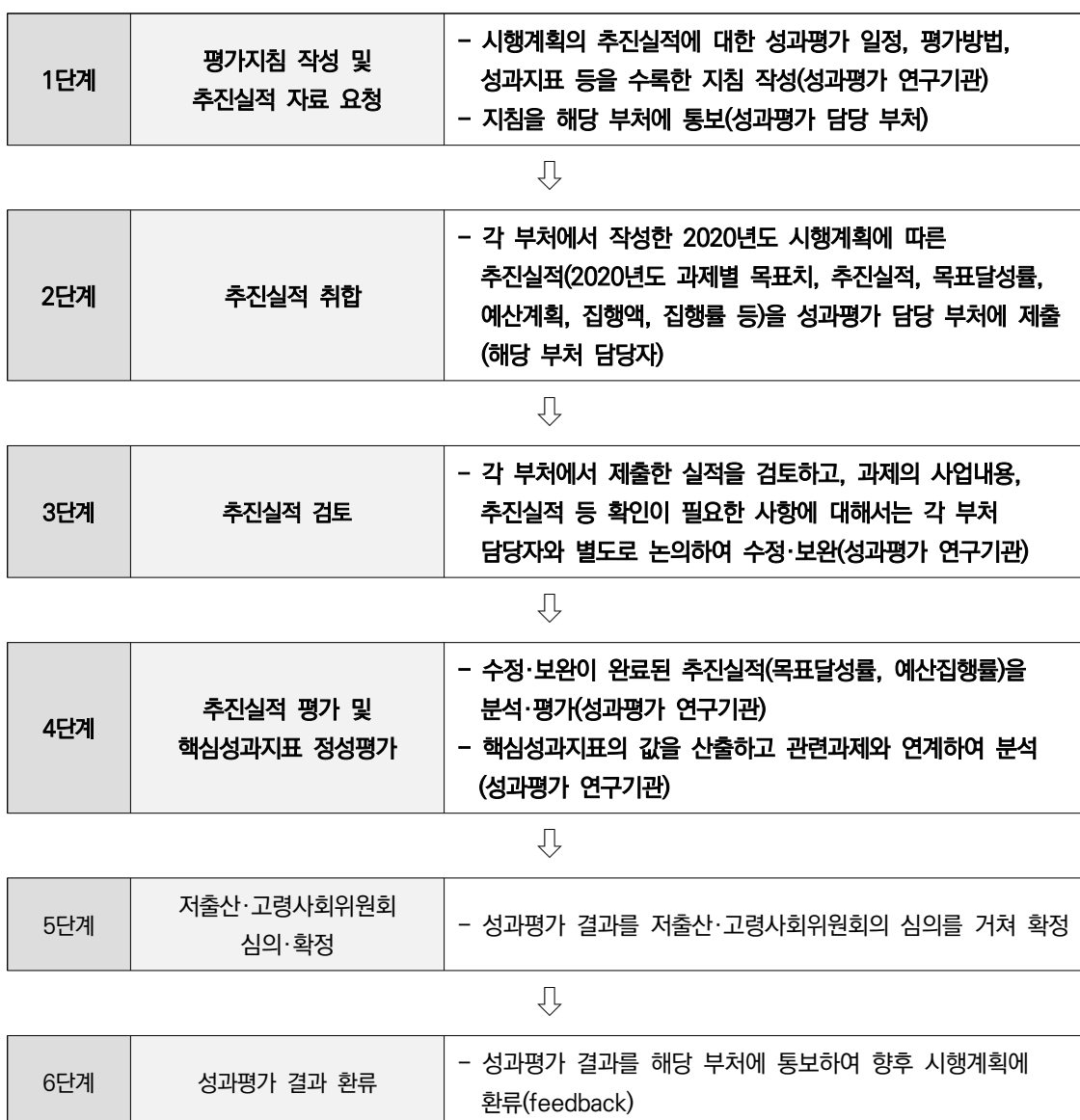
○ 이상의 법적 절차를 따라 본 연구에서는 총 6단계의 평가 절차를 구분하여 추진함.

- 1단계는 매년 실시하는 시행계획 성과평가를 위한 지침을 작성 배포하는 단계: 평가지침은 각 부처 실무 담당자가 동일 기준을 가지고 자체 평가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평가 방법을 사전에 배포하는 것
- 2단계는 추진실적 취합 단계로, 이 과정에서는 신속히 취합하여 분석이 가능한 상태의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3단계와 4단계는 추진실적과 핵심 성과지표를 분석하여, 평가 주요 결과를 도출하는 단계에 해당함.
- 5단계와 6단계는 평가 결과를 심의 확정하고, 그 결과를 차기 시행계획 수립에 환류하는 단계임.

○ 본 연구에서는 6개 단계 중 1~4단계(진하게 표시)를 수행함.

[그림 1-2]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절차



자료: 이소영, 백혜연, 변수정, 장인수(2018). 2017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p. 9; 박종서, 이소영, 황남희, 장인수(2019). 2018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p. 9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제시함.

제3절 성과평가 결과 활용

□ 평가결과는 국회 보고 자료로 활용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7조에 의거하여 정부는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결과를 확정
후 국회에 보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7조(국회보고)

정부는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이에 대한 평가 등을 확정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성과평가 결과는 국회 보고를 통해 중앙부처의 예산심의 자료 등으로 활용

□ 평가결과는 향후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환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의거하여 평가 결과를 향후 저출
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기타 활용

- 핵심성과지표 관리를 통한 향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연차별 시행계획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방향성 설정
- 향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체계 개선에 반영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자료로 활용 가능



제2장

실적 평가(기초 평가)

- 제1절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분야 실적 평가
- 제2절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분야 실적 평가
- 제3절 인구변화 적극 대비 분야 실적 평가
- 제4절 실적 평가 결과 종합

제2장 실적 평가(기초 평가)

제1절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분야 실적 평가

1. (비용)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 1세 미만 아동 의료비 제로화(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1-1-가-①, 보건복지부)

○ 2019년 사업 종료

□ 1세 미만 아동 의료비 제로화(국민행복카드 지원 확대)(1-1-가-②, 보건복지부)

○ 2019년 사업 종료

□ 1세 미만 아동 의료비 제로화(신생아 치료 건강보험 보장 등 지원 확대)(저출산-1-1-가-③,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환아 등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한 영구장애 예방 및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 (성과) 성과지표 미숙아 지원율(%) 목표치 82.3% 대비 실적치 86.1%로 104.6% 달성, 예산 13,888백만 원 전액 집행

- (선천성대사이상 의료비부담 경감) 선천성대사이상 의료비 지원기준 완화를 통한 수혜대상 확대하여 환아가정 의료비 부담 경감

- (선천성난청 확진검사 지원 확대) 선천성 난청 확진검사비 지원대상 검사종류를 5종으로 확대하여 검사비 부담 경감

-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질환 환아 특수식이 지원현황 조사를 통해 적절한 지원기준 검토

- (미숙아·선천성대사이상 지원기반 강화) 보건소가 미숙아나 선천성대사이상 출생보고 접수 시 의료비 지원내용을 1개월내 안내

○ (선진국 유사 사례분석)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의료비 지원

- (미국) '02년 10월 기준으로 메사추세츠 및 노스캐롤라이나 등 23개 주에서 탠덤매스 검사를 도입하여 3종에서 30여 종 이상의 질환에 대해 탠덤매스 스크리닝 실시

- (네덜란드) '90년대 중반부터 지방산 대사이상 질환 중 하나인 Medium chain

acyl-CoA dehydrogenase(MCAD) 결손증을 탠덤매스로 스크리닝 실시

- (호주) '97년 New south Sales에서 Public screening program으로 시작하여 호주 전역에서 5개 지역으로 나눠 탠덤매스 스크리닝 실시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미숙아 성장발달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정책 마련기반 구축 추진
 - 신생아 선천성 난청 및 대사이상 검사 수검율 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등 개선 추진

〈표 2-1〉 1세 미만 아동 의료비 제로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1-1-가-① 1세 미만 아동 의료비 제로화(외래진 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2019년 사업 종료															
1-1-가-② 1세 미만 아동 의료비 제로화(국민행 복카드 지원 확대)		2019년 사업 종료															
1-1-가-③ 1세 미만 아동 의료비 제로화(신생아 치료 건강보험 보장 등 지원 확대)	미숙아 지원율(%)	82.3	82.3	86.1	104.6	81.8	81.8	86.6	105.9	신규	신규	신규	-	16,933	13,888	13,888	100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미숙아 지원율(%)=미숙아 지원자수/ 미숙아(환아) 수×100

□ 임신·출산 의료비 경감(임신·출산 의료비 대폭 경감)(1-1-나-①,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임신·출산 등 입원료 관련 본인부담금 경감을 통해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에 기여
- (성과) 성과지표 급여적용 목표치 시행 대비 실적치 아동·산모에 대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20.7월) 달성률 100.0%, 비예산사업
 - 아동·분만병원의 법적 테두리 마련
 - 아동·분만병원 경영 안정 및 아동·산모 1인실 부담완화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아동·분만병원 관련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지속

□ 임신·출산 의료비 경감(여성 장애인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확대)(1-1-나-②,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출산한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조성

○ (성과) 성과지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율(%) 목표치 80% 대비 76.9%로 달성률 96.1%, 예산 1,423백만 원 전액 집행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의 지속적 지원 및 홍보를 통한 지원대상자 발굴 및 누락 방지
- (목표달성 부진사유) 지속적인 출산율 하락으로 출산비용지원 대상자 감소, 지원금 제도 홍보 부족으로 출산 여성장애인 미신청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지원대상자 중 미신청자 발굴을 위한 홍보 강화
 -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홍보를 통한 출산비용지원을 제고

〈표 2-2〉 임신·출산 의료비 경감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1-1-나-① 임신·출산 의료비 경감(임신·출산 의료비 대폭 경감)	급여적용	시행	1인실 기본 임원 료 지원	아동· 산모 에 대한 1인실 기본 임원 료 지원 (:20. 7월)	100.0	시행	병원 및 한방 병원 2.3인 실 급여 화	완료 (19.7 월)	100.0	시행	상급 종합 병원 및 종합 병원 2.3인 실 급여 화	완료 (18.7 월)	100.0	비예산사업			
1-1-나-② 임신·출산 의료비 경감(여성 장애인 임신·출산진료 비 지원 확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율(%)	80	80	76.9	96.1	80	80	73.8	92.2	80	80	67	83.8	1,423	1,423	1,423	100.0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급여적용=요양급여 관련 고시 개정·사행 여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율(%)=출산비용지원인원/출산비용지원대상자(예산기준)×100

□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확대(1-2-가,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고위험 임신부의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촉진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

○ (성과) 성과지표 고위험 임신부 수혜율(%) 목표치 20.5% 대비 실적치 21.8%로 달성률 106.3%, 예산 6,229백만 원 전액 집행

- (고위험 임신부 지원확대) 적극적 사업홍보 등을 통해 비용부담이 큰 19대 고위험임신질환 의료비 수혜대상을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성과목표 초과 달성
- (전문가 의견수렴) 고위험임신질환 지원 적절성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적극적 지원
- (수요자 중심 서비스) 코로나19 감염예방 등 수요자 편의를 고려하는 등 지원신청 절차·방식 완화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수혜 인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등 영향으로 지원액은 계속 감소
 - 지원범위 확대(대상 확대, 지원항목 추가 등) 검토

〈표 2-3〉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확대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1-2-가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확대	고위험 임산부 수혜율(%)	20.5	20.5	21.8	106.3	19	19	19.7	103.7	신규	신규	신규	-	8,642	6,229	6,229	100.0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고위험 임신부 수혜율(%)=고위험 임신부 지원자 수/전체 입원진료 고위험 임신부 수×100

□ 난임 지원 확대(1-2-나-①,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난임시술 관련 비용, 정서·심리지원 등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사회적 임신시스템 확립으로 저출산 극복 도모, 난임시술 본인부담 추가 경감 및 건강보험 적용기준 개선을 통한 부담 완화
- (성과) 성과지표 1.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이용도 목표치 21,608건 대비 실적치 19,933건으로 달성률 92.2%, 성과지표 2. 난임시술의료기관 평가 및 통계시스템 운영 목표치 본평가 결과 발표 및 통계 관리 이행(실적치 본평가 통계 관리) 달성률 100%, 성과지표 3.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기준 개선의 2020년도 성과목표 없음, 예산 45,326백만 원 전액 집행
 - 난임 시술비 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 난임시술에 대한 질관리 강화
 - 난임부부 심리·의료상담 지원 강화
 - (목표달성 부진사유)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이용도) '19년 실적치(17,286건)에 '20년 2개소 추가 개소를 반영하여 목표치를 상향 설정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담센터 설치 대상인 의료기관 참여부진 및 시·도 공모사업 신청 저조로 1개소 확충('20.12월),

다만, 비대면 상담 등 상담방식 다변화 및 상담시스템 개발·구축 등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전년 대비 상담실적 증가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확충을 위해 5차례에 걸쳐 공모절차를 추진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담센터 설치 대상인 의료기관 참여부진 및 시·도 공모사업 신청 저조로 센터확충에 난항
-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확대, 온라인상담을 통한 난임부부 심리·정서 지원 강화
- 난임시술에 대한 질 관리 강화 추진

□ 난임 지원 확대(난임휴가제)(1-2-나-②, 고용노동부)

○ 사업 종료

〈표 2-4〉 난임 지원 확대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1-2-나-① 난임 지원 확대	1.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이용도	21,608	21,608	19,933	92.2	5,760	5,760	17,286	300.1	신규	신규	-	-	53,916	45,326	45,326	100.0
	2.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통계시스템 운영	본평가 결과 발표 및 통계 관리	본평가 결과 발표 및 통계 관리	본평가 결과 발표 및 통계 관리	100.0	본평가 통계 관리	본평가 통계 관리	본평가 통계 관리	100	시범 평가 통계 관리	시범 평가 통계 관리	시범 평가 실시 및 통계 관리	-				
	3.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개선	성과목표 없음				개선	개선	개선	100	-	-	-	-				
1-2-나-② 난임 지원 확대 (난임휴가제)	사업 종료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고위험 임신부 수해율(%)=고위험 임신부 지원자 수/전체 임신진료 고위험 임신부 수×100

□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분만취약지 지원사업 확대 및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센터 확대)
(1-2-다-①,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확대) 분만실 이용이 어려운 취약지 산모들의 원거리 산전 진찰 및 출산에 따른 신체·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을 위해 산부인과 설치·운영 지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확대) 고위험 산모·신생아를 여러 진료 과가 통합적으로 집중 치료할 수 있는 권역 단위 최고 수준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 센터 설치·운영 지원

○ (성과) 성과지표 1. 분만취약가임인구율(%) 목표치 1.39% 대비 실적치 1.33%로 달성률 104.5%(하향지표), 성과지표 2.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설치 개소수(개) 목표치 20개 대비 실적치 20개로 달성률 100%, 예산 21,300백만 원 중 94.4%인 20,116백만 원 집행

- 분만취약지 지원

-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사업 확대(37→40개소)

- 기존 산부인과 37개소 운영 지원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1개소 확대(19→20개소)

- 기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19개소 운영 지원

- (예산 미집행 사유)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신규 선정 의료기관 시설·공사 지연으로 운영비 불용,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규 선정 의료기관 시설·공사 지연으로 운영비 불용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분만취약지 지원)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 및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로 분만취약지 산부인과의 운영상 어려움 제기→운영비 지원 방식 외에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원방안 등 마련 검토

□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마더세이프 프로그램 운영)(1-2-다-②,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응급피임약 사용법, 감기약 등 약물과 음주, 흡연 등이 임신과 태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상담 제공을 통한 건강한 임신·출산 도모

○ (성과) 성과지표 상담센터 상담건수(건) 목표치 15,166건 대비 실적치 15,011건으로 달성률 99.0%, 예산 270백만 원 전액 집행

- 임신 중 약물복용 등 태아 기형발생 위험물질에 노출된 산모 등에 대한 온·오프라인 전문상담- 총 상담건수 15,011건

- 의료인 및 임산부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개발

- 상담사례의 약물 DB 운영 및 내용 분석

- (목표달성 부진사유) 코로나 19로 인하여 콜센터 이용 및 비대면 상담으로만 이루어져 직접상담 및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인을 위한 상담전문가 교육과정 운영에 한계가 있음.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양질의 정보제공을 위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며, 콜센터의 전화뿐만 아니라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상담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보다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서비스 구축이 필요

- ‘임산부에게 도움이 되는 필수 지식 10가지’ 시리즈로 소책자를 제작하여 임신부 및 전국 병·의원에 배포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하고자 함.
- 마더세이프 강좌 및 심포지엄, 약물상담 전문가 과정 등을 통해 의료인들이 직·간접적으로 약물 등으로 인한 인공임신중절 예방과 모유수유 중단방지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부를 위한 마더세이프 스쿨 운영으로 직접 임신부들에게 정보제공함으로써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도모하고자 함.
- 핑크다이어리 및 네이버 지식인 맘카페 카톡상담 등을 통하여 약물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고, SNS 및 유튜브 ‘임산부TV’ 채널 등을 통하여 임신부, 모유수유부, 계획임신부에게 약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표 2-5〉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1-2-다-①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분만취약 지 지원사업 확대 및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설치 개소수 확대)	1. 분만취약가임 인구율(%)	1.39	1.39	1.33	104.5	1.40	1.40	1.37	102.2	1.40	1.40	1.34	104.5	21,300	21,300	20,116	94.4
	2.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설치 개소수(개)	20	20	20	100.0	19	19	19	100	16	16	16	100				
1-2-다-①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마더세이 프 프로그램 운영)	상담센터 상담건수 (건)	15,166	15,166	15,011	99.0	14,000	14,000	15,729	112.35	신규	신규	13,722	-	270	270	270	100.0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1. 분만취약가임인구율(%)=분만취약 가임인구 수(기준시간(60분)내 분만의료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가임인구수)/전국 가임인구수×100; 성과지표 2.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설치 개소수(개)=설치 확대 개소 수; 성과지표 상담센터상담건수(건)=상담센터 연간 상담건수

□ 고위험 출산 진료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 및 의료 접근성 훼손 방지 방안 마련(1-2-라,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및 본인 부담 완화를 위한 분만 관련 수가 개선

○ (성과) 성과지표 분만 관련 수가 개선 목표치, 실적치 개선(달성률 100%), 비예산사업

- 분만 수가 및 분만전 감시료 등 개선, 중증소아환자 관련 수술 수가 개선: (기대효과) 필수의료 분야의 기본적인 의료서비스가 적절히 유지되도록 보상 강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마련을 위한 지원을 통해 건강불평등 완화 추진
- (선진국 유사 사례 분석) (일본) 일부 수술 수가에 대해 연령 및 체중별 가산을 통해 미숙아·조산아 등 소아 수술 분야 활성화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사회적 논의 시 필수의료 지원 필요성은 공감하나, 개별 수가 인상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누어짐. 즉, 분만, 미숙아·신생아 수술 수가 환자 직접 적용 분야 개선은 찬성하나, 그 외 신생아실 유지 등을 위한 국가 책임 강조
- 분만 관련 수가 개선 고시 개정 추진('21.1분기)
- 수가 개선 현황 및 건강보험 재정 영향 모니터링(계속)

〈표 2-6〉 고위험 출산 진료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 및 의료 접근성 훼손 방지 방안 마련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1-2-라 고위험 출산 진료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 및 의료 접근성 훼손 방지 방안 마련	분만 관련 수가 개선	개선	개선	개선	100.0	-	-	-	-	-	-	-	-	비예산사업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분만 관련 수가 개선=관련 고시 개정 유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1-3-가,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를 출산가정에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건강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출산 장려

- (성과) 성과지표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수혜율(%) 목표치 45% 대비 실적치 41.9%로 달성률 93.1%, 성과지표 2. 사업 참여자(이용자) 만족도(점) 목표치 86.5% 대비 실적치 87.2%로 100.8% 달성, 예산 143,469백만 원 중 140,552백만 원 집행(98.0% 집행)
-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120% 이하)
-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산가정의 서비스 질 향상 및 제공인력의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제공인력 투입 확대(1명 → 2명)
- 코로나19확산에 따라 서비스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용권보장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기간 연장(출생후 60일→90일) 및 인정제공인력 활용기준 완화하여 서비스 가능하도록 적극 조치
- 정신질환 제공인력의 서비스 참여 사전적 차단을 위해 채용시 건강진단 항목에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확인사항 추가 및 제공인력 중 정신질환 증세가 있는 경우 근로금지 조치 등 관리 강화

- 아동학대관련 결격사유 신설을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 추진('21)
- 제도 개선 사항 등 반영 보도자료 배포, 바우처 서비스 안내 홍보물(리플릿)제작 및 지자체 배포, 이용자 준수사항(마그네틱 형)안내문제작, 전 제공기관 및 이용자 대상으로 배포
- (목표달성 부진사유) '19년 실적을 토대로 '20년 목표를 상향 조정하였으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및 장기화에 따른 대면 및 재가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
- (예산 미집행 사유) 코로나-19 지속 및 확산으로 대면(재가) 서비스 수요 감소 등 서비스 이용률 저조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19년, '20년 아동학대 사례 및 학대 관련 신고와 의심사례 발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공인력의 결격사유 신설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필요
 - 저출산 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추가 확대 (기준중위소득 120% → 150% 이하, '21.5.22.시행)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제공인력의 결격사유 신설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제공인력의 자격 강화 등을 위한 사업지침 및 양성교육 과정 개편 추진
 - 제공인력 비대면(사이버) 보수교육 시간 확대 추진
 - 소득기준 확대 등 반영한 보도자료 배포,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홍보물(동영상 및 리플릿 등) 제작 및 지자체 등에 배부

〈표 2-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1-3-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수혜율(%)	45	45	41.9	93.1	33	33	44.2	133.9	22	22	29.9	135.9	143,469	143,469	140,552	98.0
	2. 사업 참여자(이용자) 만족도(점)	86.5	86.5	87.2	100.8	86.0	86.0	85.2	99.1	85.0	85.0	85.5	100.6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수혜율(%)=연간 이용자 수/연간 출생아수×100; 성과지표 2. 사업 참여자(이용자) 만족도 (점)=사업참여자(이용자) 만족도

□ 예방접종 지원 확대(1-3-나,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감염병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하여 국가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하고, 예방접종률을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퇴치수준 이상으로 향상, 유지하여 감염병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 (성과) 성과지표 영유아 완전 접종률 목표치 95.0% 이상 대비 실적치 95.7%로 100% 이상 달성(100.7%), 예산 264,045백만 원 전액 집행
- 국가예방접종 지원백신(17종)의 무료접종 실시, 예방접종 무료지원 대상자 확대, 예방접종 대상자 관리 및 국가예방접종사업 홍보 강화, 예방접종 담당자 맞춤형 교육 실시 등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
 - 국가예방접종 어린이 총 12,921,163건 접종
 - 예방접종비용 무료지원 대상자 확대 추진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백신 변경
 - 예방접종 대상자 관리 강화
 - 국가예방접종사업 대국민 소통 및 홍보 강화
 - 예방접종 담당자 맞춤형 교육 실시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시도 및 보건소 담당자의 현장 대응으로 인한 예방접종담당자교육 시행횟수 감소 및 참여율 저조→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시도 및 보건소 담당자의 업무부담 증가(코로나19 대응 등) 및 인력부족으로 인한 예방접종사업의 원활한 추진 어려움
 - 국가예방접종사업 접종률 유지 및 향상 방안 추진
 - 수행인력 역량 강화 및 교육 지원

〈표 2-8〉 예방접종 지원 확대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1-3-나 예방접종 지원 확대	영유아 완전 접종률	>95.0	>95.0	95.7	100.7	>95.0	>95.0	95.3	100.3	94.0	94.0	95.7	101.8	237,583	264,045	264,045	100.0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영유아 완전 접종률=기본접종 5종(B형간염, DTaP, 폴리오, Hib, PCV) 1~3차 완전접종자수/접종대상자수×100

□ 아동수당 지원 확대(1-4-가,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 (성과) 성과지표 1. 아동수당 만족도(점) 목표치 71.5 대비 실적치 74.6으로 104.3% 달성, 성과지표 2. 아동수당 지급률(%) 목표치 99.0 대비 실적치 97.2로 98.2% 달성, 예산 3,104,537백만 원 중 3,101,635백만 원 집행(집행잔액)

- 아동수당 제도의 운영 내실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약 263만 명)에게 매월 아동수당 지급
-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아동양육한시지원 추진: 아동수당 수급 가구에 한시적으로 상품권 등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 활성화 도모(263만명, 1인당 40만원 상당)
- (목표달성 부진사유) 아동수당 홍보, 미신청자 발굴, 신청을 유도하고자 하나 개인 의사에 반하여 신청하게 할 수는 없다는 한계(예시로 가정폭력시설 거주하는 부모-아동의 경우, 상대 배우자에게 주거정보 노출을 꺼려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존재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사회적 합의 및 국가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단계적 확대((단계적 확대(안)) 초등 저학년(만 9세 미만)→초등 고학년(만 12세 미만)→중학생(만 15세 미만)→고등학생(만 18세 미만)) 추진 검토

〈표 2-9〉 아동수당 지원 확대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1-4-가 아동수당 지원 확대	1. 아동수당 만족도(점)	71.5	71.5	74.6	104.3	71.4	71.4	71.5	100.1	70	70	71.4	102.0	3,076,686	3,104,537	3,101,635	99.9
	2. 아동수당 지급률(%)	99.0	99.0	97.2	98.2	-	-	-	-	-	-	-	-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1. 아동수당 만족도(점)=만족도 조사 후 100점 기준으로 환산; 성과지표 2. 아동수당 지급률(%)=0~6세 아동수당지원 아동수/0~6세 주민등록 인구수(연도말 기준)×100

□ 다자녀 기준 완화(1-5-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사업내용)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 (성과) 성과지표 다자녀 기준완화 협의 건수(건) 목표치 2건 대비 실적치 20건 달성률 1,000% 달성, 비예산사업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내 다자녀 지원 확대 관련 과제 포함
 - '20년 「모자보건사업안내」지침 개정을 통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다자녀(2자녀 이상) 기준 추가
 - 3개 광역시·도(8개 기초지자체)의 19개 사업 다자녀 지원 대상 기준(3자녀 이상 → 2자녀) 완화
 - (선진국 유사 사례 분석) (프랑스) 다자녀가구 가족수당, (스웨덴) 다자녀가구 추가 아동수당, (헝가리) 주택담보 대출 상환금 지원 대상 확대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각 부처 및 지자체, 기관의 추가 예산 등의 사유로 적극적인 사업발굴에 어려움 호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내 ‘가구별 아동지원 강화-생활밀착형 제도마련’ 과제로 지속 검토 예정

〈표 2-10〉 다자녀 기준 완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1-5-가 다자녀 기준 완화	다자녀 기준완화 협의 건수(건)	2	2	20	1000	2	2	2	100	신규	신규	-	-	비예산사업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다자녀 기준완화 협의 건수(건)=다자녀 기준 완화 관련 부처(기관) 협의건수

□ 고용보험 미적용 취업 여성 대상 출산지원금 지급(1-6-가,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하는 여성에게 출산급여 지급
- (성과) 성과지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급자수(명) 목표치 14,339명 대비 실적치 12,342명으로 달성률 86.1%, 예산 21,608백만 원 중 18,949백만 원 집행(집행률 87.7%)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설을 통해 일하는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활성화 및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
 - 사업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모성보호 알리미서비스 확대, 타 부처 및 유관기관 협조, 온·오프라인 및 방송매체 홍보 추진
 - (선진국 유사 사례 분석) (자영업자까지 출산지원)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 등 대부분의 OECD 국가; (임금근로자에 한정하여 출산지원) 캐나다, 일본, 독일, 한국; (ILO 입장) 제183호 모성보호협약('00년, 제2조제1항)은 비정형 고용형태 근로자에게도 출산급여 제도가 적용되어야 함을 명시
 - (목표달성 부진사유) '20년 지원 인원이 모든 소득활동 유형에서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고용환경 악화 및 저출산 심화 등으로 지원대상인 소득활동을 하는 출산여성 감소
 - (예산 미집행 사유)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여건 악화 및 저출산 심화 등으로 지원대상인 소득활동을 하는 출산여성이 감소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심각한 초저출산 기조하에 출생아 수 급감에 따른 집행 애로
 - 확대되는 고용보험과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가 상호보완하여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
 -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홍보 추진

〈표 2-11〉 고용보험 미적용 취업 여성 대상 출산지원금 지급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1-6-가 고용보험 미적용 취업 여성 대상 출산지원금 지급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급자수(명)	31,405	14,339	12,342	86.1	25,000	25,000	4,353	17.4	-	-	-	-	47,208	21,608	18,949	87.7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급자수(명)=매년 지원 승인원 산출(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급자 수)

□ 기간제 노동자 출산휴가급여 보장(1-6-나,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비정규직 근로자의 출산휴가급여 보장

○ (성과) 성과지표 기간제 근로자 출산휴가급여 보장을 위한 법개정 달성률 100%, 예산 288,608백만 원 중 285,771백만 원 집행(집행률 99.0%, 집행잔액)

- 기간제 근로자의 출산휴가급여 지급 보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기간제 근로자의 출산휴가급여 지급 보장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시행령 개정 추진(연중)

〈표 2-12〉 기간제 노동자 출산휴가급여 보장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1-6-나 기간제 노동자 출산휴가급여 보장	기간제 근로자 출산휴가급여 보장을 위한 법개정	법 개정	법 개정	법 개정	100.0	-	-	-	-	-	-	-	-	268,868	288,608	285,771	99.0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기간제 근로자 출산휴가급여 보장을 위한 법개정=고용보험법 개정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지원확대 검토(1-7-가,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출산·양육에 따른 여성 연금수급권 저해 요인 완화 및 출산에 따른 국민연금 혜택을 통한 출산 친화 여건 조성

○ (성과) 성과지표 국민연금법 개정 법률 개정 추진 대비 법안 상임위 소위 회부 달성률 50%, 예산 177백만 원 전액 집행

- 출산크레딧 첫째아 확대 관련 법안 발의 (김성주, 남인순의원 '20.7월)
- 발의안 상임위 소위 안건 상정(제382회 정기국회, 11월)

- 「국민연금의 돌봄크레딧 도입 타당성 검토」연구용역 추진(~20.12월)
- (선진국 유사 사례 분석) (프랑스) 한 아이 당 2년의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며, 세 아이 이상을 기르면 공적연금 계산 시 최종연금의 10% 증액, (영국) 12세 이하의 자녀 양육기간(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독일) 한 자녀 당 3년을 자동적으로 가입기간으로 인정. (스웨덴) 4세 미만 자녀의 연수(연령)를 기여기간으로 인정
- (목표달성 부진사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 논의가 필요하나 '20.7월 발의안에 대해 논의되지 못함, 사업 추진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나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함.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의원실 및 기재부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 협의 추진

〈표 2-13〉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지원확대 검토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1-7-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지원확대 검토	국민연금법 개정	법률 개정 추진	법률 개정 추진	법안 상임위 소위 회부	50.0	법률 개정 추진	법률 개정 추진	-	-	-	-	-	-	177	177	177	100.0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국민연금법 개정=국민연금법 개정

□ 출산 친화적 세제 개선(1-7-나, 기획재정부)

- (사업내용)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 지원을 위해 자녀장려금(CTC) 지급
- (성과) 성과지표 자녀장려금 지급 목표치 0.7조 원 대비 실적치 0.65조 원으로 92.9% 달성, 비예산사업
 - 자녀장려세제의 신청·심사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년 74만 가구, 0.65조원의 자녀장려금 지급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자녀장려금 신청 편의 제고
 - (선진국 유사 사례 분석) (미국) Child Tax Credit('15~)17세 미만의 공제대상자녀에 대해 최대 2,000달러(약 24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 '19년 CTC 환급액 186억 달러(약 22.7조원)
 - (목표달성 부진사유) 목표치와 실제 지급금액의 차이는 추정 상의 오차
 - 자녀장려금은 재정지출(예산집행)이 아닌 조세지출로, 전년도 지급액을 기준으로 추정된 예상금액을 목표치로 함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해당 없음

〈표 2-14〉 출산 친화적 세제 개선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1-7-나 출산 친화적 세제 개선	자녀장려금 지급	0.7 조원	0.7 조원	0.65 조원	92.9	0.7 조원	0.7 조원	0.7 조원	100	0.5 조원	0.5 조원	0.5 조원	100	비예산사업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자녀 장려금 지급=자녀장려금 신청규모

2. (시간)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화

□ 임신·출산기 근로시간 단축(2-1-가,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여성근로자의 만혼 등으로 인하여 유산·사산 및 조산 등을 예방하고, 임신·출산기 여성근로자 보호·휴가급여를 현실화하여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고용 기피 요인 해소

- (성과) 성과지표 1. 근로기준법 개정, 성과지표 2.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50% 달성, 비예산사업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 완료(한국여성정책연구원, '18.12월), 전주혜의원 법안 발의('20.7월)
- (임신 중 육아휴직) 한정애·전봉민 의원안('19.5월) 발의, 뉴딜 법제도 개선과제로 정부안 환노위 제출('20.10.23)
- (임신 중 육아휴직)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정부안 발의('20.10.23.)
-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현실화) '19년 상한액 인상(160→180만원) 전면 시행('19.1월~) 및 '20년 상한액 인상(180만→200만원)('20.1월)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없어 무조건적인 수용 의무(유급으로 부여)가 있고, 최근의 출산육아기 근로자 지원 제도 확대 등으로 영세 사업장의 부담 가중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 필요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임신 쏠기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확대 추진
 - (임신 중 육아휴직)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정부안, '20.10.23. 제출) 국회통과 추진*

* '21.5.18. 임신중 육아휴직 허용 관련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11.19. 시행

〈표 2-15〉 임신·출산기 근로시간 단축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2-1-기 임신·출산기 근로시간 단축	1. 근로기준법 개정	1	1	0.5	50	1	1	0	0	-	-	-	-	비예산사업(시행계획에 명시)			
	2.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1	1	0.5	50	1	1	0	0	-	-	-	-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1. 근로기준법 개정=근로기준법 개정, 성과지표 2.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남녀고용평등법 개정

□ 육아·돌봄 근로시간 단축(2-1-나,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돌봄휴가를 활용하도록 하여 출산·양육부담이 가중되는 취업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 (성과) 성과지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 목표치 6,610명 대비 실적치 14,698명으로 222.4% 달성, 예산 51,700백만 원 전액 집행
 -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20.2.28)
 -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시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20.2.28)
 - 가족돌봄휴가 제도 도입('20.1.1.)
 - 감염병 확산 등 비상시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 근거 마련('20.9.8)
 - '20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시행('20.3월~12월)
 - 약 14만 명의 근로자에게 가족돌봄비용 529억 원 지원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가족돌봄휴가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 실시(카드뉴스 제작, 사업장 이메일 발송 등)
 -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을 통한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의 10시 출근 지원 지속(연중)

〈표 2-16〉 육아·돌봄 근로시간 단축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2-1-나 육아·돌봄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	6,610	6,610	14,698	222.4	4,350	4,350	5,660	130	-	-	3,820	-	39,200	51,700	51,700	100.0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 수

□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등 근로시간 유연화 기반 마련(2-1-다,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근로시간 단축 사유, 사용자의 의무 등을 단일법령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근로시간 결정의 주도권을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촉진
- (성과) 성과지표 청구권 도입 완료(「근로시간 단축 청구권」도입 완료('20.1.1.), 비예산사업
 -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이드 북 발간·배포(1월)
 - 근로시간 단축제도 홍보(3월~)
 -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실태 설문조사 결과 발표(9월)
 -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실태 조사 연구용역 추진(5~11월)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제도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안내 및 홍보 지속 추진

〈표 2-17〉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등 근로시간 유연화 기반 마련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2-1-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등 근로시간 유연화 기반 마련	청구권 도입	청구권 도입	청구권 도입	청구권 도입 완료	100	-	-	-	-	-	-	-	-	비예산사업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청구권 도입=청구권 도입 완료

□ 임신·출산기 근로시간 단축(남성 육아휴직·출산휴가 사용 확산(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강화)(고용부))(2-2-가-①,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남성의 육아참여를 활성화하여 남녀 공동 육아 분위기 확산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활용 확대
- (성과) 성과지표 1. 남성육아휴직자 비율 목표치 19.5% 대비 실적치 24.5%로 125.6% 달성, 성과지표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도입 2019년 법개정 완료, 예산 <육아휴직급여(아빠육아휴직 보너스)> 1,224,320백만 원 중 1,215,500백만 원 집행(집행률 99.3%), <배우자출산휴가급여> 7,013백만 원 전액 집행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20년 제도 사용인원은 13,507명으로 전년 대비 37.9% 증가
 - (육아휴직) 같은 자녀에 대해 근로자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개정('19.12.24) 및 시행('20.2.28)

- (예산 미집행 사유) 출생아 수 급감, 직장 내 일·가정양립제도 확산의 한계, 남성비중 증가에 따른 평균 사용기간 감소 등에 기인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여성에게 집중된 가사·육아부담, 사내눈치 등 사회적 인식 부족이 남성 육아휴직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
 - (배우자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신설에 대해 보도자료 브리핑 등을 통한 언론 집중 홍보 및 카드뉴스, 리플릿 등 온·오프라인 홍보 지속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반기별 남성육아휴직 실적 분석 등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한 언론 집중 홍보

□ 남성 육아휴직·출산휴가 사용 확산(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강화)(2-2-가-②, 행정안전부)

- (사업내용)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인상' 등 육아휴직수당 제도 개선
- (성과) 성과지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강화(만원) 목표치 250 대비 실적치 250으로 100% 달성, 예산 각 자치단체 인건비 예산에서 집행
 - 육아휴직 대상자가 휴직 대신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지정시, 매주 최초 5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인상하여, 소득 감소로 인해 제도 활용이 어려웠던 남성 육아휴직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
 - 한부모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을 인상하여, 한부모 공무원의 육아휴직 장려 및 육아부담 경감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민간부문 육아휴직수당 현황 등 육아휴직수당 관련 동향 파악을 통한 제도 개선 방안 모색

□ 남성 육아휴직·출산휴가 사용 확산(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강화)(2-2-가-③, 인사혁신처)

- (사업내용)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인상' 등 육아휴직수당 제도 개선
- (성과) 남성 육아휴직·출산휴가 사용 확산(단위: 만원) 목표치 200 대비 실적치 200으로 100% 달성. 비예산사업(각 부처 인건비 예산에서 집행)
 - 매주 최초 5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인상하여, 소득 감소로 인해 제도 활용이 어려웠던 남성 육아휴직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
 - 한부모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을 인상(첫 3개월 상한 250만원)하여, 한부모 공무원의 육아휴직 장려 및 육아부담 경감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민간부문 육아휴직제도 현황 등 육아휴직수당 관련 동향 파악을 통한 제도 개선 방안 모색

〈표 2-18〉 남성 육아휴직·출산휴가 사용 확산(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강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2-2-가-① 임신·출산기 근로시간 단축	1. 남성육아휴직자 비율 ¹⁾	19.5	19.5	24.5	125.6	-	-	-	-	-	-	-	-	1,194,854	1,224,320	1,215,500	99.3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도입	19년도 도입 완료				-	-	-	-	-	-	-	-	39,350	7,013	7,013	100.0
2-2-가-② 남성 육아휴직·출산 휴가 사용 확산(아빠육아 휴직 보너스제 강화)(행안부)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강화(만원)	-	250	250	100	250	250	250	100	-	-	-	-	각 자치단체 인건비 예산에서 집행			
2-2-가-③ 남성 육아휴직·출산 휴가 사용 확산(아빠육아 휴직 보너스제 강화)	남성 육아휴직· 출산휴가 사용 확산 (단위 : 만원)	-	200	200	100	250	250	250	100	-	-	-	-	비예산(각 부처 인건비 예산에서 집행)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1. 남성육아휴직자*20년 편성 예산상 육아휴직 인원에 '19년 남성육아휴직비중 반영하여 증, 성과지표 2.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도입=법 개정여부 확인

□ 남성 육아 참여 확대 조기 정착(통계청)(2-2-나-①, 통계청)

- (사업내용)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인상' 등 육아휴직수당 제도 개선
- (성과) 성과지표 해당없음, 예산 103백만 원 중 99백만 원 집행(집행률 96.1%)
 - 우리나라 국민의 시간활용 통계를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에 따라 성인의 성별 가사노동 시간 공표
 - 「2019년 생활시간조사」마이크로데이터 제공
 - 「2019년 생활시간조사」보고서 발간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생활시간조사 주기 단축 요청: 여가부, 한국은행 등은 생활 시간조사 결과의 정책지표 활용을 위하여 실시 주기를 단축(5년→3년)할 것을 요청

1) 성과지표 변경: 기존 시행계획 상 성과지표는 '남성육아휴직자'로 2020년도 성과지표 목표치도 25,000이었으나, 남성육아휴직자의 전체 규모(수)보다 비율로 보는 것이 성평등 관점에서 더욱 적절하고 남성육아휴직의 증가추이를 파악하는데 용이하여 성과지표 및 성과지표 목표치를 '남성육아휴직자비율', 2020년도 19.5%로 변경함.

- 조사 주기 단축에 따른 조사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연구용역을 통해 파악하고 시험조사를 실시하여 차기 조사 준비

□ 남성 육아 참여 확대 조기 정착(가사노동 성별분업 실태조사)(여가부)(2-2-나-②, 여성가족부)

- (사업내용)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인상' 등 육아휴직수당 제도 개선
- (성과) 성과지표 가족실태조사 실시 본조사 실시(달성률 100.0%), 예산 1,388백만 원 중 1,279백만 원 집행(집행률 92.1%, 집행잔액)
 - 가사 참여, 자녀 돌봄, 가족원 돌봄 등의 문항을 조사하여 가족의 평등한 가사·돌봄 수행 수준 측정

□ 남성 육아 참여 확대 조기 정착(대중매체 모니터링)(여가부)(2-2-나-③, 여성가족부)

- (사업내용)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대중매체에 대해 성인지 관점을 가지고 내용 분석을 통해 차별·비하·폭력 등을 조장하는 부정적 사례에 대해 시정을 추진하여 양성평등한 미디어 환경 조성
- (성과) 성과지표 모니터링 보고서 목표치 17개 대비 실적치 17개로 100% 달성, 예산 350백만 원 중 326백만 원 집행(집행률 93.1%)
 - 민간 협력기관 확대 운영을 통한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 및 성차별 사례 개선요청 강화
 - 변화된 교육환경에 따라 청소년 대상 성평등 미디어 교육 대면
 - 미디어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시민참여 온라인 캠페인(5회) 및 미디어 인식개선 강연회·포럼(2회) 실시
 - (선진국 유사 사례 분석) (UNESCO) 자유, 다양성, 젠더 포용적 미디어 사업(~2020)
 - (예산 미집행 사유) 예산액(350) 내 인건비(50)가 일부 미집행(담당 인력 중도 입사에 따른 인건비 일부 미집행)

□ 남성 육아 참여 확대 조기 정착(성평등 교육 강화)(여가부)(2-2-나-④, 여성가족부)

- (사업내용)성평등한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하고 사회문화 및 일상생활 전반에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필요: 지역양성평등센터를 통해 초·중등학교, 지역주민 등 대상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실시
- (성과) 성과지표 교육참여자 만족도(점) 목표치 92.8점 대비 실적치 93.4점으로 100.6% 달성, 예산 120백만 원 전액 집행

- 지역 단위 양성평등정책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양성평등 환경 조성 기반 마련
- 지역사회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운영
- 지역 주민 대상 성평등 교육활동가 양성 및 교육 역량강화 지원을 통하여 성평등 문화 확산 저변 확대
- 주민 참여 지역 정책 모니터링을 통한 지역 성평등 정책 개선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지역사회 양성평등 환경 조성 및 평등 가치와 포용성 확산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 중이나,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지역 간 불균형 발생
 -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성 격차 해소를 위한 전국적 확대 및 법적 근거 마련, 인력 및 예산확충 등 필요
 - 지역양성평등센터 법적근거 마련 및 전국적 확대 추진
 - 지역양성평등센터를 통해 지역 사회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 주민 참여 정책 모니터링 등 다양한 정책 수요 대응 및 성평등한 지역 환경 조성
 - 지역 내 양성평등 활동가 양성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양성평등정책 추진 역량 강화

□ 남성 육아 참여 확대 조기 정착(신규)(성평등 교육 강화)(남성육아 관련홍보 및 아파와 함께하는 등·하원 운동 추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2-나-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사업내용) 남성의 육아참여를 활성화하여 남녀가 함께 하는 육아문화 조성

○ (성과) 성과지표 함께육아 인식확산 목표치 68% 대비 실적치 67% 달성률 98.5%, 예산 2,000백만 원 전액 집행

- (정책공모전) 저출산고령화 정책 대국민 공모('20.5.8~24), 총 4,615개 아이디어 접수, 이중 함께육아를 촉진하는 성평등 노동, 일·생활 균형 아이디어 다수 접수
- (정책토론회) 누구나 사용하는 육아휴직 만들기를 위한 '일하는 모든 부모를 위한 육아휴직 제도 개편방안 정책토론회('20.7.20)
- (홍보영상) 함께육아 문화 및 사회적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한 4차 기본계획 '일·생활균형' 정책에 대한 홍보영상 제작·확산('20.12)
- (기타) 아파육아 촉진을 위한 아파 육아휴직의 경험을 소개하는 고재열 기자 칼럼('19.11~'20.5), 카드뉴스 등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라디오광고(성평등 육아환경 조성, 아파 육아휴직) 등을 제작, 확산
- (목표달성 부진사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함께육아 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정책 총괄기관으로, '남성 육아참여'를 매년 주요 캠페인으로 전개하기 어려운 근본적 한계를

지녀, '20년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4차 기본계획을 구성, 분야별 정책홍보에 주력하여 함께육아 메인으로 진행하지 못함.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위원회 주요 캠페인 외에도 남성의 육아참여 촉진 칼럼이나 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 확산하여 지원하고자 함
- 함께육아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이 타부처도 공동 추진하는 주제로, 위원회는 관련부처 캠페인도 적극 지원하고자 함

〈표 2-22〉 남성 육아 참여 확대 조기 정착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2-2-나-① 남성 육아 참여 확대 조기 정착	해당없음	-	-	-	-	-	-	-	-	-	-	-	-	103	103	99	96.1
2-2-나-① 남성 육아 참여 확대 조기 정착	가족실태조사 실시	본조 사	본조 사	본조 사	100	시행 조사	시행 조사	시행 조사	100	-	-	-	-	1,388	1,388	1,279	92.1
2-2-나-② 남성 육아 참여 확대 조기 정착	모니터링 보고서	17	17	17	100	15	17	17	113	-	-	-	-	350	350	326	93.1
2-2-나-③ 남성 육아 참여 확대 조기 정착	교육참여자 만족도	92.8	92.8	93.4	100.6	80	80	92.3	115.4	-	-	-	-	120	120	120	100.0
2-2-나-④ 남성 육아 참여 확대 조기 정착	함께육아 인식 확산	68	68	67	98.5	65	65	66.5	102.3	-	-	-	-	2,000	2,000	2,000	100.0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가족실태조사 실시=본조사; 성과지표 모니터링 보고서=내용분석(모니터링) 보고서 발간 개수; 성과지표 교육참여자 만족도=교육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 함께육아 인식확산= 68 71 '남녀함께육아' 광고 시청 전후 호감도 변화조사

□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 강화(중소기업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강화)(2-3-가-①,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과 고용안정 도모

○ (성과) 성과지표 지원금 집행실적 중 중소기업 근로자 비율(%) 목표치 63.1% 대비 실적치 91.1%로 144.4% 달성, 예산 93,642백만 원 중 89,697백만 원 집행(집행률 95.8%)

- (지원 확대)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단가 인상(월60 → 월80만원)을 위한 고시 및 지침 개정('20.1월 시행)

- (지급요건 완화) 장려금 지급요건 및 지급방식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20.3월 시행)

- (예산 미집행 사유) 코로나19로 대체인력 채용이 저조하여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여 3차 추경 시 예산 일부 감액(93,642백만원→86,618백만원)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육아휴직등을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확대·신설 추진('21.1월)
-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 강화(가족친화기업인증 및 컨설팅, 인센티브지원) 일·가정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 확산(가족친화인증제)(2-3-가-②, 여성가족부)
- (사업내용) 기업의 가족친화경영을 확산하여 근로자가 직장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성과) 성과지표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수 목표치 4,300개 대비 실적치 4,340개로 100.9% 달성, 예산 1,283백만 원 전액 집행
 -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이 4,340개사로 전년(3,833개사) 대비 13% 증가해, 가족친화경영과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 기여
 -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권역별 설명회 개최(9회, 375사 참석) 및 사전 컨설팅 지원(459개사)
 -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업하여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추가 발굴('17년 143개→'18년 186개→'19년 207개→'20년 220개)
 - 일하는 방식 개선,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인증 후 컨설팅 지원 확대('18년 150개사→'19년 200개사→'20년 314개사)
 -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한 지역 유관기관 간 '가족친화문화확산 협의회'(12회) 운영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가족친화인증기업(관) 신규 확대를 위한 장단기 방안 마련 및 기존 가족친화인증기업(관)에 대한 체계적 사후관리를 통한 인증제 활성화·내실화 도모로 가족 친화적 기업 및 사회 문화 확산
-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 강화(일·생활 균형 캠페인 집중 추진)(2-3-가-③,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일하는 방식과 문화 개선으로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 및 일·생활균형의 일터 문화 확산
 - (성과) 성과지표 캠페인 참여기업수(누적)(개소) 목표치 2,400개 대비 실적치 2,548개로 106.2% 달성, 비예산사업
 -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방역과 연계한 가족돌봄, 재택근무 등 일생활 균형 제도 확산을 통한 '20년 캠페인 참여기업 1,108개소 발굴(신규 742, 연장 366)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현장 중심의 인식개선 활동 추진에 애로사항 발생
 -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홍보계획 마련, 시행
 - 지역 단위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일생활 균형 지역추진단 등과 협업체계 구축
 - 매년 공익광고 제작 및 송출, 온·오프라인 홍보채널 다양화,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통해 일생활 균형 인식개선 강화

〈표 2-23〉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 강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2-3-가-①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 강화	지원금 집행실적 중 중소기업 근로자 비율(%)	63.1	63.1	91.1	144.4	60.1	60.1	77.8	129.5	-	-	54.1	-	93,642	93,642	89,697	95.8
2-3-가-②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 강화	가족친화인증기업· 기관 수	4,300	4,300	4,340	100.9	3,800	3,800	3,833	100.8	3,300	3,300	3,328	100.8	2,447	1,283	1,283	100
2-3-가-③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 강화	캠페인 참여기업 수(누적) (개소)	2,400	2,400	2,548	106.2	2,300	2,300	2,621	114.0	1,200	1,200	2,122	176.8	비예산사업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지원금 집행실적 중 중소기업 근로자 비율(%)=고용보험 전산망; 성과지표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수=가족친화인증
유효한 기업·기관 수; 성과지표 캠페인 참여기업 수(누적)(개소)=일·생활균형 관리시스템 통계

□ 다양한 근무형태 활성화(다양한 근무형태 활성화)(2-3-다-①,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일하는 방식과 문화 개선으로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 및 일·생활균형의 일터 문화 확산
- (성과) 성과지표 1. 승인사업장 수(개소) 목표치 850개 대비 실적치 4,947개로 582.0% 달성, 성과지표 2. 지원 인원 수 목표치 7,800명 대비 실적치 30,088명으로 385.7% 달성, 예산 44,184백만 원, 집행액 44,027백만 원 집행(집행률 99.6%,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의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제 활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추경, 기금변경 등을 통해 예산 증액)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절차 간소화, 고용장려금 예산 확대, 사업 홍보 강화 추진
 - '20년 유연근무제 지원 근로자의 고용유지율이 85.6%(전년 82.4% 대비 3.2% 상승)로 재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에도 기여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선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요건 완화 등 제도 개편 추진
- 유연근무제 우수사례 발굴·확산, 다양한 온라인 채널 통한 사업 홍보 추진으로 인식개선 및 사업 활성화 지속 추진

□ 다양한 근무형태 활성화(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2-3-다-②,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일과 자녀보육, 퇴직준비, 학업 등 병행)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고용문화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등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 (성과) 성과지표 지원자 수 목표치 7,500명 대비 실적치 20,837명으로 277.8% 달성, 예산 44,778백만 원, 집행액 44,021백만 원(집행률 98.3%)
 - 제도 홍보 및 지원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전환형 시간제 일자리 집행실적이 크게 증가
 - 특히,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자녀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재직자의 고용안정 및 일·생활 균형에 기여

〈표 2-24〉 다양한 근무형태 활성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2-3-다-① 다양한 근무형태 활성화	1. 승인사업장 수(개소)	850	850	4,947	582.0	800	800	956	119.5	220	220	992	450.9	20,418	44,184	44,027	99.6
	2. 지원 인원 수	7,800	7,800	30,088	385.7	7,600	7,600	6,824	89.8	3,000	3,000	6,571	219.0				
2-3-다-② 다양한 근무형태 활성화	지원자 수	7,500	7,500	20,837	277.8	10,700	10,700	7,477	70.0	9,150	9,150	7,872	86.0	13,621	44,778	44,021	98.3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1 승인사업장(개소)=고용보험 전산망 분석, 성과지표 2. 지원 인원 수=고용보험 전산망 분석; 성과지표 지원자 수=매년 지원 승인원 산출

□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공공부문 근무환경 조성(2-3-다-③, 인사혁신처)

- (사업내용) (대체인력 활용) 공직 대체인력 활용 활성화를 통해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 (유연근무제 정착 및 복무제도 개선) 공직사회에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제를 정착 및 복무제도 개선
- (성과) 성과지표 1. 대체인력 활용률(%) 목표치 87.5% 대비 실적치 93.6%로 107.0% 달성, 성과지표 2. 공직사회 유연근무제 확산(%) 목표치 20% 대비 실적치 123.9%로 619.5% 달성, 비예산사업

-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활용률 증가: '20년 목표(87.5%) 대비 실적(93.6%) 6.1%p 초과 달성
- 나라일터 내 대체인력뱅크 홈페이지 내용 전면 개편('20. 7)
- (유연근무 활성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재택근무 등 다양한 유연근무를 적극 권장하는 복무관리 지침 등을 시행(총 17차례)하여 공직사회의 유연근무를 활성화하는 기반 마련
- (복무규정 개정) 정책현장, 전문가 의견, 민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위한「국가공무원 복무규정」개정('20. 10)
- (지속가능 근무혁신 기반마련) '방역과 일과 삶이 공존'하는 근무여건 조성 및 조직문화 개선 중심의 새로운 근무혁신지침 마련('20. 5)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대체인력 통계 측정 등) 3분기 내 중앙부처별 육아휴직자 및 대체인력 통계 측정 및 대체인력 활용에 대한 안내 및 정보 제공(연중/수시)
 - (유연근무제 활성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 근무여건의 확산·정착 추진
 - (가정친화적 근무여건 확충) 난임휴가 등 복무제도 개선, 가정 친화적 복무제도 활용 장려 등 저출산 시대에 적합한 근무여건 확충

〈표 2-25〉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공공부문 근무환경 조성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2-3-다-③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공공부문 근무환경 조성	1. 대체인력 활용률(%)	87.5	87.5	93.6	107.0	87.0	87.0	93.2	107.1	85.7	85.7	89.7	104.7	비예산사업			
	2. 공직사회 유연근무제 확산(%)	20	20	123.9	619.5	19.5	19.5	68.6	351.8	19.0	19.0	65.9	346.8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1. 대체인력 활용률(%)=(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육아휴직자) × 100, 성과지표 2. 공직사회 유연근무제 확산(%)=(연간 유연근무제 이용자 수/대상인원) × 100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초기 집중 지원(2-4-가,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통해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지원하고 육아기 근로자의 고용 안정 도모: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 (성과) 성과지표 아바 육아휴직 보너스제 지원인원 목표치 10,371명 대비 실적치 11,768명(달성률 113.5%), 예산 1,224,320백만 원 중 1,215,500백만 원 집행(집행률 99.3%, 집행잔액)
 - 부부동시 육아휴직 허용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20.2.28.)

-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인상(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은 통상임금 80%(상한 120만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50%(상한 120만원)
- 보도자료 배포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이를 부담하는 고용보험(실업급여 제정)의 재원 고갈 상황이 심각→모성보호 육아지원급여를 위한 일반회계 지원 확대 필요
 -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 실시(카드뉴스 제작 등)

〈표 2-26〉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초기 집중 지원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2-4-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초기 집중 지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지원인원	10,371	10,371	11,768	113.5	-	-	-	-	-	-	-	-	1,194,854	1,224,320	1,215,500	99.3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지원인원=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지원인원

□ 육아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 최저보험료 부과(2-4-나,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육아휴직 중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

○ (성과) 성과지표 육아휴직자 건보료 경감 계속(달성률 100%, 비예산사업)

- '19.1.1. 이후 복직자(납입고지 유예 종료)부터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최저 보험료('20년 본인부담금 기준 9,300원) 부과

〈표 2-27〉 육아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 최저보험료 부과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2-4-나 육아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 최저보험료 부과	육아휴직자 건보료 경감	계속	계속	시행	100.0	시행	시행	시행	100	고시 개정	고시 개정	고시 개정	100	비예산사업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육아휴직자 건보료 경감=육아휴직자 건보료 경감 관련 고시 개정 및 경감 시행 여부

3. (돌봄)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 보육의 공공성 강화(국공립 어린이집 확충)(3-1-가,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 종일 보육 내실화 등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발달과 일 생활균형 지원

○ (성과) 성과지표 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소 수 목표치 550개 대비 실적치 581개로 105.6% 달성, 성과지표 2. 공공보육 이용률(%) 목표치 35% 대비 32% 달성(달성률 91.4%), 예산 146,688백만 원 중 118,935백만 원 집행(집행률 81.1%)

- 늦은 시간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으며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581개소 확대를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 및 어린이집 이용 만족도 제고
- (예산 미집행 사유) 현재 예산서 상 단가 및 국고보조율이 낮게 편성되어 실제 소요 비용의 31.4%(실질보조율)만 보조하고 있음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낮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방식에 수요 신청이 집중되어 불용 발생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현재 예산서 상 단가 및 국고보조율이 낮게 편성되어 실제 소요 비용의 31.4%(실질보조율)만 보조하고 있으므로 따라,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 필요
 - 대규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민간부문의 민원 증대를 고려하여 상생방안 모색 필요
 - 예산확충 : 지자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신축 지원단가 현실화 및 차등보조율 도입을 위해 재정당국과 지속 협의 필요
 - 이해관계자 이견·갈등 조정 : 민간매입 및 장기임차 등 기존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확대하여 민간과 상생하는 어린이집 확충 지속 추진

〈표 2-28〉 보육의 공공성 강화(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3-1-가 보육의 공공성 강화(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1.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소 수	550	550	581	105.6	550	550	654	118	450	450	574	127	146,729	146,688	118,935	81.1
	2. 공공보육 이용률	35	35	32	91.4	30	30	28.2	94	28	28	28.5	102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소 수=국공립어린이집 사업 선정 개소 수, 성과지표 2. 공공보육 이용률(%)=(공공보육시설 이용아동)/전체 어린이집 이용아동

□ 직장어린이집 확대(복지부)(3-1-나-①,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명단 공표 및 이행 강제금 등 수단을 통한 사업장의 의무이행 강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으로 설치의무 대상 확대하는 등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성과) 성과지표 1. 의무이행률(%) 목표치 88.4% 대비 실적치 90.2%로 102.0% 달성, 성과지표 2. 제도 개선 추진 목표치 법령 개정 대비 의견 수렴 및 대응으로 98% 달성, 예산 해당 없음.
 - 직장어린이집 설치 목표 의무이행률 초과 달성 (목표치 대비 102%)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명단공표)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 조사 및 명단 공표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률 제고
 - (제도 개선) 직장어린이집 설치 강화 관련 제도 개선사항 지속 발굴·추진

□ 직장어린이집 확대(3-1-나-②,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근로자들의 출산·육아로 인한 육아부담을 덜어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
- (성과) 성과지표 직장어린이집 수(개소) 목표치 1,203개 대비 실적치 1,216개로 101.1% 달성, 예산 133,720백만 원 중 123,973백만 원 집행(집행률 92.7%)
 - (공모 선정) 4차례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12개소 선정(상생형 11개소 포함)
 - (추진 성과)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등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수요를 적극 발굴한 결과 직장어린이집 개소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 (예산 미집행 사유) 코로나19로 인한 직장어린이집 신규 설치수요 감소 고려, 3차 추경시 예산 감액(133,720백만원→123,220백만원)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직장어린이집의 내실 있는 운영과 보육의 질 유지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단가 인상 추진
 -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어린이집 설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함께 설치하는 공동직장어린이집,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노력

〈표 2-29〉 직장 어린이집 확대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3-1-나-① 직장어린이집 확대	1. 의무이행률(%)	88.4	88.4	90.2	102.0	87.5	87.5	90.1	103.0	-	-	86.7	-	해당없음			
	2. 제도개선 추진	법령 개정	법령 개정	의견 수렴 및 대응	98	법령 개정	법령 개정	-	-	-	-	-	-				
3-1-나-② 직장어린이집 확대	직장어린이집 수(개소)	1,203	1,203	1,216	101.1	1,159	1,159	1,153	99.5	1,056	1,056	1,111	105.2	133,720	133,720	123,973	92.7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1. 의무이행률=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이행률 (이행사업장/전체의무사업장×100), 성과지표 2. 제도 개선 추진=법령개정 여부 확인: 성과지표 직장어린이집 수(개소)=연도말 운영 중인 직장어린이집 수

□ 종일보육 내실화(2-1-가(3-1-다),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아동·부모의 보육 수요·이용, 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반영한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시행하여 보육 서비스의 질 개선: 종일보육 내실화를 위해 보육교사 등 인력 배치, 현행 보육지원구조(12시간 기본)를 ‘기본 + 연장보육’ 체계로 재구성
- (성과) 성과지표 시범사업 평가 평가 실시(달성률 100%), 예산 보육료, 인건비 등 세부사업 예산으로 달성률 산출 불가(‘보육지원체계 개편’은 보육료, 인건비 등 어린이집 운영관련 예산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별도 예산 집행 실적 미기재)
 - 연장보육(16:00~19:30) 도입, 연장보육교사 신규 배치를 통해 보육교사 업무부담 경감 및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
 - 기본 및 연장보육 구분, 연장보육료 신규 지원으로 부모가 눈치보지 않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 조성
 - 보육지원체계 개편 현황 모니터링 및 보육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 추진
 - 제도개편에 대한 현장이해도 증진 및 홍보를 위한 교육영상 제작, 권역별 간담회를 통한 현장 의견 수렴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보육지원체계 개편 내실화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표 2-30〉 종일보육 내실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2-1-가 종일보육 내실화	시범사업 평가	평가 실시	평가 실시	평가 실시	100.0	신규	신규	-	-	-	-	-	-	보육료, 인건비 등 세부사업 예산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시범사업 평가=사업 평가 실시 여부

□ 보육품질 향상(3-1-라,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 및 적정 처우 보장 등을 통하여 영유아에 대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 (성과) 성과지표 보조교사 배치율 목표치 23.0% 대비 실적치 27.7%로 120.4% 달성, 예산 1,286,844백만 원 전액 집행
 - (학과제 도입) ‘학과제 방식의 보육교사 양성체계 도입을 위한 운영체계 구축’(20.3월 ~ 11월) 연구를 통해 학과 인정방식 개발 및 수행기관 역할 방안 등 마련
 - (장기 미종사자교육 도입) 장기간 보육현장을 떠난 보육교직원의 재취업전 사전 교육 이수 의무화(시행규칙 개정 시행, '20.3월)
 - (보조·연장보육교사 지원) '20년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보육교사 적정 배치 지원을 위해 추경 편성 지원(413억원)
 - (대체교사 지원) 담임교사의 연가, 보수교육 등 보육공백 방지를 위한 대체교사 확보 지원('20년 3,436명, 전년대비 700명 증)
 - (담임수당 인상) '20년 영유아반 담임교사 수당을 인상하고, 연장보육교사 전담수당 신규 반영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과제 방식의 보육교사 양성’ 방안 지속 검토
 -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보조·연장교사와 대체교사 인원 확대 및 예산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과 지속 협의
 - 보육교직원 대상 보수교육의 교과목 및 교육방식, 교육체계 등에 대한 전문가, 현장의 견수렴을 통해 보수교육 개편안 마련

〈표 2-31〉 보육품질 향상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3-1-라 보육품질 향상	보조교사 배치율	23.0	23.0	27.7	120.4	22.9	22.9	23.1	100.9	-	-	11.4	-	1,205,622	1,286,844	1,286,844	100.0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보조교사 배치율=보조교사 수/영아반 담임교사 수

□ 수요자 맞춤형 보육지원(3-1-마,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다양한 보육 수요에 부응하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 다양화 및 가정양육지원 서비스 내실화, 수요자 중심 평가 등 안심여건 강화
- (성과) 성과지표 1. 보육료 지원 만족도 목표치 77.8 대비 실적치 74.1(달성률 95.2%), 성과지표 2. 시간제 보육반 1개반당 월평균 이용건수 목표치 68.0 대비 실적치 16.6(달성률 24.4%), 성과지표 3. 어린이집 평가(인증) A,B 등급비율(단위: %) 목표치 70 대비 실적치 85로 달성률 121.4%, 예산 <영유아보육료 지원(0~2세 및 시간연장형보육료)> 4,694,123 백만 원 전액 집행, <시간제보육 지원> 37,699백만 원 전액 집행,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246,745백만 원 전액 집행,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30,930백만 원 전액 집행, <평가인증> 8,910백만 원 전액 집행
 - (보육료 지원) 부모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보육료 지속 지원
 - (보육서비스 다양화) 보육수요에 맞는 어린이집 이용 지원
 - (양육수당 지속 지원)
 - (가정양육 지원 확대)
 -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육아종합지원센터 7개소 확충하여 부모교육 상담, 장난감 대여 등 종합적인 가정양육 서비스 제공
 - (어린이집 평가) 어린이집 평가 시행 및 운영체계 등 내실화
 - (열린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투명운동을 위한 열린어린이집 선정 독려, 전년대비 약 42% 증가한 7,532개소(전체 약 23%) 선정·운영
 - (목표달성 부진 사유)
 - (보육료 지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린이집 미등원이 많아지면서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임
 - (가정양육 지원 확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방역지침에 따라 시간제 보육사업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 대상자 감소('20.2~6)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보육료 지원) 부모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지원단가 인상 등을 통해 보육료 지원 만족도 향상 추진
- (보육서비스 다양화) 맞벌이 야간근무 가구 등 불가피한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그 밖의 연장형 보육’ 지속 제공
- (양육수당지원) 양육수당 지속 지원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운영방식 변경 등 사업 내 실화 추진
- (어린이집 평가) 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아동인권·건강·안전 중심의 어린이집 평가 체계 개편 추진
- (열린어린이집) 열린어린이집 선정 독려, 신설 국공립어린이집의 열린어린이집화 등 추진

〈표 2-32〉 수요자 맞춤형 보육지원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3-1-마 수요자 맞춤형 보육지원	1. 보육료 지원 만족도	77.8	77.8	74.1	95.2	78.5	78.5	77.8	99.1	70	70	74.7	106.7	4,775,504	4,694,123	4,694,123	100.0
														128,809	-	-	-
	2. 시간제 보육반 1개반당 월평균 이용건수	68.0	68.0	16.6	24.4	62.5	62.5	68.0	108.8	47.0	47.0	62.5	133.0	32,900	37,699	37,699	100.0
														1,221,636	1,246,745	1,246,745	100.0
	3. 어린이집 평가(인증) A,B 등급비율 (단위: %)	70	70	85	121.4	신규	신규	-	-	-	-	-	-	30,930	30,930	30,930	100.0
														8,910	8,910	8,910	100.0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1. 보육료 지원 만족도(0.4)=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 성과지표 2. 시간제 보육반 1개반당 월평균 이용건수= $\sum_{i=1}^{12}$ (월별 총이용건수 / 월별 시간제보육반수)/12, 성과지표 3. 어린이집 평가(인증) A,B 등급비율 (단위: %)=평가(인증)결과 어린이집 수(A*)/ 전체 어린이집 수(B) × 100 (* A = 평가인증 유지 어린이집 + 평가 A, B 등급 어린이집)

□ 보육시설 안전 및 건강한 환경 조성(3-1-바,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어린이집 등·하원 정보를 활용하여 안심보육환경 마련 및 보육에만 전념하는 업무환경 조성, 고농도 미세먼지 증가에 따라 취약계층인 영유아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미세먼지 대응체계 강화를 통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의무화를 통하여 어린이집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 (성과) 성과지표 1.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점) 목표치 76.7점 대비 실적치 76.9점으로 100.3% 달성, 성과지표 2.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율(%) 목표치 98% 대비 실적치 100%(달성률 102.0%), 성과지표 3. 하차확인 장치설치율 목표치 99% 대비 실적치

100%(달성률 101.0%), 예산 19,777백만 원 전액 집행

1. 업무환경 개선 및 자동화

- (안심정보 전달체계 구축) 민간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안심정보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등·하원 시간을 자동감지하고, 학부모에게 실시간 정보 제공
- (주요업무 프로세스 전산화) 감지된 등·하원 정보를 기반으로 출결 정보를 자동생성하고 이에 따른 보육료 관리 전산화 및 자동화

2. 미세먼지 대응·관리 강화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대응요령 등을 추가하는 「어린이집용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개정·배포('19.2.7월)
- 대응매뉴얼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취약계층 건강보호 조치를 적극 실시하도록 대응매뉴얼 이행 상황 점검 및 공기청정기 설치·운영 전수조사(3월)
- 어린이집 안전점검 시 공기청정기 관리 상태 점검을 통한 실내공기질 관리('19년 하절기 및 동절기, 약 12천개소)
- 국조실, 환경부 등 유관기관의 미세먼지 관련 제도 개선 및 이행 등 적극 협조(연중)

3.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 통학차량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령 개정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1. 업무환경 개선 및 자동화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개선을 통해 적기 민원응대 및 사용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등·하원 정보 연계를 통해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운영비 절감

2. 미세먼지 대응·관리 강화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및 미세먼지 대응 TF 과제 협조(연중 상시)
- 등·하절기 어린이집 안전점검 시 어린이집에서 건강보호조치 실시 현황 점검
- 미세먼지 발생시 대응요령 및 공기청정기 관리 사항 등에 대한 보육교직원 대상 안전 교육 실시(3월~)

〈표 2-33〉 보육시설 안전 및 건강한 환경 조성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3-1-바 보육품질 향상	1. 보육통합 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점)	76.7	76.7	76.9	100.3	76.5	76.5	76.5	100	76.3	76.3	76.5	100.3	2,210	19,777	19,777	100.0
	2.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율(%)	98	98	100	102.0	97	97	97	100	-	-	96	-				
	3. 하차확인장치 설치율(%)	99	99	100	101.0	97	97	100	103.1	-	-	95	-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1.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점)=조사항목별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들의 합계/항목 수; 성과지표 2.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율(%)=전체어린이집수/공기청정기 설치어린이집 수; 성과지표 3. 하차확인장치 설치율(%)=어린이통학차량대수/하차 확인장치 설치수

□ 국·공립 유치원 확대(3-2-가, 교육부)

○ (사업내용)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제고) 국·공립유치원 이용 비율을 '21년까지 40%로 확대하여 유아교육의 국가책임 확대 및 출발선 단계부터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16) 24.2%→('17) 24.8% →('18) 25.5% →('19) 28.5%), (만3~5세 누리과정 안착) 현장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유아·놀이 중심의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적용하고, 학부모의 교육·보육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학비·보육료 지원,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학부모 수요와 유치원 여건을 고려한 놀이와 쉼 중심의 내실있는 방과후 과정을 제공하여 유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

○ (성과) 성과지표 1.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목표치 34% 대비 실적치 29.8%(달성률 87.6%), 성과지표 2. 교원연수만족도(점) 목표치 80점 대비 실적치 88.7점(달성률 110.9%), 예산 3,989,979백만 원 전액 집행

1.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제고

- '20년 당초 목표(600 학급) 대비 140% 상회하는 총 800여개의 학급을 확충하여 학부모의 국공립유치원 수요에 부응

2. 만 3~5세 누리과정 안착

- 유아학비·보육료 도입 이후 “최초”로 단가 2만원 인상('13.~'19.)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및 보육료 22만원 →('20.) 24만원)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원비 안정화 유도

- '2019 개정 누리과정'의 현장 안착 및 교원의 실행력 지원을 위한 현장지원자료 8종 개발·보급, 개정 누리과정 교원 연수 등 추진

3.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 코로나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긴급돌봄 제공 및 등원 개학 이후에도 돌봄 중심의 방과후 과정 운영 지속
- 다양한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과후 과정 학급 확대(국공립 방과후 과정 운영 학급: '20.) 9,915학급 (전년 대비 900학급 이상↑)), 운영시간 다양화(아침·저녁·온종일 돌봄 등), 유 - 초 연계 돌봄(병설유치원-초등학교 통합 운영 : 32학급) 등 방과후 과정 내실화
- (목표달성 부진사유) '20년 800여 학급 확충(당초 목표인 600학급 대비 140% 이상 달성) 등 외연 확대뿐만 아니라 방과후 과정 내실화, 통학버스 운영 확대 등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노력 지속, 다만 코로나 19로 인한 유치원 휴업 장기화 및 가정 양육으로의 전환 등으로 인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확대 추진에 애로, 유아 발달 특성상 입학 후 기관 이동을 선호하지 않는 학부모 성향으로 인해 확충 후 정책효과 발생까지 시간이 필요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학부모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립유치원 분원장의 법적 근거 마련 및 학부모 수요, 시도별·유치원별 수용 여건에 따라 방과후 과정 참여 대상·시간 확대 추진

〈표 2-34〉 국·공립 유치원 확대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3-2-가 국·공립 유치원 확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34	34	29.8	87.6	29	29	28.5	98.3	26	26	25.5	98.1	4,031,608	3,989,979	3,989,979	100
	교원연수만족도(점)	80	80	88.7	110.9	75	75	87.2	116.2	신규	신규	-	-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1.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국공립유치원 원아 수/전체 유치원 원아 수×100, 성과지표 2. 교원연수만족도(점)=5점 척도로 조사 후 매우 불만족 0, 불만족 25, 보통 50, 만족 75, 매우 만족 100점으로 환산

□ 유아 학습권 보호(3-2-나, 교육부)

- (사업내용) 일방적 폐원 등으로부터 유아 학습권 보호 제도 마련, 법령 개정을 통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 (성과) 시행계획에 성과지표 없음. 비예산사업
 - 유치원 3법 개정('20.1.29.) 및 하위법령(유아교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0.7.30.)을 통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기반 마련
 - 시도교육청별 사립유치원 폐원 인가 관련 세부기준(규칙) 제정을 통하여 일방적 폐원으로 부터 유아 학습권 보호
 - 관할청에서 사립유치원의 폐쇄 인가를 내실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관할청의 폐쇄 인가 처리 기한을 종전 15일에서 60일로 연장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유아 학습권 보호를 위해 시도교육청 별로 정한 폐원 세부 기준을 바탕으로 사립유치원의 폐원 인가를 내실 있게 검토

〈표 2-35〉 유아 학습권 보호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3-2-나 유아 학습권 보호	성과지표 없음	-	-	-	-	-	-	-	-	-	-	-	-	비예산사업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없음.

□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3-2-다, 교육부)

- (사업내용)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18.10.25.)」의 주요 추진과제인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한 국가관리 회계관리시스템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도입 추진
- (성과) 성과지표 에듀파인 사용 유치원 수 목표치 3,584개 대비 실적치 3,584개(달성률 100.0%): 당초 시행계획 상 목표치인 3,801개원(19년 10월 정보공시 기준)을 휴·폐원이 적용된 유치원 수로 조정(20년 4월 정보공시 기준), 예산 6,607백만 원 중 5,090백만원 집행(집행률 77.0%)
 - (도입 근거 마련)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의 단계적 도입 및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1단계 도입) 현원 200명 이상과 사용희망 사립유치원 총 1,320개원 도입 완료
 - (전면도입) 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년 모든 사립유치원(3,584개원)에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도입
 - (소규모 유치원 지원) 소규모 유치원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출단계 최소화, 원장 회계관 직 겸직 및 1인 결재 허용 등 절차 간소화
 - (예산 미집행 사유) 위탁 사업 집행 잔액 및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집합교육 및 방문 컨설팅을 원격 지원으로 대체함에 따라 미집행 발생→대면 컨설팅 어려움을 고려하여 교육용 동영상 영역별(98개)로 맞춤(따라하기 및 교육용 2종) 제작하여 유튜브 교육부 TV 및 KERIS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하고, 비대면으로 상담이 가능한 원격지원서비스 운영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맞춤형 기능 개선) 사립유치원 현장 간담회를 통한 개선 의견 수렴 및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업을 통해 기능 개선 지속 추진

- (찾아가는 서비스) 사립유치원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공공철구 출동’ 서비스를 통한 사용 환경 점검 및 시스템 운영 방법 컨설팅 지원

〈표 2-36〉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3-2-다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	에듀파인 사용 유치원 수(원)	3,801	3,584	3,584	100.0	567	567	1,320	230	-	-	-	-	6,607	6,607	5,090	77.0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에듀파인 사용 유치원 수(원)=K-에듀파인 사용 유치원 수(원)

□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체계 안정적으로 정착(3-3-가-①, 교육부)

- (사업내용)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
- (성과) 초등돌봄 참여 학생 수(만명) 목표치 40.8만 명 대비 실적치 42.1만 명으로 103.2% 달성, 예산 381,401백만 원 중 381,394백만 원 집행(사회정책조정역량(범정부 공동 온종일 돌봄조정 지원) 용역 사업 낙찰 차액 발생으로 인한 미집행)
 - (온종일 돌봄 수혜인원 확대) '20년말 기준으로 초등돌봄교실과 마을돌봄기관((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 (여가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을 통해 42.1만명((정원기준):학교돌봄 28.5만명, 마을돌봄 13.6만명)으로 돌봄서비스 확대
 - (돌봄 프로그램 내실화) 지자체 담당자 업무매뉴얼 개발·배포 등을 통해 지역 간·기관 간의 돌봄서비스 편차 완화 및 프로그램 질 제고
 - (이용자 친화적 돌봄 제공) 온종일돌봄 이용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 추진으로 이용자 편의성 제고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학교 내 공간 부족 및 인력 확보·관리 문제 등 돌봄 인프라 확대 한계로 인해 현장 애로, 마을돌봄(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지역 내 공간 확보의 어려움으로 목표 대비 시설 확충 미흡('20년 목표 523개소→실적 424개소)
 - '21년 목표인 45.9만명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온종일돌봄 확대 추진
 - '21년 돌봄교실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학교) 돌봄교실 확충 수요조사 실시 및 확충 독려
 - 마을돌봄 및 학교돌봄과 동일하게 「정부24」 원스톱서비스에서 학교돌봄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불편 최소화('21년 하반기)

□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체계 안정적으로 정착(복지부)(2-1-가(3-3-가-②),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방과 후 돌봄, 문화·예술·체육 및 지역탐방 프로그램 제공 등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정 등의 육아부담 완화
- (성과) 성과지표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수(개소) 목표치(시행계획 목표치 400개에서 추경으로 인한 목표변경(400개소→350개소)) 350개 대비 실적치 251개(달성률 71.7%), 예산 41,107백만원, 집행액 36,335백만 원(집행률 88.4%)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하여 신축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 LH 신혼부부 특화단지 설치 시 다함께돌봄센터 포함하여 설치('21~'22년, 19개 지구)하였고, 향후에도 신혼희망타운 계획 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적극 추진하도록 협의
- '20년부터 센터에 월 30만원의 운영비를 국고로 추가 지원하고, 수탁자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사업 참여 유도
 - (목표달성 부진사유)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지자체 업무부담 및 리모델링 등 설치 절차 지연으로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일부 지연
 - (예산 미집행 사유)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지연 예상으로 국비 26,234백만원 → 23,698백만원으로 예산 감액(△2,536백만원, '20.7월 3차 추경)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전용면적 확보((설치기준) 다함께돌봄센터 전용면적 66㎡ 확보, 놀이공간 외 사무공간, 화장실 및 조리공간을 별도로 갖추어야 함) 및 지역 내 돌봄 수요 확인 등 검토 사항이 많아 설치 공간 확보 곤란, 종사자 처우개선 필요성('20년 기준 센터장 월 급여액은 1,866천원, 종사자 월 급여액은 925천원(4시간 근무 기준)) 및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업무 병행으로 인한 업무 부담 가중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 월 30만원의 운영비를 실제 프로그램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실화 필요('21년에도 지원액 동일)
 - 지역 내 작은도서관 등 돌봄에 적합한 공간을 활용·연계하는 경우 전용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비 현실화를 위한 재정당국과의 지속 예산 협의

□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체계 안정적으로 정착(여가부)(3-3-가-③, 여성가족부)

- (사업내용)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

- (성과) 성과지표 방과후아카데미 참여 청소년 효과성 증가율 목표치 22.7% 대비 실적치 18.4%로 81.1% 달성, 예산 46,781백만 원 대비 집행액 44,074백만 원(집행률 94.2%, 집행잔액)
-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학업·체험활동의 균등한 기회 제공을 위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인프라 지속적 확충
 -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사업의 만족도 및 사업효과성 제고
 - (종사자 역량 강화) 현장 지도자 역량강화 직무교육 실시
 - (현장컨설팅 지원) 전문가 현장 컨설팅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의무 컨설팅 37개소, 희망 컨설팅 57개소)
 - ('20. 종합평가) 성과에 기반한 사업관리를 위해 평가 및 환류
 - (현장점검) 사업운영실태 점검 및 성과 모니터링을 위한 지자체 자체점검(6~8월, 전수조사) 및 여가부-지자체 합동점검(10~11월, 4개소) 실시
 - (코로나19관련 긴급돌봄지원) 휴교·휴업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긴급돌봄지원
 - (대외 홍보) 대외 홍보 강화를 통한 대국민 인식 강화
 - (선진국 유사 사례 분석) (미국) After-school Program: 청소년돌봄 및 계발펀드(The Child Care and Development Fund ; CCDF), (독일) 주간아동청소년 방과후 돌봄활동 '호르트'(주간아동보호시설)
 - (목표달성 부진사유) 코로나19에 따른 휴교·휴업으로 긴급돌봄지원 및 참여청소년에 대한 비대면 활동서비스 등을 제공하였으나, 당초 계획에 따라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계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실행계획('18.4월)에 따른 연차계획의 이행을 위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기반 확충에 필요한 운영시설 리모델링비, 임차료 등 반영 필요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45개소 신규 운영기관 확대('21년 349개(↑45))
 - 지역 실정에 맞는 운영프로그램 선택(2개 과정) : 학습 지원과정 및 '체험 역량 강화과정'
 - 운영내실화 추진을 위한 현장 컨설팅(105개소, 5~10월), 종사자 교육(연간 11회, 3~12월), 종합평가(189개소, 5~11월) 실시
 - 코로나19 관련 긴급돌봄지원(연중)

〈표 2-37〉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체계 안정적으로 정착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3-3-가-①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체계 안정적으로 정착	초등돌봄 참여 학생 수(만명)	40.8	40.8	42.1	103.2	37.2	37.2	39.8	106.9	34.6	34.6	36.3	104.9	385,810	381,401	381,394	100.0
3-3-가-②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체계 안정적으로 정착(복지부)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수(개소)	400	350	251	71.7	150	150	156	104.0	17	17	17	100	45,307	41,107	36,335	88.4
3-3-가-③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체계 안정적으로 정착(여가부)	방과후 아카데미 참여 청소년 효과성 증가율	22.7	22.7	18.4	81.1	22.5	22.5	22.6	100.4	21.0	21.0	22.3	106.1	51,301	46,781	44,074	94.2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초등돌봄 참여 학생 수(만명)=초등돌봄 이용학생 수; 성과지표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수(개소)=연도말 기준 다함께돌봄 실태조사 등을 통해 목표달성 여부 확인; 성과지표 방과후 아카데미 참여 청소년 효과성 증가율=효과성 조사 실시

□ 아이돌봄서비스 확충 및 내실화(3-4-가, 여성가족부)

- (사업내용)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급인력 처우 개선을 통한 안정적 서비스 공급, 민간 서비스와의 연계 등 종합적 개편 필요(맞벌이 가구 대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비율 4.2%에 불과('17년))
- (성과) 성과지표 맞벌이가구 중 서비스 이용가구 비율(신규, %) 목표치 4.6% 대비 실적치 3.7%로 80.4% 달성, 예산 390,964백만 원 중 390,945백만 원 집행(집행잔액)
 - (코로나19 대응) 정부대응단계에 맞춰 즉각 조치로 돌봄공백 최소화
 - 아이돌보미 및 서비스 관리체계 강화로 만족도 제고
 - (목표달성 부진사유) 매년 이용가구가 증가추세였으나, '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외부인에 의한 감염우려와 재택근무 확산 및 가족돌봄휴가 확대 등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수요 감소('16년: 61,221가구, '17년: 63,546가구, '18년: 64,591가구, '19년: 70,485가구, '20년: 59,663가구)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서비스 이용가정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시간 및 지원비율 확대
 - 아동학대 사례관리 전담인력 업무 가이드 개발 및 배포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확대를 위한 온라인교육 시범사업 실시
 -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국가자격제도(가칭 '육아전문관리사') 연구 추진

〈표 2-38〉 아이돌봄서비스 확충 및 내실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맞벌이가구 중 서비스 이용가구 비율(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수(아이돌봄서비스 통합업무관리시스템 통계)/만 12세 이하 자녀 보유 맞벌이가구 수(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 돌봄서비스 이용자 편의 제고(3-4-나, 여성가족부)

- (사업내용) 실시간 신청·대기관리시스템 구축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부모 및 이용 부모의 편의 제고
- (성과) 성과지표 시스템 고도화 시행(달성률 100%), 예산 343백만 원 중 336백만원 집행(집행률 98.0%, 낙찰차액으로 인한 미집행)
 - (연계율 제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모바일앱을 질병·야근·출장 등 긴급상황 등에 활용 할 수 있어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율이 전년 대비 5.3%상승
 - (이용률 제고) 일시연계서비스(긴급돌봄) 전담도우미 9,060명을 확보, 돌보미의 93%가 모바일앱을 설치하여 업무에 적극 활용 중
 - (사용자 만족도 제고) 모바일앱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입장 및 아이돌보미가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이용자 중 62.5%가 만족한다고 답변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단순 집행율을 높이는 것이 아닌 신규 이용가정 확대라는 구체적 목표로 설정하여 이 용활성화 활동 유도
 - '22년 예산안 편성시 제도개선 및 연계 활성화방안 반영 노력(지속)

〈표 2-39〉 돌봄서비스 이용자 편의 제고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시스템 고도화=시스템 고도화 여부 판단

□ 지역 사회 내 돌봄여건 확충(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3-5-가-①, 여성가족부)

- (사업내용) 공동육아나눔터 개소 수 증가 및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 연계·지원을 통해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활성화 제고
- (성과) 성과지표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수(연인원, 천명) 목표치 1,049천 명 대비 실적치 509천 명으로 48.5% 달성, 예산 13,935백만 원 중 98.5%인 13,723백만 원 집행
 - 공동육아나눔터 개소 수 확대
 - 시간제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주말·야간·방학 등 운영을 확대하여 맞벌이·한부모 가구 등의 돌봄 취약 가구의 돌봄 부담 완화
 - 민·관 협력 확대로 공간 조성 및 리모델링 지원 확대
 -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관련 국토부 관련 법령을 개정 및 범부처 생활 SOC 복합화 추진으로 이용자의 접근성 강화
 - (선진국 유사 사례 분석) (덴마크) 부모놀이터(Legestue): 코펜하겐 내 각 자치구의 문화의집(Kulturhus)에서 대부분 부모 놀이터를 운영중이며, 놀이터와 도서관을 함께 운영하여 더 많은 아이들을 유입하는데 효과적
 - (목표달성 부진사유) 2020년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부분 운영 폐쇄
 - (예산 미집행 사유) 목표달성 부진사유와 동일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지역의 돌봄문화를 정착하고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단위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확대 필요
 - 마을 단위 공동육아나눔터 확대를 위한 재정 당국과 협의 지속 및 공간 확대를 위한 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 협의

□ 지역 사회 내 돌봄여건 확충(지역아동센터 운영 내실화)(3-5-가-②,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보호·상담·급식·학습지도, 지역사회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 (성과) 성과지표 1.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수(명) 목표치 111,200명 대비 실적치 110,321명으로 99.2% 달성, 성과지표 2. 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 2020년 종료(2020년 시행계획 p.254 참조), 성과지표 3. 공공성강화 시범사업 참여센터 수(개소) 목표치 100개 대비 실적치 150개로 150% 달성, 예산 379,038백만 원 대비 집행액 376,380백만 원 집행(집행률 99.3%,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집행잔액 등)
 - 지역아동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유도
 - 지역아동센터 돌봄 환경 개선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돌봄 지원체계 운영
- (목표달성 부진사유) 계획한 성과지표 중 공공성 강화 시범사업 참여센터 수는 초과달성 하였으나,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수는 목표치에 미달: 저출산에 따른 아동인구 감소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수는 향후 지속적 감소 추세 전망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소규모, 개인시설(약 66%) 중심 구조로 인해 공공성 및 서비스 질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학부모·아동의 기대와 욕구 충족에 미흡
 - 지속적인 운영주체 전환 유인책 마련을 위해 '22년 예산 편성 시 재정당국과 협의 추진
 -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 예산확보 및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상향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 추진

□ 지역 사회 내 돌봄여건 확충(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활성화)(3-5-가-③, 여성가족부)

- (사업내용) 방과후 돌봄(활동)이 필요한 청소년(초4~중3)에게 급식 및 상담, 학습지원, 창의적 체험활동 등 맞춤형 활동 서비스 제공을 통해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지원 및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
- (성과) 성과지표 방과후아카데미 참여 청소년 효과성 증가율 목표치 22.7% 대비 실적치 18.4%로 81.1% 달성, 예산 46,781백만 원 대비 집행액 44,074백만 원(집행률 94.2%, 집행잔액)
 -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학업·체험활동의 균등한 기회 제공을 위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인프라 지속적 확충
 -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사업의 만족도 및 사업효과성 제고
 - (종사자 역량 강화) 현장 지도자 역량강화 직무교육 실시
 - (현장컨설팅 지원) 전문가 현장 컨설팅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의무 컨설팅 37개소, 희망 컨설팅 57개소)
 - ('20. 종합평가) 성과에 기반한 사업관리를 위해 평가 및 환류
 - (현장점검) 사업운영실태 점검 및 성과 모니터링을 위한 지자체 자체점검(6~8월, 전수조사) 및 여가부-지자체 합동점검(10~11월, 4개소) 실시
 - (코로나19관련 긴급돌봄지원) 휴교·휴업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긴급돌봄지원
 - (대외 홍보) 대외 홍보 강화를 통한 대국민 인식 강화
 - (선진국 유사 사례 분석) (미국) After-school Program: 청소년돌봄 및 계발펀드(The Child Care and Development Fund ; CCDF), (독일) 주간아동청소년 방과후 돌봄활동 '호르트'(주간아동보호시설)

- (목표달성 부진사유) 코로나19에 따른 휴교·휴업으로 긴급돌봄지원 및 참여청소년에 대한 비대면 활동서비스 등을 제공하였으나, 당초 계획에 따라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계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실행계획('18.4월)에 따른 연차계획의 이행을 위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기반 확충에 필요한 운영시설 리모델링비, 임차료 등 반영 필요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45개소 신규 운영기관 확대('21년 349개(↑45))
 - 지역 실정에 맞는 운영프로그램 선택(2개 과정) : 학습 지원과정 및 '체험 역량 강화과정'
 - 운영내실화 추진을 위한 현장 컨설팅(105개소, 5~10월), 종사자 교육(연간 11회, 3~12월), 종합평가(189개소, 5~11월) 실시
 - 코로나19 관련 긴급돌봄지원(연중)

□ 지역 사회 내 돌봄여건 확충(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3-5-가-④,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 가정 내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 (성과) 성과지표 드림스타트 사업의 가족기능향상 기여도(점) 목표치 73.8점 대비 실적치 75.6점(달성률 102.4%), 예산 71,220백만 원 전액 집행
 - (실무자 교육) 드림스타트 실무자 대상 역량 강화를 위한 기본 및 전문화·특성화 교육 실시
 - (사업운영 평가체계 강화) 평가체계 및 지표 개선을 통한 사례관리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사업의 효과성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운영 평가 체계 마련 및 시범평가 실시(5~11월, 40개소)
 - (슈퍼바이저 체계구축)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및 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한 슈퍼비전 체계 구축(5월)
 - (효과성 검증) 드림스타트 효과성 종단연구 및 만족도 조사 실시(7~12월)
 - (사업보고대회 및 유공 정부포상) '20년 드림스타트 사업성과 및 '21년 사업 방향 공유,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을 위한 사업보고대회 개최(12월)
 - (드림스타트 협의체 운영) 중앙부처-지자체 드림스타트 간 양방향 소통체계 운영을 통한 정보 공유 및 의견수렴(11월)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평가와 컨설팅 전문인력의 분절적 운영
 -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평가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표 2-40〉 지역 사회 내 돌봄여건 확충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3-5-가-① 지역 사회 내 돌봄여건 확충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수 (연인원, 천명)	1,049	1,049	509	48.5	999	999	1,323	132.4	698	698	951	136.2	13,935	13,935	13,723	98.5
3-5-가-② 지역 사회 내 돌봄여건 확충 (지역아동센터 운영 내실화)	1.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수(명)	111,200	111,200	110,321	99.2	110,100	110,100	111,148	101	109,800	109,800	109,926	100.1	379,038	379,038	376,380	99.3
	2. 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	종료				89	89	90.0	101.1	89	89	90.6	101.8				
	3. 공공성강화 시범사업 참여센터 수(개소)	100	100	150	150.0	신규	신규	-	-	-	-	-	-				
3-5-가-③ 지역 사회 내 돌봄여건 확충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활성화)	방과후아카데미 참여 청소년 효과성 증가율	22.7	22.7	18.4	81.1	22.5	22.5	22.6	100.4	21.0	21.0	22.3	106.1	51,301	46,781	44,074	94.2
3-5-가-④ 지역 사회 내 돌봄여건 확충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드림스타트 사업의 가족기능향상 기여도(점)	73.8	73.8	75.6	102.4	72.5	72.5	74.8	103.2	72	72	72.3	100.4	73,942	71,220	71,220	100.0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수(연인원, 천명)=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수 합계(연인원); 성과지표 1. 1.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수(명)=전체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수 집계, 성과지표 3. 공공성강화 시범사업 참여센터 수(개소)=공공성강화 시범사업 참여센터 수 집계; 성과지표 방과후아카데미 참여 청소년 효과성 증가율=효과성 조사 실시; 성과지표 드림스타트 사업의 가족기능향상 기여도(점)=드림스타트 수혜대상자의 가족 기능(가족 응집력, 적응성 등 14문항) 점수

□ 지역단위 양육·돌봄서비스 종합플랫폼 구축(3-5-나-①, 행정안전부)

○ (사업내용) 지역별 양육·돌봄 정보를 모아 국민들이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 (성과) 성과지표 시스템 구축(%) 목표치 100% 달성(달성률 100%), 예산 19년 예산집행 완료에 따른 해당 없음.

- (데이터 구축) 지자체 시설현황 전수조사(3종), 온종일 돌봄 구축정보 연계(4종), 관계부처 시스템 정보 연계(2종)를 통해 시설정보 DB 구축
- (기능) 정부24의 지도 서비스 중 하나의 기능(시설 검색, 위치 공유, 길찾기, 전화 걸기 등)으로 구축
- (운영) 매월 시설정보를 업데이트(지자체)하여 이용자 편의 제고

□ 지역단위 양육·돌봄서비스 종합플랫폼 구축(지역 내 기존 서비스 연계 네트워크 구축)(3-5-나-②, 보건복지부)

○ 2019년 단년도 사업(사업종료)

□ 지역단위 양육·돌봄서비스 종합플랫폼 구축(지역 내 기존 서비스 연계 네트워크 구축)(3-5-나-③, 여성가족부)

○ (사업내용) 가족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단위 양육·돌봄 서비스 제공 플랫폼 구축

○ (성과) 성과지표 가족센터 이용자 수(단위: 천명) 목표치 4,200천 명(시행계획 목표치 4,500천 명에서 4,200천 명으로 변경) 대비 실적치 4,288천 명으로 102.1% 달성, 예산 98,672백만 원 중 48.9%인 48,240백만 원 집행

- 다양한 가족에게 종합적인 가족서비스 제공으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
- 가족문제에 대한 지역내 사회적 자원 활용과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등 가족활동 허브기능 수행 기반 구축
- (선진국 유사 사례 분석) (독일) 마더센터: 어린이 집, 여성 재취업 연계, 재활용센터, 양육상담119, 커뮤니티 공간 등 지역맞춤형 복합시설 운영, 부모가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간단한 식음료 및 돌봄 품앗이,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소통 공간 제공('18년 약 400개)
- (목표달성 부진사유) 예산집행계획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자금 일부 미배정
- (예산 미집행 사유) 기획재정부의 자금 일부 미배정(4,511백만 원, 균특 불용 및 세수부족)
- 국비는 설계비와 공사비(건축, 통신, 전기 등)로 집행 가능, 공공건축 사업은 착수부터 실시설계 완료까지 상당기간(10~15월)이 소요되고, 착공 후 공정률 향상에 일정기간(약 6개월)이 필요하여 예산 실집행이 저조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연례적 실집행률 부진사업으로 예·결산 지적
 - 예산편성 효율화 및 지속적 예산집행·공정관리 추진: 연차별 예산 차등지원 방식으로 변경('20년 균분지원 → '21년 공사단계에 집중지원(사업기간 2년 4:6, 3년 2:3:5)), 지자체별 추진상황 정기(수시)점검, 공정률 감안 국비교부, 실시설계 용역 조기완료 및 착공 독려

〈표 2-41〉 지역단위 양육·돌봄서비스 종합플랫폼 구축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3-5-나-① 지역단위 양육·돌봄서비스 종합플랫폼 구축	시스템 구축(%)	100	100	100	100	50	50	50	100	-	-	-	-	해당 없음			
3-5-나-② 지역단위 양육·돌봄서비스 종합플랫폼 구축	2019년 단년도 사업(사업종류)	-	-	-	-	-	-	-	-	-	-	-	-	-	-	-	-
3-5-나-③ 지역단위 양육·돌봄서비스 종합플랫폼 구축	가족센터 이용자 수(단위: 천명)	4,500	4,200	4,288	102.1	4,100	4,100	5,268	128.5	-	-	-	-	104,867	98,672	48,240	48.9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시스템 구축(%)=시스템 구축 완료 및 서비스 개시; 성과지표 해당없음: 성과지표 가족센터 이용자 수(단위:천명)=가족센터 이용자수

□ 국가 중심 아동보호체계 개편(3-6-가,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통해 아동이 원가정 및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통한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발달 지원
- (성과) 성과지표 1. 재학대 발생률(%) (하향지표) 목표치 9.5% 대비 실적치 11.9%로 79.8% 달성, 성과지표 2. 쉼터아동 심리치료 효과성(%) 목표치 23.5% 대비 실적치 22.5%로 달성률 95.7%, 예산 67,998백만 원 중 67,123백만 원 집행(집행률 98.7%,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 아동보호를 공적으로 수행할 아동보호전담요원 281명 시군구 배치
 - 공공 중심 아동보호체계 구축 위한 현장 소통 및 홍보 등 실시
 - 아동보호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 아동보호 서비스 내실화를 위한 예산 확보
 - 아동학대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추진('20.10월~)
 - 신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
 - '20년 아동보호전문기관 2개소, 쉼터 2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21년 아동보호전문기관(+10개소)·쉼터(+29개소) 확충예산 확보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층사례관리기관 전환방안(~'22년) 마련, 거점 기관(17개 시·도, 기관별 3명)에 심리치료전문인력 예산 확보('20.12월)

- 학대피해·위기의심 아동 정보공유 및 보호·지원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구성·운영(월1회 원칙)
 - 즉각 분리제도, 사례관리 의무화 등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이행을 위한 「아동복지법」개정('20.12.2.)
 - 위기아동 선제적 발굴·지원을 통한 아동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
 - 위기아동 발굴 및 현장조사 제고를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개선
 - e아동행복지원사업 현장조사 담당공무원 역량교육 실시
 - (목표달성 부진사유) 학대 건수 증가에 따른 재학대 수 증가
 - 위기아동 발굴 강화(e아동행복지원시스템, '18년3월~) 및 아동학대 신고건수 증가* 등으로 인해 아동학대 발견율이 증가*하였고, 보다 많은 학대가 발견됨에 따라 재학대율도 함께 상승
- * 아동학대 신고건수 : ('18년)36,417건 ('19년) 41,389건 ('20년)42,251건
- * 아동학대 발견율(%) : ('18년)2.98 ('19년)3.81 ('20년)4.02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 확대(총 715명, ~'22년)를 통해 전국적으로 균등한 아동보호 서비스 제공
 - 공공 아동보호체계의 안착 및 내실화
 - 아동학대조사공공화 안착을 통한 공공 대응체계 확립
 - 학대피해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가정환경 조성
 - 학대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 회복 지원 기능 강화
 - 전국 지자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하여 아동학대 조사·대응 공공 책임 강화
 - 위기아동 선제적 예측을 위한 신규 연계변수 발굴 및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개선

〈표 2-42〉 국가 중심 아동보호체계 개편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3-6-가 국가 중심 아동보호체계 개편	1. 재학대 발생률(%) (하향지표)	9.5	9.5	11.9	79.8	9.5	9.5	11.4	80.0	9.1	9.1	10.3	86.8	65,658	67,998	67,123	98.7
	2. 심터아동 심리치료 효과성(%)	23.5	23.5	22.5	95.7	23.5	22.5	24.1	107.1	23.5	22	22.34	101.6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1. 재학대 발생률(%) (하향지표)=최근 5년내 아동학대로 판단된 전례가 있는 건수 /당해연도 아동학대 건수×100. 성과지표 2. 심터아동 심리치료 효과성(%)=심리치료 프로그램 완료 아동의 참여 후 향상된 평균 점수/심리치료 프로그램 완료 아동의 참여 전 평균 점수×100

□ 아동 안전 교육 강화(3-6-나,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아동안전교육 콘텐츠 개발과 인프라를 구축을 통해 대상자 맞춤형 아동안전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을 실시하여 아동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
- (성과) 성과지표 1. 아동안전사고 예방교육 참여자 수(명) 목표치 83,000명 대비 실적치 41,602명으로 50.1% 달성, 성과지표 2. 아동대상 아동안전사고 예방교육 참여자 만족도 (점) 목표치 94.7점 대비 실적치 96.8점으로 102.2% 달성, 예산 543백만 원 중 538백만 원 집행(집행률 99.1%, 집행잔액)
 - (콘텐츠) 영유아 아동안전사이버과정 5과정(20차시) 신규 개발, 온라인 학습자료, 애니메이션 e-북, 감염병 예방관리 영상 등 비대면 교육지원을 위한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개발 36종, 보완 12종)
 - (안전교육)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 방지를 위한 교안 및 교구 활용 맞춤 수정·보완, 비대면 아동안전교육 포맷(지원교육)을 개발(아동 87,136명, 보호자 1,706명, 종사자 432명 교육)
 - (인프라·환경조성) 아동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안전 환경에 맞는 눈높이 교육을 제공할 아동안전교육 전문인력(37명)을 양성하고 아동안전사이버교육센터 운영(29,895명), 취약계층 가정대상 안전용품 지원(4,500가구)
 - (정책지원) △아동안전에 관심이 있는 전문기관간의 협의체를 결성하여 공동사업 진행, △아동안전교육 실태 및 요구도 조사(1건), △아동안전사고예방 홍보(캠페인 6회, 안전송 방영 등)
 - (목표달성 부진사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대면교육(41,602명)과 지원교육(비대면 교육, 워크북 제작·배포, 45,534명)으로 병행 수행. 총 87,136명 교육 진행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07년부터 매년 개발된 아동안전교육 콘텐츠가 누적되어 있으나 최근 발생한 대규모 사회재난(감염병, 산불화재 등), 다양한 아동안전 이슈(아동 학대, 아동 간 성적 문제행동, 교통안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아동안전 콘텐츠 개발·보완 및 교육·홍보 확대 필요, 아동안전사이버교육('13년 구축) 보유 콘텐츠(사이버교육, 교육자료) 노후화로 인한 사이버교육 실적·교육자료 보급건수 감소 우려
 - 비대면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아동안전교육 융합콘텐츠 개발
 - 아동안전교육 소외가 없도록 17개 시·도 전역에 전문강사 양성·배치 및 찾아가는 아동안전교육 진행
 - SNS, 카드뉴스 등 아동안전사고예방 온라인 홍보를 통한 아동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
 - (교육콘텐츠 개발·보급) 영유아용 응급처치 사이버과정 개발(1과정, 4차시), 서책형태의 콘텐츠 온라인 형태로 기존 연령별 교육 자료 개발·보완 등

- (아동안전교육 지원) 아동안전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전문강사를 활용한 대상별(아동/종사자)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
- (아동안전교육센터) 사이버교육센터를 통해 모바일 수강 등을 가능하게 하여 아동안전 전문 교육플랫폼으로서의 교육 접근성과 편의성 강화('21년 목표: 3만명)
- (홍보 및 정책지원) 아동안전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 확대 실시

〈표 2-43〉 아동 안전 교육 강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3-6-나 아동 안전 교육 강화	1. 아동안전사고 예방교육 참여자 수(명)	83,000	83,000	41,602	50.1	77,000	77,000	81,241	105.5	51,300	51,300	70,273	137.0	543	543	538	99.1
	2. 아동대상 아동안전사고 예방교육 참여자 만족도(점)	94.7	94.7	96.8	102.2	94	94	96.3	102.4	92.5	92.5	94	101.6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1. 아동안전사고 예방교육 참여자 수(명)=오프라인 아동안전사고 예방 교육 참여자 수 집계, 성과지표 2. 아동대상 아동 안전사고 예방교육 참여자 만족도(점)=아동대상 아동안전사고 예방교육 만족도 점수=100점 만점, 전체 응답자 점수 평균

4. (문화) 모든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

□ 비혼출산·양육 차별 불합리한 법제 개선(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 가족제도와 관련된 불합리한 법제 개선)(4-1-가-①, 여성가족부)

○ (사업내용) 시행계획 내 성과지표 해당없음, 비예산사업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원 발의(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 '20.9.1, 정춘숙 의원 대표 발의 '20.11.2)
- 다양한 가족 형태의 제도적 수용 방안 검토 및 사회적 논의 추진
- (선진국 유사 사례 분석) 주요 국가에서는 기본법에서 가족의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개별 정책과 관련된 규정에서 관련한 가족 규정을 두고 있음, 입법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가족에는 위탁가정, 등록된 파트너십, 법률혼 관계가 아닌 사실상 가족관계 등을 포함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일부 단체에서 가족 개념 확대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 정책이 '가족해체, 동성혼 옹호'를 조장한다면서 문제 제기,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적 법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지지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 비혼 출산·양육 차별 불합리한 법제 개선(가족 제도와 관련된 불합리한 법제 개선)(저고위)(4-1-가-②,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사업내용)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제도 확립, 어떤 형태의 가족도 차별 없는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

○ (성과) 시행계획 내 성과지표, 예산 해당없음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본계획」가족 다양성 법제 개선 과제 마련 ('20.12월)
-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관계부처 협력체계 구축 및 방안 마련
- (선진국 유사 사례 분석) (프랑스) PACS(시민연대계약): 공동생활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성 또는 동성의 두 사람이 체결하는 민법 내지 사법상 계약, 양육자녀에게 지급되는 수당, 지원금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인정 및 차별 없는 양육지원으로 PACS 시행 이후 결혼은 줄었지만 출산율은 OECD 최고 수준 유지, (스웨덴) 동거인법: '사실혼'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며, 법적으로 인정되는 결혼과 동일한 수준의 시민적 지위(Civil Status) 부여, 동거, 비혼 출산 등 개인의 다양한 선택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동거 비율은 높지만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 유지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가족다양성 분과위원회 운영,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자문을 통한 차별적 법제개선 발굴 및 개선 검토(계속)

□ 가족 제도와 관련된 불합리한 법제 개선(법무부)(4-1-가-③, 법무부)

○ (사업내용) 인지 시 종전 성(姓) 사용 원칙 확립, 출생통보(등록)제도 도입 검토

○ (성과) 성과지표 1. 「민법」 개정 목표치 국회 심의 대응 50% 달성, 성과지표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목표치 개정안 마련 대비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로 50% 달성, 비예산사업

- 인지 시 종전 성 사용 원칙 확립: 부의 인지 시 자녀의 종전 성 사용을 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심의 대응('20)
- 출생통보(등록)제도 도입 검토 관련: 관계기관 협의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인지 시 종전 성 사용 원칙 확립) 추후 민법 제781조 개정 여부에 중장기적 검토 추진, (출생통보(등록)제도 도입 검토 관련) 각계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계속, 출생통보제도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 개정안 마련을 위한 내부 검토 진행

□ 비혼 출산·양육 차별 불합리한 법제 개선(가족 제도와 관련된 불합리한 법제 개선) (행안부)(4-1-가-④, 행안부)

○ (사업내용) 주민등록 등·초본의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 표기를 개선하여 재혼가정의 생활 보호 및 불합리한 차별 해소

○ (성과) 시행계획에 2020년 성과목표, 예산 내용 없음.

- (방안 마련) 재혼가정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 표기를 ‘부, 모, 자녀’로 표기 허용
- (내부보고) 「세대주와의 관계표시 개선 방안」 내부보고 완료
- (개정안 마련)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가 검토(’20.8.)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추진(∼’21년), 개선안 관련 업무 처리 지침 자치단체 배포(∼’21년)

〈표 2-44〉 가족 제도와 관련된 불합리한 법제 개선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4-1-가-① 비혼출산·양육 차별 불합리한 법제 개선 (건강가정기본 법 전면 개정, 가족제도와 관련된 불합리한 법제 개선)	해당없음	-	-	-	-	-	-	-	-	-	-	-	-	비예산사업			
4-1-가-② 비혼 출산·양육 차별 불합리한 법제 개선(가족 제도와 관련된 불합리한 법제 개선)(저고위)	해당없음	-	-	-	-	-	-	-	-	-	-	-	-	해당없음			
4-1-가-③ 가족 제도와 관련된 불합리한 법제 개선(법무부)	「민법」 개정	국회 심의 대응	국회 심의 대응	국회 심의 대응	50%	개정 안 마련	개정 안 마련	전문가 의견 수렴, 국회 심의 대응	50%	-	-	-	-	비예산사업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개정 안 마련	개정 안 마련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 부처 협의	50%	-	-	-	-	-	-	-	-				
4-1-가-④ 비혼 출산·양육 차별 불합리한 법제 개선(가족 제도와 관련된 불합리한 법제 개선) (행안부)	해당없음	-	-	-	-	-	-	-	-	-	-	-	-	-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해당없음: 해당없음; 성과지표 1. 「민법」 개정=국회통과 여부 확인, 성과지표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국회통과 여부 확인; 해당없음

□ 자립지원 강화(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4-1-나-①, 여성가족부)

- (사업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및 청소년한부모의 학업 지원 등으로 아동 양육부담 경감 및 자립지원 강화
- (성과) 한부모가족지원 사업 만족도(점) 목표치 74.8점 대비 실적치 80.5점으로 107.6% 달성, 예산 359,968백만 원 중 359,907백만 원 집행(집행잔액)
 - 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 확대를 통한 생활안정·자립역량 강화
 - 한부모가족의 주거·양육·의료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
 -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차별 해소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지원의 실효성 제고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필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은 '신청주의' 기반이므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에서 누락될 우려 존재

□ 자립지원 강화(비혼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강화)(4-1-나-②, 여성가족부)

- (사업내용) 비혼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강화
- (성과) 성과지표 1. 면접교섭 참가자(명) 목표치 369명 대비 실적치 1,866명으로 505.7% 달성, 2. 면접교섭 참여가구의 양육비 이행률(%) 목표치 90% 대비 실적치 93.2%로 103.6% 달성, 예산 140백만 원 전액 집행
 -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상담채널(문자상담) 확대 및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위기가족 찾아가는 해피콜 운영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카카오톡 등 온라인 상담서비스 확대
 - 코로나19 블루 등 고객 수요를 반영한 심화상담서비스 강화

□ 자립지원 강화(난임시술 지원대상 사실혼까지 확대)(4-1-나-③, 보건복지부)

- 2019년 완료 사업으로 평가 제외
- (사업내용) 난임시술 관련 비용, 정서·심리지원 등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사회적 임시스템 확립으로 저출산 극복 도모
- (성과) 성과지표 사실혼 부부 지원추진 2020년 성과목표 없음(시행계획), 예산 45,326백만 원 전액 집행
 - 모자보건법 개정(19.4월)으로 사실혼 부부의 난임지원 근거 마련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사실혼 부부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및 정부지원 실시('19.10.24 시행)

- 난임 시술비 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표 2-45〉 자립지원 강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4-1-나-① 자립지원 강화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한부모가족지원 사업 만족도(점)	74.8	74.8	80.5	107.6	74.8	74.8	79.4	106.1	73.6	73.6	74.6	101.3	352,110	359,968	359,907	99.98
4-1-나-② 자립지원 강화 (비혼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강화)	1. 면접교섭 참가자(명)	369	369	1,866	505.7	321	321	486	151.4	230	230	393	170.9	140	140	140	100
	2. 면접교섭 참여가구의 양육비 이행률(%)	90	90	93.2	103.6	90	90	92	102.2	89.8	89.8	90	100.2				
4-1-나-③ 자립지원 강화 (난임시술 지원대상 사실혼까지 확대)	사실혼 부부 지원추진 (성과목표 없음)	-	-	-	-	추진 완료	추진 완료	추진 완료	100	신규	신규	-	-	53,916	45,326	45,326	100.0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한부모가족지원 사업 만족도(점)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한 설문조사; 성과지표 1. 1. 면접교섭 참가자(명)=개별면접교섭 서비스 및 교섭서비스 참여인원, 성과지표 2. 면접교섭 참여가구의 양육비 이행률(%)=양육비 이행 가구수/면접교섭지원가구수(면접교섭서비스를 2회 이상 이용한 가구 중 양육비에 대한 집행권원이 있는 가구)×100; 성과지표 사실혼부부 지원 추진=사실혼부부 지원 실시 여부

□ 임신·출산·아동 존중(임산부 편의 증대 방안 마련)(4-2-가-①,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대중교통의 임산부 배려석 확산, 임산부 배려 인식개선 홍보 강화, 임산부 배려 표
시물 보급 등을 통하여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배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임산부 편의 증대

○ (성과) 성과지표 임산부 배려 경험률 목표치 53% 대비 실적치 45.9%로 달성률 86.6%,
예산 100백만 원 전액 집행

-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임산부의 날(10.10.) 행사 및 유공자 포상(대통령 표창 1, 국무총리 표창 2)을 실시하여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 재인식
- (임산부배려 캠페인 및 홍보) 온라인 캠페인, 민관 연계 캠페인, 임산부 배려 인식개선 영상 공모전 등 홍보 실시
- (임산부배려 인식 및 실천수준 설문조사) 임산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임산부배려 인식 및 실천수준 설문조사 실시
- (목표달성 부진사유) 일반인의 임산부배려 앰블럼 인지율(72.7%), 임산부 배려석 인지율(94.5%)은 높은 반면, 임산부의 배려 받은 경험은 45.9%로 나타나 국민들의 인지율은

높은 수준이나, 실천과는 차이가 있음; 일상생활에서 임신부들이 가장 필요한 배려로 대중교통 좌석양보(57.7%)로 나타났으며, 임신부배려석을 이용한 임신부 중 59.4%가 이용 시 불편함을 느꼈고, 그 이유로 일반인이 착석 후 자리를 비켜주지 않아서 응답이 77.6%로 높게 나타남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공동 캠페인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진행 및 임신부의 날 기념행사 규모 및 참석자 최소화
- 임신부배려 엠블럼, 임신부배려석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율은 각각 72.7%, 94.5%로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으나 인지와 실천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사회적인 공감대 확산 및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캠페인과 적극적인 홍보 활동 필요
- 임신부 배려(한) 경험율이 낮은 지역을 대상(영남권, 호남권, 충청권)으로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 기관과 연계한 캠페인 지속 확대 추진

□ 임신·출산·아동 존중(임신 후 상담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 인력 확충)(4-2-가-②,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산전-조기 아동기의 예방적·전문적 방문건강관리를 통해 모자 건강을 보호하고, 모든 아동의 최선의 건강발달을 지원

○ (성과) 성과지표 사업참여자 만족도(점) 목표치 75점 대비 실적치 93.1점으로 124.1% 달성, 예산 1,918백만 원 전액 집행

- 시범보건소의 성공적인 사업 정착을 위해 보건소 임신부 등록 담당자 교육, 보건소 관리자 교육, 사업전담인력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2020년도 총 1,939회의 기본방문과 1,349회의 지속방문이 사업 참여 보건소를 통해 실시
- (선진국 유사 사례 분석) (호주) Maternal Early Childhood Sustained Home-visiting (MECSH): 임신부검진, 산전-후상담(교류, 고립감완화, 이웃연결 등), 영유아가 정 전호방문, 영유아예방접종, 육아기술교육, 산후케어, 관계기관 전문서비스 연계 등, (미국) Maternal, Infant, and Early Childhood Home Visiting (MIECHV): 산모의 산전 건강 예방 및 산전 진료 지원, 건강한 모유수유를 위한 산모교육, 부모의 아동발달 단계 및 행동 이해 지원, 칭찬 등의 긍정적인 육아기술의 사용 장려, 미래를 위한 목표 설정 및 교육, 고용 및 보육 솔루션 마련을 위한 협력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추가 서비스 제공 요구 지속 발생, 비대면 사업 지침, 교육 자료 발간, 추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매뉴얼 등 추가 개발

□ 임신·출산·아동 존중(지자체 아동친화도시 모델 확산)(4-2-가-③,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아동친화도시(만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권리를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 인증 등 아동 친화적인 환경의 지역사회 확산을 통해 아동 삶의 질 개선
- (성과) 성과지표 아동친화도시 인증지자체 수(개) 목표치 47개 대비 실적치 53개로 달성률 112.8%, 비예산사업
 -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 우수 지자체 어린이날 유공 표창(5.4.)
 - 놀이혁신 선도사업 실시(10개소) 및 '놀이혁신위원회' 개최(12월)
 - (선진국 유사 사례 분석) (아일랜드) '청소년 행복 도시 조성' (2000년~): 아동참여 보장, 아동이익 대변을 위한 법률서비스, 아동 관련 연구 및 정보체계 구축, 아동복지지표 개발, 아동영향평가,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와 자원 제공 등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자체 지원, 아동인권 증진 사업을 통한 아동 친화적 환경 조성
- 아동배타적 문화를 통합적 문화로 전환하는 캠페인 전개(4-2-가-④,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내용) 출산·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공유 및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통한 인식전환 및 행동 변화 유도
 - (성과) 성과지표 광고 시청 후 긍정적 인식 변화율(%) 목표치 65.6% 대비 실적치 52.5%로 80.0% 달성, 예산 2,000백만 원 전액 집행
 - (캠페인 광고 확산) 광고영상 5편(런칭, 회사, 버스정류장, 운동, 버스內) 제작, 케이블TV · 인터넷매체 · IPTV · 옥외매체 등 송출('20.8.11~10.9)
 - (온라인 콘텐츠 확산) 바이럴 동영상 제작, 유튜브 송출('20.12.7.~'21.1.13.)
 - (온라인 프로모션) 일방향적 홍보에서 탈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온라인 이벤트로 국민참여 및 콘텐츠를 함께 제작하는 '양방향' 소통캠페인 추진
 - (목표달성 부진사유) 젊은층의 경제적 불안정성과 코로나 19 상황에서의 결혼·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증가로 광고를 통한 긍정적 인식변화가 어려워짐, 다만, 또 다른 지표인 '캠페인 광고 효과성'(캠페인 인지율, 저출생 관심도) 측면에서는 '19년 대비 증가하여(19년 각각 70.0%, 67.6점에서 20년 77.0%, 69.7점으로 증가함) 저출생 현안에 대한 관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저출생 문제는 주택, 교육, 일자리 안정성 등 사회·경제적인 부문과 사회구성원의 인식변화 등 다양한 원인이 기저에 존재하므로 단발성 광고 캠페인으로 즉각적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움

- (개선방안) 출산과 육아에 대한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과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대국민 신뢰 형성을 통한 사회구성원의 인식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캠페인 추진 필요
- (추진계획) '21년 저출생 극복 캠페인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반영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으로 추진

〈표 2-46〉 임신·출산·아동 존중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4-2-가-① 임신·출산·아동 존중(임산부 편의 증대 방안 마련)	임산부 배려 경험률	53	53	45.9	86.6	61	61	45.9	75.2	62	62	60.1	96.9	100	100	100	100.0
4-2-가-② 임신·출산·아동 존중(임신 후 상담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 인력 확충)	사업참여자 만족도(점)	75	75	93.1	124.1	-	-	-	-	-	-	-	-	1,678	1,918	1,918	100.0
4-2-가-③ 임신·출산·아동 존중(지자체 아동친화도시 모델 확산)	아동친화도시 인증지자체 수(개)	47	47	53	112.8	36	36	42	116.7	20	20	31	155.0	비예산사업			
4-2-가-④ 아동배타적 문화를 통합적 문화로 전환하는 캠페인 전개	광고 시청 후 긍정적 인식 변화율(%)	65.6	65.6	52.5	80%	-	-	(65.4)	-	-	-	-	-	2,000	2,000	2,000	100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임산부 배려 경험률=임산부배려 인식 및 실천수준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성과지표 사업참여자 만족도(점)=사업참여자 대상 만족도조사 실시; 성과지표 아동친화도시 인증 지자체 수(개)=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인증 지자체수; 성과지표 광고 시청 후 긍정적 인식 변화율(%)=광고 효과성 조사

□ 다양한 가족 포용(미혼모·부 일상 속 차별 개선)(여가부)(4-2-나-①, 여성가족부)

○ (사업내용)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적 인식확산 및 사회적 환경 조성

○ (성과) 성과지표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여부 시행계획에 2020년 성과목표 없음(2019년도 추진 완료), 예산 1,900백만 원 중 1,899백만 원 집행(집행잔액)

- (국민소통) 가족 응원 온라인캠페인,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을 공유·확인할 수 있는 공모전 및 국민인식조사 추진
- (홍보) 대상별(청소년·청년층, 장년층)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매체 홍보
- (모니터링·교육) 매체모니터링 실시 및 가족다양성 교육기반 마련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국민소통) 다양한 가족과 공감·소통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행사 추진,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실시·결과 발표,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
- (홍보) 영상, 카드뉴스 등 인식개선 콘텐츠 및 통합적 가족서비스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 제작·대중매체 홍보
- (교육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요소 모니터링(정부간행물 등 대상), 가족다양성 교육 교사 양성 및 시범교육 확대운영 등

□ 다양한 가족 포용(미혼모·부 일상 속 차별 개선)(교육부)(4-2-나-②, 교육부)

○ (사업내용) 교원 자율적 연수를 통해 효과적인 역량 배양기회를 제공하고, 생애 주기에 맞는 연수제공 및 관련 연구 등 지원 확대; 교원이 창의융합인재 양성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연수 내용과 방법 등 질 관리 강화; 다문화학생의 공교육 진입 및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강화; 다문화 이해교육 및 다문화 친화적인 환경 구축을 통한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인식 개선; 학령기의 예기치 못한 임신 출산으로 인하여 학생 미혼모가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 강화

○ (성과) 성과지표 한국어교육 참여자 만족도 목표치 4.0 대비 실적치 4.38로 109.5% 달성, 예산 <다문화 인식개선> 14,446백만 원 중 14,341백만 원 집행(집행률 99.3%), <미혼모 위탁교육기관 확대> 학생 미혼모 발생 시 위탁교육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므로 2020년 예산은 미확정, 시행계획 p.347

- [다문화 인식개선] 다문화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 [미혼모 위탁교육기관 확대]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위탁기관을 지정(~'20.2.)하고 위탁기관을 상호 인정('20.3.~)하여 학생 미혼모가 전국 어디서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 (선진국 유사 사례 분석) [다문화 인식개선] (프랑스) 프랑스어 비모국어 학생을 위한 특별반 제도('02년~)
- (예산 미집행 사유) [다문화 인식개선] 코로나19로 인한 다문화 정책학교 사업비 일부 미집행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다문화 인식개선] 다문화학생의 지역 특색에 따른 다문화교육 운영 및 이중언어 강점 개발 측면 지원 강화 필요
 - [미혼모 위탁교육기관 확대] (학업 유지 지원)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학생 미혼모 위탁교육기관을 지속 운영하여, 학생 미혼모의 학습권 보장, (상담 지원) 학생 미혼모 발생 시, 학교 내 담당 교원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기관 안내·상담 지원

□ 다양한 가족 포용(다양한 가족 관련 통계 구축)(4-2-나-③, 여성가족부)

○ (사업내용) 다양한 가족 관련 통계 구축

○ (성과) 성과지표 인구주택총조사시 동거가구 반영 목표치 조사실시 수행(달성률 100%), 비예산사업

- '25년 인구주택총조사시 비혼 동거가구가 조사될 수 있도록 통계청 협력 추진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구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5년주기 인구주택총조사시 관련 문항 개발 협의 지속 실시

□ 다양한 가족 포용(다문화 가족 포용을 위한 교육·소통 강화)(4-2-나-④, 여성가족부)

○ (사업내용) 국민대상 다문화이해교육 확대를 통한 다문화가족 차별 해소 및 문화적 다양성 존중

○ (성과) 성과지표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이수자수(천 명) 목표치 140천 명 대비 실적치 145천 명으로 103.6% 달성, 예산 627백만 원 전액 집행

-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강사 관리 및 인력풀 구축·관리
- 다문화 인식개선 시나리오 공모전 개최, 공모전 활용 동영상 콘텐츠 2종(5분, 30초), '다누리배움터' 대상별 온라인 교육콘텐츠 2종(일반인용, 직장인용) 제작·배포
- 다문화이해교육 온라인 지원시스템(www.danurischool.kr) 운영

□ 다양한 가족 포용(다문화 가족 포용을 위한 교육·소통 강화)(4-2-나-⑤,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국내입양 활성화 추진

○ (성과) 성과지표 1. 국내입양비율 목표치 54.8% 대비 실적치 52.3%로 달성률 95.4%, 성과지표 2. 입양양육수당 수혜자 만족도(점) 목표치 47.8점 대비 실적치 57.8점으로 120.9% 달성, 예산 23,984백만 원 전액 집행(입양아동 양육수당 신청자가 예상했던 인원대비 증가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하여 집행)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연령 및 지원금액 확대·추진을 위해, 연차별 연령 확대, 지원 금액 단계적 확대 등 다양한 방안 검토·협의
- 2021년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대상 연령 확대
- (목표달성 부진사유)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혼인율, 출산율이 급속히 감소(2020년 기준 혼인 건수 전년 대비 10.7% 감소, 출생아 수 전년 대비 10.0% 감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하고 있으며,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 비율(초혼 신흠부부 중 자녀가 없는 부부의 비

중은 42.5%로 전년에 비해 1.1%p 증가, 통계청 신혼부부통계(2019년 기준))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입양을 신청하는 예비양부모의 수도 감소('18) 558가정 → ('19) 539가정 → ('20) 527가정 (양친가정조사 신청서 제출 기준))하고 있음, 또한, 입양특례법 개정('12.8.5. 시행)에 따라 양친자격 및 입양 절차가 강화되고, '16년 발생한 입양아동 학대·사망 사건 이슈화에 따라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국내입양 환경이 매우 위축되어 있음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금액 단가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의 시급성,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지원 확대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만,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아동수당 도입 및 확대 등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정책 추진으로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 TV,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입양공감대 조성 및 확산, 반편견 입양교육 등을 통해 입양 인식개선을 위한 다각적 홍보 추진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단가 인상(월 15만원 → 월 20만원) 협의 추진

〈표 2-47〉 다양한 가족 포용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4-2-나-① 다양한 가족 포용(미혼모·부 일상 속 차별 개선)(여가부)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여부	2020년 성과목표 없음 (2019년도 추진 완료)				추진	추진	추진 완료	100	신규	신규	-	-	1,900	1,900	1,899	99.95
4-2-나-② 다양한 가족 포용(미혼모·부 일상 속 차별 개선)	한국어교육 참여자 만족도	4.0	4.0	4.38	109.5	신규	신규	-	-	-	-	-	-	14,446	14,446	14,341	99.3
4-2-나-③ 다양한 가족 포용(다양한 가족 관련 통계 구축)	인구조택총조사시 동거가구 반영	조사 실시	조사 실시	조사 실시	100	반영	문화 개발 협의	문화 개발 협의	100	-	-	-	-	비예산사업			
4-2-나-④ 다양한 가족 포용(다문화 가족 포용을 위한 교육·소통 강화)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이수자수(천 명)	140	140	145	103.6	130	130	141	108.5	120	120	123	102.5	690	627	627	100
4-2-나-⑤ 다양한 가족 포용(다문화 가족 포용을 위한 교육·소통 강화)	1. 국내입양비용	54.8	54.8	52.3	95.4	56.7	56.7	55	97.0	58.6	58.6	55.5	94.7	23,426	23,984	23,984	100
	2. 입양양육수당 수혜자 만족도(점)	47.8	47.8	57.8	120.9	신규	신규	-	-	신규	신규	-	-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여부=인식개선 캠페인 위탁업체 선정 및 추진 여부; 성과지표 한국어교육 참여자 만족도=한국어학급 및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만족도 조사; 성과지표 인구조택총조사시 동거가구 반영=인구조택총조사시 동거가구 반영 여부; 성과지표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 이수자수(천 명)=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이수자수; 성과지표 1. 국내입양비용=(국내입양 아동 수/국내외 입양아동 수)×100, 성과지표 2 입양양육수당 수혜자 만족도(점)=리커트 5점 척도(매우불만족:0점, 불만족:25점, 보통:50점, 만족:75점, 매우만족:100점) 측정 후 100점 기준 환산

□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가족평등지수 개발)(4-2-다-①, 여성가족부)

- (사업내용) 가족 내, 가족 간 평등 수준 변화 및 불평등 원인을 분석하여 가족관계개선 및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접근 방법 모색
- (성과) 성과지표 가족평등지수개발 「2020년 제4차 가족실태 조사」에 반영, 조사 완료하여, 달성률 80%, 비예산사업
 - 가족평등수준 측정 관련 지표 검토 내용을 활용하여 제4차 가족실태조사 문항으로 반영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가족 구성원 간의 평등 수준의 차수별 비교를 위해 가족 실태조사 문항으로 조사 지속 실시

□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4-2-다-②,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찬·외가 경조사 휴가의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에 기여
- (성과) 성과지표 경조사휴가 활용실태 파악 목표치 1 대비 실적치 0.5(달성률 50%), 비예산사업
 - 「2019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2020)」설문에 경조사휴가 관련 문항 포함 추진
 - (목표달성 부진사유) 2018년부터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가 통계청 승인 행정통계로 되면서 관련 문항 등을 포함하는 데 애로, 경조사휴가 근거규정 신설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설문에 관련 내용 포함 지속 추진

〈표 2-48〉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4-2-다-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가족평등 지수 개발)	가족평등지수개발	발표	발표	조사 실시	80	연구 계획 수립	연구 계획 수립	수립 완료	100	-	-	-	-	비예산사업			
4-2-다-②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경조사휴가 활용실태 파악	1	1	0.5	50	1	-	-	-	-	-	-	-	비예산사업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가족평등지수개발=가족평등 지표 검토; 성과지표 경조사휴가 활용실태 파악=활용실태 파악 여부

5. (기반) 2040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 조성

□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5-1-가,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특고·예술인 등 고용보험 적용 확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확대(월 보수기준 상향, 신규가입자 중심 지원 등)
- (성과) 성과지표 1.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목표치 14,215만 명 대비 실적치 14,112만 명으로 달성률 99.3%, 성과지표 2. 사회보험료 지원자 수(만명) 목표치 274만 명 대비 실적치 274만 명(달성률 100%), 예산 1,318,611백만 원 중 집행액 1,318,536백만 원(집행잔액)
 - (고용보험 적용확대) 예술인 고용보험 연내 시행, 특고 고용보험 시행을 위한 법 개정 완료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210만원→215만원)하여 저임금근로자를 사회보험 영역으로 포섭하고,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회보험료 부담완화를 통해 고용안정 전망 개선에 기여
 - (목표달성 부진사유)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위축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고용보험 적용확대) '20.12.23 발표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대상 단계적 확대 지속 추진
 - (두루누리) '21년 월 보수 기준을 인상('20년 215만원→ 220만원, '21.1.1. 시행)하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표 2-49〉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5-1-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1.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4,215	14,215	14,112	99.3	13,823	13,823	13,864	100.3	-	-	13,432	-	1,149,011	1,318,611	1,318,536	99.99
	2. 사회보험료 지원자 수(만명)	274	274	274	100.0	237	237	265	111.8	200	200	221	110.5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1. 1.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목표 대비 실적, 성과지표 2 사회보험료 지원자 수(만명)=10인 미만 사업 지원금 실질수혜자 수(고용보험+국민연금)

□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신규)(5-1-나,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저소득 구직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 (성과) 성과지표 해당없음(근거 법률(「구직자 취업촉진법」) 제정 지연으로 인해 당초 시행 일

정이 변경('20.7월 → '21.1월)되어 연내 제도 시행 불가), 예산 277,128백만 원 중 25,716백만 원 집행(집행률 9.3%)

-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제도 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확산
- (선진국 유사 사례 분석) OECD 주요 국가((실업부조 도입국가)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핀란드 등)들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실업부조의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
- (예산 미집행 사유) 법 제정 지연으로 당초 계획('20.7월 시행 전제 예산 편성)과는 달리 '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지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예산 부대의견에 근거하여 취업성공 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예산 전용(251,213백만원, 예산현액 기준 집행률은 99.2%)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21.1월)에 따라 참여자 모집·발굴을 위한 집중 홍보 강화
 - 제도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제도 개선방안 마련

〈표 2-50〉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신규)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5-1-나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신규)	해당없음	-	-	-	-	-	-	-	-	-	-	-	-	277,128	277,128	25,716	9.3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해당없음

□ 임금격차 개선(5-2-가,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ffirmative Action) 적용 대상 기업에 직종·직급별 남녀 임금현황 제출 의무화 및 적용 대상 기업 확대로 여성고용률 및 여성관리자 비율을 향상하고, 성별임금격차 개선
- (성과) 성과지표 1. AA 적용 사업장의 여성고용률 목표치 38.75% 대비 실적치 38.73%으로 99.9% 달성, 성과지표 2. AA 적용 사업장의 여성관리자 비율 목표치 21.5% 대비 실적치 22.29%로 103.7% 달성, 예산 872백만 원 전액 집행
 - 과제(대규모기업집단 300인 이상까지 AA 대상 사업장 확대 등) 이행완료로 해당사항 없음
 - (목표달성 부진 사유)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률 하락

〈표 2-51〉 임금격차 개선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5-2-기 임금격차 개선	1. AA 적용 사업장의 여성고용률	38.75	38.75	38.73	99.9	38.37	38.37	38.41	100.1	37.8	37.8	38.18	101.01	872	872	872	100.0
	2. AA 적용 사업장의 여성관리자 비율	21.5	21.5	22.29	103.7	20.66	20.66	21.13	102.27	20.39	20.39	20.56	100.83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1. AA 적용 사업장의 여성고용률=(AA전체사업장여성근로자수/AA전체사업장근로자수)×100, 성과지표 2. AA 적용 사업장의 여성관리자 비율=(AA전체사업장여성관리자수/AA전체사업장관리자수)×100

□ 채용 성차별 및 유리천장 해소(여성고용 및 여성관리자 비율 제고)(5-2-나-①,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통해 효과적인 기업문화 개선을 유도하고 양질의 여성일자리 창출 및 유리천장 현상 타파

○ (성과) 성과지표 1. AA 적용 사업장의 여성고용률 목표치 38.75% 대비 실적치 38.73%으로 99.9% 달성, 성과지표 2. AA 적용 사업장의 여성관리자 비율 목표치 21.5% 대비 실적치 22.29%로 103.7% 달성, 예산 872백만 원 전액 집행

- AA 전체 적용 사업장에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 및 임금격차 원인'을 제출토록 하여 기업 스스로 성별격차 개선 유도('20.1.6. 시행규칙 개정 완료)
- '20년도 AA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52개소)
- 여성고용률 및 여성관리자 비율 지속 증가: '20년도 여성 고용비율은 38.73%, 관리자비율은 22.29%로, 전년 대비 여성 고용비율은 0.32%p 증가, 여성 관리자비율 1.16%p 증가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고용률은 OECD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고 유리천장은 여전(우리나라 유리천장지수 8년 연속 최하위(29위), 여성 임원·고위관리직 비율 저조: ('20.3월 英 이코노미스트지) 한국 여성임원 비율 3.3%(OECD 평균 25.4%), 한국 여성고위관리직 비율 14.5%(OECD 평균 32.5%)
- 연구용역을 통한 AA 제도개선 방안 검토('21.4월~11월)

□ 채용 성차별 및 유리천장 해소(채용 단계별 공정성 강화 및 성차별 사례 모니터링)(5-2-나-②,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채용 단계별 공정성 강화 및 성차별 사례 모니터링을 통한 채용 성차별 해소

○ (성과) 성과지표 성차별 모니터링 실시 목표치 11,550건 대비 실적치 12,000건으로 103.9% 달성, 비예산사업

- 모집·채용시 성차별적 요소 모니터링 실시(20년 모니터링 광고 수 12,000건 중 차별광고 수 677건, 사법처리 1건, 경고 494건, 시정광고 182건)
- 성차별 익명 신고시스템 운영('20.12월): 접수건 수 364건, 행정지도 148건, 진정사건 20건, 기타(취하 안내) 155건, 조치검토 41건)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주요 채용·구인 사이트(예: 사람인, 잡코리아, 알바몬 등) 내 모집·채용 시 성차별적 요소 모니터링 후 위반사항 조치
 -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 운영(상시)

〈표 2-52〉 채용 성차별 및 유리천장 해소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5-2-나-① 채용 성차별 및 유리천장 해소 (여성고용 및 여성관리자 비율 제고)	1. AA 적용 사업장의 여성고용률	38.75	38.75	38.73	99.9	38.37	38.37	38.41	100.1	37.80	37.80	38.18	101.01	872	872	872	100.0
	2. AA 적용 사업장의 여성관리자 비율 제고)	21.5	21.5	22.29	103.7	20.66	20.66	21.13	102.27	20.39	20.39	20.56	100.83				
5-2-나-② 채용 성차별 및 유리천장 해소 (채용 단계별 공정성 강화 및 성차별 사례 모니터링)	성차별 모니터링 실시	11,550	11,550	12,000	103.9	6,946	6,946	11,000	158.4	-	-	6,615	-	비예산사업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1. AA 적용 사업장의 여성고용률=(AA전체사업장여성근로자수/AA전체사업장근로자수)×100, 성과지표 2. AA 적용 사업장의 여성관리자 비율=(AA전체사업장여성관리자수/AA전체사업장관리자수)×100; 성과지표 성차별 모니터링 실시=성차별 모니터링 건수

□ 고용평등 추진 체계 정비(5-2-다,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고용평등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을 배치하고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 고용평등 인프라 확충 및 임신·출산 휴가 중 비자발적 퇴사근절을 위한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 (성과) 성과지표 해당없음, 비예산사업
 - 임신·출산 휴가 중 비자발적 퇴사 근절을 위한 '20년도 스마트 근로감독 실시(400개소)
 - 지방관서에 고용평등 분야를 전담하는 부서 신설("근로문화개선지도과")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임신·출산 휴가 중 비자발적 퇴사 근절을 위한 '20년도 스마트 근로감독 실시(900개소 목표)

〈표 2-53〉 고용평등 추진 체계 정비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5-2-다 고용평등 추진 체계 정비	해당없음	-	-	-	-	-	-	-	-	-	-	-	-	비예산사업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해당없음

□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 지원프로그램 확대(5-2-라-①,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육아휴직 후 근로자들의 원활한 직장복귀를 지원하여 일·가정 양립제도의 지속 가능성 제고
- (성과) 성과지표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율(%) 목표치 65% 대비 실적치 81%로 달성률 124.6%, 비예산사업
 - 직장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산
 - 민간 대체인력뱅크를 활용하여 구직자 및 취업자 대상 전문 직무교육 확대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연내 수시로 시행하는 일·가정 양립 박람회·각종 행사에서 해당 내용 반영된 제도 안내 리플릿 배포하여 홍보 추진

□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 지원프로그램 확대 및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5-2-라-②, 기획재정부)

- (사업내용) 경력단절 예방, 육아휴직 후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 (성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기완료(2018.12월)

□ 경력단절 예방(상담-훈련-취업 연계 지원 확대)(5-2-라-③, 여성가족부)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 및 서비스 내실화 추진으로 여성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 성과지표 새일센터 취업자의 상용직 비율 목표치 70.6% 대비 실적치 67.6%(달성률 95.8%), 예산 84,886백만 원 대비 집행액 84,343백만 원(집행률 99.4%)
 - (코로나19 극복) 인턴십, 직업훈련 요건을 완화하여 코로나19 환경에도 경단여성 재취업을 차질 없이 지원
 - (직업교육훈련 다변화) 고부가가치 과정 확대 및 30·40대 경력자 특화 과정 신설을 통해 변화되는 노동 환경에 대응한 직무역량 강화
 -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경력단절여성의 특성(경단기간, 일경험 등), 취업욕구 등을 파악

한 1:1 원스톱 사례관리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여 30·40 여성의 취업 성과 및 서비스 만족도 제고

- (취약계층 지원) 민-관 협업을 통해 직업훈련 참여 시 훈련수당 지급, 차상위 계층 경단여성에게 생계비 최대 400만원 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등 취약계층 여성의 사회진입 기회 확대
- (다부처 협업) 전문직 경력단절여성의 맞춤형 역량개발 및 취업 연계 강화를 위해 직업훈련(부처별)-인턴연계(여가부)-사후관리(여가부) 등 선순환 구조의 일자리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 (경력단절 예방) 새일센터를 통한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및 직장문화개선 컨설팅 지원 확대('19년 30개소 → '20년 60개소)로 여성 근로자의 경력유지에 기여
- (목표달성 부진사유)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연계는 코로나19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인턴십, 직업훈련 요건을 완화하여 코로나19 장기 환경에도 전년수준을 회복하였으나, '20년에는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여성의 일자리가 큰 타격을 입었고, 특히 단기간 일자리 채용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매년 증가하던 상용직 비율이 다소 감소
- (예산 미집행 사유)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서비스 성격의 사업 축소, 새일센터 운영기간 단축 등에 의한 미집행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및 양육부담 증가로 여성들의 노동시장 이탈과 경력단절 증가
 - '21년부터 새일인턴사업으로 취업된 여성을 상용직(정규직)으로 전환하고 6개월후에 기업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의 상용직 비율 제고 추진

〈표 2-54〉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 지원프로그램 확대 등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5-2-라-①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 지원프로그램 확대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율(%)	65	65	81	124.6	64.5	64.5	80.3	124.50	63	63	79.5	126.19	비예산사업			
5-2-라-②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 지원프로그램 확대 및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기완료사업															
5-2-라-③ 경력단절 예방(상담-훈 련-취업 연계 지원 확대)	새일센터 취업자의 상용직 비율	70.6	70.6	67.6	95.8	70.5	70.5	71.2	101.0	신규	신규	70.4	-	84,886	84,886	84,343	99.4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육아휴직 후 직장복귀율(%)=고용보험전산망 상 휴가종료자 수 대비 1년간 고용유지자 비율; 성과지표 해당없음; 성과지표 새일센터 취업자의 상용직 비율=(상용직 취업인원/취업인원)×100

□ 다양한 청년주택 공급 확대(5-3-가-①, 국토교통부)

- (사업내용) 청년 전세임대·매입임대, 행복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의 주거비 부담 경감
- (성과) 성과지표 1. 청년 전세임대 공급(천호) 목표치 9천 호 대비 실적치 14천 호로 155.6% 달성, 성과지표 2. 청년 매입임대 공급(천호) 목표치 6천 호 대비 실적치 7천 호로 116.7% 달성, 성과지표 3. 청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만호) 목표치 1.4만 호 대비 실적치 1.7만 호로 121.4% 달성, 성과지표 4. 청년 행복주택 공급 목표치 1 대비 실적치 1.2로 120% 달성, 예산 <청년전세·매입임대> 2,408,986백만 원 전액 집행, <청년 행복주택> 2,938,396백만 원 중 2,587,463백만 원 집행(집행률 88.1%), <청년 공공지원 민간임대> 636,876백만 원 중 242,472백만 원 집행(집행률 38.1%)
 - 청년 전세임대주택 14천호 공급('20.12월말)
 - 청년 매입임대주택 6.7천호 공급('20.12월말)
 -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대상이 기존 본인과 부모의 소득 100%였으나, 본인 소득 100% 이하인 경우를 추가하고, 1인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20%p 가산 적용하여 입조요건 완화('20.12월)
 - 청년 행복주택 1.2만호 공급('20.12월말)
 - 청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7만호(부지확보 기준) 공급('20.12월말)
 - (예산 미집행 사유) 출자에 비해 용자 집행률이 다소 낮은 점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출자(보조)와는 달리 용자상환의무가 있어 미신청하는 사례가 있음

□ 청년 임차가구 주거비 지원 강화(5-3-가-②, 국토교통부)

- (사업내용) 상대적으로 주거취약계층인 청년을 대상으로 저리의 주택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주거안정에 기여
- (성과) 성과지표 청년 대상 주택도시자금 지원 수혜가구(호) 목표치 80,000호 대비 실적치 119,178호로 149% 달성, 예산 9,915,100백만 원 중 9,912,165백만 원 집행(집행률 99.9%, 집행잔액)
 - '20년 약 12만 호(목표 8만 호 대비 약 150%)의 청년 가구에 전월세자금 대출을 저리로 지원
 - 청년전용 전세대출상품을 개편하여 지원대상 및 대출한도를 대폭 확대
 -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청년을 위해 대출금리를 인하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생애주기 연계를 통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제도 개선 필요
 - 생애주기 연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방안 마련 및 시행('21년 연중)

- 전월세자금 대출관련 개선사항 발굴 및 모니터링('21년 하반기)
- 청년 8만 가구(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기금 대출 지원

〈표 2-55〉 다양한 청년주택 공급 확대 등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5-3-가-① 다양한 청년주택 공급 확대	1. 청년 전세임대 공급(천호)	9	9	14	155.6	9	9	13	144	5	5	7	140	1,790,520	2,408,986	2,408,986	100
	2. 청년 매입임대 공급(천호)	6	6	7	116.7	4	4	4	100	3	3	3	100				
	3. 청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만호)	1.4	1.4	1.7	121.4	1.4	1.4	1.4	100	1.2	1.2	1.2	100	640,944	636,876	242,472	38.1
	4. 청년 행복주택 공급	1	1	1.2	120.0	1	1	1	100	-	-	-	-	2,879,450	2,938,396	2,587,463	88.1
5-3-가-② 청년 임차가구 주거지 지원 강화	청년 대상 주택도시기금 지원 수혜가구(호)	80,000	80,000	119,178	149.0	80,000	80,000	140,537	175.7	신규	신규	-	-	9,399,200	9,915,100	9,912,165	99.9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1. 청년 전세임대 공급(천호)=공급실적, 성과지표 2. 청년 매입임대 공급(천호)=공급실적마련, 성과지표 3. 청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만호)=부지확보, 성과지표 4. 청년 행복주택 공급=청년 행복주택 준공물량; 성과지표 청년 대상 주택도시기금 지원 수혜가구(호)=주택도시기금 수요자대출 통계(구입 및 전월세대출)

□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분양주택 공급 확대(임대)(5-3-나-①, 국토교통부)

○ (사업내용) 높은 주거비 등으로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젊은 계층을 위해 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주변 시세의 약 80% 수준의 저렴한 행복주택을 공급하여 결혼과 출산을 장려

○ (성과) 성과지표 신혼부부 행복주택 공급 목표치 1.7(0.8) 대비 실적치 0.8로 100% 달성(위 성과목표는「주거복지로드맵('17.11)」및「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18.7)」에 따른 것으로, 제반 사정에 따라 실제 연차별 공급계획은 조정 가능, 시행계획 p. 404 참조), 예산 2,938,396백만 원 중 2,587,463백만 원 집행(집행률 88.1%)

- (입주자 모집) 분기별(4회)로 총 2.7만호 모집 완료
- (준공) 신혼특화단지를 비롯한 신혼부부 대상 행복주택 0.8만호 준공
- (예산 미집행 사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출자(보조)와는 달리 상환의무가 있어 미신청하는 사례가 있음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신혼부부 대상 건설형 공공주택 공급을 행복주택 뿐만 아니라 타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통합공공임대, 분양전환, 매입·전세형 등), 분양주택(신혼희망타운 등)으로 공급을

확대하여 신혼부부 수요에 대처(참고: '21년 신혼부부 공급 공공임대) 행복 1.2만, 국민·영구 1.0만, 분양(신혼희망) 0.7만)

- 착공에서 준공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건설형 주택의 단점을 보완하여 단기 공급이 가능한 매입·전세 임대 공급 적극 병행(신혼부부 대상 매입·전세임대 '20년 2.4만호 공급, '21년 2.9만호 공급 예정)

□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분양주택 공급 확대(임대)(5-3-나-②, 국토교통부)

○ (사업내용) 젊은 신혼부부에 대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성과) 성과지표 1.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천호) 목표치 12천 호 대비 실적치 14천 호로 달성률 116.7%, 성과지표 2. 신혼부부 매입임대 공급(천호) 목표치 11천 호 대비 실적치 11천호로 달성률 100%, 예산 3,829,835백만 원 전액 집행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4만호 공급('20.12월말)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05만호 공급('20.12월말)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의 입주자 선정에서 소득·자산기준을 완화한 4순위를 신설하고, 재계약 기준을 마련('20.12월)
- 2인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소득기준(전년도 월평균 소득)을 10%p 가산 적용하여 입주요건 완화('20.12월)

□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분양주택 공급 확대(임대)(5-3-나-③, 국토교통부)

○ (사업내용) 신혼부부의 저렴한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희망타운(육아·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을 주거복지로드맵보다 확대한 총 15만호(분양 10만+임대 5만) 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포함된 공공분양주택 15만호 공급 추진

○ (성과) 성과지표 1. 신혼희망타운 목표치 3만호 대비 실적치 2.6만 호로 86.7% 달성, 성과지표 2. 공공분양주택 목표치 2.9만호 대비 실적치 3.1만 호로 106.9% 달성, 비예산사업

- (신혼희망타운) 수원당수 등 24개 지구 2.6만호 사업승인 및 화성봉담2 등 0.7만호 분양 완료
- (공공분양주택) 고양지축 등 30개 지구 3.1만호 착공 및 과천시식정보타운 등 0.9만호 분양 완료
- (목표달성 부진사유) 당초 '20년 사업승인 가능 예상지구를 대상으로 개략적인 물량을 산출하여 공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지구계획 승인 또는 변경 과정에서 지구계획 확정이지연 되어 사업승인 지연 발생, 지구계획 변경 및 분양성을 고려한 주택규모 확대 등에 따라 공급호수 감소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주거복지로드맵 수립 당시 대상지구별 지구조성 및 주택건설사업 추진일정 등을 고려하여 공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토지보상 지연 및 문화재 발굴 등 지구조성 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 지연 발생으로 연도별 공급계획 조정 불가피
- 주거복지로드맵 상 중장기 공급계획('18~'22)의 특성 상 실제 지구조성 및 주택공급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해 당초 연도별 공급계획 대비 지연이 발생됨에 따라, 신혼희망타운 총 15만호 공급물량은 변동 없이 연도별 공급계획을 조정하되, 공급시기를 앞당겨 주택공급 효과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청약 제도를 도입하여 '21년에 신혼희망타운 1.4만호 사전청약 실시

□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강화(임대)(5-3-나-④, 국토교통부)

- (사업내용) 신혼가구에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조건을 완화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등 주거안정을 통한 저출산 대책 해결에 기여
- (성과) 성과지표 1. 신혼부부 주택 구입자금 수혜가구(호) 목표치 30,000호 대비 실적치 20,285호로 67.6% 달성, 성과지표 2.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수혜가구(호) 목표치 50,000호 대비 실적치 29,667호로 59.3% 달성, 예산 9,915,100백만 원 중 9,912,165백만 원 집행(집행률 99.97%, 집행잔액)
 -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신혼희망타운 입주대상 범위에 신혼가구(혼인기간 7년 이내)가 아닌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포함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및 시중금리 하락추세를 감안하여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상품 금리를 2회에 걸쳐 인하(기존 1.7~2.75% → 1.55~2.10%)
 - '20년 신혼부부가구 대상으로 5.0만쌍(5.7조원)에 대해 저리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지원
 - (목표달성 부진사유) 신혼부부 대상 금융지원 목표(8만 가구) 일부 완수(5.0만 가구),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결혼 연기 등의 사유로 대출 수요 감소 및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대출 상품(상대적 금리 低)으로 수요 이전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기금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청년이 결혼 후에 보다 낮은 금리로 신혼부부 전용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 지원
 - 신혼희망타운 입주자에 대한 초저금리(연 1.3%) 주택담보장기대출(수익공유형) 상품 공급 추진
 - 신혼부부 주거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저리의 구입·전세자금 지속 공급
 - 신혼부부 8만 가구(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기금 대출 지원

〈표 2-56〉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분양주택 공급 확대(임대) 등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5-3-나-①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분양주택 공급 확대 (임대)	신혼부부 행복주택 공급	1.7	0.8	0.8	100.0	1.5	1.5	0.8	88.9	1.0	1.0	1.0	100	2,879,450	2,938,396	2,587,463	88.1
5-3-나-②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분양주택 공급 확대 (임대)	1.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천호)	12	12	14	116.7	9	9	13	144	4	4	4	100	3,271,760	3,829,835	3,829,835	100.0
	2. 신혼부부 매입임대 공급(천호)	11	11	11	100.0	10	10	16	160	5	5	5	100				
5-3-나-③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분양주택 공급 확대 (임대)	1. 신혼희망타운	3	3	2.6	86.7	2.2	2.2	2.2	100	-	-	-	-	비예산사업			
	2. 공공분양주택	2.9	2.9	3.1	106.9	2.9	2.9	2.9	100	1.8	1.8	1.9	105.6				
5-3-나-④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강화	1. 신혼부부 주택 구입자금 수혜가구(호)	30,000	30,000	20,285	67.6	30,000	30,000	21,501	71.7	20,000	20,000	36,826	184.1	9,399,200	9,915,100	9,912,165	99.97
	2.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수혜가구(호)	50,000	50,000	29,667	59.3	50,000	50,000	43,755	87.5	22,000	22,000	47,974	218.1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신혼부부 행복주택 공급=신혼부부 대상 행복주택 준공물량; 성과지표 1.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천호)=공급실적, 성과지표 2. 신혼부부 매입임대 공급(천호)=공급실적; 성과지표 1. 신혼희망타운=사업승인기준, 성과지표 2. 공공분양주택=착공기준; 성과지표 1. 신혼부부 주택 구입자금 수혜가구(호), 성과지표 2. 신혼부부의 주택전세자금 수혜가구(호)=주택도시자금 수요자대출 통계(구입 및 전월세대출)

□ 아이키우기 좋은 주거 인프라 조성(임대)(5-3-다, 국토교통부)

○ (사업내용)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내 아이돌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민 편의를 도모

○ (성과) 성과지표 신혼부부 매입임대 아이돌봄시설 설치(호) 목표치 20호 대비 실적치 19호로 달성률 95.0%, 예산 11,400백만 원 중 10,830백만 원 집행(집행률 95.0%)

- 장기 미임대주택을 입주자와 인근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등 복리시설로 리모델링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정('20.12)
- 아이돌봄시설 총 19개소 공급('19.12월말)
- (목표달성 부진사유) 기존주택 매입 후 아이돌봄시설에 대하여 지자체 등 생활SOC 사업과 연계·운영이 필요하나, 근린시설 공간 등의 돌봄시설 활용 여부의 지자체 협의(수요, 운영계획, 입지, 공간 등)가 어려움
- (예산 미집행 사유) 아이돌봄시설 1개소가 지자체 협의 지연으로 연내 미공급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매입임대 주택 입자인 신혼부부 외에도 지자체의 수요까지 충족할 수 있는 아이돌봄시설의 확보에 어려움

- 신축 매입약정 방식을 통해 사전에 아이돌봄시설 물량을 확보하고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수요 맞춤형 서비스 공급을 추진

〈표 2-57〉 아이키우기 좋은 주거 인프라 조성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5-3-다 아이키우기 좋은 주거 인프라 조성	신혼부부 매입임대 아이돌봄시설 설치(호)	20	20	19	95.0	10	10	10	100	-	-	-	-	5,700	11,400	10,830	95.0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신혼부부 매입임대 아이돌봄시설 설치(호)=(설치수/목표)×100

□ 교육부담 경감 및 교육기회 보장 강화(신규)(5-4-가, 교육부)

○ (사업내용) 공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하고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 교육급여 인상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 우수학생 선점으로 야기되는 고입 단계에서의 사교육과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 외고 국제고와 일반고의 고입 동시 실시 추진

○ (성과) 성과지표 1. 고교 무상교육 시행 단계적 시행(고 2,3학년 시행 100% 달성), 성과지표 2.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 수(%) 목표치 1.02% 대비 실적치 1.15%로 112.7% 달성, 성과지표 3. 학부모 설명회 개최 목표치 42회 대비 실적치 248회(달성률 590.5%), 예산 1,461,649 백만 원 중 1,461,643백만원 집행(집행잔액)

-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의 고입동시실시를 통해 고입경쟁률 완화

〈표 2-58〉 교육부담 경감 및 교육기회 보장 강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5-4-가 교육부담 경감 및 교육기회 보장 강화	1. 고교 무상교육 시행	단계적 시행	단계적 시행	고23 학년 실시	100.0	관계 법령 개정	관계 법령 개정	개정 완료	100	-	-	-	-	1,388,212	1,461,649	1,461,643	100.0
	2.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 수(%)	1.02	1.02	1.15	112.7	0.96	0.96	1.06	109	신규	신규	1.02	-	101,649			
	3. 학부모 설명회 개최	42	42	248	590.5	38	38	101	265	-	-	-	-	-	해당없음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1.고교 무상교육 시행=고등학교 2·3학년 무상교육 시행, 성과지표 2.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 수=(신규 수급자 수/전체 학생수)×100, 성과지표 3. 학부모 설명회 개최=개최횟수

제2절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분야 실적 평가

1. (소득)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

-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1-1-가,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논의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
 - (성과) 성과지표 협의체 구성 목표치 1건 대비 실적치 1건으로 100.0% 달성, 비예산 사업
 -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방안 마련('20.5)
 - 기재부, 노동부, 농림부, 금융위, 유관기관 등 협의체 개최('20.5)
 -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 논의 안건 작성을 위한 제도별 현황, 발전방향 관련 기초연구 실시('20.6~8)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관계부처 및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 및 범정부 협의체 운영 추진
 - 각 제도의 역할 정립 및 발전방향 검토, 유기적 연계·조정으로 노후소득보장 강화 추진

〈표 2-59〉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	협의체 구성	1	1	1	100%	-	-	-	-	-	-	-	-	비예산사업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협의체 구성=협의체 구성 여부

- 기초연금 내실화(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1-2-가,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기초연금의 지급으로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
 - (성과) 성과지표 기초연금수급자수(만명) 목표치 544(만명) 대비 실적치 566(만명)으로 달성률 104%, 예산 16,808,047백만 원 중 16,807,513백만 원 집행
 1. 어르신들의 두터운 노후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인상
 - 법령 개정을 통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수급대상 확대('20.1월)
 2. 수급기준 완화 및 사각지대 발굴노력 등으로 수급자수 지속 증가
 - 수급자수는 '14년 435만명에서 '20년 566만명으로 늘어나 30.1% 증가하였으며 매월 최대 30만원(부부가구 48만원)을 안정적으로 수급

- 기초연금 인상 및 지급 대상자 확대에 따른 필요 예산 적시 확보
- 선정기준액을 전년 대비 8% 상향(1월) 및 근로소득 공제액을 94만원에서 96만원으로 인상(2%↑)하여 수급 기준 완화
- 찾아뵙는 서비스,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 등 기초연금 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당초 목표치인 544.4만명을 초과 달성

3. 복지제도 최초로 도입된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의 성공적 안착

- 선정기준액 인상 등으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에 기초연금 신청 안내 실시('20.1월)
- '20.1~12월 기초연금 신청자(84.7만명) 중 79.1만명이 수급희망자 이력관리를 신청하여 신청률은 93.3%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21.1월부터 소득하위 70% 수급자에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 '22년 전체 수급자(소득하위 70%)에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
 - 기초연금 제도 내실화를 통한 수급률 제고 및 안정적 운영 추진

〈표 2-60〉 기초연금 내실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1-2-나 기초연금 내실화	기초연금수급자수 (1)	544만 명	544만 명	566만 명	104.04	515.5 만명	515.5 만명	535만 명	103.78	500만 명	500만 명	512만 명	102.4	16,808,047	16,808,047	16,807,513	100.00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기초연금수급자수=19년도 수급자수 × (100% + 2.2%)

□ 1인 1국민연금 확립(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1-2-나-①,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여성, 근로빈곤층 등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1인 1국민연금체계 구축
- (성과) 성과지표 국민연금 가입자 중 보험료 납부자 비율 목표치 84.8% 대비 실적치 86.0%로 101.4% 달성, 예산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두루누리 지원(국민연금))> 1,087,102백만 원 전액 집행, <실업크레딧 지원> 83,641백만 원 중 83,622백만 원 집행
- (제도 개선)
 - 건설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 확대 전면시행('20.8.)
 -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적용 확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20.7.1.)

- 고소득·고액자산자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지원 배제를 위한 지원기준 개선(고시 제정·시행, '20.7.1.)
 - (연금보험료 지원)
 -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의 월 소득 기준을 완화('19년 210만원→'20년 215만원)하여 보험료 지원 확대('20.1.)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일몰 기간 '24년까지(5년) 연장(국민연금법 개정, '20.1.21.)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국민연금법 '20.1.21., 하위법령 '20.7.1. 개정) 및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20.7.~)
 - (실업크레딧 지원)
 - 실직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실업크레딧 지원 사업 추진
 - (예산 미집행 사유)
 - 실업크레딧 신청자 급증('19년 50.49%→'20년 60.28%)으로 인한 미신청자 안내문 발송 감소(일반수용비 4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백만원)
 - 코로나19로 인한 지사담당자 업무교육 미 실시(국내여비 9백만원)
 - 코로나19로 인한 현장간담회 미 실시(사업추진비 1백만원)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예산반영 및 세부기준 마련 추진
 - 구직급여 수급자 대상 실업크레딧 지속 홍보
- 1인 1국민연금 확립(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1-2-나-②,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내용)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
 - (성과) 성과지표 연금보험료 농업인 지원대상 수급자 수(천명) 목표치 457천명 대비 실적치 478천명으로 104.6% 달성, 예산 167,919백만 원 전액 집행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21년도 기준소득금액 인상
 - 관계기관 협업(복지부-농식품부-해수부)을 통해 각 부처의 지원대상 특성을 반영하여 고소득·고액자산가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제외기준 마련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개선 등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도모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확대를 위해 '22년도 기준소득금액 인상 추진

〈표 2-61〉 1인 1국민연금 확립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1-2-나-① 1인 1국민연금 확립	국민연금 가입자 중 보험료 납부자 비율	84.8	84.8	86.0	101.4	84.1	84.1	85.3	101.43	79.9	79.9	83.4	104.38	943,960	1,087,102	1,087,102	100.00
														83,641	83,641	83,622	99.98
1-2-나-② 1인 1국민연금 확립	연금보험료 농업인 지원대상 수급자 수(천명)	457	457	478	104.6	453	453	461	101.77	신규	신규	448	-	180,232	167,919	167,919	100.00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보험료 납부자 / 국민연금 가입자; 성과지표=연금보험료 지원 이력이 있는 농업인 중 국민(노령)연금을 지급받는 인원 수

□ 주택연금 활성화(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1-3-가, 금융위원회)

○ (사업내용) 고령자에게 소유주택을 담보로 사망 시까지 노후생활비를 연금방식으로 지원하는 주택연금 사업의 활성화

○ (성과) 성과지표 1. 가입연령 및 주택가격 제한개선 목표치 가입연령 인하 대비 주금공법 시행령 개정완료 100% 달성, 성과지표 2. 연금수급권 보장강화 목표치 주금공법 개정추진 대비 주금공법 시행령 개정완료 100% 달성, 성과지표 3. 유휴주택 활용 사업 목표치 SH공사와 협업체계 구축 대비 현재 사업 진행중으로 100% 달성, 비예산사업

- (가입대상 확대) 가입연령 하향조정 및 가입주택 가격 현실화(시가 9억원에서 상향조정)를 통해 제도 활성화('20.11월 주금공법 개정)
- (연금수급권 보장 강화) 가입자가 생전에 수익자로 지정한 자(배우자)가 수급권을 취득하는 신탁(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여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 연금 자동승계(주금공법 개정 완료)
- (유휴주택 활용) 공실이 발생하는 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임대주택으로 활용(서울시·SH공사 협약을 통해 서울시에서 우선 시행, '20.4월)
 - (연금수급권 보장 강화)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가 자동으로 승계받을 수 있는 '신탁방식 주택연금' 도입을 위한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21.6월)
 - (압류방지통장 도입) 주택연금 지급액 중 월 185만원('민사집행법' 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하여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연금 수급권을 보호('21.6월)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해당 없음

〈표 2-62〉 1인 1국민연금 확립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1-3-가 주택연금 활성화	가입연령 및 주택가격 제한개선	가입 연령 인하	주금 공법 시행령 개정 완료	주금 공법 시행령 개정 완료	100	-	-	-	-	-	-	-	-	비예산사업			
	연금 수급권 보장 강화	신규	주금 공법 개정 추진	주금 공법 개정 완료	100	-	-	-	-	-	-	-	-				
	유휴주택 활용	신규	SH 공사와 협업 체계 구축	사업 진행중	100	-	-	-	-	-	-	-	-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1=주금공법 시행령 개정완료, 성과지표 2=주금공법 개정 추진, 성과지표 3=SH공사와 협업체계 구축

□ 퇴직·개인연금 확산·정착(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1-3-나-①, 금융위원회)

- (사업내용)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적연금 이외에 퇴직·개인연금 활성화 지속 추진
- (성과) 성과지표 1. 퇴직급여법 입법지원(0.5) 목표치 법규 개정 완료 달성(달성률 100%), 성과지표 2. 통합연금포털 개편 (0.5) 목표치 시스템 개편 완료 달성(달성률 100%), 비예산사업
 - 고용부와 함께 디폴트 옵션, 일임형 퇴직연금, 수수료 규율근거 등의 도입을 위한 의원입법 발의를 지속 지원
 -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하여 금감원과 함께 수익률 비교, 연금가입내역 조회, 노후재무진단 및 연금가입·계좌이체까지 원스톱 지원하는 “통합연금포털” 개편 완료(’20.1월)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디폴트 옵션, 일임형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등과 관련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개정안 국회 통과를 지속 지원

□ 퇴직·개인연금 활성화(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1-3-나-②,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등 퇴직연금제도 확충을 통한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
- (성과) 성과지표 1. 퇴직연금도입률(%) (0.5) 목표치 29.9% 대비 실적치 미생산로 달성률 산출불가(’20년 통계는 ’21.12월 생산 예정), 성과지표 2. 교육실시 횟수(0.5) 목표치 250 대비 실적치 270으로 108% 달성, 비예산사업

- 법 개정 처리없이 20대 국회 회기 종료됨에 따라 21대 국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개정안 의원입법 발의 지원
 - 퇴직연금 의무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근거 마련 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개정안 국회 발의 지원
- 개정안 통과 필요성 확산 및 인식공유를 위해 유관기관(저출산고령사회위 등) 합동 법률안 설명 및 노·사 의견수렴 진행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운영을 위한 사전준비
 - 고용부-근로복지공단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하위법령, 고시 및 지침안 등 마련(총 10회 업무협의)
- 퇴직연금제도 교육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영세사업장 및 소속 노동자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긍정적 인식 확산
- 체계적이고 합리적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기준마련, 실시로 퇴직연금 서비스의 질 제고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역량강화에 기여
- 영세 소규모 사업자 퇴직연금 도입률 상승
 - 영세 소규모 사업장(30인 이하) 퇴직연금 도입률 지속적 증가 추세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개정안 국회 통과 지원, 법 통과 시 신규제도 시행 준비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

〈표 2-63〉 퇴직·개인연금 확산·정착 / 활성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1-3-나-① 퇴직·개인연금 확산·정착	퇴직급여법 입법지원(0.5)	법규 개정	법규 개정	법규 개정	100	-	-	-	-	-	-	-	-	비예산사업			
	통합연금포털 개편(0.5)	시스템 개편	시스템 개편	완료	100	-	-	-	-	-	-	-	-				
1-3-나-② 퇴직·개인연금 활성화	퇴직연금 도입률2)(%)(0.5)	29.9	-	-	-	29.0	29.0	27.5	94.8	27.3	27.3	27.3	100	비예산사업			
	교육실시 횟수(0.5)(정량)	250	250	270	108	250	250	573	231.2	250	250	474	189.6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1 퇴직급여법 입법지원=관련법규 개정 여부, 성과지표 2 통합연금포털 개편=통합연금포털 시스템 개편 및 서비스 개시 여부, 최종성과지표=(지표①*0.5)+(지표②*0.5); 성과지표 1. 퇴직연금 도입률=(도입사업장 수/도입대상 사업장 수)×100, 성과지표 2. 교육실시 횟수(0.5), 최종성과지표=(지표①*0.5)+(지표②*0.5)

2) 퇴직연금도입률 통계는 통계청에서 생산(20년 통계는 '21.12월 생산 예정)

□ 농지연금 확산(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1-3-다,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내용) 농업소득 외에 별도의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고령농업인에 대한 연금 지급을 통해 노후생활 보장

○ (성과) 성과지표 농지연금 가입건수(건) 목표치 16,900건 대비 실적치 17,098건으로 101.2% 달성, 예산 177,572백만 원의 99.5%인 176,722백만 원 집행(상반기 신규가입건수 증가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당초예산 147,877백만원에서 29,695백만 원 증액하여 177,572백만 원 집행, 집행잔액으로 850백만 원 불용)

- 농지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통장(농지연금지킴이통장) 출시

• '20.7월 출시~12월 까지 가입자 146명 기준 월 1.8억원 수급권 보호

- 공익직불금 등 농가 이전소득 증가,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한 대면 홍보 부진 등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20년 누적가입목표 대비 101.2%인 17,098건 달성, 1,767억원 지급

- 연평균 11백만원 연금지원으로, 노후생활 부족자금 보전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의사결정자인 고령농업인과 의사결정 보조자인 자녀세대로 타겟을 구분하여 인식전환 홍보 적극 추진

• 가입자 선택권 확대 및 농촌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가입연령 기준 완화(만65세 → 60세) 검토

• 저소득층 농업인을 위한 우대상품 출시 검토

〈표 2-64〉 농지연금 확산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1-3-다 농지연금 확산	농지연금 가입건수(건)	16,900	16,900	17,098	101.2	14,000	14,000	14,492	103.5	28.3	28.3	30.1	106.4	147,877	177,572	176,722	99.5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농지연금 가입건수(건)=연도말 누적 계약 건수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완료)(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1-4-가, 보건복지부)

○ 2019년 종료 사업

2. (준비) 新중년 새로운 인생 출발 지원

-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기(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2-1-가-①,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기' 실행을 위한 계속고용 지원 방안 마련 및 소득격감 없는 점진적 은퇴 지원
 - (성과) 성과지표 장년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지급근로자 목표치 7,000명 대비 실적치 10,581명으로 151.2% 달성, 예산액 59,000백만 원 중 45,265백만 원 집행(집행률 76.7%)
 - (법·제도 정비) 지급 규정 개정을 통해 주된 일자리에서의 고령자 고용연장 토대 마련
 - 20.7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규정 개정 : 공인노무사와 장려금 사업을 직접 실행하는 지방고용센터 등을 대상으로 장려금 활성화를 위한 수렴 결과를 토대로 지급규정 완화
 -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개정: 코로나19 필수대면 노동자 보호대책 일환으로 일부 업종별 지원기준을 완화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제도 연착을 위해 중소·중견 기업 대상 사업 적극 홍보
 - (온라인) 도입절차, Q&A 등 다양한 주제로 카드뉴스·동영상 등 제작·배포
 - (오프라인) 지방관서 간담회·권역별 설명회 개최, 유관기관 협업, 전단·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배포
-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기(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2-1-가-②,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사회를 위한 고령자 고용기반 확대
 - (성과) 성과지표 노인실태조사 실시(건)(1.0) 목표치 1건 대비 실적치 1건으로 100% 달성, 예산 1,013백만 원 중 910백만 원 집행(연구용역 계약(910백만 원) 및 낙찰차액 발생)
 - 20년 노인실태조사 조사 완료 및 결과보고서 제출('20.11.)
 - 노인의 특성·욕구 변화추이를 파악함으로써 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노인의 보건복지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 변화된 노인의 특성, 사회·경제·문화적 상황을 종합 검토하여 조사문항에 반영
 - '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공표(보도자료 배포, '21.6.7.)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미래 노인 정책 혁신을 위한 연구 진행('21년)

〈표 2-65〉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기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2-1-가-①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기	장년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지급근로자	1,740	7,000	10,581	151.2	1,200	1,200	7,433	619	-	-	-	-	59,000	59,000	45,265	76.7
2-1-가-②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기 (연령에 영미하지 않는 사회 논의)	노인실태조사 실시(건)(1.0)	1	1	1	100	-	-	-	-	-	-	-	-	1,013	1,013	910	89.8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장년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지급근로자=지원금 지급받은 근로자 수(고용보험 DB); 성과지표 노인실태조사 실시(건)=노인 실태조사 실시 여부

□ 주 근로자 대상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제공과 재취업 촉진(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2-1-나-①,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 생애경로에 따른 맞춤형서비스를 확충하며 미래를 설계·준비하도록 지원체계를 마련
- 신중년이 일하기에 적합한 직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양질의 일자리로의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
- 폴리텍 신중년 특화캠퍼스(기술기능직) 등 확대를 통해 신중년의 노동시장 재진입 촉진
- (성과) 성과지표 1. 생애경력설계 참여자(천명) 목표치 25(천명) 대비 실적치 23(천명)으로 달성률 92.0% 성과지표 2. 신중년 적합직무 승인인원 목표치 9천명 대비 실적치 8,027명으로 달성률 89.2%, 예산 <전직지원 서비스> 20,343백만 원 전액 집행, <신중년 적합직무> 19,320백만 원 중 17,635백만 원 집행(집행률 91.3%, 집행잔액), <신중년 특화캠퍼스> 1,866백만 원 전액 집행

1. 전직·재취업지원서비스

- 서비스 제공 실적
 - (전직지원 서비스) 퇴직예정자 대상의 전직스쿨 프로그램 4,742명, 구직자 대상의 재도약 프로그램 2,097명 참여, 취업자수 27,527명
 -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참여자 23,334명, 서비스 만족도 4.84점(5점 만점)
- 주요 성과
 - 생애전환기에 경력을 진단하고, 경로를 미리 설계할 수 있도록 대상별(재직자·구직자) 및 연령별(40대·50대·60대), 희망경로별 서비스 제공

- 참여자의 업·직종별 경력개발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①사무직 ②제조업 생산직 ③ 서비스직으로 나누어 프로그램 제공

2.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 서비스 제공 실적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3,522명 지원
- 주요 성과
 -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고령자 고용 수요가 감소하였으나, 고용위기지역 및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해 한시적으로 심사위원회를 생략하는 등 요건 완화를 통해 전년 대비 승인인원 및 지원인원 증가

3. 신중년 특화캠퍼스

- 신중년특화과정 확대
 - 신중년특화과정 인프라 구축 및 훈련 참여 인원 확대 추진
 - 학과 신설과 연계하여 신중년 특화과정 4개 직종 추가 선정('19) 및 인프라 구축 후 '20년 훈련 실시
- 신중년특화과정 참여 기준 완화
 - 신중년특화과정 참여 연령기준을 완화(50대 이상→40대 이상)하여 훈련 대상 확대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체크리스트 마련
 - 대면 수업 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캠퍼스별 대면수업 준비사항 체크리스트 작성
- (목표달성 부진사유) (전직·재취업지원서비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서비스 중단에 따라 전년 대비 실적 다소 부진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전직·재취업지원서비스) 비대면 서비스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여 실적제고 도모

□ **全 근로자 대상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제공과 재취업 촉진(신중년 창업지원체계 강화)(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2-1-나-②, 기획재정부)**

○ (사업내용) 은퇴자 및 중고령자 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성과) 성과지표 1. 고령자 협동조합수(단위: 개)는 2년마다 시행되는 협동조합 실태조사를 통해 산출('20년말 기준 조합수는 '21년 실태조사를 통해 '22년초 산출 가능)하므로 목표 미설정, 성과지표 2. 중고령자 협동조합 교육 참가자수(명) 목표치 300명 대비 실적치 334명으로 111.3% 달성, 예산 320백만 원 전액 집행.

- 협동조합 임·직원, 조합원 등 당사자 대상 협동조합 직무관련 '일반과정'(회계, 마케팅,

설립 등)과 사업역량 개발을 위한 ‘업종·특화과정’ 운영(총 45회, 874명)

- (예산 변경 사유) '20년 시행계획에 기재된 예산(6,314백만원)은 협동조합 사업 전체 예산이고, 이 중 신중년 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 관련 사업은 맞춤형 아카데미(320백만원)임.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수요조사 등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교육내용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추진

□ **소 근로자 대상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제공과 재취업촉진(신중년 창업지원체계 강화)(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2-1-나-③,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내용) 경력·네트워크 전문성을 보유한 중장년(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의 기술창업 활성화

○ (성과) 성과지표 창업성공률 목표치 53% 대비 77%로 145.3%³⁾ 달성, 예산 4,460백만 원 전액 집행

- '20년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를 통해 506명 창업교육 수료, 784개사 (예비)창업기업 보호 지원 및 매출 1,055억원, 신규고용 901명 달성
- (협업성과) 기술·경험·네트워크를 보유한 중장년 창업자 발굴을 위해 노사발전재단 등 (예비)퇴직인력 집적기관 3곳과 연계
 - (노사발전재단) 4개 지역의 4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와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와 연계하여 창업 특화 프로그램 진행
- (국방전직교육원) 전역 예정 군간부 대상 기술창업교육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및 유망 창업자 발굴 노력(73명 기본교육 수료)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센터 부재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추가 선정
 - 정책 수요자(중장년 창업자) 맞춤 추가 지원과제 도출

3) 20년 성과지표 목표를 ('20) 53%으로 변경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에 기인하고 있음('16년~'19년의 목표치 상승 추세(41.2%→45%→47%→50%))에 따라 '20년 목표치를 53%로 설정하고, 기존 목표치 상승 추세와 성과 측정산식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수정함).

〈표 2-66〉 초 근로자 대상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제공과 재취업촉진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2-1-나-① 초 근로자 대상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제공과 재취업촉진	1. 생애경력설계 참여자(천명)(0.5)	25	25	23	92.0	30	30	32	108.4	25	25	28	112.4	21,572	20,343	20,343	100
	2. 신중년 적합직무 승인인원 (명)(0.5)	9,000	9,000	8,027	89.2	8,000	8,000	7,981	99.8	-	-	-	-	27,600	19,320	17,635	91.3
														1,866	1,866	1,866	100
2-1-나-② 초 근로자 대상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제공과 재취업촉진 (신중년 창업 지원체계 강화)	고령자 협동조합수 (단위: 개)	-	-	-	-	750	750	940	125.3	-	-	-	-	320	320	320	100
	중고령자 협동조합 교육 참가자수(명)	300	300	334	111.3	300	300	255	85	220	220	294	133.6				
2-1-나-③ 초 근로자 대상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제공과 재취업촉진 (신중년 창업 지원체계 강화)	1. 창업성공률 (중장년센터)	75	53	77	145.3	50	50	76	151.9	47	47	79.8	169.8	4,460	4,460	4,460	100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1. 생애경력 설계 참여자(천명)=프로그램 참여자수, 성과지표 2. 신중년 적합직무 승인인원(명)=연간 승인 순인원; 성과지표 1. 고령자 협동조합 수(단위: 개)=전체 근로자 대비 55세 근로자가 50%이상인 협동조합 수, 성과지표 2. 중고령자 협동조합 교육 참가자수=협동조합 교육 참가자 중 50세 이상 참가자 인원, 최종성과지표=(지표①*0.5)+(지표②*0.5); 성과지표 1. 창업성공률(중장년센터)=(Σ창업성공기업수/Σ창업지원사업참여자수)*100

□ 퇴직자 일자리 기회 확대(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2-1-다-①, 고용노동부)

○ (사업내용)

-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하여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지원
- 장년 퇴직자가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공익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 (성과) 성과지표 1.사회공헌 참여자 수(명) 목표치 13,000명 대비 실적치 11,832명으로 달성률 91.0%, 성과지표 2. 사회공헌 만족도(점) 목표치 86점 대비 실적치 87.4점으로 101.6% 달성, 예산 57,468백만 원의 88.6%인 50,889백만 원 집행

- 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 14,226명에게 경력·전문성을 활용한 지역 사회에 사회공헌 활동 및 지역서비스 일자리를 제공
- 베이비부머 고령 퇴직자들이 사회적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퇴직 후 정서적·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데 기여
- 퇴직 인력의 숙련이 사회적으로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여 재취업에 도움을 받았다는 참여자가 12.8%에 달하는 등 은퇴 이후 노동시장 재진입에 도움을 주고 있음

- (목표달성 부진사유) '20년 3월부터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세부 사업의 지연·중단이 반복되고, 자치단체의 코로나 19 대응 예산 확대에 따른 사업 수행 노력 감소 및 감염을 우려한 고령자 참여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참여인원이 감소
- (예산 미집행 사유) '19년과 '20년 목표인원은 15,500명으로 동일하였으나 지원실적은 14,226명으로 '19년 12,564명보다 많은 인원을 지원(지원률 '19년 81.1% → '20년 91.8%, 10.7%p 증). 다만, '20년 3월부터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세부 사업의 지연·중단이 반복되고, 자치단체의 코로나 19 대응 예산 확대에 따른 사업 수행 노력 감소 및 감염을 우려한 고령자 참여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자치단체 집행률이 저조('19년 83.5% → '20년 75.4%). 이는 고령 퇴직전문인력을 통해 대면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사업 성격으로 인해 코로나 19에 따라 참여자 보호·활동기관 폐쇄 등의 조치로 정상적 활동이 불가능한 것에서 기인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자치단체 대상 '21년 사업 선정을 조기에 진행('20년 8월~)하여 조속한 예산집행 및 참여자 모집 수행
 - 지속적인 자치단체 및 운영기관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집행부진 사유를 파악하고, 적시에 해소방안을 마련

□ 퇴직자 일자리 기회 확대(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2-1-다-②,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내용) (귀농귀촌 활성화) 연령별·유형별 맞춤형 귀농·귀촌 교육 및 귀농인의 집 조성을 통한 신중년 일자리 기회 확대
- (성과) 성과지표 귀농귀촌 교육수료자 정착률(%) 목표치 21.5% 대비 실적치 27.9%로 129.8%⁴⁾ 달성, 예산 1,550백만 원 전액 집행
 - 귀농·귀촌을 통한 농촌인구 유입은 꾸준히 지속되어 농촌인구 증가와 지역 활성화에 기여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해당없음

□ 퇴직자 일자리 기회 확대(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2-1-다-③, 해양수산부)

- (사업내용) (귀어귀촌 활성화) 지역별·업종별 맞춤형 귀어·귀촌 교육을 통한 신중년 일자리 및 창업 기회 확대
- (성과) 성과지표 해당 없음으로 평가 대상 제외, 예산 3,120백만 원 전액 집행
 - '20년까지 전국 6개소의 귀어학교 개설을 지원

4) 성과지표 목표률('20) 21.5%로 변경하였음(최근실적을 반영하여 기존 목표치보다 상향 수정).

- 어업·양식업 등 어업창업 및 어촌정착 등 초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어업인 208명에게 정착지원금 지원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귀어학교 조기개설 위한 차년도 사업대상자 조기선정 추진
-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의 홍보방법과 사업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 및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업시행지침을 개선하고 사업관리 강화 추진

□ 퇴직자 일자리 기회 확대(산림분야 공공일자리 창출)(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2-1-다-④, 산림청)

○ (사업내용) 신중년(5060)에게 산림에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여 소득창출과 사회공헌 및 인생 2막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성과) 성과지표 취업취약계층 참여율 목표치 53.6% 대비 실적치 64.4%로 달성률 120.1%, 예산 <산림서비스도우미> 16,093백만 원 중 15,974백만 원 집행(집행률 99.3%), <산림재해일자리> 192,506백만 원 중 190,943백만 원 집행(집행률 99.2%), <공공산림가꾸기> 52,491백만 원 중 52,133백만 원 집행(집행률 99.3%)

- 저소득층, 장년층 등 21,013명에게 산림분야 일자리 제공
 - 본예산(17,925명) + 추경예산(3,088명) = 21,013명
- (예산 미집행 사유) 고령층 비중이 약 36%로 고용부담금 면제에 따른 집행 잔액 발생)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21년 국비 1,412억원 투입하여 약 16천명에게 일자리 기회 제공

〈표 2-67〉 퇴직자 일자리 기회 확대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2-1-다-① 퇴직자 일자리 기회 확대	1. 사회공헌 참여자 수(명) (0.5)	15,000	13,000	11,832	91.0	12,500	12,500	10,513	84.1	6,470	6,470	6,647	102.7	48,592	57,468	50,889	88.6
	2. 사회공헌 만족도(점) (0.5)	86	86	87.4	101.6	85.6	85.6	85.8	100.2	85.0	85.0	85.2	100.2				
2-1-다-② 퇴직자 일자리 기회 확대	귀농귀촌 교육수료자 정착률(%)	19.2	21.5	27.9	129.8	19.0	19.0	22.6	118.9	신규	신규	18.9	-	1,560	1,550	1,550	100
2-1-다-③ 퇴직자 일자리 기회 확대	-	-	-	-	-	-	-	-	-	-	-	-	-	3,120	3,120	3,120	100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2-1-다-④ 퇴직자 일자리 기회 확대 (산림분야 공공일자리 창출)	취업취약계층 참여율(%)	50	53.6	64.4	120.1	45	45	65.1	145	36.7	36.7	51.3	140	14,777	16,093	15,974	99.3
														186,155	192,506	190,943	99.2
														11,468	-	-	-
														46,789	52,491	52,133	99.3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1. 사회공헌 참여자 수(명)(0.5)=참여인원, 성과지표 2. 사회공헌 만족도(점)(0.5)=5점 척도를 100점으로 환산; 성과지표 귀농귀촌 교육수료자 정착률(%)=(귀농귀촌자 수 / 귀농귀촌종합센터 교육 수료자)×100; 성과지표 취업취약계층 참여율(%)=세부사업별 취업취약계층 참여율(취업취약계층 참여자 수/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수)×100) 평균

□ 신중년 새출발 지원인프라 확충(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2-2-가,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신중년 등 전 국민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노후준비 상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 (성과) 성과지표 1. 노후준비 서비스 수혜자수(명) 목표치 12만명 대비 실적치 121,982명으로 101.7% 달성, 성과지표 2. 노후준비 인식도(점) 목표치 93.3점 대비 실적치 93.4점으로 100.1% 달성, 예산 2,072백만 원의 84.7%인 1,755백만 원 집행(코로나19로 대면교육이 일부 취소되어 불용 발생)

- ‘제2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 실시
- 노후준비 실태, 노후준비 인식도, 제1차 기본계획 평가
- “전세대 노후준비 참여 제고”, “노후준비서비스 품질 제고” 목표로 “행복한 노후생활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진단·상담 등 종합적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통해 노후준비에 기여

- 대면 서비스가 어려운 코로나19 환경 속에서도 상담 121,982명, 교육 134,914명 등에 서비스 제공('19년 상담 116,564명, 교육 553,468명)

- 신중년사업 국정과제 추진

- 정부의 신중년 정책 지원을 위해 커리어 모색, 일자리 창출, 사회문제해결 등 3가지 모델 유형으로 특화 교육 실시
- 4개 지역본부(서울북부·남부, 부산, 대구)에서 3년간 51개의 아카데미를 시범운영(1,181명 참여)하여 25개 법인 설립, 205개 일자리 등 창출

- 노후준비서비스 이용고객들의 노후준비 인식 및 행태변화에 기여

- 이용자중 90% 이상이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는 등 효과성 증가

- 지자체 및 지역사회 자원과 협력 강화
 - 내실 있는 노후준비 지원 지역협의체 운영으로 지자체 등과의 다양한 공동협력사업 추진 및 서비스 확산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모델 발굴 및 협업사업 확대
- 고령화대비 자립지원 지자체 기반구축 사업 운영
 -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노후준비 4대 영역에 대한 다양한 상담·교육 등 실시로 은퇴 전·후 노후준비 및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 노후준비서비스 특징을 살린 일자리 창출 사업 지속
 - 민간강사 중 '19년 강의 실적이 우수한 강사는 재계약하고, 공개 모집을 통해 신규 강사 후보자 선발('20년 83명)
 - 체계적인 노후준비 지원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 노후소득 추가창출 희망자에 대한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상담 활성화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운영체계 개선
 - 노후준비서비스 내실화를 통한 복지체감도 향상
 - 노후준비지원 사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표 2-68〉 신중년 새출발 지원인프라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2-2-가 신중년 새출발 지원인프라 확충	1. 노후준비 서비스 수혜자수(명)	12만	12만	121,982	101.7	11만	11만	116,564	106.0	10만	10만	108,045	108	2,072	2,072	1,755	84.7
	2. 노후준비 인식도(점)	93.3	93.3	93.4	100.1	93.0	93.0	93.1	100.1	92.8	92.8	92.8	100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1. 노후준비 서비스 수혜자수(명)=노후준비 상담건수/전산등록, 성과지표 2. 노후준비 인식도(점)=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설문조사, 최종성과지표=(지표①*0.5)+(지표②*0.5)

3. (참여)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3-1-가,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노인의 소득보전 및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 근로능력을 갖춘 노인을 대상으로 민간분야 취업을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 확산
- 노인일자리 '21년까지 80만개 창출, 노인의 역량을 활용하고 사회기여도가 높은 사회서비스 형 확대

○ (성과) 성과지표 노인일자리 창출 수 목표치 740 대비 실적치 770으로 104.1% 달성, 예산 2,492,517백만 원 중 2,492,433백만 원 집행(코로나 19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중단, 참여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1. 공익활동형

- (공익활동) 사업량 증가('19. 47만개→'20. 54.3만개) 및 참여기간을 연장(9개월→11개월)으로 저소득 노인의 소득 공백 최소화

2.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 (사회서비스형) 전문역량을 보유한 노인세대에게 적합한 일자리 분야 발굴 및 보급 확대
 - 전문성이 필요한 일부 사업의 경력단절 최소화를 위해 참여연령을 60세로 낮추고, 관련 분야 생애 경력을 선발기준에 반영
 - '19년도 발굴된 전문분야 사회서비스형 사업 보급 및 안정화 지원
 - '20년도 지역사회 돌봄, 안전, 환경 등 신규 사회서비스형 사업 시범사업 운영에 따라 6개 신규 프로그램 개발('21년부터 추진)

3. 민간형 일자리

- (시장형사업단) 사업유형 재정비 및 초기 성장지원 컨설팅 활성화, 오픈마켓 판매 채널 및 입점 상품 확대를 통한 노인생산물 비대면 판로지원
- (고령자친화기업) 신규 선정('20년 45개) 및 영세한 소규모 창업 기업 대상 사전 창업 교육 이수 의무화(3개소), 우수 고용기업 재인증(2개소) 및 보조금 집행 관리 강화(1회 →2회)
- (시니어인턴십) 기존 유사사업(기업연계형)을 시니어인턴십으로 통합하여, 사업량 확대('19. 8.9천명 → '20. 17.5천명) 및 지원 단가 인상(월 30 → 37만원)을 통해 민간일자리 확충 기반 마련
- (취업알선형) 인력파견형 사업과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을 통합, '취업알선형'으로 명칭변경 및 일원화에 따라 사업량 증가

4. 사업관리

- (코로나-19 대응)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노인일자리 참여노인 긴급 생계지원(활동비 선지급, 상품권 지급) 통한 취약계층 생계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활동비 선지급 추진)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중단기간(3월분), 활동비 선지급을 통해 저소득 참여노인 324,450명 소득 보전
 - (상품권 인센티브 지급) 상품권 인센티브 지급으로 참여 노인 497,965명이 최대 236천원(월59천원, 4개월)의 추가 소득 확보
 - (지역활성화 기여) 총2,607억에 해당(지자체보조 포함)하는 활동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20년 제15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적극 행정 우수사례 선정
- (수행기관 지원)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배치기준 완화, 보수수준 인상 및 수당 신설
- (정책홍보 활성화)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하여 일하는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향상('19년 70.6%→'20년 88.4%)
- '노인일자리 여기' 홈페이지 및 대표 전화번호(1544-3388) 집중 홍보(11.16.~12.18., 5주)
- (통합지원센터 신설) 개인별 욕구·능력에 따른 상담과 프로그램 연계,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지역본부 내 '맞춤형 노인지원사업' 신설·운영 (대전/서울/전북)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수행기관) 전담인력 배치기준 추가 완화, 계속근로 유도방안 검토 및 회계·노무 업무 관련 종사자 교육 강화를 통해 개별 수행기관의 실질적인 사업관리 지원
 - (코로나19 대응) 코로나로 인한 사업중단에 대비하여 비대면 일자리 지속 발굴 및 전환 독려, 비대면 교육 확대

〈표 2-69〉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3-1-가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	노인일자리 창출 수	740	740	770	104.1	610	640	684	106.9	513	513	544	106.0	2,394,369	2,492,517	2,492,433	100.00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노인일자리 창출 수(1)=연도별 노인일자리 창출 수의 합

□ 고령세대의 여가 기회 확대(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3-3-가-①,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내용) 고령층 맞춤형 문화·관광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고, 노인복지관 예술 강사 지원 및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고령자의 문화예술향유 기회 확대
- (성과) 성과지표 통합문화이용권 발급률 목표치 95 대비 실적치 102.5로 107.9% 달성, 예산 <통합문화 이용권 지원> 155,794백만 원 전액 집행,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지원> 2,773백만 원 전액 집행, <고령세대 문화예술 교육 지원> 3,712백만 원 전액 집행, <시니어 꿈꾸는 여행자 운영·지원> 500백만 원 전액 집행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 및 수혜 인원 증가, 코로나19 여건에서도 이용률 90% 이상(91.9%) 달성으로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여건 개선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지원) 전국 179개 문화시설·단체 활용, 고령세대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202개 운영, 어르신 문화예술체험꾸러미(총 2만개) 및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 메뉴얼 제작·배포(전국 366개 시설·단체) 등 비대면 문화예술활동 지원
- (고령세대 문화예술교육 지원) 노인복지관에 5개 분야(무용·미술·사진·연극·음악) 예술강사 지원(274개 교육 프로그램, 4,723명 수혜), 중장년층의 문화향유·여가활동 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12개 지역, 1,706명)
- (시니어 꿈꾸는 여행자 운영·지원) 총 12개 기수 360명 교육 지원(서울, 대전, 군산, 원주, 광주, 창원, 부산 등), 5개 테마 랜선여행 추진, 코로나로 인한 근거리 여행 우리동네 VLOG 등 온라인 명사특강 추진(약 1,000명 참가), 고령자의 여행수요 확대 및 고령자의 삶의 질 제고, 언론보도(총 103건)
- (예산 변경 사유)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소비 지원 확대 대책 일환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예산을 당초 예산보다 9,000백만원 증액 편성함, 문예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6,300백만원 증액, 국비 증액에 따라 지방비 추경으로 2,700백만원 증액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지원) 코로나 19 장기화에 대비, 고령층의 정보격차로 인한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방식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21년 비대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임
 - (고령세대 문화예술교육 지원) 비대면 교육 추진을 위한 관계자 연수 및 교육 지침 등 마련
 - (시니어 꿈꾸는 여행자 운영·지원) 고령자의 자기주도적 여행계획 수립 달성도 측정 방안 마련 필요, 서울과 광역시 중심의 운영을 기타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 필요

□ 고령세대의 여가 기회 확대 및 인프라 개선(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3-3-가-②,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노인복지관의 기능 재정립 및 노인연령에 따른 맞춤 프로그램 제공
- (성과) 성과지표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복지관 비율(%) 목표치 91% 대비 실적치 79.3%로 87.1% 달성, 예산 4,608백만 원 전액 집행
 - 노인복지관에 전문예술강사 파견, 교육지원금 지원 등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245개소, 274개 프로그램)을 통해 60세 이상 노인(5,200여명)을 대상으로 무용·미술·연극·음악 분야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인지 및 신체·건강 증진, 노년기 재사회화 등 목표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재구조화 '20년 사업지침 개정
 - 노인복지관 6대 사업 영역별 운영기준 정립을 위한 기초가이드 개발
 - 경로당 광역지원센터(16개소)를 통해 전국 경로당(67천여개소) 이용 노인에게 여가·건강관리·교육 등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 우수 경로당 탐방시리즈(모범 및 이색 경로당, 백세건강운동 동영상 등 72건) 동영상 업로드(유튜브 경로당 전문채널(KSCA TV))
- (목표달성 부진사유)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기관 감소 반면, 회원가입 복지관 수 증가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코로나19로 인한 상황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제공방안(온라인, 비대면·비접촉 강좌, 예방접종자 중심 운영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21년 지침 개정
 - 경로당광역지원센터(16개소)를 통해 경로당에 여가·건강관리·교육 등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 노인복지관에서 개인별 사례관리형 서비스 제공(건강, 인지기능, 정서지원 등), 노인 자치활동 지원 등 프로그램 및 사회참여 교육 확대,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제공
 - 노인복지민간단체 공모사업을 통해 노인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지원

〈표 2-70〉 고령세대의 여가 기회 확대 및 인프라 개선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3-3-가-① 고령세대의 여가 기회 확대	통합문화 이용권 발급률	95	95	102.5	107.9	94	94	101.8	108.3	93	93	96.7	104	146,794	155,794	155,794	100
														2,773	2,773	2,773	100
														3,712	3,712	3,712	100
														500	500	500	100
3-3-가-② 고령세대의 여가 기회 확대 및 인프라 개선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복지관 비율(%)	91	91	79.3	87.1	89	89	89	100	87	87	87	100	4,608	4,608	4,608	100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통합문화이용권 발급률=(문화누리카드 발급액 / 카드예산) × 100, *20년 1인당 9만원; 성과지표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복지관 비율(%)=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가입 복지관 중 문화체육관광부 개발 프로그램 제공 노인복지관 비율

□ 고령자 교육 기반 확충(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3-3-나, 교육부)

○ (사업내용)

- 고령화 사회에 따른 은퇴·고경력 인력을 활용하여 자유학년제·돌봄 교실 등 교육 현장의 수요에 맞는 진로체험 기회 등 제공
- 저학력·비문해 성인의 기초 문해력 향상 지원을 통한 국민 행복 실현 및 의무교육 수준인 초·중학 학력인정 기회 부여로 기초 학습권 보장

○ (성과) 성과지표 1. 개인교육기부단 참여자수(명)(0.5) 목표치 200명 대비 실적치 244명으로 122.0% 달성, 성과지표 2. 문해교육 지원받은 학습자 수(만명)(0.5) 목표치 5.7만명 대

비 실적치 6.9만명으로 121.1% 달성, 예산 <고령자 교육기반 확충> 100백만 원 전액 집행, <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 4,900백만 원 전액 집행

- (고령자 교육기반 확충)

- 고령화 사회에 따른 은퇴·고경력 인력을 활용하여 자유학년제·돌봄교실 등 교육 현장의 수요에 맞는 진로체험 기회 등 제공
- 개인교육기부자 역량 강화 및 교육기부 박람회 연계 워크숍 운영('20.6., 12.), 코로나 19 대응 비대면 강의 콘텐츠(3종)·홍보 영상(1종) 제작

- (계층별 맞춤형 평생교육 활성화)

- (문해교육 지원 확대) 다양한 경로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문해학습자 69,898명에게 문해교육 기회 지원
- (학력인정 문해교육 기반 구축) 초등·중학 문해교육 교육과정('18.5. 개정)에 따라 개정된 초등과정 교수·학습자료 무상보급
- (성인문해능력조사 실시) 우리나라 성인의 문해능력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의 실증적 자료 생산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고령자 교육기반 확충) 비대면 강의 콘텐츠 및 프로그램 홍보 영상 등 제작, 인력 확보 등 지속 노력을 통해 개인교육기부 활성화 제고
- 문해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문해교육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문해교육 지원규모 확대, 지원 경로 다각화
- 양질의 문해교육 서비스 지원을 위해 전문 문해교원 양성, 다양한 영역의 생활문해교육 교육과정 개발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보급 등 추진

〈표 2-71〉 고령자 교육 기반 확충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3-3-나 고령자 교육 기반 확충	개인교육기부단 참여자수(명) (0.5)	200	200	244	122.0	200	200	201	100.5	110	110	288	261.8	100	100	100	100
	문해교육 지원받은 학습자 수(만명)(0.5)	5.7	5.7	6.9	121.1	5.4	5.4	6.3	116	신규	신규	5.1	-	4,900	4,900	4,900	100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1. 개인교육기부단 참여자수(명)(0.5)=개인교육기부단 위촉 은퇴인력수, 성과지표 2. 문해교육 지원받은 학습자수(만명)(0.5)=문해교육을 지원받은 학습자 수

4. (건강)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돌봄 환경 조성

- 건강보험 강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보장(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비 경감 지속 추진)(함께 만 들어가는 행복한 노후-4-1-가-①,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비 부담 경감
- (성과) 성과지표 MRI·초음파, 약제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목표치 흉부·심장 초음파, 약제 급여화 추진 대비 실적치 여성생식 초음파, 눈 초음파, 약제 급여화 추진으로 100%⁵⁾ 달성, 비예산사업
 -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20.2월)
 - 의협·병협·주요 학회 등이 참여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협의체를 운영('19.10~'20.2월)하여 보험 적용 확대 및 손실보상 방안 마련
 - 질 출혈, 여성생식기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기 위해 부인과 질환의 진단을 시행하는 검사로, 급여화 후 환자 부담이 1/2~1/3 감소
 - 눈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20.9월)
 - 전문 학회 등과 함께 눈 초음파 협의체를 운영('20.5~'20.7월)하여 보험 적용 확대 방안 마련, 기타 안과분야 비급여도 급여 적용
 - 눈 관련 질환이 의심되거나 백내장 수술 시 삽입할 인공수정체 도수 측정을 위한 경우 등에 시행하는 초음파로, 급여화 후 환자 부담이 1/2 이상 감소
 - 항암제 등 약제 보험기준 확대('20.6월~)
 - 기존 전액 본인 부담 항목이었으나 건강보험 적용 후 환자 부담이 기존 대비 약 5~30% 수준으로 감소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척추질환 MRI·흉부 및 심장 초음파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 (초음파) 흉부 초음파('21.상반기), 심장 초음파('21.하반기) 건강보험 적용
 - (MRI) 척추질환 MRI 건강보험 적용 검토('21.하반기)
 - (약제) 만성질환 치료제 기준비급여 항목('21년 로드맵상 67개 항목) 검토('21년 연중)

5) 20년 성과지표 목표를 ('20) 흉부·심장 초음파, 약제 급여화 추진으로 변경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에 기인하고 있음(여성생식기 질환 및 안과질환과 관련한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의 국민요구도가 높아 추진계획 변경, 당초 '21년 추진 예정이었던 두경부(안) 초음파 등을 국민요구도 및 등재비급여(눈의계측검사) 연계 검토를 위해 먼저 시행('20.9월), 심장초음파의 경우 시행 주체에 대한 의료법 해석상의 이견 및 갈등 문제 선결이 필요, '21년도 심장 관련 등재 및 기준비급여와 연계 검토를 위해 연기).

- 건강보험 강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보장(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4-1-가-②,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지속적인 무릎관절증으로 고통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에 무릎인공관절수술을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 경감 및 활기찬 노후보장
 - (성과) 성과지표 무릎관절 수술비 지원 수혜건수 목표치 2,182건 대비 실적치 2,469건으로 113.2%⁶⁾ 달성, 예산 2,992백만 원 전액 집행
 - 60세 이상 저소득층(기초, 차상위, 한부모)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2,469건(1,707명) 지원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21 추진계획)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지속 확대
 -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수 증가에 따라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건수 확대 추진, '21년 3,000건 목표
 - 사업의 지속적 확대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원예산 확대 추진
- 건강보험 강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보장(치매 대응체계 강화)(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4-1-가-③,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치매예방·조기발견·치료·돌봄을 위한 국가 치매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치매환자와 가족 및 사회적 부담 경감
 - (성과) 성과지표 1. 치매환자 등록관리율(%)(0.7) 목표치 57% 대비 실적치 59.8%로 104.9% 달성, 성과지표 2. 치매전문병동 설치(0.3) 목표치 5개소 대비 실적치 7개소로 140% 달성, 예산 225,229백만 원 전액 집행
 - (치매안심센터 접근성 개선)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더라도 전국의 모든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20.7월)
 - (서비스 확대) 치매쉼터 이용시간·기간연장 및 대상자(인지지원등급자 추가) 확대('20.1월)
 - (비대면 서비스) 대면접촉 최소화를 위한 ICT 기술 활용 비대면 치매 검진·인지강화 프로그램 제공('20.6월~)
 - '20.12월 기준 전국 256개 모든 치매안심센터에서 ICT기술 활용 프로그램 등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비대면 서비스 운영 중
 - (치매안심병원) 7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 추가 확충
 - '19년 말 기준 43개소('17년 사업대상) 공사 완료, '20년 말 기준 55개소 공사 마무리(49개소 운영)

6) 20년 성과지표 목표치를('20) 2,182건으로 변경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에 기인하고 있음(사업예산동결로 사업비 조기소진('18~'21 예산 2,992백만원)및 코로나19로 사업추진에 차질).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서비스 연계) 치매안심센터가 지역사회 치매관리 중추기관으로 작동하도록 관련 서비스와 협력·연계하여 치매환자 발굴·전달체계 강화
 - 치매안심센터와 관련 기관 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사업 간 서비스 이용 내역을 공유하여 개인별 종합적 관리 추진
- (치매전문병동 지속 확충) 7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 추가 확충(5개소 신규설치, 2개소 치매병상 확대) 추진
 - 2020년 포함, 매년 5개소 내외 치매전문병동 추가확충
 - 기 설치 추진 중인 55개 병원(2019년 치매전문병동 설치완료 43개소 포함)은 2020년 내 공사완료

〈표 2-72〉 건강보험 강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보장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4-1-가-① 건강보험 강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보장(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비 경감 지속 추진)	MRI·초음파, 약제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완료	여성 흉부 생식기 심장 초음파, 약제 급여화 추진	여성 생식기 초음파, 눈 초음파, 약제 급여화 추진	100	완료	하복부 생식기 초음파, 흉부 MRI, 약제 급여화 추진	하복부 생식기 초음파, 흉부 MRI, 약제 급여화 추진	100	-	상복부 초음파, 뇌· 뇌혈관 MRI, 약제 급여화 추진	상복부 초음파, 뇌· 뇌혈관 MRI, 약제 급여화 추진	100	비예산사업			
4-1-가-② 건강보험 강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보장(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무릎관절 수술비 지원 수혜건수	2,600	2,182	2,469	113.2	2,182	2,182	2,549	116.8	2,212	2,212	1,661	75.1	2,992	2,992	2,992	100
4-1-가-③ 건강보험 강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보장(치매 대응체계 강화)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0.7))	57	57	59.8	104.9	51	51	55.7	109.2	30	30	44.7	149.0	248,649	225,229	225,229	100
	치매전문병동 설치(0.3)	5	5	7	140	45	45	43	95.6	5	5	5	100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MRI·초음파, 약제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연도별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계획; 성과지표 무릎관절 수술비 지원 수혜건수=무릎관절 수술비 지원건수; 성과지표 1. 치매환자 등록관리율(%)(0.7)=(치매안심센터등록환자/추정치매환자)×100, 성과지표 2. 치매전문병동 설치(0.3)=치매전문병동 설치 개수, 최종성과=(지표①*0.7)+(지표②*0.3)

□ 건강노화를 위한 예방적 관리 강화(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강화, 고령자 질병 예방 및 관리 강화)(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4-1-나-①,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대상 포괄적 예방·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일차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제고 및 역할 강화

- (성과) 성과지표 만성질환관리 통합서비스 모형 참여 의료기관 비율 목표치 25% 대비 실적
치 31.1%로 124.4% 달성, 예산 6,480백만 원 중 3,331백만 원 집행(집행률 51.4%)
- 기존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장점을 연계한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추진
 - 기존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는 약 처방 등 치료 위주였으나, 통합 모형에서는 환자별
관리계획 수립, 질병관리와 생활습관개선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등 종합적 관리 가능
 - 1~4차 공모를 통하여 75개 시군구, 1,552개 의원에서 환자 224,300명 등록 관리
 - 기존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장점을 연계
 - 일차의료 중심의 성인 천식·COPD 관리모형 개발연구
 - 일차의료 중심의 아동 천식·아토피피부염 관리모형 개발연구
 - (예산 미집행 사유)
 - 피출연·피보조 기관에서 불용액 발생(만성질환자 자가측정기기지원 3,300백만원 중
계약 낙찰차액 1,597백만원 불용액 발생)
 - 피출연·피보조 기관에서 이월액 발생(일차의료정책지원 848백만원 중 연구용역 차년
도 잔금 등 107백만원 이월액 발생, 만성질환자 자가측정기기지원 3,300백만원 중 계
약지연 및 제품 품질 개선 요청과 중국 현지공장 부품수급 사정으로 1,444백만원 이월
액 발생)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통합사업 추진)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의원급만성질
환관리제 등 관련 사업 장점을 연계한 통합 사업 추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
업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활성화)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연계모
형 시범지역 운영('21.上)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확대질환 최종보고회 개최 및 최종보고서 제출정보시스템 구축('21.5)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확대질환 정보시스템 구축('21.5)
 - 맞춤형 검진바우처 시범사업 임상진료지침 권고 항목을 근거로 검사항목 변경('21.3)
 - 1~2주기 대상 검진바우처 시범사업 효과 분석
 - 자가측정기기 지원을 통한 환자 자가관리 역량 강화('21.7~)
- 건강노화를 위한 예방적 관리 강화(고령자 질병 예방 및 관리 강화)(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
후-4-1-나-②, 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업내용) 국민이 생애전주기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안전사용 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추진
- (성과) 성과지표 교육 횟수 목표치 120 대비 실적치 121로 100.8% 달성, 예산 621백만 원 중 614백만 원 집행(집행률 98.9%, 낙찰차액으로 인한 미집행)
 - 노인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현장 교육 실시(14개 시도)
 - 노인 질환 및 생활환경 등을 반영
 - 의약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 교육 실시
 - 노인 생활환경에 기초한 안전사용 교육 교재 활용
 - 노인 만성질환 사용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 여러 약제를 동시 복용하는 노인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법 등
 - 코로나 19 예방·치료에 대한 올바른 물품 정보 등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코로나19 장기화 환경을 감안하여 다양한 교육 방식 검토 등 사업자(대한약사회)와 협의하는 등 지속적 관리 예정
- 건강노화를 위한 예방적 관리 강화(고령자 맞춤형 체육 및 건강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확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4-1-나-③,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고령층 등 국민 대상으로 적절한 운동과 건강교육 실시를 통해 신체기능 향상, 건강생활 유지·개선을 통한 질병의 예방 및 관리
 - (성과) 성과지표 건강백세 운동교실 강습횟수 목표치 150,000건 대비 실적치 104,100건으로 69.4% 달성, 예산 8,499백만 원 중 918백만 원 집행(집행률 10.8%)
 - 대면강습 1,933건, 비대면 운동프로그램 운영 참여 실적 102,167건
 - (건강생활실천 지역협의회 운영) 실적 500회
 - (역할) 사업시기, 장소 등 협의 조정(시설중복 방지) 및 인프라 연계
 - (기관) 보건소, 노인회, 체육회 등 노인운동관련 프로그램 운영기관 참여
 - (건강백세운동교실) '20년 코로나19 사태로 대면사업 위축, 참여자 감소('19) 84,736명 →('20) 1,313명('19년 대비 2.2% 수준)하였으나,
 - 노인층 및 청장년층 운동프로그램을 제작·배포하여 비대면 건강프로그램 제공, 높은 호응도 등 홍보 효과 및 사업목적 달성 노력
 - 홈페이지 및 유튜브 게시(조회수 총 46,234회), 지역방송 송출(269회), SNS 발송(74,897건), 검진기관대한노인회사업장USB 배포(971건) 등
 - (연구용역) 건강백세운동교실 성과 평가 및 개선 모형 연구용역 실시(4월~12월)

- (사업모형) 공단의 특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문적인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 (단기) 비대면 건강프로그램 확대 및 자조모임의 자율적 운영
 - (중장기) 자조모임의 질적 강화,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으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 (건강취약계층 건강개선사업) 낙상예방수칙 보급 및 식습관 체험교실 운영 등(연중, 비대면 병행)
 - 국민참여형 특화사업 : 모바일 앱(Walk on 등) 활용, 실외걷기 운동 등
 - 청소년 건강체험학교 : 초·중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 (목표달성 부진사유) 코로나 19로 사업 중단 및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강습횟수 축소
 - (예산 미집행 사유)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프로그램 운영 중단, 운영기관 비대면 건강프로그램 진행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21 추진계획 사업목표) 비대면 서비스 도입 등 With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건강증진사업 추진
 - ('21 추진계획 추진방향) 코로나19 지역별 상황에 맞게 비대면 업무 확대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 ('21 추진계획 추진내용) 건강강좌 및 운동콘텐츠 제작 등 비대면 건강프로그램 개발 및 건강증진사업 확대
 - 강습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현지확인 및 모니터링 실시
- 건강노화를 위한 예방적 관리 강화(방문건강관리 서비스 확충 및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확대)(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4-1-나-④,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 건강관리 필요 노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방문 건강관리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정서지원, 만성질환 관리 등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보건소에서 만성질환 위험군에게 모바일 앱으로 운동·영양 등 생활습관 개선 및 건강관리 지원
- (성과) 성과지표 1. 노인방문건강관리 대상(가구)(0.5) 목표치 100만 대비 실적치 89만으로 89%⁷⁾ 달성, 성과지표 2.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보건소(개)(0.5) 목표치 130개 대비 실적치 139개로 106.9% 달성, 예산 79,601백만 원 중 79,457백만 원 집행(집행률 99.8%)

7) 20년 성과지표 목표치를 ('20) 100만으로 변경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에 기인하고 있음(노인방문건강관리 대상 기존 목표치/실적치는 전체등록가구수이며, 실제 노인가구 비율은 80% 수준, 따라서 19년도 실적치에 80% + 7만가구로 조정).

- '20년 12월말 기준, 방문건강관리사업 현황은 등록가구 1,121,174가구, 신규등록가구 165,206가구이며 그 중 적정관리가구는 66,527가구(40.3%)
 - 노인등록가구 878,819가구(78.4%) 중 신규등록가구는 150,807가구(91.3%)이며 그 중 적정관리가구는 61,449가구(92.4%)
 - 노인등록가구원수는 954,532명으로 전체 노인의 11.2%대상 서비스
- '20년 코로나19 확산 가운데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및 “유선 모니터링 체계를 신규 구축”하여 직접 방문의 공백을 해소하고, 연속성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
 - 24개 보건소에서 약1만명을 대상으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추진
 - '20.4월부터 12월까지 총 1,963,665건의 유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9,433건의 후속 조치 안내 실시
-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시행, 139개소 18천명(전년 대비 보건소 39개소, 대상자 6천명 증가) 대상 서비스 제공
 - 복부비만 등 대상자 중 건강관리 희망자에 대해 보건소에서 모바일 기반으로 생활습관 개선 및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비만예방관리
 - 본 사업 평가 결과 건강문제 개선효과 및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목표달성 부진사유)
 - 코로나19 확산 및 보건소의 코로나19 방역업무 지원으로 방문건강증진(대면상담)이 중단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 발생
 -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신규등록가구가 약 24.5% 감소했으며, 노인 신규등록가구는 8.4% 감소
 - 또한, 어르신 방문건강사업에 대한 지자체 합동평가도 유예됨에 따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에도 어려움 발생
- (예산 미집행 사유) 보건소의 코로나19 방역 업무 과중으로 인해 사업수행기관이 목표 대비 1개 기관 미선정되어 미집행액 발생(60백만원)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건강취약계층 중심의 대면 서비스와 비대면 서비스의 이중화된 서비스 전달체계를 대면+비대면 통합서비스 체계로 개편
 - 아동대상 모바일헬스케어 시스템을 활용, 시범사업 추진('21.6월~)

〈표 2-73〉 건강노화를 위한 예방적 관리 강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4-1-나-① 건강노화를 위한 예방적 관리 강화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강화, 고령자 질병 예방 및 관리 강화)	만성질환관리 통합서비스 모형 참여 의료기관 비율(1)	25	25	31.1	124.4	15	15	18.4	122.7	10	10	10.9	109	848	6,480	3,331	51.4
4-1-나-② 건강노화를 위한 예방적 관리 강화 (고령자 질병 예방 및 관리 강화)	교육 횟수	120	120	121	100.8	120	120	247	206	70	70	69	98.6	621	621	614	98.9
4-1-나-③ 건강노화를 위한 예방적 관리 강화 (고령자 맞춤형 체육 및 건강예방· 관리 프로그램 운영 확대)	건강백세 운동교실 강습횟수	15만	15만	104,100	69.4	25만	25만	25만	100	25만	25만	25만	100	14,923	8,499	918	10.8
4-1-나-④ 건강노화를 위한 예방적 관리 강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확충 및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확대)	노인방문 건강관리 대상(가구)(0.5)	130만	100만	89만	89.0	120만	120만	116만	96.7	신규	신규	116	-	76,953	79,601	79,457	99.8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보건소(개) (0.5)	130	130	139	106.9	100	100	100	100	신규	신규	70	-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만성질환관리 통합서비스 모형 참여 의료기관 비율(1)=만성질환관리 통합서비스 모형 참여 의료기관수/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 참여의원(8천개)×100; 성과지표 교육횟수=어르신 안전사용 교육 실시 횟수; 성과지표 건강백세 운동교실 강습횟수=건강백세운동교실 개소당 강습횟수×개소; 성과지표 1. 노인방문건강관리 대상(가구)(0.5)=방문건강관리 대상자 등록 관리 현황, 성과지표 2.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보건소 (개)(0.5)=사업참여 보건소 개소수

□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추진(병원 내 지역연계실 설치 및 시군구 단위 종합재가 센터 도입)(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4-2-가-①,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 확충 등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제공기반 구축(~'25년)

○ (성과) 성과지표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자립생활 유지율(%) 목표치 50% 대비 실적치 70.8%로 141.6% 달성, 예산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지원

- (퇴원·지역연계) 퇴원환자 대상으로 의료 및 지역사회 연계서비스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 방안 마련 및 시행

- (급성기) 종합병원급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환자 통합평가, 회복기·유지기 기관과 의뢰·회송 체계 정비, 경제·사회적 지원 및 지역사회 서비스 자원 연계 활동 등 모델 마련
- (회복기)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45개소('20.3, '20.12.) 지정, 지역사회 연계수가 등 포함한 2단계 수가 시범사업 시행('20.3)
- (종합재가센터) 재가서비스 통합·연계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 산하 종합재가센터 확대('19년 10개소 → '20년 24개소)
- (협업) 장기요양 이동지원 시범사업*(6월~), 고령자복지주택 돌봄서비스 연계방안 마련 등을 통한 신규 사회서비스 정책개발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핵심 인프라 확충 및 제공기반 구축
 - 의료 전달체계(급성기-회복기-유지기 기관)에 맞는 성과지표 및 보상체계 검토하여 단계별 기능 정립 및 전문화 추진
 -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제공환경 개선

□ '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으로 재가 기반 서비스 강화(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4-2-가-②,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장기요양 수급자에 대한 재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통합재가 급여 도입 및 복지용구 지원 대상자 및 품목 확대
- (성과) 성과지표 1. 통합재가급여 본사업 실시 목표치 과제완료 대비 50으로 50% 달성, 성과지표 2. 복지용구 안전손잡이 급여 확대 및 실내용 단차해소기 등 신규제품 선정 목표치 100 대비 실적치 100으로 100% 달성, 예산 해당없음
- (통합재가급여) 통합재가 예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통합재가 급여 지침 안내 예비사업 급여제공 기준 일부 완화
- (복지용구) 고령자 가정 내 낙상 예방을 위한 복지용구 급여 확대('20.3월)
 - 안전손잡이 연간 구입 한도 증가(4개 → 10개)
 - 경사로 품목 유형 확대(실내용 추가, 11개 제품)('21.2월 급여시작)
- (복지용구) 복지용구 신규급여 등재 신청 절차 규제 완화('20.3월)
 - 신규급여 결정 시 고령친화 우수인증 제품 유통실적 제출 면제(하반기 43개 접수)
- (목표달성 부진사유) 통합재가 본사업은 진행 중인 예비사업을 보완 및 성과평가를 거친 후 진행하도록 함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신규품목 급여결정 신청 시 평가 기준 등 품목선정 체계가 수급자의 욕구 및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도록 개선 추진(~'22년)
- 사회적으로(신기술, 고가 등)가 높은 품목·제품을 제한적으로 급여적용하는 예비급여제도 도입 추진(~'23년)

〈표 2-74〉 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 사업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4-2-가-①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추진(병원 내 지역연계실 설치 및 시군구 단위 종합재가센터 도입)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자립생활 유지율(%)	50	50	70.8	141.6	50	50	55.4	110.8	-	-	-	-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지원			
4-2-가-② '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으로 재가 기반 서비스 강화	통합재가급여 본사업 실시	과제 완료	과제 완료	50	50	100	100	0	0	신규	신규	신규	신규	해당없음			
	복지용구 안전손잡이 급여 확대 및 실내용 단차해소기 등 신규제품 선정	100	100	100	100	100	100	0	0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1. 통합재가급여 본사업 실시=통합재가급여 본사업 추진, 성과지표 2. 복지용구 안전손잡이 급여 확대 및 실내용 단차해소기 등 신규제품 선정=①안전손잡이 급여 확대(4개→10개) ②실내용 단차해소기 제품 선정

□ 돌봄의 예방적 기능 강화(장기요양 진입 예방을 위한 노인돌봄 관련 서비스 통합)(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노후-4-2-나-①,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 일반·취약노인 지원체계를 개편하여 실질적인 예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장기요양 진입 지연 및 노인의료비 절감 도모

○ (성과) 성과지표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점)(0.5) 목표치 70점 대비 실적치 83.6점으로 119.4% 달성, 성과지표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혜율(%) (0.5) 목표치 5.5% 대비 실적치 5.3%으로 96.4% 달성, 예산 372,797백만 원 중 99.5%인 370,975백만 원 집행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 6개 유사·분절적 노인돌봄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개편

- '19년 대비 서비스 대상자를 대폭 확대('19. 35만 → '20. 43만)

- 은둔·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서비스를 확대('19. 115개→'20. 163개 수행기관)하여 정서지원 강화
- (목표달성 부진사유) 코로나-19 감염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 사업추진 어려움
 - 대상자 발굴 어려움 및 다수 인원이 참석하는 '우수사례 발표·성과 대회' 취소
- (예산 미집행 사유) 코로나-19 감염확산 및 장기화로 인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발굴이 어려워 불용액 발생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지자체·복지관 등과 협력하여 대상자 적극 발굴 추진

□ 노인안심 생활지원(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4-2-나-②,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화재예방을 위한 배연창 설치지원 지속, 감염병 예방관리 및 미세먼지 대응역량 강화, 동·하절기 민관 합동 안전점검 정기 실시 등 시설내 안전인프라 제고
- (성과) 성과지표 안전점검 실적(%) 목표치 100 대비 실적치 100으로 100% 달성, 예산 1,800백만 원 전액 집행
 - 요양시설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대피시간 확보를 위해 화재안전창문 설치 지원(법인 및 민간시설 지원)으로 화재 등 노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시행에 따라 시설 내 안전한 환경 조성으로 노인요양시설 이용자(보호자) 만족도 증가
 - 하절기 대비 노인의료·재가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20.5~6월)
 - 동절기 대비노인의료·재가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20.11~'21.1월)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안전점검) 노인의료·재가복지시설에 대한 동·하절기 안전점검 및 미세먼지 정기 점검 실시

□ 돌봄의 예방적 기능 강화(식생활 안전 관리)(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4-2-나-③, 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업내용) 노인의 생활 패턴별 차별화되고 체계적인 식생활안전 관리로 만성질환 예방 및 악화를 방지하여 건강수명 연장 도모
- (성과) 성과지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등록 수(개소) 목표치 290개 대비 실적치 307개로 105.9% 달성, 예산 810백만 원 전액 집행
 - 어르신의 건강한 식생활 관리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연중)
 - 영양사가 없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노인 급식소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관리 현장 컨설팅 실시
 - 노인급식소 조리원, 영양보호사 등 식품안전·영양관리 교육 지원

- ‘튼튼 먹거리 탐험대’ 활용 노인 식생활 교육프로그램 운영(8~12월)
 - 일상 식생활에 활용 가능한 노인 건강·영양 실천방법 교육 및 요리교실 등 체험·참여형 교육 실시(총 20회)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코로나 19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하여 온라인 워크숍 등 비대면 행사 개최를 검토, 추진 예정

〈표 2-75〉 돌봄의 예방적 기능 강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4-2-나-① 돌봄의 예방적 기능 강화 (장기요양 진입 예방을 위한 노인돌봄 관련 서비스 통합)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점)(0.5)	70	70	83.6	119.4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556,280	372,797	370,975	99.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혜율(%) (0.5)	5.5	5.5	5.3	96.4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4-2-나-② 노인안심 생활지원	안전점검 실적(%)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800	1,800	1,800	100
4-2-나-③ 돌봄의 예방적 기능 강화 (식생활 안전 관리)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등록 수 (개소)	290	290	307	105.9	280	280	287	102.5	신규	-	-	-	810	810	810	100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만족도 조사(점)=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7점 리커트 척도 설문조사, 성과지표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혜율(%)=(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혜자 수/노인인구 수); 성과지표 안전점검 실적(%)=[(점검시설/시설현황)]*100; 성과지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등록 수(개소)=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지원을 받는 노인 급식소

- 장기요양시설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확충 및 전문요양실 도입)(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4-2-다-①,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요양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18~'22년) 및 전문요양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 (성과) 성과지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 국고보조금 집행률(1.0) 목표치 98 대비 실적치 99로 101.0% 달성, 예산 86,233백만 원 중 85,714백만 원 집행(집행률 99.4%, 집행잔액)
 - (치매전담형 시설 확충) 노인요양시설은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 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인정 받아 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설로 지속적인 시설 확충을 통해 서비스 질 제고 및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함
 -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총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2차 시범사업 실시 후 평가 결과 입소

자 만족도 4.36/5점, 보호자 만족도 4.56/5 획득

- (예산 미집행 사유) 지자체 사업 추진 시 설치 규모가 확보된 예산액 지원 규모 보다 작거나, 코로나 19 상황 지속으로 지자체 사업 포기 등의 사유로 집행 잔액 발생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전문요양실 사업) 3차 시범사업 실시('21년), 사업결과 분석 후 본사업 전환 여부 결정 예정

□ 장기요양시설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안심할 수 있는 장기요양 인프라 구축)(함께 만 들어가는 행복한 노후-4-2-다-②,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실효성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

○ (성과) 성과지표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실효성 강화 및 지정갱신제 제도 시행으로 100% 달성, 예산 해당없음

- 장기요양기관 지정 요건 강화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시 해당 지역의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도 고려하도록 법령 개정(20.3.31.)
- 지정·갱신제('19.2월 도입)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한 '운영 실태 조사 및 개선안 마련 연구용역' 실시('20.5~12월)
- 연구용역 결과 분석 및 개선안 검토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장기요양기관 지정 요건 중 행정처분 이력 검토 범위 확대
 - 지자체 등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지정(갱신)제 세부 운영지침 및 관련 시스템 지속 보완 및 고도화 추진

〈표 2-76〉 장기요양시설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4-2-다-① 장기요양시설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확충 및 전문 요양실 도입)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 국고보조금 집행률(1.0)	98	98	99	101.0	98	98	98	100	97	97	97	100	80,231	86,233	85,714	99.4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4-2-다-② 장기요양시설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안심할 수 있는 장기요양 인프라 구축)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실효성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	100	시행	시행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해당없음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 국고보조금 집행률(1.0)=(집행액/예산액)×100; 성과지표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실효성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지정제 실효성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

□ 이용자 중심 서비스 연계(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4-2-라,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보건-복지 서비스 칸막이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민간-공공 협력으로 사람 중심의 서비스 제공

○ (성과) 성과지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내실화 완료로 100% 달성, 예산 34,458백만 원 중 34,473백만 원 집행

- 선도사업 지자체에서 전담부서(16개 시군구 본청) 설치 및 인력 배치(평균 인력 4.5명)하여 총 17,143명 대상자를 발굴, 통합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15,757명(91.9%)에게 서비스 연계·제공(‘20.12)
- ‘지역케어회의’에 보건, 주거 등 보다 다양한 직역에서 참여하고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19)에 따른 매뉴얼 마련 및 배포, 주기적 운영 현황 관리
- 건보공단인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건강 위험군을 발굴하고 건강 등 통합적인 돌봄 관리할 수 있는 ‘집중형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 확대(4개→15개 지자체)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선도사업 이후 안정적 통합돌봄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을 통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표 2-77〉 이용자 중심 서비스 연계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시행 계획 목표치	제출 목표치	실적	달성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4-2-라 이용자 중심 서비스 연계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실시	선도 사업 내실화	내실화	내실화	100	선도 사업 실시	실시	실시	100	-	-	-	-	34,458	34,458	34,473	100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실시=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실시 여부

□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4-3-가-①, 국토교통부)

○ (사업내용) 저소득 고령층에게 시세의 30~70% 수준으로 건설임대주택 공급(영구 '89년~, 국민 '98년~, 행복 '13년~) 및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16년~)

○ (성과) 성과지표 1. 고령자 전세임대 공급(천호) 목표치 4(천호) 대비 실적치 3(천호)으로 75.0% 달성, 성과지표 2. 고령자 건설임대 공급(천호) 목표치 6(천호) 대비 실적치 6.3(천호)으로 105.0% 달성, 예산 <고령자 건설 임대> 447,528백만 원 중 473,038백만 원 집행(집행률 105.7%), <고령자 매입·전세임대> 310,280백만 원 중 285,424백만 원 집행(집행률 92.0%)

-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3천호 공급('20.12월말)
- 고령자 건설임대주택 6.3천호 공급('20.12월말)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해당 없음

□ 안전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고령자 복지주택 등 케어안심 주택 공급)(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4-3-가-②, 국토교통부)

○ (사업내용)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를 위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복지주택' 추진

○ (성과) 성과지표 저소득 고령자주택건설비용 지원 목표치 10개소 대비 실적치 10개소로 100% 달성, 예산 12,285백만 원 중 17,882백만 원 집행(집행률 145.6%, 초과집행)

- 지자체 공모를 통해 10곳(1,251호) 선정('20.5, 20.11) 및 사업승인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해당 없음

□ 안전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고령자 복지주택 등 케어안심 주택 공급)(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4-3-가-③,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케어안심주택) 기존 영구임대주택 등에 의료·돌봄 등 서비스를 연계하는 케어안심주택 모델 개발 및 확충 추진

○ (성과) 성과지표 케어안심주택 모델 및 매뉴얼 개발·적용 목표치 적용 대비 실적치 적용(선도지자체)로 100% 달성, 예산 해당사항 없음

- 케어안심주택 사례분석 및 제도화 방안 연구를 통해 개념 정립, 향후 제도화 방향 및 실행모형 도출 기반 마련
- 국토부와 고령자복지주택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 논의를 통해 노인 주거-돌봄서비스 연계(충남 청양군, 127가구)

- 21년도 선도사업 실행계획서에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케어안심주택 제공 모형 도출에 기여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자체에서 케어안심주택 운영 모형 검증을 통해 향후 전국적 확대 방안 검토
- 안전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노인가구 기존 주택 맞춤형 개보수 지원 강화)(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4-3-가-④, 국토교통부)
- (사업내용) 주택개량 시 편의시설 설치를 통하여 고령자의 주거환경 개선
- (성과) 성과지표 저소득 고령자 주거편의시설 설치 목표치 8,000 대비 실적치 11,102로 138.8% 달성, 예산 151,103백만 원의 91.0%인 137,490백만 원 집행
- 저소득 고령자에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손잡이, 단차제거 등) 설치 관련 최대 50만원 추가 지원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포함 자가가구에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추가 설치 관련 최대 380만원 추가 지원
 - (예산 미집행 사유) 정부방역조치 연계 및 사업불가기간 발생에 따라 수선계획 변경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예산 편성 시 통계청의 개선된 경상소득 통계를 반영한 추계를 통해 불용 최소화
 - 21년 연간수선계획 수립 및 차질없이 주택개량 실시
- 안전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노인가구 기존 주택 맞춤형 개보수 지원 강화)(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4-3-가-⑤,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재가 노인의 주택 개보수 지원을 통해 노인 가구 주거환경 개선
- (성과) 성과지표 없음에 따라 평가 대상 제외, 예산 해당사항 없음
- 안전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노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주거모델 개발·공급)(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4-3-가-⑥,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건강한 노인이 잔존능력을 활용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주거복지시설 적정모형 개발 및 확충 추진
- (성과) 성과지표 노인가구 주거모델 개발 대비 개발 연구 추진으로 100% 달성, 예산 해당사항없음
- '20년 노인주거복지서비스 제공모형 개발연구 추진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연구결과를 토대로 양로시설 및 노인복지주택 주거모델 개발 보급 확보방안 마련

-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4-3-가-⑦, 국토교통부)
 - (사업내용)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을 통해 고령자도 손쉽게 주거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성과) 성과지표 고령자 맞춤형 주거정책 정보 제공 시스템 운영(100% 달성), 별도의 예산 없음(LH 자체 예산으로 운용)
 - 마이홈 상담센터, 마이홈포털 및 모바일 앱 서비스 지속 확대 운영을 통하여 맞춤형 주거지원 안내 강화
 - 각종 주거지원 서비스를 통합 상담·지원하기 위해 1:1 오프라인 상담센터인 마이홈센터 확대 설치('20년 5곳 추가 설치)
 - 콜센터(1600-1004), 온라인 포털(www.myhome.go.kr) 및 모바일 앱 서비스 지속 운영을 통한 맞춤형 주거지원 통합 상담·안내
 - 마이홈센터를 중심으로 복지관련 기관과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다양한 서비스 지원
 - 지역 노인복지관 등과 업무협약을 신규 체결하고(8건), 도시락 제공 등 독거노인 대상 주거지원 서비스 제공(25건)
 -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맞춤형 주거상향을 지원하기 위한 '찾아가는 주거상담' 개최(28건)
 - 사용자의 편의성 및 가독성을 고려한 지도 및 위치 기반 정보제공서비스 구현하여 편의성 향상 및 주택정보 접근성 증대
 - 지도(GIS) 서비스를 기반으로 주택매물위치정보 및 상세정보를 클릭 없는 팝업형태로 제공하여 가독성 및 편의성 제고
 - 위치기반의 간편한 검색을 통한 '내 주변 마이홈 정보 찾기' 서비스 제공
 - 민간사업자(다방)와 주택정보 공유를 통한 민간주택정보 제공
 - (마이홈→다방) 민간 플랫폼에 공공임대주택(건설임대, 매입임대 등)정보 제공
 - (다방→마이홈) 마이홈포털의 '입주가능주택 찾기' 메뉴에 민간임대주택정보 제공
 - 인기 캐릭터(펭수)를 활용한 마이홈포털 홍보강화
 - 마이홈 센터 관련 영상콘텐츠 제작·방영 및 유튜브 게시를 통해 공감과 관심 제고(조회수 63만건)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1/4분기 : 마이홈 상담센터·콜센터·포털·앱 등 운영
 - 2/4분기 : 마이홈 상담센터·콜센터·포털·앱 등 운영

- 3/4분기 : 마이홈 상담센터·콜센터·포털·앱 등 운영
- 4/4분기 : 마이홈 상담센터·콜센터·포털·앱 등 운영

〈표 2-78〉 안전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 치	제출 목표 치	실적	달성 률 (%)	시행 계획 목표 치	제출 목표 치	실적	달성 률 (%)	시행 계획 목표 치	제출 목표 치	실적	달성 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4-3-가-①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1. 고령자매입 전세임대 공급(천호)	4	4	3	75.0	3	3	3	100	2	2	8	400	310,280	310,280	285,424	92.0
	2. 고령자건설임대 공급(천호)	6	6	6.3	105.0	5	5	5.7	114	5	5	5	100	564,656	447,528	473,038	105.7
4-3-가-② 안전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고령자 복지주택 등 케어안심 주택 공급)	저소득 고령자주택건설비용 지원	10 개소	10 개소	10 개소	100	10 개소	10 개소	10 개소	100	-	-	-	-	12,285	12,285	17,882	146.0
4-3-가-③ 안전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 (고령자 복지주택 등 케어안심 주택 공급)	케어안심주택 모델 및 매뉴얼 개발·적용	적용	적용	적용	100	개발	개발	개발	100	-	-	-	-	해당사항 없음			
4-3-가-④ 안전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노인가구 기존 주택 맞춤형 개보수 지원 강화)	저소득 고령자 주거편의시설 설치	8,000	8,000	11,102	138.8	8,000	8,000	10,020	125.3	-	-	-	-	151,103	151,103	137,490	91.0
4-3-가-⑥ 안전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노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주거모델 개발·공급)	노인가구 주거모델 개발	개발	개발	개발	100	개발	개발	-	-	신규	신규	-	-	해당사항 없음			
4-3-가-⑦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	고령자 맞춤형 주거정책 정보 제공	시스템 운영	시스템 운영	시스템 운영	100	시스템 운영	시스템 운영	시스템 운영	100	시스템 운영	시스템 운영	시스템 운영	100	별도의 예산 없음(LH 자체 예산으로 운영)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1. 고령자매입 전세임대 공급(천호)=공급실적, 성과지표 2. 고령자건설임대 공급(천호)=공급실적; 성과지표 저소득 고령자주택건설비용 지원=사업승인실적/사업승인계획×100; 성과지표 케어안심주택 모델 및 매뉴얼 개발·적용=모델 및 매뉴얼 개발·적용 여부; 성과지표 저소득 고령자 주거편의시설 설치=수선유지급여 정산내역 확인; 성과지표 노인가구 주거모델 개발=주거모델 개발; 성과지표 고령자 맞춤형 주거정책 정보 제공=시스템 운영여부

□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지역사회 물리적 여건 조성(도시환경에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확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4-3-나-①,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내용) 부처간 협업방안 연구, 해외사례 현황조사 등을 통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의 확산방안 도출 및 정책과제화

○ (성과) 성과지표 1. 기술개발 및 연구진수(0.5) 목표치 25 대비 실적치 34로 136.0% 달성, 성과지표 2. 사업참여 만족도(점)(0.5) 목표치 83 대비 실적치 83.5로 100.6%⁸⁾ 달성, 예산 6,098백만 원 전액 집행

- (R&D) 유아·고령자 등을 배려한 디자인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R&D 과제 지원 확대(누적 기준 '19년 28개 → '20년 35개)

- 사회문제해결(고령자 자립지원, 성범죄 예방) 관련 서비스디자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국민참여 정책개발 사례 확산 노력

• 사람 중심, 사회적 가치를 담은 유니버설 확산을 위한 정책제안을 지원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민관협력모델 개선 지속

- 유니버설디자인 인식확산 관련 공모전 및 시상제도 운영

- (예산 변경 사유) 시행계획을 제출하는 연초에는 해당 연도의 R&D과제(신규,계속)의 내용과 규모가 확정되지 않고 신규공고 선정 및 협약 대상 과제가 4월 이후에 확정되어 초기 시행계획의 예산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서비스디자인을 기반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고 사회적 대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 제공

• 국내 최대 디자인 공모전(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청소년디자인전람회) 시상 및 디자인 산업컨벤션행사(디자인코리아)를 통해 유니버설 디자인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인식 확산 유도

□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지역사회 물리적 여건 조성(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4-3-나-②, 경찰청)

○ (사업내용)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통한 고령자 보행사고 감소

○ (성과) 성과지표 해당없음에 따라 평가 대상 제외

8) 20년 성과지표 목표치를 ('20) 83으로 변경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에 기인하고 있음(초기 시행계획에서 '행사참여만족도' 목표치를 전년 대비 5% 증가로 설정하였으나 해당 목표치를 지속적으로 가져갈 경우, '23년에는 목표치가 100%가 초과되는 등 비현실적이며 통상적으로 행사만족도의 경우 최대 성과가 나와도 90점을 초과하기가 어렵고, 지난해와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관객의 참여가 쉽지 않아 '행사참여만족도'의 지속 향상의 기존 취지를 담아 내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만족도 상한을 최근 4년간 평균(83점)으로 설정하였음).

- 노인복지시설 등 대상 노인보호구역 확대
- 노인보호구역 등 교통안전시설 일제점검, 신호주기 점검·조정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보강('20. 4~5월)
- 노인 등 교통약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표준규격 제정·배포('20. 10월)
- 안전속도 5030' 수용성 제고를 위한 홍보·계도 강화('20. 10월~)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해당사항 없음

□ 다양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통한 이동성 보장(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4-3-나-③, 국토교통부)

○ (사업내용)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여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지역사회 여건 조성

○ (성과) 성과지표 1. 공공형 버스 도입지역 수(단위: 개)(25%) 목표치 55개 대비 실적치 58개로 105.5% 달성, 성과지표 2. 공공형 택시 도입지역 수(단위: 개)(25%) 목표치 59개 대비 실적치 60개로 101.7% 달성⁹⁾, 성과지표 3. 저상버스 도입률(단위: %)(50%) 목표치 29.0%대비 실적치 28.8%로 99.3% 달성, 예산 <공공형버스> 41,920백만 원 중 39,754백만 원 집행(집행률 94.8%), <공공형택시> 7,272백만 원 전액 집행, <저상버스> 117,849백만 원 중 117,823백만 원 집행

- (공공형 버스) '19년 첫 도입 후 도입 지역 수 52개에서 58개로 상승, 점진적인 도입 증가 목표 달성
 - 주52시간 근무 및 코로나19로 버스 노선이 단축·폐지된 지역에 콜버스 등 공공형 버스를 대체 투입해 주민이동권 보장
- (공공형 택시) 전국 78개시 중 당초 36개('17)시에서 49개('18) → 57개('19) → 60개('20)시 제도 운영으로 국비지원 효과
 - 혜택주민도 지속 증가('17. 24만 → '18. 36만 → '19. 40만 → '20. 44만명)
- (저상버스) 프로그램목표 달성 기여도
 - 저상버스 등 교통수단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이동편의를 제고함으로써, 대중교통 육성 및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
- 성과 우수성 인정사례
 - 저상버스 보급 확대를 위하여 시내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추진 방안 마련

9) 성과지표 목표치('20) 59개로 변경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에 기인하고 있음(공공형 택시 보급 시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증가추세가 완화된 '19년 실적대비 매년 3% 증가로 지표를 조정(상향) 설정).

- (목표달성 부진사유)
 - (저상버스) 저상버스 도입 지원 예산 확보 어려움에 따라 목표치 미달
- (예산 미집행 사유)
 - (공공형 버스) 코로나-19로 인한 지자체의 사업포기, 축소 등으로 인해 불용액 21억 발생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지자체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지자체의 집행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배분하고, 매칭예산 확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독려
 - 저상버스 신규 도입 뿐만 아니라 대폐차 시에도 보조금 지급으로 저상버스 보급률 향상

□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지역사회 물리적 여건 조성(IT연계 스마트케어 활성화)(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노후-4-3-나-④,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내용)

- 건강관리 서비스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외 시장 진출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IT를 연계한 스마트케어 활성화
-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의 기획·개발·시험인증·판매의 전과정을 원스톱 지원하는 체계 및 소프트웨어 시험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
- (성과) 성과지표 1. 성능·표준화 획득·임상승인(건)(0.1) 목표치 3건 대비 실적치 6건으로 200.0% 달성, 성과지표 2. 고용 유지율(%) (0.1) 목표치 84.9% 대비 실적치 89.2%로 105.1% 달성, 성과지표 3. 등록특허 SMART 점수(점)(0.1) 목표치 3.66점 대비 실적치 3.83점으로 104.6% 달성, 성과지표 4. 서비스이용자수(명)(0.1) 목표치 6,100명 대비 실적치 17,876명으로 293.0% 달성, 성과지표 5. 사업화매출액(억원)(0.1) 목표치 42.6억원 대비 실적치 29.35억원으로 68.9% 달성, 성과지표 6. 디지털헬스케어기기시험/인증 지원(건)(0.5) 목표치 17건 대비 실적치 31건으로 182.4% 달성, 예산 <PHR 기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개발> 5,007백만 원 전액 집행, <디지털헬스케어 소프트웨어시험평가센터 구축> 2,322백만 원 전액 집행

1. PHR 기반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개발

- PHR기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과제 12건 지원
 - 국제표준인 HL7 FHIR에 관한 표준활용 가이드 설계
 - HL7 FHIR 서버 개발 및 검증 완료(표준호환성 98%) 및 상용서비스 테스트베드·인프라 구축
 - 고령자 건강관리 서비스, 치매보고자용 건강관리서비스 등 앱 개발 및 실증

2. 스마트헬스케어 종합지원센터구축 : '19년 종료

3. 디지털헬스케어 소프트웨어시험평가센터 구축

- 디지털 헬스케어 'S/W Class C'에 대한 시험평가 체계 완성
- (목표달성 부진사유) (사업화매출액) 2020년 코로나19로 전반적인 매출액 감소 추세로 인한 미달성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개인건강정보 기반 개방형 서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다양한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 확대
 - 디지털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구축 인프라를 통해 시험평가기술 개발, 기술지도 등 디지털 헬스케어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

〈표 2-79〉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지역사회 물리적 여건 조성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 치	제출 목표 치	실적	달성 률 (%)	시행 계획 목표 치	제출 목표 치	실적	달성 률 (%)	시행 계획 목표 치	제출 목표 치	실적	달성 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4-3-나-①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지역사회 물리적 여건 조성(도시환경 에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확대)	기술개발 및 연구건수(0.5)	25	25	34	136	20	20	28	140	15	20	20	133	5,480	6,098	6,098	100
	사업참여 만족도(점)(0.5)	87	83	83.5	100.6	82	82	83	101	88	88	78	89				
4-3-나-③ 다양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통한 이동성 보장	공공형 버스 도입지역 수 (단위: 개)(25%)	55	55	58	105.5	50	50	52	104.0	-	-	-	-	41,920	41,920	39,754	94.8
	공공형 택시 도입지역 수 (단위: 개)(25%)	55	59	60	101.7	52	52	57	109.6	-	-	49	-	7,272	7,272	7,272	100
	저상버스 도입률 (단위: %)(50%)	28	29	28.8	99.3	25	28.9	26.5	91.7	-	-	23.4	-	117,849	117,849	117,823	99.98
4-3-나-④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지역사회 물리적 여건 조성(IT연계 스마트케어 활성화)	성능·표준화 획득·임상승인 (건) (0.1)	3	3	6	200	3	3	2	66.6	2	2	2	100	5,007	5,007	5,007	100
	고용 유지율 (%) (0.1)	84.9	84.9	89.2	105.1	84.9	84.9	88.9	104.7	84.9	84.9	91.0	107				
	등록특허 SMART 점수 (점) (0.1)	3.66	3.66	3.83	104.6	3.55	3.55	3.2	90	3.45	3.45	2.75	79.7	-	-	-	-
	서비스이용자수 (명) (0.1)	6,100	6,100	17,876	293.0	6,000	6,000	9,492	158.2	5,800	5,800	5,091	87.8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 치	제출 목표 치	실적	달성 률 (%)	시행 계획 목표 치	제출 목표 치	실적	달성 률 (%)	시행 계획 목표 치	제출 목표 치	실적	달성 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사업화매출액 (억원) (0.1)	42.6	42.6	29.35	68.9	40.57	40.57	32.89	81	38.64	38.64	39.13	101	2,322	2,322	2,322	100
	디지털헬스케어기기시 험/인증지원(건) (0.5)	17	17	31	182.4	15	15	22	147	8	8	26	325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1. 기술개발 및 연구건수(0.5)=R&D 과제 지원 건수(누적), 성과지표 2. 사업참여 만족도(점)(0.5)=행사참여자 만족도; 성과지표 1. 공공형 버스 도입지역 수(단위: 개)(25%)=실제 공공형 버스 도입 지자체(市) 수, 성과지표 2. 공공형 택시 도입지역 수(단위: 개)(25%)=실제 공공형 택시 도입 지자체(市) 수, 성과지표 3. 저상버스 도입률(단위: %)(50%)=(저상버스 대수/전체 시내버스 대수)×100; 성과지표 1. 성능·표준화 획득·임상승인(건)(0.1)=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활용한 시제품제작 성과 조사 S/W 성능평가(가상현실시스템, PHR건강관리시스템), 신약/의료 임상승인 (스마트바이오시스템) 표준화(가상현실시스템, PHR건강관리시스템) 연차별 목표(수요조사 기반)대비 실적 건, 성과지표 2. 고용유지율(%)=(0.1)=당해연도 고용유지율 = (당해연도 1월 1일 이전 입사자 중 R&D과제 참여연구원의 당해연도 12월 31일 까지 남아있는 인력수)/(당해연도 1월 1일 이전 R&D과제 참여연구원 수) * 100, 성과지표 3. 등록특허 SMART 점수(점)(0.1)=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통해 검증된 등록특허와 한국발명진흥회의 특허분석평가시스템 SMART3.1 활용, 성과지표 4. 서비스이용자수(명)(0.1)=’18년 PHR 신규(총괄과제, 3개 세부과제) 선정으로 총괄과제 추진체계에 총괄/세부과제 책임자 참여 운영위원회(월1회 운영)를 통해 이해관계자 회의 정례 실시, 서비스이용자수는 총괄과제(운영위원회)를 통해 조사 및 취합(증빙: 건강관리시스템 관리 기록), 성과지표 5. 사업화매출액(억원)(0.1)=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활용한 사업화 매출액 성과 조사, 성과지표 6. 디지털헬스케어기기시험/인증지원(건)(0.5)=스마트헬스케어 기기 시험성적서 및 CHA 등 국제인증서 발급 등 지원

5. (마무리) 성숙한 노년기를 위한 기반 마련

□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 다양화 및 전문기관 인력 양성(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5-1-가,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호스피스 지원 활성화를 통해 말기 환자 등에 대한 호스피스 제공으로 말기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성과) 성과지표 호스피스 이용률(%) 목표치 25% 대비 실적치 24.3%로 97.2% 달성, 예산 8,832백만 원 전액 집행

- (서비스 유형 다양화·확대) 가정형 호스피스 본 사업 전환(전문기관 38개소, ’20.9~) 및 자문형·소아청소년 시범사업 확대와 평가

• 호스피스 대상질환 확대 필요성 도출 및 임상진료 지침 개발(’20.12)

- (호스피스기관 전문성 강화) 다학제 전문가팀을 통한 신규 전문기관 대상 온라인 1:1 맞춤형 교육(’20.11),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20.1~’20.6)

• 호스피스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서비스 유형별 교육 강화

- (홍보 및 인식개선) 홍보 콘텐츠 개발(중앙호스피스센터)과 지역 특성, 설문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한 홍보 실시(권역별호스피스센터)

• 의료인의 호스피스 관심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학회 학술대회 등을 통한 인식개선 실시

- (목표달성 부진사유) '19년 대비 '20년 1.4%p 증가하였으나 목표치 미달성, 호스피스 서비스 급여화('15), 가정형·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16), 자문형 시범사업 추진('17) 이후 사업이 안정화되면서 전문기관 유입이 늘지 않아 환자 이용률이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코로나19로 운영을 중단한 전문기관의 예산을 활용하여 부족한 인프라 확충 추진 (전문기관 추가지정 추진)
 - 현재 성과지표가 당해연도의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지표 변경 검토

〈표 2-80〉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 다양화 및 전문기관 인력 양성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 치	제출 목표 치	실적	달성 률 (%)	시행 계획 목표 치	제출 목표 치	실적	달성 률 (%)	시행 계획 목표 치	제출 목표 치	실적	달성 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5-1-가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 다양화 및 전문기관 인력 양성	호스피스 이용률(%)	25	25	24.3	97.2	23	23	22.9	99.6	21	21	22	109	8,832	8,832	8,832	100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호스피스 이용률(%)=당해 연도 호스피스 전문기관 및 시범사업 수행기관 이용자수/당해연도 암사망자수×100

□ 연명의료 제도의 안정적 정착 지원(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5-1-나,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통해 국민의 존엄하고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고 바람직한 임종 문화를 조성
- (성과) 성과지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개소수 목표치 200 대비 실적치 243으로 121.5% 달성, 예산 665백만 원 전액 집행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83개 기관 추가 지정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접근성 제고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 : 333,556건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추가 지정(분기별 1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운영비 지원

〈표 2-81〉 연명의료 제도의 안정적 정착 지원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 치	제출 목표 치	실적	달성 률 (%)	시행 계획 목표 치	제출 목표 치	실적	달성 률 (%)	시행 계획 목표 치	제출 목표 치	실적	달성 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5-1-나 연명의료 제도의 안정적 정착 지원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개소수	200	200	243	121.5	104	104	161	154.8	-	-	94	-	665	665	665	100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개소수=등록기관 지정 기관수(누적)/기관 수 전수 조사

□ 고령자 정신건강관리 강화(민관협력 노인자살예방사업 집중 추진)(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5-2-가,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노인자살예방사업 집중 추진에 따른 노인 자살고위험군 정신건강관리 강화

○ (성과) 성과지표 1. 사업매뉴얼 개발 20년도 성과목표 없음, 성과지표 2. 지역사회 기반 자살 예방사업 추진 목표치 4개소 대비 실적치 5개소로 125.0% 달성, 예산 400백만 원 전액 집행

- 농촌지역 노인자살예방사업 매뉴얼 확정 및 보급

• 기존의 공공부문, 전문가 중심의 노인자살예방사업에서 벗어나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단위, 주민참여에 기반한 지역사회 돌봄기능을 강화한 사업전략 및 방향성 마련

- 농촌지역 노인자살예방사업 매뉴얼을 활용한 지자체 지역 맞춤형 노인자살예방사업 실시 및 우수사례 발굴

• 5개 선정지역에 대한 서면 및 방문 컨설팅 실시

- 노인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생명지킴이교육 실시

• 이어줍니 노인 온라인교육 441명 이수('20.8~'20.12.)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노인자살예방사업 수행 지자체 선정 및 컨설팅 제공

• 지자체의 의지와 자살률 등을 고려하여 자살예방사업 수행지역 선정 및 컨설팅 제공

〈표 2-82〉 고령자 정신건강관리 강화(민관협력 노인자살예방사업 집중 추진)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 치	제출 목표 치	실적	달성 률 (%)	시행 계획 목표 치	제출 목표 치	실적	달성 률 (%)	시행 계획 목표 치	제출 목표 치	실적	달성 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5-2-가 고령자 정신건강관리 강화	사업매뉴얼 개발	-	-	-	-	매뉴얼 개발	매뉴얼 개발	매뉴얼 개발	100	-	-	-	-	400	400	400	100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사업 추진	4개소	4개소	5개소	125.0	-	-	-	-	-	-	-	-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1. 사업매뉴얼 개발=사업보고서, 성과지표 2.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사업 추진=사업 수행기관 개소수

□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강화(자살예방 게이트키퍼 100만명 양성, 노인대상 자살예방프로그램 개발)(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5-2-나,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 (성과) 성과지표 생명지킴이 양성 인원(명) 목표치 1백만명 대비 실적치 1,092,231명으로 109.2% 달성, 예산 2,093백만 원 전액 집행

- 생명지킴이 1,092,231명 양성(노인포함)
- (예산 변경 사유) 당초 별도 계획하였던 자살예방센터 및 실무종사자 대상 교육예산 100백만원 예산 변경하여 집행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교육 확산) 다양한 영역의 각 기관과 연계,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영역별, 직군별 효과성 있는 교육 추진
 - (전문강사 양성) 자살예방사업 실무자 및 관련 종사자 중 자살예방 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여 차질 없는 교육 보급
 - (생명지킴이 사후관리 확대) 생명지킴이를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활동 사례 및 자살예방 관련 정보 등을 이메일 등으로 제공

〈표 2-83〉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강화(자살예방 게이트키퍼 100만명 양성, 노인대상 자살예방프로그램 개발)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 치	제출 목표 치	실적	달성 률 (%)	시행 계획 목표 치	제출 목표 치	실적	달성 률 (%)	시행 계획 목표 치	제출 목표 치	실적	달성 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5-2-나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강화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100만명 양성, 노인대상 자살예방프로 그램 개발)	생명지킴이 양성 인원(명)	1백만	1백만	1,092,231	109.2	1백만	1백만	1,297,314	129.7%	-	-	-	-	1,993	2,093	2,093	100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생명지킴이 양성 인원(명)=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을 받은 인원 수

□ 독거노인 지역사회 관계 형성 지원(종료)(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5-2-다,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 독거노인에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주는 등 고독사 및 자살 예방, 우울증 경감을 위한 상호 돌봄체계 구축 지원

- 초기 독거노인, 잠재 독거위험 가구의 자립능력 향상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여 위기·취약 집단으로 유입 예방

○ 4-2-나 과제로 통합

□ 자살시도자, 유가족 사후지원(자살시도자 응급실 사례 관리 강화)(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5-2-라-①,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의 자살재시도 예방을 위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수행기관 확대 및 관련 종사자 교육

○ (성과) 성과지표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율(%) 목표치 59.0% 대비 실적치 59.7%로 101.2% 달성, 예산 9,481백만 원 전액 집행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수행기관 확대 및 운영모델 다양화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계획 보고
- “코로나19 대응 자살 예방 강화대책(‘20.11월, 관계부처 합동)”에서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계획 발표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자살 고위험군 사후관리 수행기관 확대 및 추진체계 확립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자살시도자에 대한 관리 강화
 - 적절한 치료와 사후관리로 자살사고 등 전반적인 자살위험도를 낮춰 자살 재시도를 예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살률 감소에 기여

□ 자살시도자, 유가족 사후지원(자살 유가족 지원체계 강화)(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5-2-라-②,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갑작스러운 사별에 따른 정신적 충격 및 위기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발 및 지원하여 자살 유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함

○ (성과) 성과지표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 추진 목표치 3개 지역 시범운영 대비 실적치 3개 지역 시범운영으로 100% 달성, 예산 1,145백만 원 전액 집행

-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3개 광역 시·도, 13개 시·군·구 참여
 - 자살사고 발생 시 전담인력이 유족 대상 서비스 안내 등 초기대응부터 심리지원, 법률·행정처리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
- 자살 유족 발굴 등 신규 유입 확대(시범지역 기준)
 - '19년 전년 동기 등록관리 인원 25명 대비 유입 약 7배 증가

- 자살 유족에 대한 24시간 지원체계 마련
 - 자살사건 직후 심리적 충격 및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전문가가 유족에게 조기개입
 - 서비스 동의 및 유입률 향상을 통해 유족의 위기상황을 지원하여 자살 유족의 자살 예방
- 자살 유족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 강화
 - 심리·정서지원, 환경·경제지원으로 사후관리 서비스체계 강화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사건 초기부터 상담과 서비스를 지원하는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의 단계적 전국 확대 추진
 -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
 - 자살 유족 홍보 및 서비스 접근성 강화
 - 자살 유족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서비스 접근성 강화
 - 자살 유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권익 옹호

〈표 2-84〉 자살시도자, 유가족 사후지원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 치	제출 목표 치	실적	달성 률 (%)	시행 계획 목표 치	제출 목표 치	실적	달성 률 (%)	시행 계획 목표 치	제출 목표 치	실적	달성 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5-2-라-① 자살시도자, 유가족 사후지원 (자살시도자 응급실 사례 관리 강화)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율(%)	59	59	59.7	101.2	58	58	57.8	99.7	57	57	59	103.5	9,481	9,481	9,481	100
5-2-라-② 자살시도자, 유가족 사후지원 (자살 유가족 지원체계 강화)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 추진	3개 지역 시범 운영	3개 지역 시범 운영	3개 지역 시범 운영	100	2개 지역 시범 운영	2개 지역 시범 운영	3개 지역 시범 운영	150	-	-	-	-	1,355	1,145	1,145	100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사례관리 서비스 동의율(%)=사례관리서비스 동의자 수/(사망자제외)응급의료센터 내원 전체 자살시도자 총 수; 성과지표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 추진=시범지역 결과보고

제3절 인구변화 적극 대비 분야 실적 평가

1. (사회시스템·지역) 인구구조 변화 대비 및 지역정책 패러다임 전환

- 소관 분야 중장기 계획을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개편(인구변화 적극 대비-1-1-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사업내용)

- (중장기 계획) 국토·도시계획, 노동, 교육, 보건의료 등 부처별 소관 분야 중장기 계획을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개편
- (인구변화 예측) 인구추계 주기 변경(5년→2년), 인구구조 변화 시나리오 분석 및 이에 따른 주요 분야의 정책 변화 방향 제시

○ (성과) 성과지표 1.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 전망(0.5) 목표치 1 대비 실적치 1로 100% 달성, 성과지표 2. 분석결과 반영 4차 기본계획 수립(0.5) 목표치 1 대비 실적치 0.75로 75% 달성, 비예산사업

- 「최근 출생아수 하락 원인과 인구구조 변화의 파급효과 분석」정책 연구('20.5~10월)
- 「인구구조 변화의 원인과 정책 대안」국회 포럼 개최('20.9.22.)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 전망과 정책적 함의」정책 연구('20.3~12월)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20.12.15.)
- (목표달성 부진사유) 성과지표 2. 분석결과 반영 4차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분석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용역 종료시점과 4차 기본계획 공표 시점이 2020.12.15.로 동일하여, 분석결과를 충분하게 반영하여 4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달성을 75%로 산정함.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해당 없음

〈표 2-85〉 소관 분야 중장기 계획을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개편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 치	제출 목표 치	실적	달성 률 (%)	시행 계획 목표 치	제출 목표 치	실적	달성 률 (%)	시행 계획 목표 치	제출 목표 치	실적	달성 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1-1-가 소관 분야 중장기 계획을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개편	1.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 전망 (0.5)	1	1	1	100	-	-	-	-	-	-	-	비예산사업				
	2. 분석결과 반영 4차 기본계획 수립 (0.5)	1	1	0.75	75	-	-	-	-	-	-	-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1.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 전망(0.5)=전망결과, 성과지표 2. 분석결과 반영 4차 기본계획 수립(0.5)=기본계획

□ 재정의 인구구조 변화 대비 강화(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인구변화 적극 대비-1-1-나-

①,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국민연금 제도개편을 통해 장기지속가능성 제고

- 기금 포트폴리오를 해외·대체투자로 다변화하여 기금의 장기수익성 제고
- (성과) 성과지표 사회적 논의 실시 목표치 1 대비 실적치 1로 100% 달성, 예산 해당없음
 - 장래인구특별추계('19.3월, 통계청)를 반영한 국민연금 재정 재추계 실시('20.3~9월) 및 결과 발표
 -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발전을 위해 '공적연금의 경제적 효과 연구' 등 관련 연구 실시
 - 국내시장의 협소성을 극복하고 글로벌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해 해외주식 비중 확대 등 투자다변화를 지속 추진(2021~2025 중기자산배분안, 기금위 의결, 5.20)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국회 논의 등을 통해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혁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등 사전 준비 철저
 - 향후 5년마다 실시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사전 준비 및 재정계산 실시
- 재정의 인구구조 변화 대비 강화(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인구변화 적극 대비-1-1-나-②,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다양한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운용
 - 건강보험지출 증가 요인이 큰 상황에 대비하여 건강보험의 장기적 재정안정성을 위해서 재정수입의 확대와 지출의 절감 방안 마련
 - (성과) 성과지표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 비율(%) 목표치 12.5% 대비 실적치 23.6%로 188.8% 달성, 비예산사업
 -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지출효율화 등 노력을 병행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 추진
 -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이용량 감소 등 이상징후 모니터링을 통한 재정수지 변동규모 추정 및 계획 범위 내 재정수지 관리
 - '21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20년 대비 +0.5조원)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해당사항 없음
- 재정의 인구구조 변화 대비 강화(재정지출 효율화)(인구변화 적극 대비-1-1-나-③, 기획재정부)
 - (사업내용) 국고보조금 개혁, 국유재산 활용 등을 통해 재정지출 효율화
 - (성과) 성과지표 국유지개발 투자집행율(%) 목표치 95% 대비 실적치 96%로 101.1% 달성, 비예산사업

- 안양세관 등 6건의 '노후청사+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 사업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승인 및 설계 착수
- 국유지 개발사업 정상추진으로 개발투자 누적집행율은 96%로 목표치(95%) 달성
- 토지 위탁개발 신규사업 발굴(4개소)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해당사항 없음

〈표 2-86〉 재정의 인구구조 변화 대비 강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 치	제출 목표 치	실적	달성 률 (%)	시행 계획 목표 치	제출 목표 치	실적	달성 률 (%)	시행 계획 목표 치	제출 목표 치	실적	달성 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1-1-나-① 재정의 인구구조 변화 대비 강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	사회적 논의 실시	1	1	1	100	1	1	1	100	-	-	-	-	해당없음			
1-1-나-② 재정의 인구구조 변화 대비 강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 비율(%)	12.5	12.5	23.6	188.8	12.5	12.5	25.1	200.8	33	33	33.1	100.3	비예산사업			
1-1-나-③ 재정의 인구구조 변화 대비 강화 (재정지출 효율화)	국유지개발 투자집행률(%)	95%	95%	96%	101.1	95%	95%	101%	106	95%	95%	105%	110	비예산사업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사회적 논의 실시=국민연금 개편 관련 사회적 논의 실시 여부; 성과지표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 비율(%)=(누적수지/건강보험 총 지출)×100; 성과지표 국유지개발 투자집행률(%)=연도별 투자집행액/연도별 투자계획

□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 구현(인구변화 적극 대비-1-2-가, 저출산·고령 사회위원회)

○ (사업내용)

- 정부의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출산을 제고→삶의 질 개선)을 지역에 확산하여 장기적으로 삶의 기반 확충
-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중앙-지역 협업 강화

○ (성과) 성과지표 1. 지역 설명회, 협의회 등 개최(회) 목표치 23회 대비 실적치 23회로 100% 달성, 성과지표 2. 지역정책 패러다임 전환(%) 목표치 70% 대비 실적치 72.2%로 103.1% 달성, 성과지표 3. 지역 정책 모델 개발(건) 목표치 2건 대비 실적치 2건으로 100% 달성, 비예산사업

-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모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맞추어 지자체 주요 정책목표를 전환하여 중앙-지방 간 정책 일관성 확보
- 지역상생분과위 논의, 지역과의 소통·협력을 통해 개인 삶의 질 제고에 초점을 맞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마련
-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 조성을 위해 지자체별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을 신규 발굴·추진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해당없음

〈표 2-87〉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 구현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 치	제출 목표 치	실적	달성 률 (%)	시행 계획 목표 치	제출 목표 치	실적	달성 률 (%)	시행 계획 목표 치	제출 목표 치	실적	달성 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인구변화 적극 대비-1-2-가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 구현	1. 지역 설명회, 협의회 등 개최(회)	23	23	23	100	20	20	-	-	신규	-	-	-	비예산사업			
	2. 지역정책 패러다임 전환(%)	70	70	72.2	103.1	60	60	-	-	신규	-	-	-				
	3. 지역 정책 모델 개발(건)	2	2	2	100	2	2	-	-	신규	-	-	-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1. 지역 설명회, 협의회 등 개최(회)= 설명회, 협의회, 포럼, 워크숍, 교육지원 등 개최 횟수, 성과지표 2. 지역정책 패러다임 전환(%)=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자체 2020 시행계획 중 정책목표 분석, 성과지표 3. 지역 정책 모델 개발(건)=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 조성을 위한 지역 정책 모델 개발 건수

2. (대응기반 강화) 인구변화 대응기반 강화 및 국민 인식개선

□ 근거 중심 인구정책 추진체계 구축(인구변화 적극 대비-2-1-가-①,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인구 통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통계의 신뢰성 및 품질을 제고

- 이를 바탕으로 근거 중심 정책 설계와 집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 생산 및 제공

○ (성과) 성과지표 통계체계 구축 목표치 보완 대비 보완으로 100% 달성, 비예산사업

- 인구정책에 대한 통계 및 해외사례 등 연구 수행
 - 저출산의 인문학적 통찰 연구
 - 출산율 선행지표와 예측모형 연구
- 통계 개선방안 마련
 - 인구추계 모형개선, 주기 단축, 시나리오 확대 등 인구 변화를 반영한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인구통계 제공

- 정책대상별(청년층, 고령층 등) 통계수요 대비 통계 세분화
- 가족다양화 및 구성원수 감소 대비 세분화된 통계 제공
- 지역소멸 대비 지역 인구추계 추계기간 확대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통계생산기관인 통계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확대하여 체계마련

□ 근거 중심 인구정책 추진체계 구축(인구변화 적극 대비-2-1-가-②, 통계청)

○ (사업내용)

- 최근 저출산 고령사회 추이 및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환기
- 저출산 고령사회 관련 주요지표 생산 등 근거기반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 (성과) 성과지표 해당없음에 따라 평가 대상 제외, 비예산사업

- 최근 초저출산 및 고령화 추이와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
- 인구정책 등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로서 다양한 통계 자료를 적시에 제공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정책 추진을 위한 통계자료 지속 제공

〈표 2-88〉 근거 중심 인구정책 추진체계 구축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 치	제출 목표 치	실적	달성 률 (%)	시행 계획 목표 치	제출 목표 치	실적	달성 률 (%)	시행 계획 목표 치	제출 목표 치	실적	달성 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2-1-가-① 근거 중심 인구정책 추진체계 구축	통계체계 구축	보완	보완	보완	100	구축	구축	구축 (보완 필요)	80	-	-	-	-	비예산사업			
2-1-가-② 근거 중심 인구정책 추진체계 구축	해당없음	-	-	-	-	-	-	-	-	-	-	-	-	비예산사업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통계체계 구축=연구를 통한 통계 분석 및 해외사례분석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홍보 강화(인구변화 적극 대비-2-2-가,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출산·양육에 대한 인식 변화와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민 인식 전환 및 행동 변화 유도

○ (성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 태도 완화(%)*하향지표 목표치 10% 대비 실적치 8.2%로 122% 달성, 예산 2,052백만 원 중 2,050백만 원 집행(집행률 99.9%, 집행잔액)

- ‘함께육아’ 캠페인 브랜딩 강화

-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지지·응원하는 문화 인식 확산과 결혼·출산 기피 현상 완화를 위해 여성에게 치우친 부담을 해소, '19년부터 함께육아 캠페인 홍보 지속 추진
- '국가(정부)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정책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기업이 아이를 함께 키우고, 가정에서는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를 실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함께육아 캠페인' 신규 포스터 제작 및 지면 광고(신문) 집행
- '함께육아' 캠페인 영상 송출 및 라디오 광고 신규 제작 및 매체 송출
- 남성육아참여모델 '100인의 아빠단 10기' 운영(5~12월)
 - 아빠 육아에 대한 긍정 경험을 확산하는 여론주도자(Opinion Leader) 그룹 '100인의 아빠단'을 지속 운영하여 함께 육아 실천 분위기 확산
 - 함께육아 공식 SNS(네이버포스트, 100인의 아빠단 카페,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통해 함께하는 육아 실천을 위한 맞춤형 정보, 정책 소개
- 전 사회적 저출산 극복 추진동력 확보
 - 인구문제에 대한 제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기여한 유공자(기관) 포상 등 '제9회 인구의 날 기념식 및 권역별 순회 토크콘서트' 개최('20.7.10., 여의도 콘래드 호텔)
- 아이의 연령에 따라 아빠가 알아야 할 육아 정보를 제공하는 <초보 아빠를 위한 육아가이드> 개정판 제작·배포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현 정부 출범 이후 저출산 정책을 출산율 위주에서 삶의 질 관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였으며, 국민인식개선 사업은 '16년부터 출산을 직접적으로 장려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 등 가족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을 추진 중
- 향후에도 가족문화개선, 일·생활균형 등 총체적인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음

〈표 2-89〉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홍보 강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 치	제출 목표 치	실적	달성 률 (%)	시행 계획 목표 치	제출 목표 치	실적	달성 률 (%)	시행 계획 목표 치	제출 목표 치	실적	달성 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2-2-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홍보 강화	출산에 대한 부정적 태도 완화(%) *하향지표	10	10	8.2	122.0	신규	-	-	-	신규	-	-	-	2,050	2,052	2,050	99.9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출산에 대한 부정적 태도 완화(%)=(출산을 하지 않는게 낫다 + 출산을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응답률(%)

-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인식·가치관 형성 교육 강화)(인구변화 적극 대비-2-2-나-①, 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학교 인구교육과 사회 인구교육 추진으로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으로 저출산 추세 반전
 - (성과) 성과지표 1.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학생인식 개선도(0.5) 목표치 4.3 대비 실적치 4.4로 102.3% 달성, 성과지표 2. 사회인구교육 인원 수(0.5) 목표치 78,000 대비 실적치 101,639로 130.3% 달성, 예산 1,045백만 원 전액 집행
 - 연구·선도학교(16교→18교) 및 대학 인구교육 강좌개설(7교→10교) 확대를 통해 학생 대상 인구문제에 대한 이해 제고 및 긍정적인 가치관 확산
 - 인구교육 교사수업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우수 수업사례 발굴 및 학교 현장의 관심과 참여 유도(15명 시상)
 - 결혼·출산·가족 등을 주제로 인구교육 창작동화 공모전 개최 및 수상작품집 발간·배포(2,500부), 뮤지컬 형식의 연극 상연 등 흥미 유발 콘텐츠를 통해 국민의 저출산 위기에 대한 관심 유도
 - 군인·공공기관, (예비)신혼부부, 직장인, 노인, 종교계 등 다양한 계층 대상 찾아가는 인구교육 실시로 사회 인식 개선에 기여
 - 코로나19로 대면교육 개선책으로 영상콘텐츠 제작·배포, 온라인 강의 등 비대면교육을 병행하고, 종교단체는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송출 등으로 사업수행 마무리
 - 중학교 자유학기제용 인구교육 교재개발, 인구교육 전문강사(28명) 양성 및 보수교육(41명) 진행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학교 인구교육) 연구·선도학교 운영범위에 유치원 포함, 운영지원단의 컨설팅을 조기 추진
 - (사회 인구교육) 비대면 교육프로그램 중심 운영,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시 대면교육 병행, 성과지표 개선
 - (인구교육 인프라) 비대면 콘텐츠 개발, 유치원·어린이집 대상 인구교육 교재 개발, 홈페이지 운영방식 개선, 내역사업 예산 조정
-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법국민적 양성평등교육)(인구변화 적극 대비-2-2-나-②, 여성가족부)
 - (사업내용) 양성평등 및 성인지적 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 지원하여, 우리 사회의 남녀 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고, 개개인의 능력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 기반 조성

- 공무원 및 사회 선도층 대상의 성 평등, 가족 등의 주요 분야에 대한 양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 교육 실시
 - 일반국민 대상의 평생학습 기회제공을 통한 양성평등 인식 및 문화 확산
- (성과) 성과지표 1. 교육실적(명)(0.5) 목표치 111,500명 대비 실적치 136,176명으로 122.1% 달성, 성과지표 2. 양성평등 인식 변화 수준(점)(0.5) 목표치 1.79점 대비 실적치 1.87점으로 104.5% 달성, 예산 8,402백만 원 전액 집행
- 공공부문 성평등 정책 역량 강화
 - 공무원 및 정책형성·실행 주체들의 성인지 정책기획·집행능력 향상 및 개인과 조직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중심의 업무·대상별 교육 활성화
 - 실질적 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 젠더 기반 폭력예방교육을 통합적으로 수행·지원할 전문강사 양성 및 관리 강화
 - 직군·지역 기반 전문강사 양성 확대 및 양성 체계 다변화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업무 역량 강화 지원
 -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한 적시학습(비대면 교육운영) 지원을 통해, 전문 업무역량을 갖춘 고충상담원 현업적용도 강화 및 공공기관 폭력예방 업무의 실효성 제고 기여
 - 사건 대응력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사건처리 사례중심의 심화과정 사전 온라인 학습 콘텐츠 개발
 - 다양한 교육운영을 통한 스마트교육 수혜자 확대
 - 교육대상별(공공기관 종사자, 각 급 학교 및 대학 교직원, 일반인)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사이버 맞춤형 교육 운영
 - 상시 연수 환경 조성 및 연수운영을 통한 학습 지속성 확보
 - 양성평등 의식을 갖춘 교원 양성을 위해 특성화 계획 수립 및 체계적인 연수과정 운영으로 선진적인 연수 제공
 - 학습자와 직접 소통하는 교육혁신을 통한 스마트러닝 구현
 - 학교 현장의 양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을 위한 진흥사업 실시
 - 양성평등 연구학교 운영 및 지원 프로그램(워크숍, 컨설팅 등) 제공을 통하여 양성평등 교육 활성화 및 성평등 실천 환경 조성
 - 유·초·중등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하여 활용 가능한 수업자료(PPT, 교수지도안, 카드뉴스 등)를 다양한 형식으로 개발·보급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평등 시민성 함양을 위해 다양한 작품(문학 등)의 공모 및 우수작 선정·시상하고 사례 발굴·확산
- 모바일 교육콘텐츠 개발 및 활용 강화
 - 교육현장 연계 및 일상생활 속 사례중심 모바일 콘텐츠 개발, 보급
 - 콘텐츠 배포·확산을 위한 협력체계(34개 기관) 구축 및 노출 확대
-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공공부문 성평등 정책 역량 강화) 성평등 사회 실현 촉진을 위한 공공부문 정책 실행 기반 조성 및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확대, 성평등 관점의 공감능력 향상과 생활밀착형 정책 기획·수행을 위한 실행력 강화
 - (대상별(연령, 직종, 지역 등) 교육내용의 특화로 전문강사를 통한 예방교육 효과성 제고) 대상 특성과 환경 분석에 기초, 실생활에서의 젠더이슈를 발굴하여 맥락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대상별 전문강사 양성,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 별도 교육 의무화 적용 대상 기관 단계별 확대 등에 따른 고위직 대상 특별교육 기획 필요
 - (고충상담원 현장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체계화 및 내실화) 사건처리 단계별 직무 역할 습득을 위한 전문과정과 사례중심의 역할 훈련을 위한 심화과정 확대 운영함에 따라 기관 내 고충처리 효과성 제고, 교육생 의견수렴, 현업적용도 분석 및 전문가 자문·평가의 지속적인 환류를 통한 프로그램 내실화 추진
 - (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이버 학습전략 방안 마련) 학습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교육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선진적인 사이버교육 환경 제공,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 강화 및 연수 편의성 증대를 위한 수강신청 및 학습기간에 제한 없는 상시연수 확대 운영,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을 상시 운영하여, 교육대상에 최적화된 교육과정 제공으로 부서간 연계·협업 강화
 - (학교 양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한 진흥사업 추진 내실화) 양성평등 연구학교 자체 지정 외 교육부·시도 지정 연구학교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콘텐츠 지원 내실화, 유·초중등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성평등교육 수업자료 및 학교 원격수업 지원용 영상 콘텐츠 개발, 청소년의 문학 부문 중심으로 생활 속 성평등 문화 감수성 제고 및 공모전의 교육적 역할 강화
 - (모바일 교육콘텐츠 개발 및 활용 강화) 교육현장 및 일상생활 속 이용 접근성이 높은 콘텐츠 개발, 보급(100건), 청년, 일반인 대상 다양한 콘텐츠 공모 및 우수콘텐츠 발굴, 확산

〈표 2-90〉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지표	추진성과												예산			
		2020				2019				2018				2020			
		시행 계획 목표 치	제출 목표 치	실적	달성 률 (%)	시행 계획 목표 치	제출 목표 치	실적	달성 률 (%)	시행 계획 목표 치	제출 목표 치	실적	달성 률 (%)	예산 (백만 원)	최종예산 (백만 원)	집행액 (백만 원)	집행률 (%)
2-2-나-①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 (인식·가치관 형성 교육 강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학생인식 개선도(0.5)	4.3	4.3	4.4	102.3	4.3	4.3	4.4	102.3	3.6	3.6	3.7	102.7	1,045	1,045	1,045	100
	사회인구교육 인원 수(0.5)	78,000	78,000	101,699	130.3	78,000	78,000	79,008	101.3	60,000	60,000	85,152	141.9				
2-2-나-②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 (법국민적 양성평등교육)	1. 교육실적(명)(0.5)	111,500	111,500	135,176	122.1	109,000	109,000	111,012	101.8	96,350	96,350	108,430	112.5	8,444	8,402	8,402	100
	2. 양성평등 인식 변화 수준(점)(0.5)	1.79	1.79	1.87	104.5	1.68	1.68	1.74	103.6	-	0.5	1.63	326.0				

주: [성과지표 측정방법] 성과지표 1.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학생인식 개선도(0.5)=저출산고령화에 대한 학생인식 개선도=결혼·출산·양육인식에 대한 사후응답평균-사전응답평균, 성과지표 2. 연중 사회인구교육 참여 인원 수: 성과지표 1. 교육실적(명)(0.5)=집합교육+사이버교육인원, 성과지표 2. 양성평등 인식 변화 수준(점)(0.5)=교육생에 대한 양성평등 인식 변화를 7점(-3~+3)척도로 조사한 평균값

제4절 실적 평가 결과 종합

1. 평가대상 제외 과제

□ 2020년도 성과 평가대상 과제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내 163과제(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97개 과제,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56개 과제, 인구변화 적극 대비 10개 과제) 중 143개 과제임(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83개 과제,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51개 과제, 인구변화 적극 대비 9개 과제).

○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과제는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14개 과제,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5개 과제, 인구변화 적극 대비 1개 과제이며, 분야별 각 과제와 제외 사유는 다음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즉, 이들 과제는 2019년 종료사업, 시행계획 상 성과지표나 성과목표가 존재하지 않아 목표달성률 산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본 평가에서 제외되었음.

〈표 2-91〉 2020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분야별 평가대상 제외 과제 목록

분야	과제번호 및 과제명	제외 사유 (자세한 사항은 기초평가 각 과제별 내용 참조)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14)	1-1-가-①. 1세 미만 아동 의료비 제로화(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 부담 경감)	2019년 종료사업
	1-1-가-②. 1세 미만 아동 의료비 제로화(국민행복카드 지원 확대)	2019년 종료사업
	1-2-나-②. 난임 지원 확대(난임휴가제 도입)	시행계획상 과제 완료
	2-1-나-①. 남성 육아 참여 확대 조기 정착(통계청)	시행계획상 성과지표 해당없음
	3-2-나. 유아 학습권 보호	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부재
	3-5-나-②. 지역단위 양육·돌봄서비스 종합플랫폼 구축(지역 내 기존 서비스 연계 네트워크 구축)(복지부)	2019년 종료사업
	4-1-가-①. 비혼 출산·양육 차별 불합리한 법제 개선(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 가족 제도와 관련된 불합리한 법제 개선)(여가부)	시행계획상 성과지표 해당없음
	4-1-가-②. 비혼 출산·양육 차별 불합리한 법제 개선(가족 제도와 관련된 불합리한 법제 개선)(저고위)	시행계획상 성과지표 해당없음
	4-1-가-④. 비혼 출산·양육 차별 불합리한 법제 개선(가족 제도와 관련된 불합리한 법제 개선) (행안부)	시행계획상 2020년도 성과지표 목표치 부재
	4-1-나-③. 자립지원 강화(난임시술 지원대상 사실혼까지 확대)	시행계획상 2020년도 성과지표 목표치 부재
	4-2-나-①. 다양한 가족 포용(미혼모·부 일상 속 차별 개선)(여가부)	시행계획상 2020년도 성과지표 목표치 부재
	5-1-나.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신규)	시행계획상 성과지표 해당없음
	5-2-다. 고용평등 추진 체계 정비	시행계획상 성과지표 해당없음
	5-2-라-②. 육아휴직 후 복귀 지원 프로그램 확대 및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2018년 종료사업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5)	1-4-가.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완료)	2019년 종료사업
	2-1-다-③. 퇴직자 일자리 기회 확대	시행계획상 성과지표 해당없음
	4-3-가-⑤. 안전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노인가구 기존 주택 맞춤형 개보수 지원 강화)(복지부)	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부재
	4-3-나-②.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지역사회 물리적 여건 조성	시행계획상 성과지표 부재
	5-2-다. 독거노인 지역사회 관계 형성 지원(종료)	시행계획상 종료사업
인구변화 적극 대비 (1)	2-1-가-②. 근거 중심 인구정책 추진체계 구축	시행계획상 성과지표 해당없음

2. 목표달성도 평가

가. 총괄

□ 2020년도 전체 평가대상 과제(143개: 163개 과제 중 평가대상 제외 20개 과제 제외) 중 100% 이상 목표를 달성한 과제 수는 총 105개로 전체의 73.43%인 것으로 나타남.

○ 평가 대상 과제 143개 과제 중 122개 과제가 목표의 90% 이상을 달성하였으며, 이들의 비중은 85.32%임.

- 21개(전체 평가 대상 과제의 14.69%) 과제는 목표달성도가 9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 전체 과제 중 목표달성도가 50~90% 미만인 과제는 20개(13.99%)이며, 목표달성도가 50% 미만으로 성과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과제는 1개(0.70%)임.

〈표 2-92〉 2020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분야별 과제의 목표달성도

(단위: 과제 수)

분야	목표달성도							평가 제외	계
	0%	1~50% 미만	50~70% 미만	70~90% 미만	90~100% 미만	100% 이상	소계		
전체	0 0.00%	1 0.70%	6 4.20%	14 9.79%	17 11.89%	105 73.43%	143 100.00%	20	163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0 0.00%	1 1.20%	5 6.02%	11 13.25%	12 14.46%	54 65.06%	83 100.00%	14	97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0 0.00%	0 0.00%	1 1.96%	2 3.92%	5 9.80%	43 84.31%	51 100.00%	5	56
인구변화 적극 대비	0 0.00%	0 0.00%	0 0.00%	1 11.11%	0 0.00%	8 88.89%	9 100.00%	1	10

주: 1) 1개 과제에 여러 개의 성과지표가 있는 경우, 목표달성률 계산 시 시행계획상 지표별로 가중치가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으로 산출

2) 1개 과제가 세부과제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의 목표달성률은 개별 과제 달성률의 합의 평균치임.

□ 2020년도 분야별 과제의 목표달성도를 정량적인 평균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위의 분포를 통하여 살펴보면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분야가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분야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목표달성도가 높은 과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¹⁰⁾.

○ 보다 구체적으로, 목표달성도 100% 이상 과제 수의 경우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분야는 목표달성도 평가 대상 83개 과제 중 65.06%인 54개 과제,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분야는 목표달성도 평가 대상 51과제 중 84.31%인 43개 과제인 것으로 나타남. “인구변화 적극 대비” 분야는 목표달성도 평가 대상 9개 과제 중 8개 과제(88.89%)가 목표 100% 이상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목표의 90% 이상을 달성한 과제의 비율은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분야의 경우 79.52%(해당과제 수 66개),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분야가 94.11%(해당과제 수 48개)인 것으로 나타남.

- 목표달성도가 50% 미만인 과제의 경우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분야는 1개 (1.20%),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분야와 “인구변화 적극 대비” 분야는 없었음.

10) “인구변화 적극 대비” 분야는 상대적으로 분야 내 과제의 수가 작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 어려움.

나.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분야 목표달성도

□ 중영역별 목표달성도

○ 더 구체적으로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분야를 중영역별로 살펴보면, 목표달성도 100% 이상에 대한 과제의 영역별 비율은 ‘2.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화’ 88.89%(영역 18개 과제 중 16개 과제), ‘4. 모든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 61.54%(영역 13개 과제 중 8개 과제), ‘5. 2040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 조성’ 64.29%(영역 내 14개 과제 중 9개 과제), ‘1.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56.25%(영역 내 16개 과제 중 9개 과제), ‘3.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54.55%(영역 내 22개 과제 중 12개 과제) 순으로 나타남.

- 목표달성도 90% 이상 과제에 대한 중영역별 비율은 ‘2.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화’ 94.45%(영역 18개 과제 중 17개 과제), ‘1.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87.50%(영역 내 16개 과제 중 14개 과제), ‘5. 2040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 조성’ 92.86%(영역 내 14개 과제 중 13개 과제), ‘3.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63.64%(영역 내 22개 과제 중 14개 과제), ‘4. 모든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 61.54%(영역 13개 과제 중 8개 과제) 순으로 도출됨.

- 목표달성도 0% 미만인 과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1~50% 미만, 50~70% 미만인 과제가 각각 1, 5개, 70~90% 미만인 과제가 11개 인 것으로 나타남.

- 1~50% 미만 범주는 ‘3.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영역에서 1개인 것으로 나타남.
- 50~70% 미만 범주는 총 5개 과제이며, ‘1.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영역, ‘2.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화’, ‘4. 모든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 영역, ‘5. 2040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 조성’ 영역에서 각각 1개, 1개, 2개, 1개 과제인 것으로 나타남.
- 70~90% 미만 범주는 총 11개 과제로 ‘1.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영역 내 1개, ‘3.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영역 내 7개, ‘4. 모든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 영역 내 3개 과제인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목표달성도 분포에 대한 영역별 비교를 통한 평가는 영역 내 세부과제의 수, 사업 수 등 다른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소영역별 목표달성도

○ ‘1.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 목표를 100% 이상 달성한 과제의 영역별 비율을 소영역별로 살펴보면, 1-4. 1-5가 100%, 1-1이 66.67%, 1-2 60.00%, 1-3, 1-6 50.00%, 1-7 0.00%인 것으로 나타남.

○ '2.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화'

- 목표달성도 100% 이상의 과제에 대한 영역별 비율은 2-3, 2-4 100%, 2-2 85.71%, 2-1 66.67%인 것으로 나타남.

○ '3.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 목표를 100% 이상 달성한 과제의 영역별 비율은 3-1 71.43%, 3-5 66.67%, 3-2, 3-4 50.00%, 3-3 33.33%, 3-6 0.00%인 것으로 나타남.

○ '4. 모든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

- 목표를 100% 이상 달성한 과제의 영역별 비율은 4-1 66.67%, 4-2 60.00%인 것으로 나타남.

○ '5. 2040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 조성'

- 목표를 100% 이상 달성한 과제의 영역별 비율은 5-4 100%, 5-2 80.00%, 5-3 57.14%, 5-1 0.00%임.

〈표 2-93〉 2020년도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분야 중영역별 과제의 목표달성도

(단위: 과제 수)

중영역	목표달성도							평가 제외	계
	0%	1~50% 미만	50~70% 미만	70~90% 미만	90~100% 미만	100% 이상	소계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0 0.00%	1 1.20%	5 6.02%	11 13.25%	12 14.46%	54 65.06%	83 100.00%	14	97
(비용) 1.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19)	0 0.00%	0 0.00%	1 6.25%	1 6.25%	5 31.25%	9 56.25%	16 100.00%	3	19
1-1	0 0.00%	0 0.00%	0 0.00%	0 0.00%	1 33.33%	2 66.67%	3 100.00%	2	5
1-2	0 0.00%	0 0.00%	0 0.00%	0 0.00%	2 40.00%	3 60.00%	5 100.00%	1	6
1-3	0 0.00%	0 0.00%	0 0.00%	0 0.00%	1 50.00%	1 50.00%	2 100.00%	0	2
1-4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1 100.00%	1 100.00%	0	1
1-5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1 100.00%	1 100.00%	0	1
1-6	0 0.00%	0 0.00%	0 0.00%	1 50.00%	0 0.00%	1 50.00%	2 100.00%	0	2
1-7	0 0.00%	0 0.00%	1 50.00%	0 0.00%	1 50.00%	0 0.00%	2 100.00%	0	2
(시간) 2.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화(19)	0 0.00%	0 0.00%	1 5.56%	0 0.00%	1 5.56%	16 88.89%	18 100.00%	1	19
2-1	0 0.00%	0 0.00%	1 33.33%	0 0.00%	0 0.00%	2 66.67%	3 100.00%	1	4
2-2	0 0.00%	0 0.00%	0 0.00%	0 0.00%	1 14.29%	6 85.71%	7 100.00%	0	7
2-3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6 100.00%	6 100.00%	0	6
2-4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2 100.00%	2 100.00%	0	2

중영역	목표달성도							평가 제외	계
	0%	1~50% 미만	50~70% 미만	70~90% 미만	90~100% 미만	100% 이상	소계		
(돌봄) 3.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24)	0 0.00%	1 4.55%	0 0.00%	7 31.82%	2 9.09%	12 54.55%	22 100.00%	2	24
3-1	0 0.00%	0 0.00%	0 0.00%	1 14.29%	1 14.29%	5 71.43%	7 100.00%	0	7
3-2	0 0.00%	0 0.00%	0 0.00%	0 0.00%	1 50.00%	1 50.00%	2 100.00%	1	3
3-3	0 0.00%	0 0.00%	0 0.00%	2 66.67%	0 0.00%	1 33.33%	3 100.00%	0	3
3-4	0 0.00%	0 0.00%	0 0.00%	1 50.00%	0 0.00%	1 50.00%	2 100.00%	0	2
3-5	0 0.00%	1 16.67%	0 0.00%	1 16.67%	0 0.00%	4 66.67%	6 100.00%	1	7
3-6	0 0.00%	0 0.00%	0 0.00%	2 100.00%	0 0.00%	0 0.00%	2 100.00%	0	2
(문화) 4. 모든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18)	0 0.00%	0 0.00%	2 15.38%	3 23.08%	0 0.00%	8 61.54%	13 100.00%	5	18
4-1	0 0.00%	0 0.00%	1 33.33%	0 0.00%	0 0.00%	2 66.67%	3 100.00%	4	7
4-2	0 0.00%	0 0.00%	1 10.00%	3 30.00%	0 0.00%	6 60.00%	10 100.00%	1	11
(기반) 5. 2040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 조성(17)	0 0.00%	0 0.00%	1 7.14%	0 0.00%	4 28.57%	9 64.29%	14 100.00%	3	17
5-1	0 0.00%	0 0.00%	0 0.00%	0 0.00%	1 100.00%	0 0.00%	1 100.00%	1	2
5-2	0 0.00%	0 0.00%	0 0.00%	0 0.00%	1 20.00%	4 80.00%	5 100.00%	2	7
5-3	0 0.00%	0 0.00%	1 14.29%	0 0.00%	2 28.57%	4 57.14%	7 100.00%	0	7
5-4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1 100.00%	1 100.00%	0	1

주: 1) 평가 제외 과제는 앞의 <표 2-91> 참조

2) 1개 과제에 여러 개의 성과지표가 있는 경우, 목표달성률 계산시 시행계획상 지표별로 가중치가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으로 산출(1/N)

3) 1개 과제가 세부과제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의 목표달성률은 개별 과제 달성률의 합의 평균치임.

□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분야 세부과제별 목표달성도

○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분야 과제 중 목표달성도가 90% 미만인 과제는 분야 내 평가 대상 83개 과제 중 17개(20.47%)로 나타났으며,¹¹⁾ 보다 구체적으로 각 세부 범주별로 해당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목표달성도가 1~50% 미만 과제는 총 1개로, <3-5-가-①. 지역 사회 내 돌봄여건 확충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임.
- 목표달성도가 50~70% 미만 과제는 총 5개로, <1-7-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지원확대 검토>, <2-1-가. 임신·출산기 근로시간 단축>, <4-1-가-③. 가족 제도와 관련된 불합리한 법제 개선(법무부)>, <4-2-다-②.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5-3-나-④.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강화>임.

11) 과제별 목표달성 관련 부진사유는 앞 절 각 세부 분야 및 영역별 기초평가 부분을 참조

- 목표달성도가 70~90% 미만 달성 과제는 총 11개로, <3-3-가-②.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체계 안정적으로 정착(복지부)>, <3-6-나. 아동 안전 교육 강화>, <4-2-다-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가족평등지수 개발)>, <4-2-가-④. 아동배타적 문화를 통합적 문화로 전환하는 캠페인 전개>, <3-4-가. 아이돌봄서비스 확충 및 내실화>, <3-3-가-③.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체계 안정적으로 정착(여가부)>, <3-5-가-③. 지역 사회 내 돌봄여건 확충(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활성화)>, <3-1-마. 수요자 맞춤형 보육지원>, <1-6-가. 고용보험 미적용 취업 여성 대상 출산지원금 지급>, <4-2-가-①. 임신·출산·아동 존중(임산부 편의 증대 방안 마련)>, <3-6-가. 국가중심 아동보호체계 재편>임.

〈표 2-94〉 2020년도 기본계획 저출산 분야 과제별 목표달성도

목표달성도	개수	과제
0%	0	해당없음.
1~50% 미만	1	3-5-가-①. 지역 사회 내 돌봄여건 확충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50~70% 미만	5	1-7-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지원확대 검토 2-1-가. 임신·출산기 근로시간 단축 4-1-가-③. 가족 제도와 관련된 불합리한 법제 개선(법무부) 4-2-다-②.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5-3-나-④.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강화
70~90% 미만	11	3-3-가-②.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체계 안정적으로 정착(복지부) 3-6-나. 아동 안전 교육 강화 4-2-다-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가족평등지수 개발) 4-2-가-④. 아동배타적 문화를 통합적 문화로 전환하는 캠페인 전개 3-4-가. 아이돌봄서비스 확충 및 내실화 3-3-가-③.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체계 안정적으로 정착(여가부) 3-5-가-③. 지역 사회 내 돌봄여건 확충(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활성화) 3-1-마. 수요자 맞춤형 보육지원 1-6-가. 고용보험 미적용 취업 여성 대상 출산지원금 지급 4-2-가-①. 임신·출산·아동 존중(임산부 편의 증대 방안 마련) 3-6-가. 국가중심 아동보호체계 재편
90~100% 미만	12	3-1-가. 보육의 공공성 강화(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1-7-나. 출산 친화적 세제 개선 5-3-다. 아이키우기 좋은 주거 인프라 조성 5-2-라-③. 경력단절 예방(상담-훈련-취업 연계 지원 확대) 1-2-나-①. 난임 지원 확대 1-1-나-②. 임신·출산의료비 경감(여성 장애인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 5-3-나-③.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분양주택 공급 확대(분양) 1-3-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2-2-나-⑤. 남성 육아 참여 확대 조기 정착(남성육아 관련홍보 및 아빠와 함께하는 등·하원 운동 추진) 1-2-다-②.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마더세이프프로그램운영) 3-2-가. 국·공립 유치원 확대 5-1-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100% 이상	54	1-1-나-①. 임신·출산의료비 경감(임신·출산 의료비 대폭 경감) 1-2-라. 고위험 출산 진료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 및 의료 접근성 훼손 방지 방안 마련 1-6-나. 기간제 노동자 출산휴가급여 보장 2-1-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등 근로시간 유연화 기반 마련 2-2-가-②. 남성 육아휴직·출산휴가 사용 확산(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강화) (행안부) 2-2-가-③. 남성 육아휴직·출산휴가 사용 확산(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강화) 2-2-나-②. 남성 육아 참여 확대 조기 정착(가사노동 성별분업 실태조사) (여가부)

목표달성도	개수	과제
		2-2-나-③. 남성 육아 참여 확대 조기 정착(대중매체 모니터링) (여가부) 2-4-나. 육아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 최저보험료 부과 3-1-다. 종일보육 내실화 3-2-다.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 3-4-나. 돌봄서비스 이용자 편의 제고 3-5-나-①. 지역단위 양육·돌봄서비스 종합플랫폼 구축 4-2-나-③. 다양한 가족 포용(다양한 가족 관련 통계 구축) 5-3-나-②.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분양주택 공급 확대(임대) 2-2-나-④. 남성 육아 참여 확대 조기 정착(성평등 교육 강화) (여가부) 1-3-나. 예방접종 지원 확대 2-3-가-②.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 강화(가족친화기업인증 및 컨설팅, 인센티브지원) 과제명 변경:일·가정양립을위한가족친화적기업문화확산(가족친화인증제) 3-1-나-②. 직장어린이집 확대 3-1-바. 보육시설 안전 및 건강한 환경 조성 1-4-가. 아동수당 지원확대 5-2-가. 임금격차 개선 5-2-나-①. 채용 성차별 및 유리천장 해소(여성고용 및 여성관리자 비율 제고) 3-5-나-③. 지역단위 양육·돌봄서비스 종합플랫폼 구축(지역 내 기존 서비스 연계 네트워크 구축)(여가부) 1-2-다-①.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분만취약지 지원사업 확대 및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센터 확대) 3-5-가-④. 지역 사회 내 돌봄여건 확충(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4-2-나-⑤. 다양한 가족 포용(임양가족 양육지원 확대) 3-3-가-①.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체계 안정적으로 정착 4-2-나-④. 다양한 가족 포용(다문화 가족 포용을 위한 교육·소통 강화) 5-2-나-②. 채용 성차별 및 유리천장 해소(채용 단계별 공정성 강화 및 성차별 사례 모니터링) 1-1-가-③. 1세 미만 아동 의료비 제로화(신생아 치료 건강보험 보장 등 지원 확대) 3-1-나-①. 직장어린이집 확대(복지부) 2-3-가-③.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 강화(일·생활 균형 캠페인 집중 추진) 1-2-가.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확대 4-1-나-①. 자립지원 강화(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5-3-나-①.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분양주택 공급 확대(임대) 4-2-나-②. 다양한 가족 포용(미혼모·부 일상 속 차별 개선) 4-2-가-③. 임신·출산·아동 존중(지자체 아동친화도시 모델 확산) 2-4-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초기 집중 지원 3-1-라. 보육품질 향상 4-2-가-②. 임신·출산·아동 존중(임신 후 상담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 인력 확충) 5-2-라-①. 육아휴직 후 복귀 지원 프로그램 확대 2-2-가-①. 임신·출산기 근로시간 단축, 남성육아휴직·출산휴가사용확산(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강화)(고용부) 5-3-가-①. 다양한 청년주택 공급 확대 3-5-가-②. 지역 사회 내 돌봄여건 확충(지역아동센터 운영 내실화) 2-3-가-①.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 강화(중소기업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강화) 5-3-가-②. 청년 임차가구 주거비 지원 강화 2-1-나. 육아·돌봄 근로시간 단축 5-4-가. 교육부담 경감 및 교육기회 보장 강화(신규) 2-3-다-②. 다양한 근무형태 활성화(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4-1-나-②. 자립지원 강화(비혼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강화) 2-3-다-③.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공공부문 근무환경 조성 2-3-다-①. 다양한 근무형태 활성화(다양한 근무형태 활성화) 1-5-가. 다자녀 기준 완화

주: 1) 평가 제외 과제는 앞의 표 2-135 참조

2) 1개 과제에 여러 개의 성과지표가 있는 경우, 목표달성률 계산시 시계열회상 지표별로 가중치가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으로 산출(1/N)

3) 1개 과제가 세부과제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의 목표달성률은 개별 과제 달성률의 합의 평균치임.

다.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분야 목표달성도

□ 중영역별 목표달성도

○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분야를 중영역별로 살펴보면, 목표달성도 100% 이상에 대한 과제의 영역별 비율은 ‘1.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 100%(영역 8개 과제 중 8개 과제), ‘4.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돌봄 환경 조성’ 83.33%(영역 24개 과제 중 20개 과제), ‘5. 성숙한 노년기를 위한 기반 마련’ 80.00%(영역 내 5개 과제 중 4개 과제), ‘2. 新중년 새로운 인생 출발 지원’ 77.78%(영역 내 9개 과제 중 7개 과제), ‘3.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75.00%(영역 내 4개 과제 중 3개 과제) 순으로 나타남.

- 목표달성도 90% 이상 과제에 대한 중영역별 비율은 ‘2. 新중년 새로운 인생 출발 지원’ 100%(영역 9개 과제 중 9개 과제), ‘1.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 100%(영역 내 8개 과제 중 8개 과제), ‘5. 성숙한 노년기를 위한 기반 마련’ 100%(영역 내 5개 과제 중 5개 과제), ‘4.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돌봄 환경 조성’ 91.66%(영역 내 24개 과제 중 22개 과제), ‘3.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75.00%(영역 4개 과제 중 3개 과제) 순으로 도출됨.
- 목표달성도 0%, 1~50% 미만 과제는 없었음.
- 또한, 50~70% 미만, 70~90% 미만인 과제가 각각 1개, 2개인 것으로 나타남.
 - 50~70% 미만 범주는 ‘4.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돌봄 환경 조성’ 영역에서 1개인 것으로 나타남.
 - 70~90% 미만 범주는 ‘3.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4.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돌봄 환경 조성’ 영역에서 각각 1개인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목표달성도 분포에 대한 영역별 비교를 통한 평가는 영역 내 세부과제의 수, 사업 수 등 다른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소영역별 목표달성도

○ ‘1.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

- 목표를 100% 이상 달성한 과제의 영역별 비율을 소영역별로 살펴보면, 평가 제외 과제가 있는 1-4를 제외한 1-1, 1-2, 1-3의 경우 모두 100%인 것으로 나타남.

○ ‘2. 新중년 새로운 인생 출발 지원’

- 목표달성도 100% 이상의 과제에 대한 영역별 비율은 2-2 100%, 2-1 75.00%인 것으로 나타남.

○ ‘3.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 목표를 100% 이상 달성한 과제의 영역별 비율은 3-1 100%, 3-3 66.67%인 것으로 나타남(3-2는 과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4.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돌봄 환경 조성’

- 목표를 100% 이상 달성한 과제의 영역별 비율은 4-3 88.89%, 4-2 87.50%, 4-1 71.43%인 것으로 나타남.

○ ‘5. 성숙한 노년기를 위한 기반 마련’

- 목표를 100% 이상 달성한 과제의 영역별 비율은 4-2 100%, 4-1 50.00%임.

〈표 2-95〉 2020년도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분야 중영역별 과제의 목표달성도

(단위: 과제 수)

중영역	목표달성도							평가 제외	계
	0%	1~50% 미만	50~70% 미만	70~90% 미만	90~100% 미만	100% 이상	소계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0 0.00%	0 0.00%	1 1.96%	2 3.92%	5 9.80%	43 84.31%	51 100.00%	5	56
(소득) 1.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9)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8 100.00%	8 100.00%	1	9
1-1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1 100.00%	1 100.00%	0	1
1-2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3 100.00%	3 100.00%	0	3
1-3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4 100.00%	4 100.00%	0	4
1-4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1	1
(준비) 2. 新중년 새로운 인생 출발 지원(10)	0 0.00%	0 0.00%	0 0.00%	0 0.00%	2 22.22%	7 77.78%	9 100.00%	1	10
2-1	0 0.00%	0 0.00%	0 0.00%	0 0.00%	2 25.00%	6 75.00%	8 100.00%	1	9
2-2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1 100.00%	1 100.00%	0	1
(참여) 3.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4)	0 0.00%	0 0.00%	0 0.00%	1 25.00%	0 0.00%	3 75.00%	4 100.00%	0	4
3-1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1 100.00%	1 100.00%	0	1
3-3	0 0.00%	0 0.00%	0 0.00%	1 33.33%	0 0.00%	2 66.67%	3 100.00%	0	3
(건강) 4.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돌봄 환경 조성(26)	0 0.00%	0 0.00%	1 4.17%	1 4.17%	2 8.33%	20 83.33%	24 100.00%	2	26
4-1	0 0.00%	0 0.00%	1 14.29%	0 0.00%	1 14.29%	5 71.43%	7 100.00%	0	7
4-2	0 0.00%	0 0.00%	0 0.00%	1 12.50%	0 0.00%	7 87.50%	8 100.00%	0	8
4-3	0 0.00%	0 0.00%	0 0.00%	0 0.00%	1 11.11%	8 88.89%	9 100.00%	2	11
(마무리) 5. 성숙한 노년기를 위한 기반 마련(7)	0 0.00%	0 0.00%	0 0.00%	0 0.00%	1 20.00%	4 80.00%	5 100.00%	1	6
5-1	0 0.00%	0 0.00%	0 0.00%	0 0.00%	1 50.00%	1 50.00%	2 100.00%	0	2
5-2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3 100.00%	3 100.00%	1	4

주: 1) 평가 제외 과제는 앞의 〈표 2-91〉 참조

2) 1개 과제에 여러 개의 성과지표가 있는 경우, 목표달성률 계산시 시행계획상 지표별로 가중치가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으로 산출(1/N)

3) 1개 과제가 세부과제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의 목표달성률은 개별 과제 달성률의 합인 평균치임.

□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분야 세부과제별 목표달성도

○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분야 과제 중 목표달성도가 90% 미만인 과제는 분야 내 평가 대상 51개 과제 중 3개(5.88%)로 나타났으며,¹²⁾ 보다 구체적으로 각 세부 범주별로 해당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목표달성도가 0%, 1~50% 미만인 과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목표달성도가 50~70% 미만 과제는 <4-1-나-③. 건강노화를 위한 예방적 관리 강화(고령자 맞춤형 체육 및 건강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확대)>임.
- 목표달성도가 70~90% 미만 달성 과제는 <3-3-가-②. 고령세대의 여가 기회 확대 및 인프라 개선>, <4-2-가-②. '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으로 재가 기반 서비스 강화>임.

〈표 2-96〉 2020년도 기본계획 고령사회 분야 과제별 목표달성도

목표달성도	개수	과제
0%	0	해당없음.
1~50% 미만	0	해당없음.
50~70% 미만	1	4-1-나-③. 건강노화를 위한 예방적 관리 강화(고령자 맞춤형 체육 및 건강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확대)
70~90% 미만	2	4-2-가-②. '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으로 재가 기반 서비스 강화 3-3-가-②. 고령세대의 여가 기회 확대 및 인프라 개선
90~100% 미만	5	4-3-가-①.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2-1-나-①. 쉼 근로자 대상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제공과 재취업 촉진 2-1-다-①. 퇴직자 일자리 기회 확대 5-1-가.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 다양화 및 전문기관·인력 양성 4-1-나-④. 건강노화를 위한 예방적 관리 강화(방문건강관리 서비스 확충 및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확대)
100% 이상	43	1-1-가.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 1-3-가. 주택연금 활성화 1-3-나-①. 퇴직·개인연금 확산·정착 2-1-가-②.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기(연령에 얽매이지 않는 사회 논의) 4-1-가-①. 건강보험 강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보장(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비 경감 지속 추진) 4-2-나-②. 노인안심 생활지원 4-2-다-②. 장기요양시설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안심할 수 있는 장기요양 인프라 구축) 4-2-라. 이용자 중심 서비스 연계 4-3-가-②. 안전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고령자 복지주택 등 케어 안심주택 공급)(국토부) 4-3-가-③. 안전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고령자 복지주택 등 케어 안심주택 공급)(복지부) 4-3-가-⑥. 안전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노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주거모델 개발·공급)(복지부) 4-3-가-⑦.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 5-2-라-②. 자살시도자, 유가족 사후지원(자살 유가족 지원체계 강화) 4-1-나-②. 건강노화를 위한 예방적 관리 강화(고령자 질병 예방 및 관리 강화) 2-2-가. 신중년 새출발 지원인프라 확충 4-2-다-①. 장기요양시설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확충 및 전문요양실 도입) 1-3-다. 농지연금 확산 5-2-라-①. 자살시도자, 유가족 사후지원(자살시도자 응급실 사례 관리 강화)

12) 과제별 목표달성 관련 부진사유는 앞 절 각 세부 분야 및 영역별 기초평가 부분을 참조

목표달성도	개수	과제
		1-2-나-①. 1인 1국민연금 확립 4-3-나-③. 다양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통한 이동성 보장 1-2-가. 기초연금 내실화 3-1-가.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 1-2-나-②. 1인 1국민연금 확립 4-2-나-③. 돌봄의 예방적 기능 강화(식생활 안전 관리) 3-3-가-①. 고령세대의 여가 기회 확대 4-2-나-①. 돌봄의 예방적 기능 강화(장기요양 진입 예방을 위한 노인돌봄 관련 서비스 통합) 1-3-나-②. 퇴직·개인연금 활성화 5-2-나.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강화(자살예방 게이트키퍼 100만명 양성, 노인대상 자살예방프로그램 개발) 2-1-나-②. 초·근로자 대상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제공과 재취업 촉진(신증년 창업지원체계 강화)(기재부) 4-1-가-②. 건강보험 강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보장(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 4-1-가-③. 건강보험 강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보장(치매 대응체계 강화) 4-3-나-①.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지역사회 물리적 여건 조성(도시환경에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확대) 2-1-다-④. 퇴직자 일자리 기회 확대(산림분야 공공일자리 창출) 5-1-나. 연명의료 제도의 안정적 정착 지원 3-3-나. 고령자 교육 기반 확충 4-1-나-①. 건강노화를 위한 예방적 관리 강화(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강화, 고령자 질병 예방 및 관리 강화) 5-2-가. 고령자 정신건강관리 강화(민관협력 노인자살예방사업 집중 추진) 2-1-다-②. 퇴직자 일자리 기회 확대 4-3-가-④. 안전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노인가구 기존 주택 맞춤형 개보수 지원 강화)(국토부) 4-2-가-①.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추진(병원 내 지역연계실 설치 및 시군구 단위 종합재가센터 도입) 2-1-나-③. 초·근로자 대상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제공과 재취업 촉진(신증년 창업지원체계 강화) 2-1-가-①.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기 4-3-나-④.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지역사회 물리적 여건 조성(IT연계 스마트케어 활성화)

주: 1) 평가 제외 과제는 앞의 <표 2-91> 참조

2) 1개 과제에 여러 개의 성과지표가 있는 경우, 목표달성률 계산시 시행계획상 지표별로 가중치가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으로 산출(1/N)

3) 1개 과제가 세부과제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의 목표달성률은 개별 과제 달성률의 합의 평균치임.

라. 인구변화 적극 대비 분야 목표달성도

□ 중영역별 목표달성도

○ 인구변화 적극 대비 분야를 중영역별로 살펴보면, 목표달성도 100% 이상에 대한 과제의 영역별 비율은 ‘1. 인구구조 변화 대비 및 지역정책 패러다임 전환’ 80%(영역 5개 과제 중 4개 과제), ‘2. 인구변화 대응기반 강화 및 국민 인식개선’ 100%(영역 4개 과제 중 4개 과제) 순으로 나타남.

- 또한, 70~90% 미만인 과제가 ‘1. 인구구조 변화 대비 및 지역정책 패러다임 전환’ 영역에서 1개인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목표달성도 분포에 대한 영역별 비교를 통한 평가는 영역 내 세부과제의 수, 사업 수 등 다른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소영역별 목표달성도

○ ‘1. 인구구조 변화 대비 및 지역정책 패러다임 전환’

- 목표달성도 100% 이상의 과제에 대한 영역별 비율은 1-2 100%, 1-1 75.00%인 것으로 나타남.

○ ‘2. 인구변화 대응기반 강화 및 국민 인식개선’

- 모든 소영역이 100%인 것으로 나타남.

〈표 2-97〉 2020년도 인구변화 적극 대비 분야 중영역별 과제의 목표달성도

(단위: 과제 수)

중영역	목표달성도							평가 제외	계
	0%	1~50% 미만	50~70% 미만	70~90% 미만	90~100% 미만	100% 이상	소계		
인구변화 적극 대비	0 0.00%	0 0.00%	0 0.00%	1 11.11%	0 0.00%	8 88.89%	9 100.00%	1	10
(사회시스템·지역) 1. 인구구조 변화 대비 및 지역정책 패러다임 전환(5)	0 0.00%	0 0.00%	0 0.00%	1 20.00%	0 0.00%	4 80.00%	5 100.00%	0	5
1-1	0 0.00%	0 0.00%	0 0.00%	1 25.00%	0 0.00%	3 75.00%	4 100.00%	0	4
1-2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1 100.00%	1 100.00%	0	1
(대응기반 강화) 2. 인구변화 대응기반 강화 및 국민 인식개선(5)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4 100.00%	4 100.00%	0	4
2-1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1 100.00%	1 100.00%	1	2
2-2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3 100.00%	3 100.00%	0	3

주: 1) 평가 제외 과제는 앞의 〈표 2-91〉 참조

2) 1개 과제에 여러 개의 성과지표가 있는 경우, 목표달성률 계산시 시행계획상 지표별로 가중치가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으로 산출(1/N)

3) 1개 과제가 세부과제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의 목표달성률은 개별 과제 달성률의 합의 평균치임.

□ 인구변화 적극 대비 분야 세부과제별 목표달성도

○ 인구변화 적극 대비 분야 과제 중 목표달성도가 90% 미만인 과제는 분야 내 평가 대상 9개 과제 중 1개(11.11%)로 나타났으며,¹³⁾ 보다 구체적으로 각 세부 범주별로 해당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목표달성도가 0%, 1~50% 미만, 50~70% 미만 과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목표달성도가 70~90% 미만 달성 과제는 〈1-1-가. 소관 분야 중장기 계획을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개편〉임.

13) 과제별 목표달성 관련 부진사유는 앞 절 각 세부 분야 및 영역별 기초평가 부분을 참조

〈표 2-98〉 2020년도 인구변화 적극 대비 분야 분야 과제별 목표달성도

목표달성도	개수	과제
0%	0	해당없음.
1~50% 미만	0	해당없음.
50~70% 미만	0	해당없음.
70~90% 미만	1	1-1-가. 소관 분야 중장기 계획을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개편
90~100% 미만	0	해당없음.
100% 이상	8	1-1-나-②. 재정의 인구구조 변화 대비 강화(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2-2-나-①.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인식·가치관 형성 교육 강화) 2-2-나-②.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법국민적 양성평등교육) 1-2-가.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 구현 1-1-나-③. 재정의 인구구조 변화 대비 강화(재정지출 효율화)(기획재정부) 2-2-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홍보 강화 1-1-나-①. 재정의 인구구조 변화 대비 강화(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 2-1-가-①. 근거 중심 인구정책 추진체계 구축

주: 1) 평가 제외 과제는 앞의 〈표 2-91〉 참조

2) 1개 과제에 여러 개의 성과지표가 있는 경우, 목표달성률 계산시 시행계획상 지표별로 가중치가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으로 산출(1/N)

3) 1개 과제가 세부과제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의 목표달성률은 개별 과제 달성률의 합의 평균치임.

3. 예산집행을 평가

가. 총괄

□ 2020년 시행계획 상 전체 163개 과제 중 평가 대상 과제 143개에 대하여 예산사업은 104개, 비예산사업은 27개, 기타 12개임.

○ 기타 범주와 관련하여, 시행계획상 예산 항목 ‘해당사항없음’, ‘해당없음’, ‘별도예산 없음 (LH 자체예산)’, ‘각 자치단체 인건비 예산에서 집행’,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지원’ 과 같은 경우 기타 범주로 분류하였음.

□ 예산집행률은 상기 과제 중 예산사업 104개(“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분야,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노후” 분야, “인구변화 적극 대비” 분야 각 61/40/3개)에 대하여 평가함.

○ 예산사업 중 100% 이상 예산을 집행한 과제는 50개로 전체 예산집행률 평가 대상 104개 과제 중 48.08%, 90% 이상을 집행한 과제는 총 91개로 예산집행률 산출 대상 과제 중 87.50%인 것으로 나타남.

○ 예산집행률이 50~90% 미만인 과제는 11개(10.58%), 5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과제는 2개(1.92%)로 나타남. 예산집행률이 80% 미만인 과제는 5개(4.80%)임.

□ 예산집행률이 100% 이상인 과제의 비율은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분야 40.98%(61개 과제 중 25개),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분야 57.50%(40개 과제 중 23개), “인구변화 적극 대비” 분야 66.67%(3개 과제 중 2개)인 것으로 나타남.

○ 예산집행률이 90% 이상인 과제는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분야 88.52%(61개 과제 중 54개),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분야 85.00%(40개 과제 중 34개), “인구변화 적극 대비” 분야 100.00%(3개 과제 중 3개)임.

○ 예산집행률이 50% 미만인 과제는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분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분야 각각 1개인 것으로 나타남.

- 집행잔액(낙찰차액 등)이 존재하는 과제의 경우는 예산집행률을 100%로 구분하지 않고 해당 과제 예산집행률별로 범주를 구분함. 참고로 이들 과제는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분야 내 <1-4-가. 아동수당 지원 확대>, <1-6-나. 기간제 노동자 출산휴가급여 보장>, <2-2-나-②. 남성 육아 참여 확대 조기 정착(가사노동 성별분업 실태조사) (여가부)>, <2-4-가.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초기 집중 지원>, <3-2-다.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 <3-3-가-①.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체계 안정적으로 정착>, <3-3-가-③.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체계 안정적으로 정착(여가부)>, <3-4-가. 아이돌봄서비스 확충 및 내실화>, <3-4-나. 돌봄서비스 이용자 편의 제고>, <3-5-가-①. 지역 사회 내 돌봄여건 확충(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3-5-가-②. 지역 사회 내 돌봄여건 확충(지역아동센터 운영 내실화)>, <3-5-가-③. 지역 사회 내 돌봄여건 확충(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활성화)>, <3-6-가. 국가중심 아동보호체계 재편>, <3-6-나. 아동 안전 교육 강화>, <4-1-나-①. 자립지원 강화(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5-1-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5-3-가-②. 청년 임차가구 주거비 지원 강화>, <5-3-나-④.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강화(임대)>, <5-4-가. 교육부담 경감 및 교육기회 보장 강화(신규)>,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분야 내 <1-3-다. 농지연금 확산>, <2-1-가-②.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기(연령에 얽매이지 않는 사회 논의)>, <2-1-나-①. 쉼 근로자 대상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제공과 재취업 촉진>, <2-1-다-④. 퇴직자 일자리 기회 확대(산림분야 공공일자리 창출)>, <3-1-가.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 <4-1-나-②. 건강노화를 위한 예방적 관리 강화(고령자 질병 예방 및 관리 강화)>, <4-2-다-①. 장기요양시설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확충 및 전문요양실 도입)>, “인구변화 적극 대비 분야” <2-2-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홍보 강화>임.

〈표 2-99〉 2020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분야별 평가대상 과제의 예산집행률

(단위: 과제 수)

분야	예산집행률								비 예산	기타	계
	0%	1~50% 미만	50~70% 미만	70~80% 미만	80~90% 미만	90~100% 미만	100% 이상	소계			
전체	0 0.00%	2 1.92%	1 0.96%	2 1.92%	8 7.69%	41 39.42%	50 48.08%	104 100.00%	27	12	143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0 0.00%	1 1.64%	0 0.00%	1 1.64%	5 8.20%	29 47.54%	25 40.98%	61 100.00%	17	5	83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0 0.00%	1 2.50%	1 2.50%	1 2.50%	3 7.50%	11 27.50%	23 57.50%	40 100.00%	5	6	51
인구변화 적극 대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1 33.33%	2 66.67%	3 100.00%	5	1	9

주: 1) 한 과제에 여러 개의 사업이 있는 경우(부처 상이 등), 사업들 중 한 개라도 예산이 있으면 예산 사업으로, 모두 비예산 사업인 경우 비예산 사업으로 표기

2) 시행계획상 예산 항목 '해당사항없음', '해당없음', '별도예산 없음(LH 자체예산)',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지원' 과 같은 경우 기타로 표기

나.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분야

□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분야 중영역별로 예산과제 중 예산 전액을 집행(100% 이상)한 과제의 영역별 비율은 '4. 모든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 75.00%(영역 내 대상 과제 (이하 동일) 8개 중 6개), '1.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58.33%(영역 내 12개 과제 중 7개), '2.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화' 36.36%(영역 내 11개 과제 중 4개), '5. 2040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 조성' 27.27%(영역 내 11개 과제 중 3개), '3.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26.32%(영역 내 19개 과제 중 5개) 인 것으로 나타남.

○ 예산집행률이 50% 미만인 과제는 '3.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내 1개인 것으로 나타남.

○ 예산집행률이 50~70% 미만인 과제는 없으나, 예산집행률이 70~90% 미만인 과제는 '1.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내 1개 과제, '3.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내 3개 과제, '5. 2040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 조성' 내 2개 과제인 것으로 나타남.

○ 예산집행률이 80% 미만인 과제는 2개이며, 모두 '3.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내 과제인 것으로 나타남.

○ 예산을 90% 이상 집행한 과제는 분야 내 평가 대상 과제 61개의 88.52%인 54개임.

〈표 2-100〉 2020년도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분야 예산집행실적

(단위: 억 원, 과제 수)

중·소영역	최종예산	예산집행률								비 예산	기타	계
		0%	1~50% 미만	50~70% 미만	70~80% 미만	80~90% 미만	90~100% 미만	100% 이상	소계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459,273	0 0.00%	1 1.64%	0 0.00%	1 1.64%	5 8.20%	29 47.54%	25 40.98%	61 100.00%	17	5	83
(비용) 1.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19)	39,109	0 0.00%	0 0.00%	0 0.00%	0 0.00%	1 8.33%	4 33.33%	7 58.33%	12 100.00%	4	0	16
(시간) 2.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화(19)	26,952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7 63.64%	4 36.36%	11 100.00%	5	2	18
(돌봄) 3.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24)	130,940	0 0.00%	1 5.26%	0 0.00%	1 5.26%	2 10.53%	10 52.63%	5 26.32%	19 100.00%	0	3	22
(문화) 4. 모든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18)	4,051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2 25.00%	6 75.00%	8 100.00%	5	0	13
(기반) 5. 2040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 조성(17)	258,221	0 0.00%	0 0.00%	0 0.00%	0 0.00%	2 18.18%	6 54.55%	3 27.27%	11 100.00%	3	0	14

주: 1) 예산 금액은 최종예산 기준이며, 예산집행률은 이에 대한 예산집행액의 비율을 뜻함.

2) 한 과제에 여러 개의 사업이 있는 경우(부처 상이 등), 사업들 중 한 개라도 예산이 있으면 예산 사업으로, 모두 비예산사업인 경우비 예산사업으로 표기

3) 다른 과제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비예산으로 표기

4) 세부 예산집행내역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 전체 예산을 활용하였으며, 각 세부사업의 집행률을 평균한 값을 적용하였음.

〈표 2-101〉 2020년도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분야 중소영역별 과제의 예산집행실적

(단위: 억 원, 과제 수)

중영역	최종예산	예산집행률								비 예산	기타	계
		0%	1~50% 미만	50~70% 미만	70~80% 미만	80~90% 미만	90~100% 미만	100% 이상	소계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459,273	0 0.00%	1 1.64%	0 0.00%	1 1.64%	5 8.20%	29 47.54%	25 40.98%	61 100.00%	17	5	83
(비용) 1.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19)	39,109	0 0.00%	0 0.00%	0 0.00%	0 0.00%	1 8.33%	4 33.33%	7 58.33%	12 100.00%	4	0	16
1-1	153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2 100.00%	2 100.00%	1	0	3
1-2	731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1 25.00%	3 75.00%	4 100.00%	1	0	5
1-3	4,075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1 50.00%	1 50.00%	2 100.00%	0	0	2
1-4	31,045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1 100.00%	0 0.00%	1 100.00%	0	0	1
1-5	0	0 -	0 -	0 -	0 -	0 -	0 -	0 -	0 -	1	0	1
1-6	3,102	0 0.00%	0 0.00%	0 0.00%	0 0.00%	1 50.00%	1 50.00%	0 0.00%	2 100.00%	0	0	2
1-7	2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1 100.00%	1 100.00%	1	0	2
(시간) 2.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화(19)	26,952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7 63.64%	4 36.36%	11 100.00%	5	2	18
2-1	518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1 100.00%	1 100.00%	1	1	3
2-2	12,352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3 60.00%	2 40.00%	5 100.00%	1	1	7
2-3	1,839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3 75.00%	1 25.00%	4 100.00%	2	0	6
2-4	12,243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1 100.00%	0 0.00%	1 100.00%	1	0	2

중영역	최종예산	예산집행률								비 예산	기타	계
		0%	1~50% 미만	50~70% 미만	70~80% 미만	80~90% 미만	90~100% 미만	100% 이상	소계			
(돌봄) 3.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24)	130,940	0 0.00%	1 5.26%	0 0.00%	1 5.26%	2 10.53%	10 52.63%	5 26.32%	19 100.00%	0	3	22
3-1	76,054	0 0.00%	0 0.00%	0 0.00%	0 0.00%	1 20.00%	1 20.00%	3 60.00%	5 100.00%	0	2	7
3-2	39,966	0 0.00%	0 0.00%	0 0.00%	1 50.00%	0 0.00%	0 0.00%	1 50.00%	2 100.00%	0	0	2
3-3	4,693	0 0.00%	0 0.00%	0 0.00%	0 0.00%	1 33.33%	2 66.67%	0 0.00%	3 100.00%	0	0	3
3-4	3,913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2 100.00%	0 0.00%	2 100.00%	0	0	2
3-5	5,629	0 0.00%	1 20.00%	0 0.00%	0 0.00%	0 0.00%	3 60.00%	1 20.00%	5 100.00%	0	1	6
3-6	685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2 100.00%	0 0.00%	2 100.00%	0	0	2
(문화) 4. 모든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18)	4,051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2 25.00%	6 75.00%	8 100.00%	5	0	13
4-1	3,601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1 50.00%	1 50.00%	2 100.00%	1	0	3
4-2	45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1 16.67%	5 83.33%	6 100.00%	4	0	10
(기반) 5. 2040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 조성(17)	258,221	0 0.00%	0 0.00%	0 0.00%	0 0.00%	2 18.18%	6 54.55%	3 27.27%	11 100.00%	3	0	14
5-1	15,957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1 100.00%	0 0.00%	1 100.00%	0	0	1
5-2	858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1 33.33%	2 66.67%	3 100.00%	2	0	5
5-3	226,790	0 0.00%	0 0.00%	0 0.00%	0 0.00%	2 33.33%	3 50.00%	1 16.67%	6 100.00%	1	0	7
5-4	14,616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1 100.00%	0 0.00%	1 100.00%	0	0	1

주: 평가 제외 과제는 앞의 <표 2-91> 참조

다.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분야

□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분야에 대하여 중영역별로 예산과제 중 예산을 전액집행(100% 이상)한 과제의 영역별 비율은 ‘5. 성숙한 노년기를 위한 기반 마련’ 100%(영역 내 비예산사업과 기타를 제외한(이하 동일) 6개 과제 중 6개), ‘3.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75.00%(영역 내 4개 과제 중 3개), ‘4.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돌봄 환경 조성’ 52.94%(영역 내 17개 과제 중 9개), ‘新중년 새로운 인생 출발 지원’ 44.44%(영역 내 9개 과제 중 4개), ‘1.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 25.00%(영역 내 4개 과제 중 1개)인 것으로 나타남.

○ 예산집행률이 50% 미만인 과제는 ‘4.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돌봄 환경 조성’ 내 1개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50~70% 미만인 과제는 1개(2.50%), 70~90% 미만인 과제는 4개(10.00%)로 각각 나타남.

○ 예산집행률이 80% 미만인 과제는 3개이며, ‘2. 新중년 새로운 인생 출발 지원’ 내 1개 과제, ‘4.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돌봄 환경 조성’ 내 2개 과제인 것으로 나타남.

○ 예산을 90% 이상 집행한 과제는 비예산사업과 기타를 제외한 전체 평가대상 과제 40개 중 85.00%(34개)로 나타남.

〈표 2-102〉 2020년도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분야 예산집행실적

(단위: 억 원, 과제 수)

중·소영역	최종예산	예산집행률								비 예산	기타	계
		0%	1~50% 미만	50~70% 미만	70~80% 미만	80~90% 미만	90~100% 미만	100% 이상	소계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233,646	0 0.00%	1 2.50%	1 2.50%	1 2.50%	3 7.50%	11 27.50%	23 57.50%	40 100.00%	5	6	51
(소득) 1.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9)	183,243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3 75.00%	1 25.00%	4 100.00%	4	0	8
(준비) 2. 新중년 새로운 인생 출발 지원(10)	4,316	0 0.00%	0 0.00%	0 0.00%	1 11.11%	3 33.33%	1 11.11%	4 44.44%	9 100.00%	0	0	9
(참여) 3.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4)	26,649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1 25.00%	3 75.00%	4 100.00%	0	0	4
(건강) 4.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돌봄 환경 조성(26)	19,212	0 0.00%	1 5.88%	1 5.88%	0 0.00%	0 0.00%	6 35.29%	9 52.94%	17 100.00%	1	6	24
(마무리) 5. 성숙한 노년기를 위한 기반 마련(7)	226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6 100.00%	6 100.00%	0	0	6

주: 1) 예산 금액은 최종예산 기준이며, 예산집행률은 이에 대한 예산집행액의 비율을 뜻함.

2) 한 과제에 여러 개의 사업이 있는 경우(부처 상이 등), 사업들 중 한 개라도 예산이 있으면 예산 사업으로, 모두 비예산사업인 경우비 예산사업으로 표기

3) 다른 과제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비예산으로 표기

4) 세부 예산집행내역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 전체 예산을 활용하였으며, 각 세부사업의 집행률을 평균한 값을 적용하였음.

〈표 2-103〉 2020년도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분야 중소영역별 과제의 예산집행실적

(단위: 억 원, 과제 수)

중영역	예산	예산집행률								비 예산	기타	계
		0%	1~50% 미만	50~70% 미만	70~80% 미만	80~90% 미만	90~100% 미만	100% 이상	소계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233,646	0 0.00%	1 2.50%	1 2.50%	1 2.50%	3 7.50%	11 27.50%	23 57.50%	40 100.00%	5	6	51
(소득) 1.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9)	183,243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3 75.00%	1 25.00%	4 100.00%	4	0	8
1-1	0	0 -	0 -	0 -	0 -	0 -	0 -	0 -	0 -	1	0	1
1-2	181,467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2 66.67%	1 33.33%	3 100.00%	0	0	3
1-3	1,776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1 100.00%	0 0.00%	1 100.00%	3	0	4
1-4	0	0 -	0 -	0 -	0 -	0 -	0 -	0 -	0 -	0	0	0
(준비) 2. 新중년 새로운 인생 출발 지원(10)	4,316	0 0.00%	0 0.00%	0 0.00%	1 11.11%	3 33.33%	1 11.11%	4 44.44%	9 100.00%	0	0	9
2-1	4,296	0 0.00%	0 0.00%	0 0.00%	1 12.50%	2 25.00%	1 12.50%	4 50.00%	8 100.00%	0	0	8
2-2	21	0 0.00%	0 0.00%	0 0.00%	0 0.00%	1 100.00%	0 0.00%	0 0.00%	1 100.00%	0	0	1
(참여) 3.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4)	26,649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1 25.00%	3 75.00%	4 100.00%	0	0	4
3-1	24,925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1 100.00%	0 0.00%	1 100.00%	0	0	1

중영역	예산	예산집행률								비 예산	기타	계
		0%	1~50% 미만	50~70% 미만	70~80% 미만	80~90% 미만	90~100% 미만	100% 이상	소계			
3-3	1,724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3 100.00%	3 100.00%	0	0	3
(건강) 4.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돌봄 환경 조성(26)	19,212	0 0.00%	1 5.88%	1 5.88%	0 0.00%	0 0.00%	6 35.29%	9 52.94%	17 100.00%	1	6	24
4-1	3,234	0 0.00%	1 16.67%	1 16.67%	0 0.00%	0 0.00%	2 33.33%	2 33.33%	6 100.00%	1	0	7
4-2	4,961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2 40.00%	3 60.00%	5 100.00%	0	3	8
4-3	11,017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2 33.33%	4 66.67%	6 100.00%	0	3	9
(마무리) 5. 성숙한 노년기를 위한 기반 마련(7)	226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6 100.00%	6 100.00%	0	0	6
5-1	95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2 100.00%	2 100.00%	0	0	2
5-2	131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4 100.00%	4 100.00%	0	0	4

주: 평가 제외 과제는 앞의 <표 2-91> 참조

다. 인구변화 적극 대비 분야 분야

□ 인구변화 적극 대비 분야에 대하여 중영역별로 예산과제 중 예산을 전액집행(100% 이상)한 과제의 영역별 비율은 '2. 인구변화 대응기반 강화 및 국민 인식개선' 66.67.00%(영역 내 3개 과제 중 2개)인 것으로 나타남. '1. 인구구조 변화 대비 및 지역정책 패러다임 전환' 영역의 경우 비예산 4개, 기타 1개 과제로 예산집행률 평가 과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예산을 90% 이상 집행한 과제는 비예산사업과 기타를 제외한 전체 평가대상 과제 3개 중 100%(3개)로 나타남.

<표 2-104> 2020년도 인구변화 적극 대비 분야 예산집행실적

(단위: 억 원, 과제 수)

중·소영역	최종예산	예산집행률								비 예산	기타	계
		0%	1~50% 미만	50~70% 미만	70~80% 미만	80~90% 미만	90~100% 미만	100% 이상	소계			
인구변화 적극 대비	115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1 33.33%	2 66.67%	3 100.00%	5	1	9
(사회시스템·지역) 1. 인구구조 변화 대비 및 지역정책 패러다임 전환(5)	0	0 -	0 -	0 -	0 -	0 -	0 -	0 -	0 -	4	1	5
(대응기반 강화) 2. 인구변화 대응기반 강화 및 국민 인식개선(5)	115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1 33.33%	2 66.67%	3 100.00%	1	0	4

주: 1) 예산 금액은 최종예산 기준이며, 예산집행률은 이에 대한 예산집행액의 비율을 뜻함.

2) 한 과제에 여러 개의 사업이 있는 경우(부처 상이 등), 사업들 중 한 개라도 예산이 있으면 예산 사업으로, 모두 비예산사업인 경우 비예산사업으로 표기

3) 다른 과제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비예산으로 표기

4) 세부 예산집행내역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 전체 예산을 활용하였으며, 각 세부사업의 집행률을 평균한 값을 적용하였음.

〈표 2-105〉 2020년도 인구변화 적극 대비 분야 중소영역별 과제의 예산집행실적

(단위: 억 원, 과제 수)

중·소영역	예산	예산집행률								비 예산	기타	계
		0%	1~50% 미만	50~70% 미만	70~90% 미만	80~90% 미만	90~100% 미만	100% 이상	소계			
인구변화 적극 대비	115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1 33.33%	2 66.67%	3 100.00%	5	1	9
(사회시스템·지역) 1. 인구구조 변화 대비 및 지역정책 패러다임 전환(5)	0	0 -	0 -	0 -	0 -	0 -	0 -	0 -	0 -	4	1	5
1-1	0	0 -	0 -	0 -	0 -	0 -	0 -	0 -	0 -	3	1	4
1-2	0	0 -	0 -	0 -	0 -	0 -	0 -	0 -	0 -	1	0	1
(대응기반 강화) 2. 인구변화 대응기반 강화 및 국민 인식개선(5)	115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1 33.33%	2 66.67%	3 100.00%	1	0	4
2-1	0	0 -	0 -	0 -	0 -	0 -	0 -	0 -	0 -	1	0	1
2-2	115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1 33.33%	2 66.67%	3 100.00%	0	0	3

주: 평가 제외 과제는 앞의 〈표 2-91〉 참조

4. 영역별 예산 구성

가.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분야

□ 2020년도 최종예산 기준으로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분야의 총 예산은 45.93조 원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5. 2040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 조성-3(7개 세부과제)’은 총 22.68조 원으로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분야 총 예산의 49.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도출되었음.

○ 이어 ‘3.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1(7개 세부과제)’ 7.61조 원(16.56%), ‘3.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2(2개 세부과제)’ 4.00조 원(8.70%), ‘1.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4(1개 세부과제)’ 3.10조 원(6.76%), ‘5. 2040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 조성-1(1개 세부과제)’ 1.60조 원(3.47%) 순으로 나타남.

○ 상기한 상위 5개 소영역 과제의 예산이 총 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이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분야 전체 예산의 84.88%로 나타남에 따라 특정 영역의 예산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대체적으로, 5. 2040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 조성, 3.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영역의 예산 비중이 다른 영역의 예산 비중에 비하여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106〉 2020년도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소영역별 최종예산

(단위: 억 원)

순위	중소영역(영역 내 과제 수)	예산(억 원)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예산 중 비중	누적 비중
1	5. 2040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 조성-3(7)	226,790	49.38%	49.38%
2	3.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1(7)	76,054	16.56%	65.94%
3	3.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2(2)	39,966	8.70%	74.64%
4	1.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4(1)	31,045	6.76%	81.40%
5	5. 2040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 조성-1(1)	15,957	3.47%	84.88%
6	5. 2040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 조성-4(1)	14,616	3.18%	88.06%
7	2.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화-2(7)	12,352	2.69%	90.75%
8	2.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화-4(2)	12,243	2.67%	93.41%
9	3.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5(6)	5,629	1.23%	94.64%
10	3.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3(3)	4,693	1.02%	95.66%
11	1.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3(2)	4,075	0.89%	96.55%
12	3.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4(2)	3,913	0.85%	97.40%
13	4. 모든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1(3)	3,601	0.78%	98.18%
14	1.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6(2)	3,102	0.68%	98.86%
15	2.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화-3(6)	1,839	0.40%	99.26%
16	5. 2040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 조성-2(5)	858	0.19%	99.45%
17	1.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2(5)	731	0.16%	99.61%
18	3.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6(2)	685	0.15%	99.76%
19	2.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화-1(3)	518	0.11%	99.87%
20	4. 모든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2(10)	450	0.10%	99.97%
21	1.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1(3)	153	0.03%	100.00%
22	1.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7(2)	2	0.00%	100.00%
23	1.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5(1)	0	0.00%	100.00%
계(83)		459,273	100.00%	-

주: 예산 수치는 예산사업에 한정하여 제시한 것이며, 영역 내 과제 수는 예산집행률 산출이 가능한 예산 과제를 포함.

나.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분야

□ 2020년도 최종예산 기준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분야의 총 예산은 23.36조 원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1.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2(3개 세부과제)’은 총 18.15조 원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분야 총 예산의 77.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도출되었음.

○ 이어 ‘3.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1(1개 세부과제)’ 2.49조 원(10.67%), ‘4.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돌봄 환경 조성-3(9개 세부과제)’ 1.10조 원(4.72%), ‘4.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돌봄 환경 조성-2(8개 세부과제)’ 0.50조 원(2.12%), ‘2. 新중년 새로운 인생 출발 지원-1(8개 세부과제)’ 0.43조 원(1.84%) 순으로 나타남.

○ 상기한 상위 5개 소영역 과제의 예산이 총 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이 저출산 분야 전체 예산의 97.01%로 나타남에 따라 특정 영역의 예산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107〉 2020년도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분야 소영역별 최종예산

(단위 : 억 원)

순위	소영역(영역 내 과제 수)	예산(억 원)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예산 중 비중	누적 비중
1	1.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2(3)	181,467	77.67%	77.67%
2	3.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1(1)	24,925	10.67%	88.34%
3	4.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돌봄 환경 조성-3(9)	11,017	4.72%	93.05%
4	4.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돌봄 환경 조성-2(8)	4,961	2.12%	95.17%
5	2. 新중년 새로운 인생 출발 지원-1(8)	4,296	1.84%	97.01%
6	4.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돌봄 환경 조성-1(7)	3,234	1.38%	98.40%
7	1.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3(4)	1,776	0.76%	99.16%
8	3.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3(3)	1,724	0.74%	99.89%
9	5. 성숙한 노년기를 위한 기반 마련-2(4)	131	0.06%	99.95%
10	5. 성숙한 노년기를 위한 기반 마련-1(2)	95	0.04%	99.99%
11	2. 新중년 새로운 인생 출발 지원-2(1)	21	0.01%	100.00%
12	1.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1(1)	0	0.00%	100.00%
13	1.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4(0)	0	0.00%	100.00%
14	3. 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2(0)	0	0.00%	100.00%
계(51)		233,646	100.00%	-

주: 예산 수치는 예산사업에 한정하여 제시한 것이며, 영역 내 과제 수는 예산집행률 산출이 가능한 예산 과제를 포함.

다. 인구변화 적극 대비 분야

□ 2020년도 최종예산 기준으로 “인구변화 적극 대비” 분야의 총 예산은 115.0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유일하게 ‘대응기반 강화-2(3개 세부과제)’의 경우 예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108〉 2020년도 인구변화 적극 대비 분야 소영역별 최종예산

(단위 : 억 원)

순위	소영역(영역 내 과제 수)	예산(억 원)	인구변화 적극 대비 예산 중 비중	누적 비중
1	대응기반 강화-2(3)	115	100.00%	100.00%
2	대응기반 강화-1(1)	0	0	0
3	사회시스템-1(4)	0	0	0
4	사회시스템-2(1)	0	0	0
계(9)		115	100.00%	-

주: 예산 수치는 예산사업에 한정하여 제시한 것이며, 영역 내 과제 수는 예산집행률 산출이 가능한 예산 과제를 포함.



제3장

핵심성과지표 평가

제1절 개요

제2절 핵심성과지표 정성평가

제3절 핵심성과지표 개선 방향

제3장 핵심성과지표 평가

제1절 개요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총 13개의 핵심성과지표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세부과제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핵심성과지표와 각 지표의 2020년 최종 목표치를 설정하여 연도에 따른 변화를 측정하고 점검함.
- 본 장에서는 각 분야별로 2020년(또는 가장 최신) 핵심지표를 산출하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성과 지표의 달성과 관련된 2020년 세부과제의 추진성과를 함께 분석함.
 - 핵심성과지표 중 임신유지율, 노인 상대빈곤율은 최신 수치이므로 업데이트가 불가능하여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 핵심성과지표 고령친화산업 비중은 지표값 산출이 불가능한 지표로(이소영 외, 2017; 박종서 외, 2018)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 따라서 2020년 분석 대상 핵심성과지표는 총 10개로, 신혼부부 임대주택 수혜율, 청년고용률,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율, 국공립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 사교육비 부담,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 노인교통사망률, 여성고용률, 고령자 고용률임.
- 추가적으로 국제비교가 가능한 일부 핵심성과지표를 대상으로 OECD 국가와의 비교 분석을 수행하고자 함.

〈표 3-1〉 핵심성과지표와 관련 영역별 세부과제

핵심성과지표	관련 중영역(소영역)	관련 세부정책(과제)
신혼부부 임대주택 수혜율	○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강화)	-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공급확대 - 신혼부부 주택자금지원 현실화
임신유지율	○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임신·출산 사회책임시스템 구축)	- 고위험 산모 신생아 의료지원 확대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지지 강화 - 생명존중 분위기 확산
청년 고용률	○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청년고용활성화)	- 청년고용대책 - 노동개혁 과제 - 일학습병행 등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율	○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일·가정 양립 실천 여건 강화)	-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 육아휴직제도 내실화 - 남성육아참여 문화 확산

핵심성과지표	관련 중영역(소영역)	관련 세부정책(과제)
국공립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 (맞춤형 보육)	-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개혁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	○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일·가정 양립 실천 분위기 확산)	- 일·가정양립 지원·홍보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사교육비 부담	○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 개혁 (교육개혁 추진)	- 사교육 경감 - 공교육 정상화 - 능력중심사회 구현
노인 상대빈곤율	○ 노후소득보장 강화 (공적연금 강화)	- 1인 1연금체계 구축 - 기초연금 내실화 - 퇴직·개인연금 활성화 - 주택·농지연금 활성화 - 노후준비 여건 조성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	○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고령자 건강생활 보장)	- 고령자 신체활동 증진 - 고령자 질병예방·관리 강화 - 노인의료·돌봄체계 내실화 - 장기요양보험제도 고도화 - 치매에 대한 체계적 대응
노인교통사망률	○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고령자 안전 및 권익보장)	- 고령운전자 안전 강화 - 고령보행자 안전환경 조성
여성고용률	○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 확대 (여성 고용 활성화)	- 여성 재취업지원 - 시간선택제 일자리, 유연근로 활성화 등
고령자 고용률	○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 확대 (중·고령자 근로기반 확대)	- 정년제도 개선 - 고령자 재취업 지원 과제 전반
고령친화산업 비중	○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고령친화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	- 고령친화산업 생태계 조성 - 유망 산업·서비스 육성 - R&D 종합지원체계 구축

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대한민국정부, p.44

제2절 핵심성과지표 정성평가

1. 핵심성과지표 평가

가. 신혼부부 임대주택 수혜율

〈표 3-2〉 신혼부부 임대주택 수혜율

성과지표	2014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목표 (2020년)	출처	측정방법
신혼부부 임대주택 수혜율	4.8%	8.24%	8.93%	15.02%	23.77%	28.16%	10.0%	국토부 행정통계	공공임대신혼부부 지원물량/연간초혼부부수

자료: 목표치는 대한민국정부(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실적치는 이소영·강은나·백혜연·변수정·장인수 (2017). 2016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이소영·백혜연·변수정·장인수(2018). 2017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박종서·이소영·황남희·장인수(2019). 2018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2019, 2020년도 공공임대 신혼부부 지원물량; 통계청(2021a). 시도·부부의 혼인종류별 혼인[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11&conn_path=I2에서 2021. 10.6.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정의) 신혼부부 임대주택 수혜율은 신혼 부부 수 대비 당해 연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받은 신혼부부 수의 비율을 의미

○ 공공임대주택 지원물량은 국민임대, 5년·10년 임대, 행복주택의 합계임.

○ 2020년 공공임대주택 지원물량으로 고려되는 세부 항목은 건설형(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5/10년형 전환), 전세형, 매입형의 합계이며 공급실적 기준임.

□ (종합) 2020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수혜율은 28.16%로 산출됨.

- 신혼부부 임대주택 수혜율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됨.

$$\text{신혼부부 임대주택 수혜율} = \frac{\text{2020년 공공임대 신혼부부 지원물량(건설형(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5/10년형 전환), 전세형, 매입형)}}{\text{2020년 초혼부부수}} \times 100$$

- 2020년 공공임대 신혼부부 지원 물량은 총 47,025호로서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건설형 영구임대 273호, 건설형 국민임대 7,477호, 건설형 행복주택 8,691호, 5/10년형 전환 5,746호, 전세형 14,340호, 매입형 10,498호(국토교통부, 내부자료)
- 2020년 초혼 부부 수는 166,990쌍(통계청, 2021a)

[그림 3-1] 핵심성과지표: 신혼부부 임대주택 수혜율의 실적치와 목표치



자료: 목표치는 대한민국정부(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실적치는 이소영·강은나·백혜연·변수정·장인수(2017). 2016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이소영·백혜연·변수정·장인수(2018). 2017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박종서·이소영·황남희·장인수(2019). 2018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2019, 2020년도 공공임대 신혼부부 지원물량: 통계청(2021a). 시도/부부의 혼인종류별 혼인[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11&conn_path=I2에서 2021. 10.6.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016, 2017, 2018, 2019, 2020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수혜율은 각각 8.24%, 8.93%, 15.02%, 23.77%, 28.16%로 나타남.
- 신혼부부에 공급되는 임대주택 물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연간 초혼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미 2020년 실적은 제3차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2020년의 목표치(10%)를 초과함.
- 감사원(2021)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물량의 실제 계약실적을 바탕으로 산출한 수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실제 계약을 체결한 물량으로 실적 계산을 통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실효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나. 청년고용률

〈표 3-3〉 청년고용률

성과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목표 (2020년)	출처	측정방법
청년고용률	40.7%	-	42.3%	42.1%	42.7%	43.5%	42.2%	48.0%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5~29세 청년취업자/ 청년 경제활동인구
	40.5%	41.2%	41.7%							

주: 2014년 청년고용률은 40.7%였으나 통계청에서 추계인구 작성방법이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이후 바뀌었고 이에 근거해 과거 시계열(2000년 7월~2017년 12월)에 대한 소급 보정 후 공표(2018년 2월)한 수치인 40.5%로 변경함(2015년 41.2%, 2016년 41.7%로 변경한 사유 동일함).

자료: 목표치는 대한민국정부(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실적치는 이소영·강은나·백혜연·변수정·장인수(2017). 2016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통계청(2021b). 연별별 경제활동인구 총괄[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2S&conn_path=I2에서 2021. 10.6.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정의) 청년고용률은 만15~29세 청년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

□ (종합) 2020년 청년고용률을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2014년 15세에서 29세 청년고용률은 40.5%로 2020년 목표치는 OECD 국가들의 청년 고용률 평균(50.9%)을 고려해 48.0%로 설정함.¹⁴⁾
- 청년고용률의 산출식은 (15~29세 청년 취업자/청년경제활동인구)×100로 제시됨.
 -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산출식의 분모가 청년 인구가 아니라 청년 경제활동인구로 잘못 기재됨(이소영, 강은나, 백혜연, 변수정, 장인수, 2017).
 - 청년 경제활동인구를 분모로 계산할 경우 2014년 청년 고용률은 40.7%가 아니라 91.0%가 됨(이소영 외,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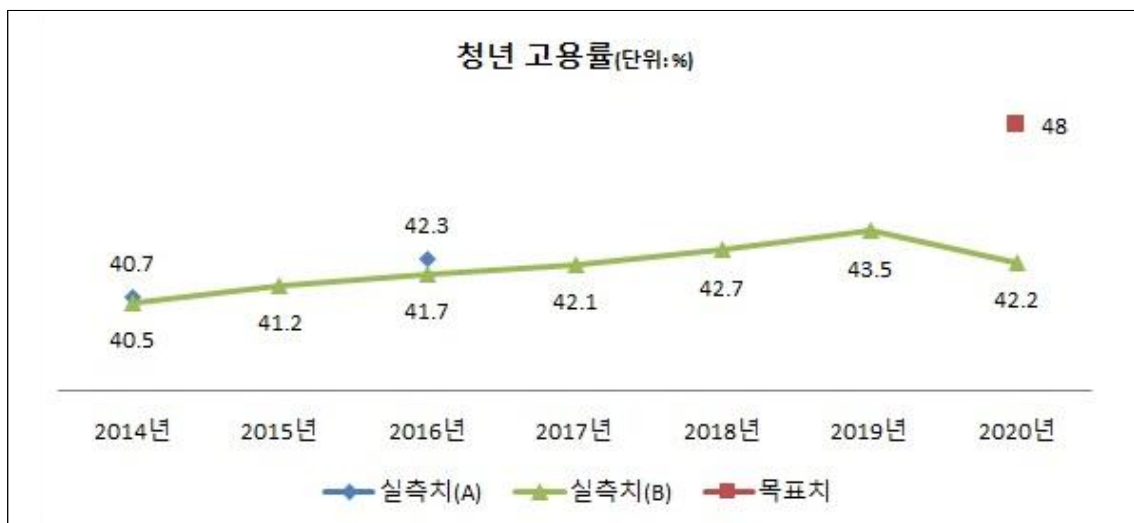
14)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대한민국정부. p.44.

○ 2020년 청년고용률은 42.2%로 산출됨.

- 청년고용률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됨.

$$\text{청년고용률} = \frac{2020\text{년}(15-29\text{세})\text{청년취업자}}{2020\text{년}(15-29\text{세})\text{청년인구}} \times 100$$

[그림 3-2] 핵심성과지표: 청년고용률의 실적치와 목표치



주: 실적치(A)는 기존 수치, 실적치(B)는 변화된 기준(통계청에서 과거 시계열(2000.7월~2017.12월) 소급보정 후 공표(2018.2.14.)을 적용하여 도출한 수치

자료: 목표치는 대한민국정부(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실적치는 이소영·강은나·백혜연·변수정·장인수(2017). 2016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통계청(2021b).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총괄[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2S&conn_path=I2에서 2021. 10.6.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015년 청년고용률은 41.2%, 2016년은 41.7%, 2017년 42.1%, 2018년 42.7%, 2019년 43.5%, 2020년 42.2%로 나타남.

- 청년고용률은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전년대비 1.3%p 하락한 2020년 42.2%로 2020년 목표치(48%)를 달성하지 못함.

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율

〈표 3-4〉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율

성과지표	2015년 (7월)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목표 (2020년)	출처	측정방법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율	5.0%	8.58%	13.4%	17.8%	21.2%	24.5%	15.0%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자료	남성육아휴직자/ 전체육아휴직자*100

자료: 목표치는 대한민국정부(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실적치는 통계청(2021c). e-나라지표.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데이터파일].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04에서 2021. 10.6.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정의)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연속적으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이용한 자 중 남성의 비율을 의미함(이소영 외, 2017).

□ (종합) 2020년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율을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4년 5%, 2020년 목표치는 15%로 각각 제시됨.¹⁵⁾

○ 2020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4.5%로 산출됨(전체 육아휴직자 수 112,040명, 남성 육아휴직자 수 27,423명).

-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됨.

$$\text{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 = \frac{\text{2020년남성육아휴직자}}{\text{2020년전체육아휴직자}} \times 100$$

○ 2020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24.5%)은 2020년 목표치인 15.0%를 초과하였음.

○ 2020년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2019년에 비하여 6,875명이 증가하였으며(2019년 105,165명, 2020년 112,040명),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전년 대비 5,126명이 증가함(2019년 22,297명, 2020년 27,423명).

[그림 3-3] 핵심성과지표: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율의 실적치와 목표치



자료: 목표치는 대한민국정부(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실적치는 통계청(2021c). e-나라지표,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데이터파일].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04에서 2021. 10.6.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대한민국정부

라. 국공립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표 3-5〉 국공립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성과지표	2014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목표 (2020년)	출처	측정방법
국공립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비율	26%	22.8%	23.7%	26.3%	29.3%	33.4%	37% (2025년 까지 45%)	복지부 보육정책 DB	평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아동수/ 평균전체어린이집이용아동수

자료: 목표치는 대한민국정부(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실적치는 보건복지부(2021). 보육통계(2020년 12월 말 기준); 보건복지부(2020). 보육통계(2019년 12월 말 기준); 보건복지부(2019). 보육통계(2018년 12월 말 기준); 보건복지부(2018). 보육통계(2017. 12월 말 기준); 보건복지부(2017). 보육통계(2016년 12월 말 기준)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정의) 국공립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은 전체 어린이집¹⁶⁾ 이용 아동 중 국공립, 직장,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의미

□ (종합) 2020년 국공립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을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먼저, 2014년 국공립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은 26.0%로 나타났으며, 2020년 목표치는 37%이고, 2025년까지는 45%로 제시됨.¹⁷⁾

- 국공립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은 (국공립, 직장,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 100로 산출됨.

○ 2020년 국공립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률은 33.4%로 산출됨.

- 국공립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률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됨.

• 국공립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률은 총 이용 아동 1,244,396명 중 415,799명(국공립 253,251명, 직장 66,401명, 공공형 96,147명임).

* 2019년의 경우 국공립 232,123명, 직장 66,023명, 공공형 102,328명, 총 400,474명임.

$$\text{국공립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 \frac{2020\text{년}(\text{국공립어린이집이용아동수} + \text{직장어린이집이용아동수} + \text{공공형어린이집이용아동수})}{2020\text{년 전체어린이집이용아동수}} \times 100$$

- 국공립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률은 매년 12월 말 기준으로 산출되는 「보육통계」를 활용하여 산출되며, 참고적으로 2020년의 수치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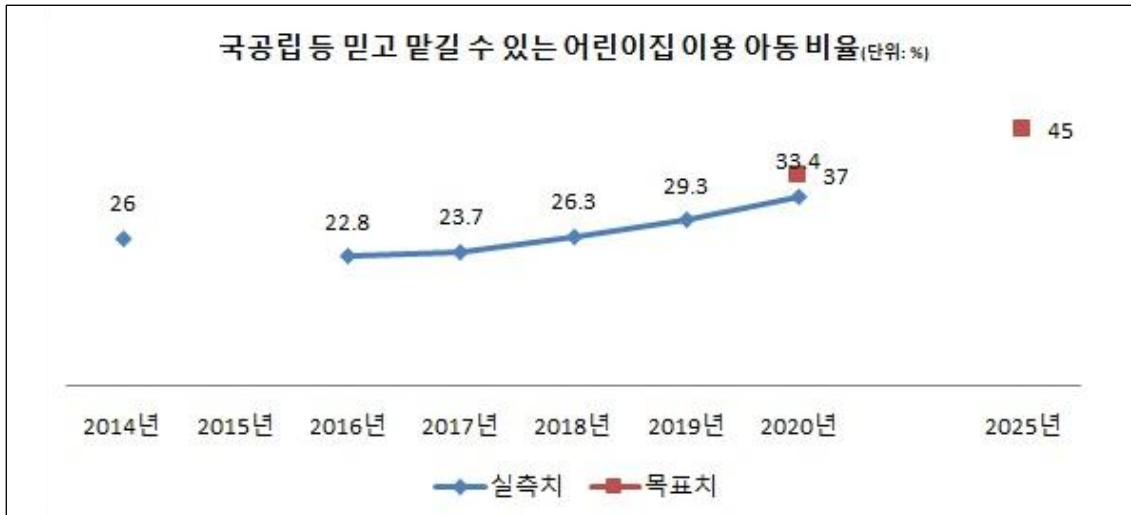
• 2020년 12월 31일 기준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총 1,244,396명으로,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국공립 253,251명, 사회복지법인 78,322명, 법인단체 등 34,066명, 민간 578,196명, 가정 230,444명, 협동 3,716명, 직장 66,401명임.

16) 어린이집 유형은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개인, 가정, 직장, 협동 어린이집으로 구분됨.

17)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대한민국정부

* 2019년 12월 31일 기준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총 1,365,085명으로,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국공립 232,123명, 사회복지법인 86,775명, 법인단체 등 38,538명, 민간 664,106명, 가정 273,399명, 협동 4,121명, 직장 66,023명임.

[그림 3-4] 핵심성과지표: 국공립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의 실적치와 목표치



자료: 목표치는 대한민국정부(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실적치는 보건복지부(2021). 보육통계(2020년 12월 말 기준); 보건복지부(2020). 보육통계(2019년 12월 말 기준); 보건복지부(2019). 보육통계(2018년 12월 말 기준); 보건복지부(2018). 보육통계(2017. 12월 말 기준); 보건복지부(2017). 보육통계(2016년 12월 말 기준)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마.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

〈표 3-6〉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

성과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목표 (2020년)	출처	측정방법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	2,076	2,083	2,068	2,018	1,993	1,967	1,908	1,800 시간대	OECD통계 (통계청국제 통계연감)	임금근로자의 전체연간근로시간/ 전체임금근로자수

자료: 목표치는 대한민국정부(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실적치는 OECD. Average annual hours actually worked[데이터파일].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ANHRS>에서 2021. 10. 12.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정의)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임금근로자의 전체 연간 근로시간을 전체 임금근로자 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일-가정 양립, 일-생활 균형을 직/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지표로 이해됨(박종서 외, 2019).

□ (종합) 2020년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을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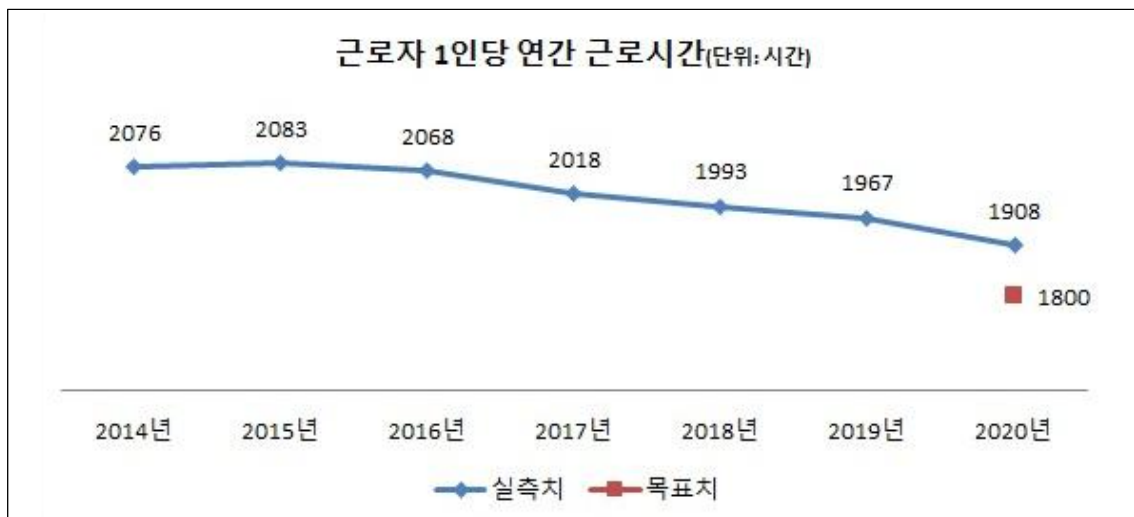
○ 먼저, 2014년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2,076시간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목표치는 1,800시간대로 제시됨.¹⁸⁾

-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됨.

$$\text{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 = \frac{\text{2020년 임금근로자의 전체연간 근로시간}}{\text{2020년 전체임금근로자수}} \times 100$$

- 2020년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908시간(OECD)으로 산출되었으며,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치인 2020년의 1,800시간대를 달성하지 못함.
-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2015년부터 지속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의 목표치인 1,800시간대와는 큰 괴리를 보이고 있으며, 국제비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하여 여전히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
- 다만 절대시간 감소 양상은 주목할 수 있음. 2015년에 2,083시간, 2016년 2,068시간, 2017년 2,018시간, 2018년 1,993시간, 2019년 1,967시간, 2020년 1,908시간을 나타내며 점차 감소하고 있음.

[그림 3-5] 핵심성과지표: 국공립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의 실적치와 목표치



자료: 목표치는 대한민국정부(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실적치는 OECD. Average annual hours actually worked[데이터파일].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ANHRS>에서 2021. 10.12.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바. 사교육비 부담

〈표 3-7〉 사교육비 부담

성과지표	2014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목표 (2020년)	출처	측정방법
사교육비 부담	18.2조 원	18.1조 원	18.7조 원	19.5조 원	21.0조 원 10.5조 원	- 9.3조 원	17조 원	통계청 사교육비조사	초, 중, 고생 총사교육비

주: 1) 2020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연간화 미적용 통계자료를 제시하여 2019년, 2020년 전년 비교만 가능함. 기존 조사결과와 구분되어 과거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시계열 비교가 불가능함. 추후 연간화된 2020년 통계자료는 2022년 3월에 공표 예정임.
2) 2020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는 코로나 상황에 의해 기존 조사 기간이 연간과 다르게, 3~5월, 7~9월만 조사를 실시하였고, 사교육비 범위에서 진로·진학 학습상담이 제외되었음.
자료: 목표치는 대한민국정부(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실적치는 통계청(2020c). 학교급별 사교육비 총액[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E003&conn_path=12에서 2021. 10.6. 인출한 자료; 통계청(2021d). 학교급별 사교육비 총액[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PE002&conn_path=12에서 2021. 10.6.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정의) 사교육비 부담은 초등학생, 중등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비의 총합을 의미함(이소영 외, 2017).

□ (종합) 2020년 사교육비 부담 정도의 산출 결과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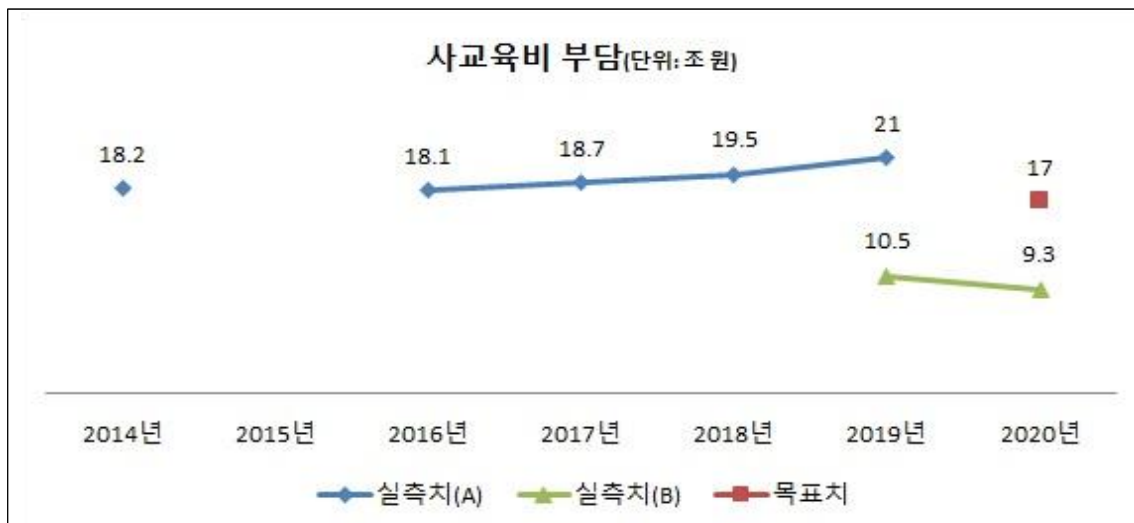
- 먼저, 2014년 사교육비 부담은 18.2조로 나타났으며, 2020년의 목표치는 17조원으로 매해 2천억 이상 감소를 목표치로 설정하였음.¹⁹⁾
- 2020년 사교육비 부담은 9.3조 원으로 전년 대비 11.4% 감소(2019년 10.5조 원)한 것으로 나타남(통계청, 2021d).
 - 해당 2020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학교급·학년별 단계적 온라인 수업 적용 및 등교, 개학 등 학사일정의 변화 등에 따라 사교육비 조사를 기존의 조사 방식과 상이한 방식으로 제시함.
 - 조사기간이 3~5월, 7~9월로 6개월 조사가 이루어짐(기존 조사기간은 연간임).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통계작성방법 변경에 따라 사교육비 범위에서 진로·진학 학습상담은 2020년도 한해 제외함(사교육항목과 조사대상월이 달라 통계작성에 미포함).
 - 기존 공표된 2014년~2019년까지의 시계열 분석은 가능하나, 2020년 통계자료는 연간화 미적용으로 인해 시계열 분석이 제한됨. 2020년 통계가 전년과 비교 가능하도록 2019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를 연간화 미적용으로 제시함으로써 2019년과 2020년 비교는 가능함.
 - 사교육비 부담은 통계청에서 실시한 「2020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를 활용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산출됨.

19)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대한민국정부

사교육비 부담 = 2020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총사교육비의 총계

- 2020년 사교육비 부담액은 학교급별로 초등학교 3.6조 원(2019년 4.8조 원), 중학교 2.6조 원(2019년 2.6조 원), 고등학교 3.1조 원(2019년 3.1조 원)이며, 전년 대비 초등학교(-25.2%), 중학교(-1.8%)은 감소하였고, 고등학교 (0.3%)의 경우 증가하였음(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 시계열 비교가 가능한 기간인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교육비 부담액은 지속 증가하는 양상을 띠고 있음.
- 2016년 18.1조 원, 2017년 18.7조 원, 2018년 19.5조 원, 2019년 21조 원으로 지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그림 3-6] 핵심성과지표: 사교육비 부담의 실측치와 목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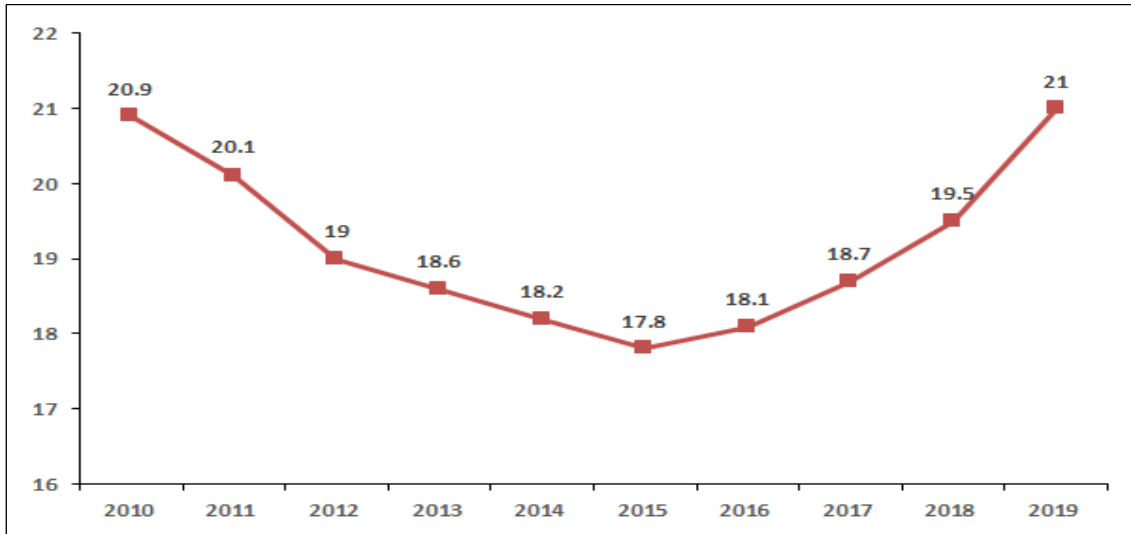
주: 1) 실측치(A)는 기존 수치(연간화 적용 통계자료), 실측치(B)는 2019년, 2020년 비교만 가능한 수치이고, 기존 조사결과와 구분되어 과거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시계열 비교가 불가능함. 추후 연간화된 2020년 통계자료는 2022년 3월 공표 예정임.
 2) 2020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는 코로나 상황에 의해 기존 조사 기간이 연간과 다르게, 3~5월, 7~9월만 조사를 실시하였고, 사교육비 범위에서 진로·진학 학습상담이 제외되었음.

자료: 대한민국정부(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통계청(2020c). 학교급별 사교육비 총액[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E003&conn_path=I2에서 2021. 10.6. 인출한 자료; 통계청(2021d). 학교급별 사교육비 총액[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PE002&conn_path=I2에서 2021. 10.6.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010년부터의 사교육비 추이를 살펴보면, 지속 감소하다 2015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여 2019년의 경우 2010년의 20.9조 원 수준에 회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그림 3-7] 사교육비 추이(2010~2019년)

(단위: 조 원)



자료: 통계청(2020c). 학교급별 사교육비 총액[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E003&conn_path=I2에서 2021. 10.6.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사.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

〈표 3-8〉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

성과지표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8년	목표 (2020년)	출처	측정방법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	8.4	8.9	-	8.9	-	-	7.5	통계청 생명표 및 WHO 건강수명	0세 기대수명 - 건강수명
	15.2	-	16.6	-	17.5	8.3			

주: 2012년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는 8.4년이었으나 통계청에서 생명표 작성방법 개선으로 1970년~2014년 생명표 수치가 갱신되었고(2016.12.2.), 이에 근거해 2012년 수치를 15.2년으로 변경함.

자료: 목표치는 대한민국정부(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실적치는 이소영·강은나·백혜연·변수정·장인수(2017). 2016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통계청(2020e). 건강수준별 기대여명[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46&conn_path=I2에서 2021. 10.5. 인출한 자료; 통계청(2020f). 완전생명표(1세별)[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42&conn_path=I2에서 2021. 10.5.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정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는 평생 동안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아파서 병상에 누워 지낸 와병일수에 의해서 발생함으로 이 격차가 줄어들수록 질병이나 부상의 고통 없이 건강한 삶을 유지한 기간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함(이소영, 강은나, 백혜연, 변수정, 장인수, 2017).

□ (종합)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의 2020년 목표치는 7.5년이며,²⁰⁾ 2018년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는 다음의 산식으로 산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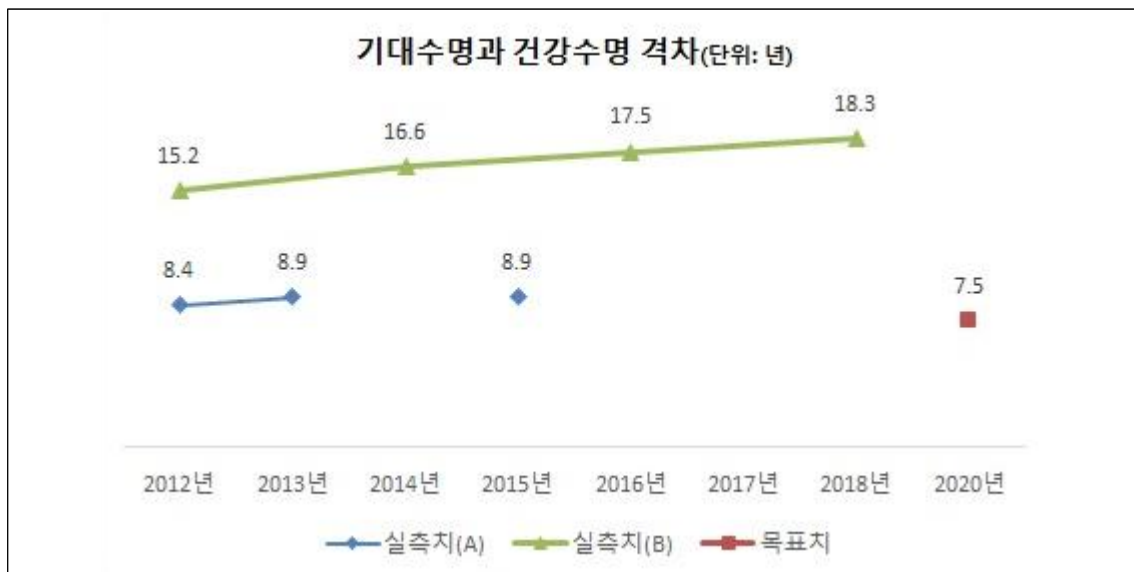
2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대한민국정부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 = 2018년 0세 기대수명 - 2018년 건강수명

- 기대수명은 통계청에서 통계청에서 연령별 정지인구와 사망자, 생존자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연령별 기대여명에서 0세 기대여명 자료를 활용함(이소영 외, 2017).
- 건강수명(유병기간 제외 기대여명)은 통계청 사회조사의 유병기간을 이용하여 장애 유병률을 산출하며, 생명표의 정지인구를 이용하여 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을 산출함(이소영 외, 2017).
- 2018년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82.7세, 건강수명은 64.4세로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는 18.3년으로 산출됨.

○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는 2012년 15.2년, 2014년 16.6년, 2016년 17.5년, 2018년 18.3년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그림 3-8]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 추이(2012~2018년)



주: 실측치(A)는 기존 수치, 실측치(B)는 변화된 기준(통계청에서 생명표 작성방법 개선으로 생명표 수치 갱신(2016.12.2.))을 적용하여 도출한 수치임.

자료: 목표치는 대한민국정부(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실적치는 이소영·강은나·백혜연·변수정·장인수(2017). 2016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통계청(2020e). 건강수준별 기대여명[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46&conn_path=I2에서 2021. 10. 5. 인출한 자료; 통계청(2020f). 완전생명표(1세별)[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42&conn_path=I2에서 2021. 10. 5.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아. 노인교통사망률

〈표 3-9〉 노인교통사망률

성과지표	2014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목표 (2020년)	출처	측정방법
노인교통사망률	28.4명	27.7명	25.0명	22.8명	18.1명	16.5명	20명	경찰청 내부자료	65세 이상 교통사고 사망자수/ 65세 이상 인구 수×10만 명

자료: 목표치는 대한민국정부(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실적치는 도로교통공단(2021). 연령층별 노인 사망자[데이터파일]. http://taas.koroad.or.kr/sta/acs/exs/typical.do?menuId=WEB_KMP_OVT_UAS_ASA에서 2021. 1 0.6. 인출한 자료; 통계청(2019).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전국[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I2에서 2021. 10.6.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정의) 노인교통사망률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의미함

○ 노인교통사망률은 노인의 교통안전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임(박종서 외, 2019).

□ (종합) 노인교통사망률의 2020년 목표치는 20명이며,²¹⁾ 2020년 노인교통사망률을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노인교통사망률은 다음의 산식으로 산출됨.

$$\text{노인교통사망률} = \frac{\text{2020년(65세이상)교통사고사망자수}}{\text{2020년(65세이상)인구수}} \times 10\text{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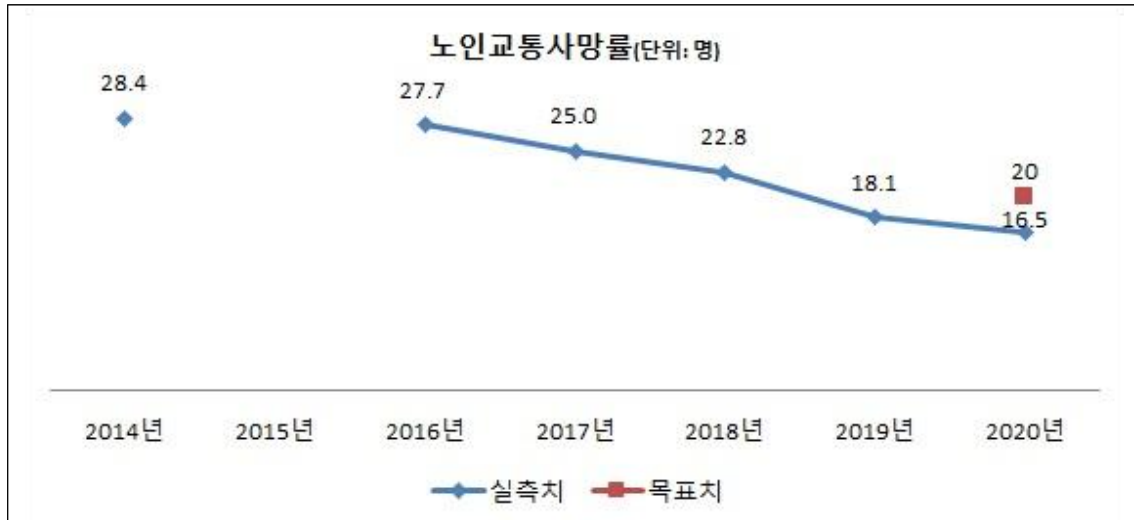
- 노인교통사망률은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2020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수 8,125,432명)와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2020년 기준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 1,342명)를 활용하여 산출됨.

○ 노인교통사망률은 2014년 28.4명, 2016년 27.7명, 2017년 25.0명, 2018년 22.8명, 2019년 18.1명, 2020년 16.5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또한, 2020년의 목표치인 20명을 2019년에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2018년 OECD 회원국 65세 이상 노인교통사망률 7.9명(도로교통공단, 2020)에 비해 높은 수준임.

21)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대한민국정부

[그림 3-9] 핵심성과지표: 노인교통사망률의 실적치와 목표치



자료: 목표치는 대한민국정부(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실적치는 도로교통공단(2021). 연령층별 노인 사망자[데이터파일]. http://taas.koroad.or.kr/sta/acs/exs/typical.do?menuId=WEB_KMP_OVT_UAS_ASA에서 2021. 10.6. 인출한 자료; 통계청(2019).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전국[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I2에서 2021. 10.6.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자. 여성고용률

〈표 3-10〉 여성고용률

성과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목표 (2020년)	출처	측정방법
여성고용률	55.4%	55.7%	56.2%	56.9%	57.2%	57.8%	56.7%	62.0%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여성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여성 생산가능인구(만 15~만64세)}×100
	55.0%	55.7%	56.1%							

주: 대한민국정부(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p.44에서 2014년 여성고용률 55.4%였으나 2015년 인구 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 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18년 1월 공표된 자료(2014년~2017년 데이터)로 변경하였음.

자료: 목표치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대한민국정부; 실적치는 이소영·백혜연·변수정·장인수(2018). 2017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박종서·이소영·황남희·장인수(2019). 2018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통계청(2021f). e-나라지표. 여성 고용동향[데이터파일].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97에서 2021. 10.6.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정의) 여성고용률은 여성 생산가능인구(만15~64세) 중 취업자 비율을 의미(이소영 외, 2017).

○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국가의 인력활용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임(이소영 외, 2017).

□ (종합) 여성고용률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년도인 2014년 여성고용률이 55.4%였고 정부는 2020년 62%를 목표치로 제시하였음.²²⁾

- 여성고용률 산출식은 아래와 같음.

$$\text{여성고용률} = \frac{\text{2020년여성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text{2020년여성생산가능인구 (만15 ~ 만64세)}} \times 100$$

- 여성고용률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하여 산출함(이소영 외, 2017).

○ 여성고용률은 2014년 55.0%, 2015년 55.7%, 2016년 56.1%, 2017년 56.9%, 2018년 57.2%, 2019년 57.8%까지 증가 추세였지만, 2020년 56.7%로 전년(2019년) 대비 1.1%p 감소됨.

- 다만, (변화된 기준으로 여성고용률 추이를 살펴보면) 여성고용률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2020년 목표 달성이 여의치 않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그림 3-10] 핵심성과지표: 여성고용률의 실측치와 목표치



주: 실측치(A)는 기존 수치, 실측치(B)는 변화된 기준(2015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14년~2016년 수치를 변경)을 적용하여 도출한 수치

자료: 목표치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대한민국정부; 실적치는 이소영·백혜연·변수정·장인수(2018). 2017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박종서·이소영·황남희·장인수(2019). 2018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통계청(2021f). e-나라지표, 여성 고용동향[데이터파일].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97에서 2021. 10.6.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차. 고령자고용률

〈표 3-11〉 고령자고용률

성과지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목표 (2020년)	출처	측정방법
고령자 고용률	65.6%	-	66.1%	67.5%	66.8%	66.9%	66.6%	70.0%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고령자취업자/ 55~64세 인구
	65.8%	66.0%	66.2%							

주: 대한민국정부(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p.44에서 2014년 고령자 고용률 65.6%였으나 2015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 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18년 1월 공표된 자료(2014년~2017년 데이터)로 변경하였음.

자료: 목표치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대한민국정부; 실적치는 이소영·백혜연·변수정·장인수(2018). 2017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통계청(2021g). e-나라지표. 고령자 고용동향[데이터파일].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96에서 2021. 10.6.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정의) 고령자 고용률은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고령자 가운데 일하고 있는 고령자가 얼마나 되는가를 의미하며, 전체 고령자(55~64세) 가운데 취업 상태에 있는 고령자 비율로 측정함(이소영 외, 2017).

○ 2018년을 정점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 규모가 감소하고 있으며,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제고는 중요한 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하나임(박종서 외, 2019).

□ (종합) 2020년 고령자 고용률을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2014년 고령자 고용률은 65.6%이며, 2020년의 목표치는 70%로 제시됨.²³⁾

○ 인구주택총조사가 등록인구기준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2017년 이후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2020년 고령자 고용률은 66.6%임.

- 2020년 고령자 고용률은 다음의 산식으로 산출됨.

$$\text{고령자 고용률} = \frac{\text{2020년 55 ~ 64세 취업자}}{\text{2020년 55 ~ 64세 인구수}}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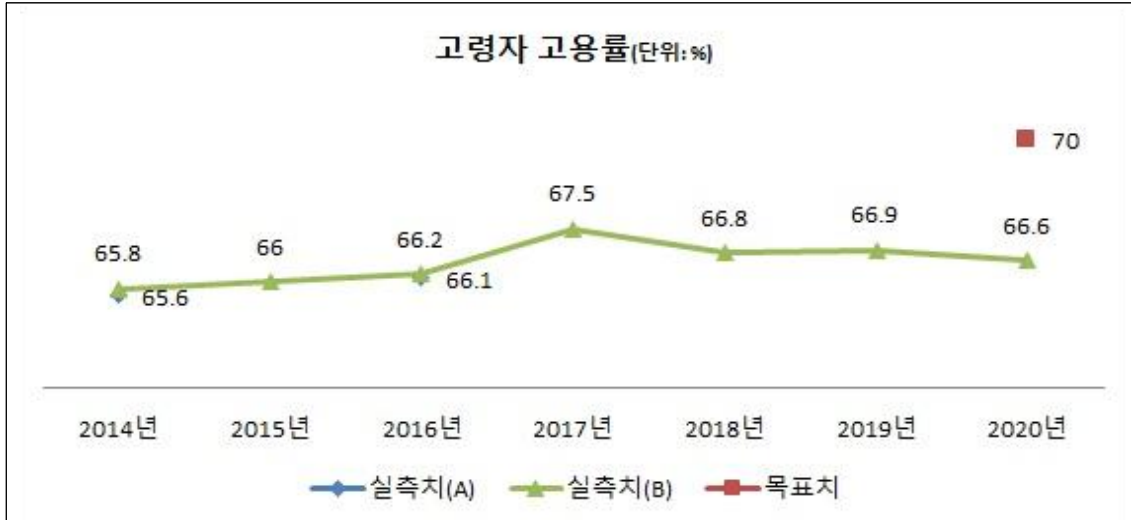
○ 고령자 고용률은 2014년 65.8%, 2015년 66.0%, 2016년 66.2%, 2017년 67.5%, 2018년 66.8%, 2019년 66.9%, 2020년 66.6%로 나타남.

- 2020년 고령자 고용률은 전년(2019년) 대비 0.3%p 감소됨.

- 2020년 고용자 고용률은 2020년 목표치 70.0%와 비교하여 3.4%p 낮은 수준임.

23)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대한민국정부

[그림 3-11] 핵심성과지표: 고령자 고용률의 실측치와 목표치



주: 실측치(A)는 기존 수치, 실측치(B)는 변화된 기준(2015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14년~2016년 수치를 변경)을 적용하여 도출한 수치
 자료: 목표치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 대한민국정부; 실적치는 이소영·백혜연·변수정·장인수(2018). 2017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통계청(2021g). e-나라지표, 고령자 고용동향[데이터파일].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96에서 2021. 10.6.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3-12〉 핵심성과지표(2014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실측치, 2020년 목표치)

성과지표	2014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목표 (2020년)
신혼부부 임대주택 수혜율	4.8%	8.24%	8.93%	15.02%	23.77%	28.16%	10.0%
청년 고용률	40.5%	41.7%	42.1%	42.7%	43.5%	42.2%	48.0%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율	5.0% (2015.7)	8.58%	13.4%	17.8%	21.2%	24.5%	15.0%
국공립 등 민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비율	26%	22.8%	23.7%	26.3%	29.3%	33.4%	37% (2025년까지 45%)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	2,076시간	2,068시간	2,018시간	1,993시간	1,967시간	1,908시간	1,800시간
사교육비 부담	18.2조 원	18.1조 원	18.6조 원	19.5조 원	21.0조 원	-	17조 원
					10.5조 원 (연간화 미적용)	9.3조 원 (연간화 미적용)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	16.6년	17.5년	-	8.3년	-	-	7.5년
노인교통사망률	28.4명	27.7명	25.0명	22.8명	18.1명	16.5명	20명
여성 고용률	55.0%	56.1%	56.9%	57.2%	57.8%	56.7%	62.0%
고령자 고용률	65.8%	66.2%	67.5%	66.8%	66.9%	66.6%	70.0%

자료: 각 성과지표별 자료 출처는 앞의 표를 참조.

2. 주요 핵심성과지표의 국제비교 평가

가. 비교 방법

□ 본 절에서는 핵심성과지표 중 1) 2019년과 비교하여 이후의 최신 수치로 갱신이 가능하고, 2) 일관성 있는 비교가 가능한 지표와, 핵심성과지표와 동일하지 않으나 비교적 핵심성과지표와 유사하여 국제비교가 가능한 지표에 한하여 국제비교 분석을 하고자 함.

○ 상기 1), 2) 조건에 부합하여 국제비교 분석이 가능한 핵심성과지표는 총 13개 성과지표 중 7개 지표임.

〈표 3-13〉 핵심성과지표에 대응되는 해외지표 목록 업데이트 가능 여부

지표명	해외지표 존재여부	해외지표명	업데이트 가능 여부
신혼부부 임대주택 수혜율	×	-	-
임신유지율	×	-	-
청년 고용률	○	Employment/population ratio(OECD)	○(2020년)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율	△	Number of users/recipients per 100 live births (출생아 100명 당 남성 육아휴직자 수)	×(2016년)
국공립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	Participation rates for 0-to-2-year-olds in formal childcare and preschool 취학 전 0~2세 어린이집 이용아동비율(OECD)	× (해당자료 없음)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	○	Average annual hours actually worked per worker	○(2020년)
사교육비 부담	○	Private spending on education(OECD) (GDP 대비 사교육비 비중)	×(2014년)
노인 상대빈곤율	○	Relative income poverty(OECD), 66세 이상 상대빈곤율	○(2018년)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	○	life expectancy(OECD) - healthy life expectancy(HALE)(WHO)	○(2019년)
노인교통사망률	○	Casualties by age & load user(IRTAD, OECD) 65세 이상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2019년)
여성 고용률	○	Employment/population ratio, women(OECD)	○(2020년)
고령자고용률	○	Employment/population ratio, 55~64(OECD)	○(2020년)
고령친화산업비중	×	-	-

- 시계열 비교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2019년과 동일하게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과 노인인구비율을 토대로 비교국을 그대로 유지함.
- 비교국가는 미국, 영국, 호주, 독일, 프랑스, 일본, 스웨덴, 스페인, 이탈리아, 터키이며 해당 국가의 합계출산율 및 노인인구비율은 다음과 같음.

〈표 3-14〉 국제비교를 위한 합계출산율 및 노인인구비율에 따른 국가군

(단위: %)

합계출산율(2019)			노인인구비율(2020)		
낮음	한국	0.92	고령화	터키	9.1
중간	스페인	1.23	고령	한국	15.6
	이탈리아	1.27		호주	16.3
	일본	1.36		미국	16.9
	독일	1.54		영국	18.7
	영국	1.63		스페인	19.6
	호주	1.66		스웨덴	20
	스웨덴	1.7		프랑스	20.4
높음	미국	1.71	초고령	독일	21.8
	프랑스	1.83		이탈리아	23.2
	터키	1.88		일본	28.9

주: 해당 국가의 합계출산율은 2019년의 수치, 노인인구비율은 2020년의 수치가 구득가능한 최신 수치임.
 자료: OECD. Fertility rates[데이터파일]. <https://data.oecd.org/pop/fertility-rates.htm>에서 2021. 10.7. 인출한 자료; OECD. Demographic References:Population age structure[데이터파일].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30130>에서 2021. 10.7.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이어지는 절에서는 국제비교가 가능한 핵심성과지표들을 활용하여 선정된 OECD 주요국들과의 국제비교를 실시하고자 함.

나. 비교 결과

- 총 13개의 핵심성과지표가 있고, 비교적 체계적이고 정확한 국제비교가 가능한 지표는 청년고용률,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율,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 사교육비 부담, 노인상대빈곤율,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 노인교통사망률, 여성고용률, 고령자고용률임.
- 이 중 본 연구에서의 업데이트가 가능한 지표는 청년 고용률,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 노인상대빈곤율,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 노인교통사망률, 여성고용률, 고령자고용률임.

〈표 3-15〉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핵심성과지표와 국제비교 가능, 업데이트 가능 지표

소영역	핵심성과지표	업데이트 국제비교지표
(중영역)청년 일자리 주거대책 강화		
청년 고용 활성화	청년 고용률	청년 고용률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강화	신혼부부 임대주택 수혜율	-
(중영역)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임신, 출산 등 사회책임시스템 구축	임신유지율	-
(중영역) 맞춤형 돌봄 확대, 교육 개혁		
맞춤형 보육	국공립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
돌봄지원체계 강화	이용아동 비율	-
교육 개혁 추진	사교육비 부담	-
(중영역)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일·가정 양립 실천 분위기 확산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율	-
남성·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일·가정 양립 실천 여건 강화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활성화		
(중영역)노후소득보장 강화		
공적연금 강화		
주택·농지연금 대폭 확산	노인상대빈곤율	노인빈곤율
퇴직·개인연금 활성화		
노후 준비 여건 확충		
(중영역)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고령자 건강생활 보장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
고령자 안전 및 권익보장	노인교통사망률	노인교통사망률
(중영역)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 확대		
여성 고용 활성화	여성고용률	여성고용률
중·고령자 근로기반 확대	고령자고용률	고령자고용률
(중영역)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고령친화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	고령친화산업 비중	-

□ 청년고용률

- 청년고용률은 만15~29세 청년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나 OECD 자료에서 산출된 청년고용률은 만15~24세를 기준으로 한 수치임(이소영 외, 2017).
- 한국의 만 15~24세 청년고용률은 2014년에서 2017년까지 25.6%에서 27.2%로 지속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0년 25.2%로 다소 감소함.
 - OECD 평균의 경우에는 2014년에서 2019년까지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0년 39.0%로 감소함.
- OECD 국제비교를 위하여 만 15-24세 청년고용률 수치를 비교한 결과, 2020년 한국의 만 15~24세 청년고용률은 OECD 평균(39.0%)과 비교 시 낮은 수준(25.2%)이며,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제외한 다른 비교 대상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임.

〈표 3-16〉 청년 고용률 국제비교

(단위: %,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출산율 (2019년)
한국(15~29세)	40.5	41.2	41.7	42.1	42.7	43.5	42.2	0.92
한국(15~24세)	25.6	26.7	26.9	27.2	26.2	26.5	25.2	0.92
미국	47.6	48.6	49.4	50.3	50.5	51.2	45.9	1.71
영국	50.5	53.5	53.4	54.0	53.7	54.1	52.3	1.63
호주	57.7	58.4	58.3	58.5	59.9	60.1	56.8	1.66
독일	46.1	45.3	45.7	46.5	47.2	48.5	48.3	1.54
프랑스	27.6	27.9	27.8	28.7	29.9	29.7	28.5	1.83
일본	40.3	40.7	42.5	42.5	46.0	47.4	46.4	1.36
스웨덴	42.6	43.7	44.3	44.8	44.5	43.8	39.4	1.70
터키	33.5	34.2	34.1	34.3	35.0	33.1	29.2	1.88
스페인	18.5	20.0	20.5	22.9	24.3	24.9	20.7	1.23
이탈리아	15.6	15.6	16.6	17.1	17.7	18.5	16.8	1.27
OECD평균 (15~24세)	40.1	40.7	41.1	41.6	42.1	42.5	39.0	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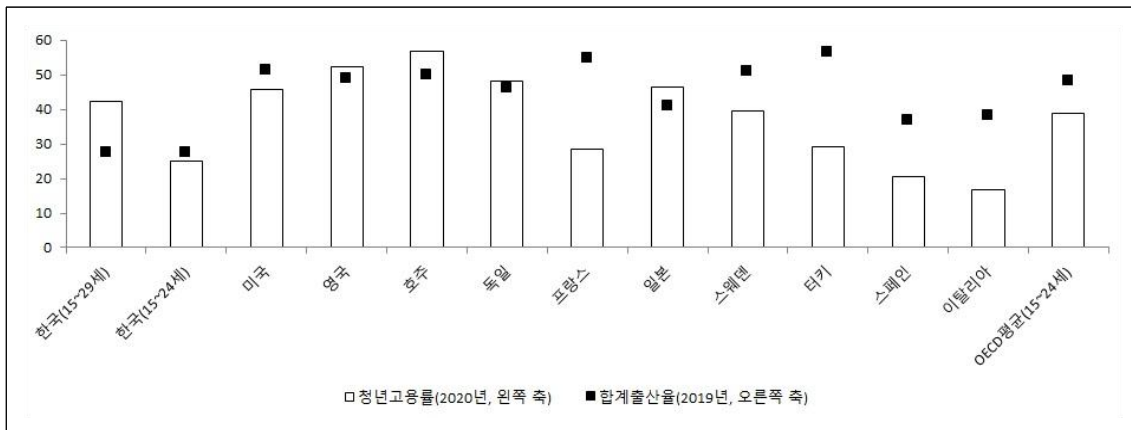
주: 1) 청년 고용률의 OECD 평균은 OECD 38개국 수치의 평균값임. 2020년 독일의 청년 고용률 48.3%는 추정치임.

2) 합계출산율(2019)의 OECD평균은 OECD 38개국의 평균값임(이하 합계출산율(2019년) 동일).

자료: 통계청(2021b).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총괄[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2S&conn_path=12에서 2021. 10.6. 인출한 자료; OECD. Employment: Employment/population ratio, by sex and age group[데이터파일].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54742#>에서 2021. 10.12.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그림 3-12] 2020년 기준 청년고용률 국제비교

(단위: %, 명)



자료: 통계청(2021b).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총괄[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2S&conn_path=12에서 2021. 10.6. 인출한 자료; OECD. Employment: Employment/population ratio, by sex and age group[데이터파일].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54742#>에서 2021. 10.12.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

○ 2020년을 기준으로 하여 국제비교한 결과, 한국의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관찰기간 내 지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OECD 비교 국가 중 최장 시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OECD 평균인 1,687시간에 비해서도 221시간 많은 수치임.

〈표 3-17〉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 국제비교

(단위: 시간,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출산율 (2019년)
한국	2,076	2,083	2,068	2,018	1,993	1,967	1,908	0.92
미국	1,782	1,783	1,778	1,778	1,782	1,777	1,767	0.92
영국	1,542	1,525	1,541	1,536	1,536	1,537	1,367	1.71
호주	1,755	1,751	1,739	1,738	1,733	1,722	1,683	1.63
독일	1,400	1,401	1,396	1,389	1,387	1,383	1,332	1.66
프랑스	1,518	1,519	1,522	1,508	1,514	1,511	1,402	1.54
일본	1,729	1,719	1,714	1,709	1,680	1,644	1,598	1.83
스웨덴	1,465	1,466	1,478	1,466	1,466	1,452	1,424	1.36
터키	자료 없음							1.70
스페인	1,691	1,694	1,702	1,692	1,699	1,688	1,577	1.88
이탈리아	1,716	1,718	1,722	1,719	1,719	1,715	1,559	1.23
OECD평균	1,764	1,764	1,763	1,756	1,753	1,743	1,687	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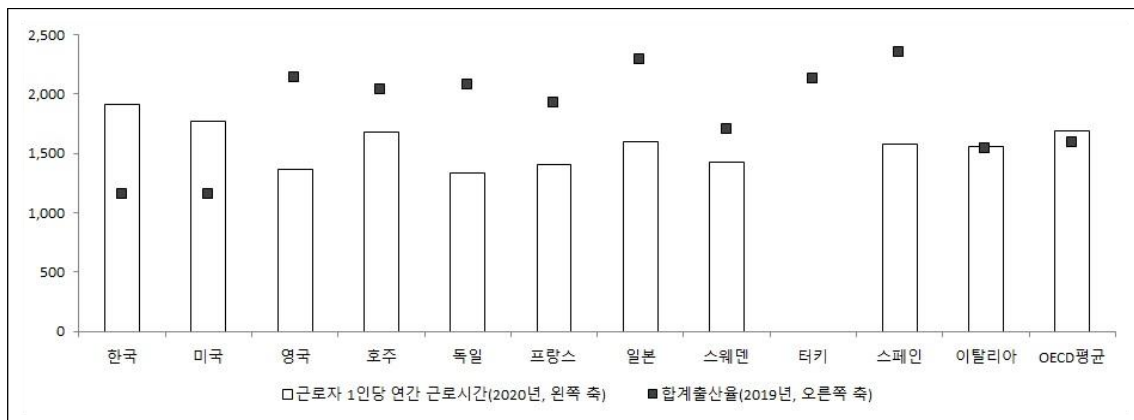
주: 1) 임금근로자(dependent)가 아닌 전체(total) 근로자 1인당 연간근로시간임.

2)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 OECD평균은 OECD 36개국의 가중평균값임.

자료: OECD. Average annual hours actually worked[데이터파일].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ANHR>에서 2021. 10.12.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13] 2020년 기준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 국제비교

(단위: 시간, 명)



자료: OECD. Average annual hours actually worked[데이터파일].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ANHR>에서 2021. 10.12.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노인상대빈곤율

○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중위소득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노인의 비율을 의미하는 노인상대빈곤율은 2015년 44.3%에서 비하여 2016년에는 45.0%으로 증가하였으나, 다시 2018년 43.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국제비교 결과, 2015년~2018년까지 한국의 노인상대빈곤율은 OECD 비교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8〉 노인상대빈곤율 국제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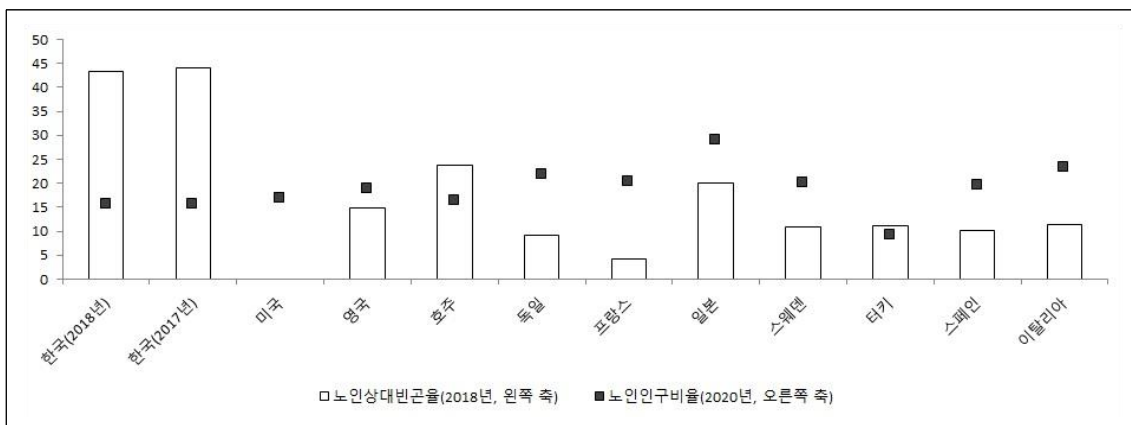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노인인구 비율 (2020)
한국	-	44.3	45.0	44.0	43.4	-	15.6
미국	21.0	20.9	22.9	23.1	-	-	16.9
영국	13.1	13.8	14.2	15.3	14.9	15.5	18.7
호주	25.7	-	23.2	-	23.7	-	16.3
독일	9.5	9.6	9.6	10.2	9.1	-	21.8
프랑스	3.3	3.1	3.4	3.6	4.1	-	20.4
일본	-	19.6	-	-	20.0	-	28.9
스웨덴	10.0	11.4	11.0	11.3	10.9	11.4	20.0
터키	18.9	17.0	-	12.2	11.1	-	9.1
스페인	5.4	5.9	9.4	10.2	10.2	-	19.6
이탈리아	9.3	10.2	10.3	9.7	11.3	-	23.2

주: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빈곤율임.

자료: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by country-POVERTY[데이터파일].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66670>에서 2021. 10.12.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14] 2018년 기준 노인상대빈곤율 국제비교

(단위: %)



자료: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by country-POVERTY[데이터파일].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66670>에서 2021. 10.12.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

○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의 경우 우리나라는 관측기간 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2019년 기준 주요 OECD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낮은 수준임.

- 우리나라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는 2010년 9.32년에서 2015년 10.07년, 2019년 10.24년으로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응 정책이 요구됨.
- 반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는 터키 10.19년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한 기간이 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3-19〉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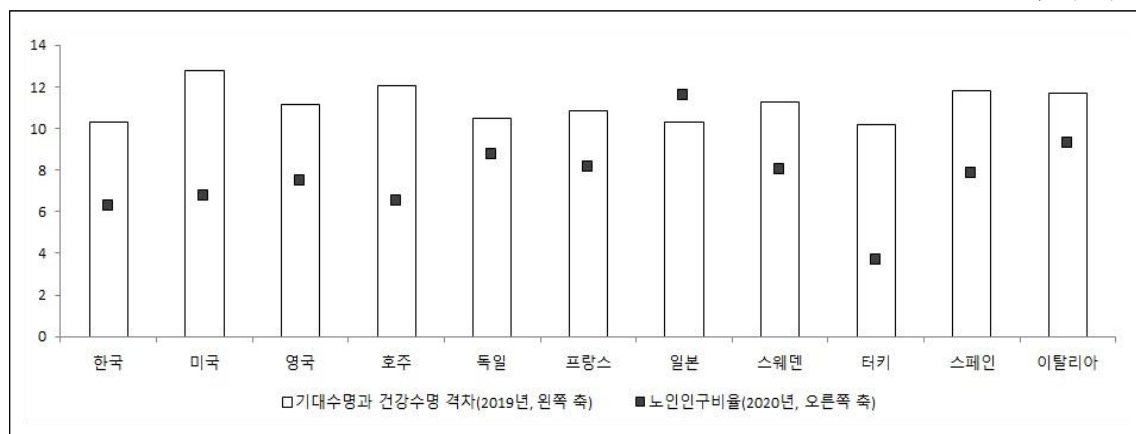
(단위: 년, %)

구분	2010년	2015년	2019년	노인인구비율 (2020)
한국	9.32	10.07	10.24	15.6
미국	11.86	12.14	12.78	16.9
영국	11.16	11.33	11.17	18.7
호주	11.63	11.94	12.07	16.3
독일	10.54	10.63	10.51	21.8
프랑스	10.64	10.7	10.82	20.4
일본	9.93	10.28	10.31	28.9
스웨덴	10.42	10.87	11.29	20.0
터키	7.35	10.28	10.19	9.1
스페인	11.37	11.34	11.81	19.6
이탈리아	10.96	11.04	11.68	23.2

자료: OECD. Health Status: Life expectancy[데이터파일].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30114>에서 2021. 10.7. 인출한 자료; WHO. Healthy life expectancy(HALE) at birth(years)[데이터파일]. <https://www.who.int/data/gho/data/indicators/indicator-details/GHO/gho-ghe-hale-healthy-life-expectancy-at-birth>에서 2021. 10.7.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15] 2019년 기준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 국제비교

(단위: 년, %)



자료: OECD. Health Status: Life expectancy[데이터파일].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30114>에서 2021. 10.7. 인출한 자료; WHO. Healthy life expectancy(HALE) at birth(years)[데이터파일]. <https://www.who.int/data/gho/data/indicators/indicator-details/GHO/gho-ghe-hale-healthy-life-expectancy-at-birth>에서 2021. 10.7.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노인교통사망률

- 노인교통사망률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의미하는데, 한국은 관찰기간 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28.91명에서 2019년 19.82명으로 약 9.09명 감소함.
- 그러나 국제비교 결과, 2019년 한국의 노인교통사망률은 OECD 비교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
- 한국의 인구 고령화 수준은 아직 다른 나라에 비하여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세계에서 가장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노인교통사고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관리와 관련된 정책이 요구됨(이소영 외, 2017).

〈표 3-20〉 노인교통사망률 국제비교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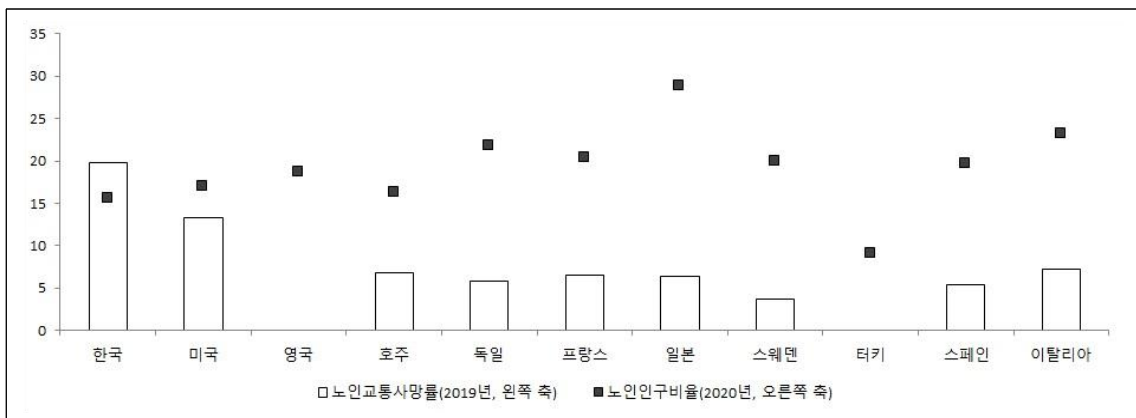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노인인구비율(2020)
한국	28.91	27.73	25.63	25.01	22.82	19.82	16.52	15.6
미국	12.41	13.09	13.91	13.51	13.31	13.34	-	16.9
영국	4.16	3.82	3.83	3.98	4.00	-	-	18.7
호주	6.97	7.54	7.24	7.99	6.24	6.79	-	16.3
독일	5.86	6.00	6.08	5.69	5.94	5.80	4.94	21.8
프랑스	6.62	6.93	7.20	6.90	6.54	6.46	4.78	20.4
일본	7.98	8.09	7.65	7.13	6.71	6.29	-	28.9
스웨덴	5.29	3.66	4.57	3.95	5.98	3.68	3.29	20.0
터키	자료 없음							9.1
스페인	5.65	5.88	5.90	5.27	5.54	5.40	-	19.6
이탈리아	8.11	8.23	7.82	8.20	7.78	7.21	-	23.2

주: 미국(2019년), 호주(2017년~2019년)의 수치는 잠정값임.

자료: OECD. By age and road user[데이터파일].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IRTAD_CASUAL_BY_AGE에서 2021. 10.12.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16] 2019년 기준 노인교통사망률 국제비교

(단위: 명, %)

자료: OECD. By age and road user[데이터파일].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IRTAD_CASUAL_BY_AGE에서 2021. 10.12.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여성고용률

○ 여성고용률은 여성 생산가능인구(만15~64세) 중 취업자 비율로서, 한국은 관찰기간인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20년에 전년 대비 1.1%p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국제비교 결과, 2020년 한국의 여성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2.3%p 정도 낮은 수준이며, 터키,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치임.

〈표 3-21〉 2020년 기준 여성고용률 국제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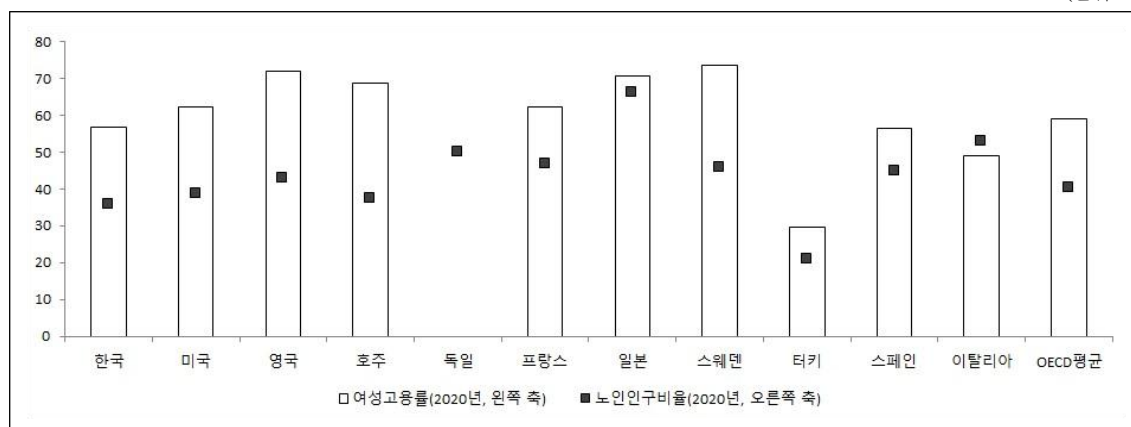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노인인구비율 (2020)
한국	55.0	55.7	56.1	56.9	57.2	57.8	56.7	15.6
미국	63.0	63.4	64.0	64.9	65.5	66.3	62.2	16.9
영국	67.4	68.5	68.9	70.1	70.5	71.6	72.0	18.7
호주	66.1	66.8	67.4	68.2	69.2	70.0	68.6	16.3
독일	69.5	69.9	70.8	71.5	72.1	72.8	-	21.8
프랑스	60.3	60.6	60.9	61.2	62.0	62.4	62.2	20.4
일본	63.6	64.6	66.1	67.4	69.6	70.9	70.6	28.9
스웨덴	73.2	74.0	74.8	75.4	75.9	75.4	73.5	20.0
터키	29.5	30.5	31.2	32.2	32.9	32.2	29.7	9.1
스페인	52.0	53.4	55.1	56.5	57.8	58.8	56.6	19.6
이탈리아	46.8	47.2	48.1	48.9	49.5	50.1	49.0	23.2
OECD평균	57.8	58.4	59.1	59.9	60.6	61.3	59.0	-

주: OECD평균은 2014~2019년 OECD 38개국 수치의 평균, 2020년은 OECD 37개국 수치의 평균임.

자료: OECD. Employment: Employment/population ratio, by sex and age group[데이터파일].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54742#>에서 2021. 10.12.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그림 3-17] 2020년 기준 여성고용률 국제비교

(단위: %)



자료: OECD. Employment: Employment/population ratio, by sex and age group[데이터파일].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54742#>에서 2021. 10.12.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 고령자고용률

○ 고령자고용률은 전체 고령자(55~64세) 가운데 취업 상태에 있는 고령자 비율을 의미하는데, 한국의 고령자고용률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가 2020년 66.6%로 감소하였음.

○ 국제비교 결과, 2020년 한국의 고령자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약 6.2%p 정도 높은 수준이며, OECD 비교 국가 중 스웨덴,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수준임.

〈표 3-22〉 고령자고용률 국제비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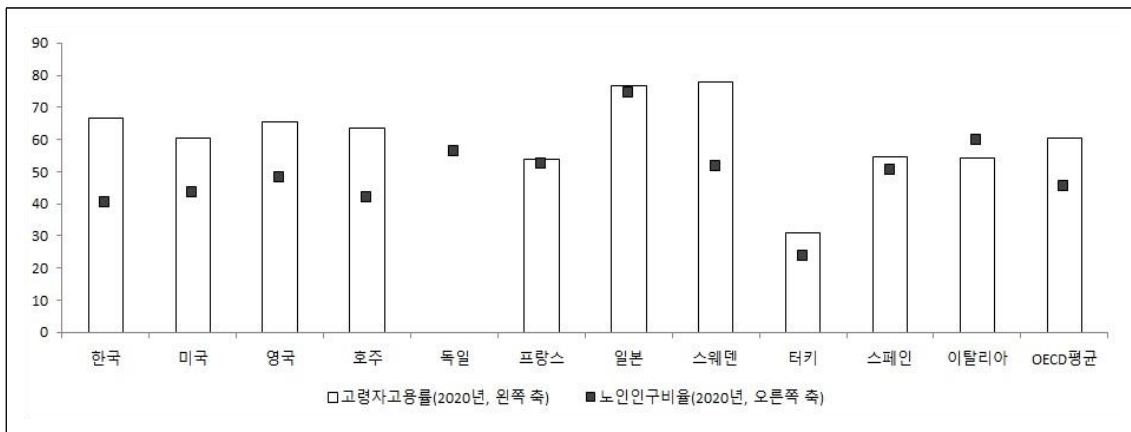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노인인구비율 (2020)
한국	65.8	66.0	66.2	67.5	66.8	66.9	66.6	15.6
미국	61.3	61.5	61.8	62.5	63.1	63.7	60.3	16.9
영국	60.6	61.9	62.8	63.6	65.1	66.2	65.3	18.7
호주	61.4	62.1	62.5	63.6	63.8	64.5	63.6	16.3
독일	65.6	66.2	68.6	70.1	71.4	72.7	-	21.8
프랑스	46.9	48.7	49.8	51.3	52.2	53.0	53.8	20.4
일본	68.7	70.0	71.4	73.3	75.2	76.3	76.7	28.9
스웨덴	74.2	74.6	75.6	76.6	78.1	77.9	77.8	20.0
터키	31.4	31.9	33.4	34.4	35.3	33.6	31.1	9.1
스페인	44.3	46.9	49.1	50.5	52.2	53.8	54.7	19.6
이탈리아	46.2	48.2	50.3	52.2	53.7	54.3	54.2	23.2
OECD평균	57.3	58.2	59.2	60.4	61.3	62.0	60.4	-

주: OECD평균은 2014~2019년 OECE 38개국 수치의 평균, 2020년은 OECD 37개국 수치의 평균임.

자료: OECD. Employment: Employment/population ratio, by sex and age group[데이터파일].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54742#>에서 2021. 10.12.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그림 3-18] 2020년 기준 고령자고용률 국제비교

(단위: %)



자료: OECD. Employment: Employment/population ratio, by sex and age group[데이터파일].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54742#>에서 2021. 10.12.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제3절 핵심성과지표 개선 방향

□ 논의의 배경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분야 정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핵심적으로 추적,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13개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함.
- 다만, 이러한 핵심성과지표가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 관리할 만한 효용성이 있는지, 또한 핵심적으로 추적할 만한 가치와 대표성을 띠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적지 않았음.
- 이에, 핵심성과지표 개선(안)이 2018년 연구 사례(김은정, 이상림, 강은나, 김대중, 김종훈, 박종서, ...이지혜, 2018)에서 제안된 바 있음.

〈표 3-23〉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성과지표, 핵심성과지표 개선(안)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성과지표		기본계획 핵심성과지표 개선(안)	
성과지표	출처	성과지표	출처
신혼부부 임대주택 수혜율	국토부 행정통계	실질 청년 취업률	통계청 신규 개발 필요 (구직 포기/유보자 포함)
임신유지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혼인 이행률	통계청 신규 개발 필요 (혼인건수/미혼자 인구)
청년고용률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국토부 주거실태 조사 개선 (혼인연도 항목 추가)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율	고용부 고용보험D/B	청년 비정규직 비율	고용부 고용통계
국공립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복지부 보육정책 D/B	합계 출산율	통계청 출산 통계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	OECD 통계	출산 기타 지표	통계청 신규 개발 필요 (유배우 출산율, 조정합계출산율)
사교육비 부담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결과	보육수준 만족도	보육실태 조사 항목
노인 상대빈곤율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연령별/혼인상태별 고용률	통계청「경제활동 인구조사」 (가구 정보 항목 추가 필요)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	통계청 생명표 및 WHO 건강수명	유자녀 부모 고용률	통계청「경제활동 인구조사」 (가구 정보 항목 추가 필요)
노인교통사망률	경찰청 내부자료	노인 사고사율	통계청 사망 원인 통계
여성고용률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노인 자살율	통계청 사망 원인 통계
-	-	일반 만족도	복지부 저출산 고령화 국민의식 조사

자료: 대한민국정부(2015). 2016~202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p.44.; 김은정, 이상림, 강은나, 김대중, 김종훈, 박종서, ...이지혜. (2018).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7년 모니터링, p.144.

- 또한 2021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핵심성과지표가 존재하지 않아 정책의 목표와 성과 측면에서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할 요인 부재 측면에서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음.
- 이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핵심성과지표 개선(안)을 참고하여 제4차 기본계획에서 관리될 필요성이 있는 핵심성과지표를 개발하는 것은 향후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음.
- 본 절에서는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4차 기본계획에서 지속, 추적할 필요가 있는 핵심성과지표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 조사를 수행함.

□ 전문가 조사²⁴⁾ 및 내부 연구진 논의 결과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각 분야별 전문가 조사 및 내부 연구진 논의 결과, 향후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표와 관련된 개선 방향들이 제시되었으며, 다음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표 3-24〉 제시된 대체 핵심성과지표 내용 및 관련 근거(사유)

대체 핵심성과지표 내용	근거(사유)
수정된 노인빈곤율	현재의 노인상대빈곤율은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위소득 30%(생계비 수준)으로 현실에 보다 부합하는 빈곤선을 적용하여 개선하는 방향
성별&연령대별 상대빈곤율	노인의 상대빈곤율, 청년 비정규직 비율, 실질 취업률, 주거비 부담을 통합할 수 있는 성별&연령대별 상대빈곤율의 관리, 측정(다만, 기존의 지표에서는 소득에 비해 자산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한국에서도 모든 세대에서 소득보다 자산 가치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산출 필요)
지역 불균형 관련 지표 (인구소멸지수, 고령화율), 고용, 결혼, 출산, 의료, 고용, 주거, 돌봄, 교육, 지방재정 등 주요 영역별 대표지표)	기존에는 개인을 단위로 해서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만 있었고, 사회구조 및 지역(사회) 차원에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없었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인구변화에 대응한 사회 혁신, 적응을 목표 및 추진전략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이를 시·도, 시·군·구별로 비교해서 개선/유지/악화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 도입 필요
성, 교육수준, 소득분위별 임금격차, 유자녀 부모 고용률	고용관련 지표 중 양극화 정책을 평가할 필요
청년 주거비 부담 관련 지표, 가족 주거비 부담 수준, 노인 주거비 부담	혼인, 출산 관련 가장 큰 저해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주거 관련 요인을 심도 있게 고려할 필요
출산의향 자녀 수, 계획자녀 수와 합계출산율 간 간극(gap)	저출산 관련 성과 평가의 핵심 지표로서의 출산율 개선 수준 측정 필요
노동시장의 성 평등 관련(고용률, 임금 수준 격차, 남녀 노동시간, 돌봄시간 격차) 지표 검토	성차별구조, 경력을 추구하는 생애 주기와 가족생활의 양립이 어려운 삶의 조건 개선 수준 측정 필요

24) 조사 대상 전문가는 4장의 “저출산/고령사회 등 분야별 예산 규모, 저출산 정책 예산의 분류 기준, OECD 저출산 정책 예산 분류 기준 준용시 범주별 예산 규모 관련 의견 조사” 전문가와 동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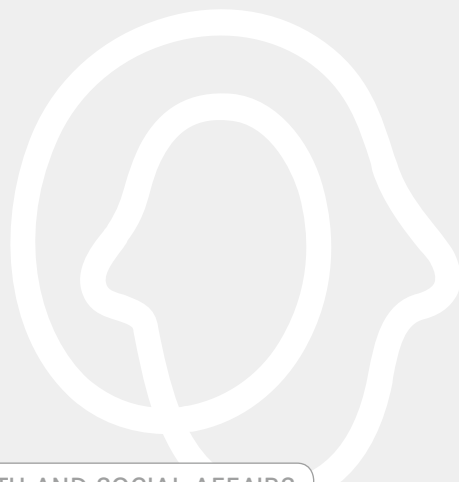
대체 핵심성과지표 내용	근거(사유)
유자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 전체 근로자 대비 유급육아휴직자 비율, 임금 대비 육아휴직급여 비율	보다 구체적인 육아휴직 관련 실태를 파악할 필요
세부 범주별 합계출산율(소득수준별 합계출산율, 교육수준별 합계출산율, 자산 수준별 합계출산율 등)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정책 타 게팅(targeting) 집단 설정 필요
혼인/출산 관련 집계 수준 지표의 세분화(연령별 혼인 이행률,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 자녀 수별 유배우 출산율)	
혼인 이후 출산까지의 평균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보육비 부담(=보육비/소득)'	
유배우출산율, 혼인이행률, 조정합계출산율, 코호트완결출산율, 이상자녀수 등의 보조지표의 활용, 성별&연령대별(가능한 경우 혼인상태 추가) 고용률	
노인가구의 경제적 지표, 주거환경 및 건강에 대한 지표를 추가적으로 활용(중장년층의 고용정보(고용형태: 자영업, 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 정규직, 비정규직)를 연령대별(55세부터 5세 단위), 노인 인구의 주택 점유형태, 유형뿐만 아니라 가구구성현황(자녀와의 동거여부, 인접해서 거주하는지 등))	
고령자 건강관련 지표(본인부담 의료비, 장기요양인정자 비율 등)	보다 구체적으로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 설정 도 모 필요
경력단절 여성취업률	
아동과 함께 하는 여가시간(부모의 10세 미만 자녀와 함께 보내는 여가시간)(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공공보육(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이용률, 중고등학생 연간 성교육 경험률, 건강한 출산 비율(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고졸 채용률, 한부모가족의 사회적 인식 및 차별 개선 필요도(가장 필요한 정책지원 1순위 중 사회적 인식 및 차별 개선을 응답한 비율):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다문화가족 자녀의 차별 경험률(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 조사 결과를 취합 정리하여 작성함.

○ <표 3-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향후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다음
의 사항을 참고하여 핵심성과지표를 관리, 추적할 필요가 있음.

- 보다 구체적으로, 빈곤선을 조정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노인빈곤율을 산정할 필요성, 노
인빈곤율뿐 아니라 성별, 연령대별 여러 계층의 빈곤율을 산정할 필요성, 지역 인구 변화
에 따른 불균형 양상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고용 양극화 특성을 반영 및 추적할 수 있는
지표, 저출산, 고령사회의 주요 원인이자, 인구 고령화 양상에 대한 당면 정책 방향으로
이해되고 있는 주거 관련 요인을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 저출산 대응 정책 성과 평
가 지표를 보다 심도 있게 측정, 추적할 필요, 성 평등/일, 가정 양립 관련 성과 측정 지표
의 필요성, 보다 구체적인 육아휴직 관련 실태를 파악할 필요성,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정책 타게팅(targeting) 집단 설정 필요성(이는, 정책의 성과
평가를 보다 정교하게 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 설정 도모 필요성에 따라 기존 핵심성과지표를 수정, 보완
하거나 새로운 지표를 산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함.

○ 상기 전문가 조사 및 내부 연구진 논의 결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후 활용할 수 있
는 핵심성과지표가 개발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제4장

예산 분류 체계 개선 방향

제1절 서론

제2절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예산 현황

제3절 저출산 정책 예산 분류

제4절 소결: 예산분류 체계 개선 방향

제4장 예산 분류 체계 개선 방향

제1절 서론

1. 논의의 배경

- 2020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성과평가는, 제3차,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간 정책 추진의 유기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교두보의 위치를 띠고 있음.
 - 지난 2016년부터 추진되어 온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 마무리하는 동시에 2021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기본계획의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방향도 검토해 볼 필요
 - 특히, 저출산 분야와 관련하여, 투입 예산 규모 대비 정책 성과가 높지 않다는 비판적 시각이 적지 않음.
-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의 저출산고령사회 (분야별) 예산 규모 변화의 특성과 저출산/고령사회 각 분야별 예산 구분 기준에 대한 쟁점을 검토해 볼 필요
- 보다 구체적으로, 다각적으로 관측, 제시되고 있는 성과 및 현재 그리고 향후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 변화를 고려할 때 저출산고령사회 분야별 예산 규모는 어떠한 특성을 띠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또한,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대응기반 강화 정책의 범위 및 논의되고 있는 각 분야별 정책의 성과와 관련하여, 보다 명확한 성과 평가 및 각 분야별 정책 범위 설정을 위한 예산 분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특히, 각 분야와 관련성이 높지 않은 정책 포함 여부 검토 및 각 세부사업 정책이 어떠한 대상자에게 어떻게 추진(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이는 다각적으로 추진되어 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예산 투입과 구분을 바탕으로 한 정책의 실효성 측면을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당위성과 더불어, 사업의 성과와 예산을 더욱 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에 기인하고 있음.
 - 이에 본 절에서는 최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분야별 예산 현황 및 저출산 분야 예산 구분 기준 관련 논의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분류 체계 대안과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2. 전문가 조사 개관

- 조사대상: 저출산 분야 전문가 24명, 고령사회 및 대응기반 강화 분야 전문가 16명(총 40명)

〈표 4-1〉 조사 전문가 특성

(단위: 명)

전공분야		관심 연구분야	
경제학	9	인구정책	13
사회학	9	노인복지	8
사회복지학	9	고용, 노동	6
정책학, 행정학, 지역개발학	7	노후소득보장	3
인구학	2	출산, 결혼	3
기타(가족학, 노년학, 교육학)	4	기타(보육정책, 주거복지, 복지국가, 지역경제, 조세재정)	7
총합	40	총합	40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 조사 결과를 취합 정리하여 작성함.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이메일 서면 조사(자기기입식)
- 조사기간: 1차, 추가) 2021.7.29. - 2021.8.15.
- 조사내용: 저출산/고령사회 등 분야별 예산 규모, 저출산 정책 예산의 분류 기준, OECD 저출산 정책 예산 분류 기준 준용시 범주별 예산 규모 관련 의견 조사
- 기타사항: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 직,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전문가 인력풀 중 평가가 가능하다고 회신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 조사대상의 대표성 문제에서 어느 정도의 한계점이 있음.

제2절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예산 현황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분야별, 연도별 예산 규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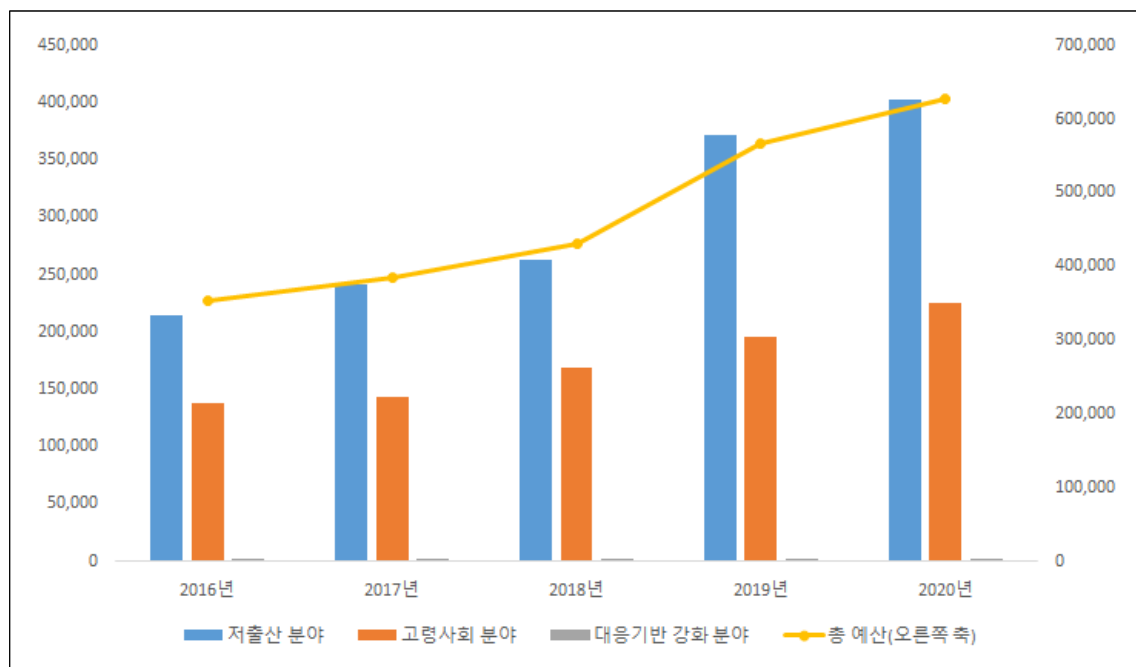
- 2016-2021년 중앙정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분야별, 연도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연도별 총 예산은 지속 증가하고 있음.
- 대체적으로 저출산 분야 예산이 고령사회 분야 예산보다 많으며, 이러한 추세는 모든 기간에서 유지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남.
- 저출산 예산은 제3차 기본계획의 기간(2016-2020년)동안 지속 증가하였다가 4차 기본계획이 시작된 2021년 약 3.5조 감소

- 2021년에는 저출산/고령사회 분야 예산 규모가 다소 감소한 반면, 대응기반 강화 분야의 예산 규모가 크게 증가

〈표 4-2〉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분야별, 연도별 예산 규모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저출산 분야	214,173 (60.8)	241,150 (62.8)	263,189 (61.0)	371,297 (65.5)	401,906 (64.12)
고령사회 분야	138,232 (39.2)	142,780 (37.2)	168,105 (39.0)	195,638 (34.5)	224,734 (35.86)
대응기반 강화 분야	112 (0.03)	108 (0.03)	99 (0.02)	108 (0.02)	115 (0.02)
총 예산	352,517 (100.0)	384,038 (100.0)	431,393 (100.0)	567,043 (100.0)	626,755 (100.0)



주: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20)=저출산 영역,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20)=고령사회 영역=대응기반 강화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7).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8년도 시행계획, p.4.; 대한민국정부. (202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 p.4.

□ 전문가 조사 주요 결과

- 최근 2016-2021년 동안 저출산 분야의 예산 규모에 대한 견해

- 예산 규모, 즉 양적 측면이 문제가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의 문제 또한 살펴볼 필요, 가령 청년, 돌봄 관련 정책과 관련하여 국가의 역할이 아직 부족하다고 여겨짐. 어떻게, 어떠한 곳에 투입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증거 기반정책이 보다 강화될 필요

- 지금까지의 출산율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저출산 정책은 예산 투입 대비 성과를 살펴보면, 사중손실(dead weight loss)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정책 성과에 대한 엄밀한 평가가 선결되어야 할 것임.
- 저출산 분야의 주요 정책은 보육 지원,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청년 주거 등의 세부 영역으로 나눌 수 있고, 현재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는 출산율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현재의 저출산 예산 규모는 크다고 단언하기 어려움.
- 전체 정부예산 규모 대비, OECD 대비 등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참조 수준이 정리될 필요, 또한 각각의 분야에서 포괄하고 있는 사업 범위를 심도 있게 재검토할 필요
- 현재의 저출산 예산 규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저출산 정책 분야 내 세부과제를 담당하는 각 부처별 과대과장된 예산 규모, 투입된 예산 대비 높지 않은 정책성과의 수준이 맞물린 결과로 이해됨. 단적으로,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작된 2006년에 비하여 2020년의 저출산 예산 규모는 약 20배 증가한 반면, 합계출산율은 크게 감소한 양상은 “예산 규모는 과다한 반면, 효과는 미미하거나 없다”는 논의를 직접적으로 지지하고 있음.
- 저출산 추세가 불과 3-4년전 예측한 것에 비해서도 훨씬 심각한 상황을 보이고 있는 특징은 예측에 기반한 정책적 대응의 실효성이 크게 낮은 수준을 방증하는 동시에, 낮은 예산 규모 수준을 지지하고 있다고 할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저출산 예산 구조는 OECD에서 구분하고 있는 가족 지출 이외에도 주거, 고용 정책 관련 예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특징(출산과 직,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 정책 분야를 모두 망라하고 있는 특징)을 띠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의 근본적인 배경은 친출산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직/간접적인 관련 정책 사업이 저출산 영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특징을 띠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음.
- 저출산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관점을 견지하여, 저출산 예산 투입의 실효성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할 시점임. 즉, 지금까지의 투입된 예산 규모 대비 정책의 실효성이 높지 않음을 인식하여, 예산 투입 규모를 증대하여 더욱 적극적인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 방향의 수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 저출산 분야에 국한되는 논의는 아니지만, 대체로 직접 지원은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되어 있는 대상의 행동 변화를 유인하기 위한 정책이고, 간접 지원은 저출산, 고령화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이들을 보다 포괄적으로 정책 대상으로 추진하는 정책 성격을 띠고 있다고 판단됨. 또한, 예산 투입 대비 예상(기대)되는 정책 결과(효과)에 대한 논의가 복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예산 규모에 대한 평가 이전, 이러한 특성에 대한 논의가 선결될 필요

○ 최근 2016-2021년 동안 고령사회 분야의 예산 규모에 대한 견해

- 유례없는 속도로 급격한 인구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노인 빈곤율, 고령층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 정책의 미흡 등 고령화 대응 정책의 양적, 질적 수준은 더욱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예산 규모도 더욱 증대될 필요, 구체적으로 인구 고령화의 급격한 속도와 노인 빈곤, 노인 자살률 등의 사회 문제를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 저출산 문제뿐 아니라 인구 고령화 문제 역시 심각한 사회적 당면 과제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사회 분야 예산은 저출산 분야 예산 규모보다 크게 낮은 수준임. 현재 고령사회 분야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후소득보장 대응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으며, 노후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노인 교육, 고용, 주거 등 저출산 분야와 유사하게 보다 광의의 범주에서의 다양한 정책 사업이 추진될 필요
- 베이비부머 세대의 향후 고령층 진입을 상기하면, 고령사회 분야 예산 규모는 더욱 증가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또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고령사회 분야에 국한되는 논의는 아니지만, 각 세부사업의 성과에 대한 보다 엄밀한 검증, 평가를 통해 정당성이 담보된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최근 2016-2021년 동안 대응기반 강화(성장동력) 분야의 예산 규모에 대한 견해

- 최근의 대응기반 강화(성장동력) 분야의 예산 규모 증가는 기존 저출산 분야 예산을 분야만 변경(trade-off)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향후, 전반적인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 강화에 대한 중요성을 상기할 때, 대응기반 강화 분야의 예산 규모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됨.
- 출산과 양육이 더욱 수월하고, 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는 측면에서의 사회적 여건 조성을 위한 대응기반 강화 분야의 예산 규모가 더욱 증가할 필요가 있음.
- 저출산, 고령화가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 모든 구성원이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상기할 때, 대응기반 강화 분야의 예산 규모 증대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저출산, 인구 고령화 흐름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할 필요성을 상기하면, 이러한 필요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대응기반 강화 예산 규모를 더 증가시킬 필요
- 저출산, 고령사회 분야 내 실효성이 낮은 사업 예산을 조정해서 대응기반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경험적으로 지금까지의 저출산 현상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책의 실효성이 높지 않았음을 상기하면, 향후 정책의 방향은 이러한 저출산 현상으로부터 유발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대응기반 강화 정책 예산 규모의 증가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해됨.

- 최근 2016-2021년 동안 저출산/고령사회/대응기반 강화(성장동력) 분야의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모든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예산 규모가 “작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저출산 17명(42.5%), 고령사회 22명(55.0%), 대응기반 강화 16명(40.0%). 특히, 이러한 경향은 고령사회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남.

〈표 4-3〉 각 분야별 예산 규모에 대한 조사대상 전문가 견해의 분포

(단위: 명, %)

구분	매우 작다	작다	보통이다	크다	매우 크다
저출산	6 (15.0)	17 (42.5)	7 (17.5)	8 (20.0)	2 (5.0)
고령사회	2 (5.0)	22 (55.0)	13 (32.5)	3 (7.5)	0 (0.0)
대응기반 강화	5 (12.5)	16 (40.0)	16 (40.0)	3 (7.5)	0 (0.0)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 조사 결과를 취합 정리하여 작성함.

제3절 저출산 정책 예산 분류

1. 저출산 정책 예산의 분류 기준

- 저출산 정책 예산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출산 분야 정책의 다양성과 모호한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성과 평가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음. 이는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임.
- 이때 OECD 가족지출로 표현되는 직접지원은 가족·아동에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현금·서비스·세제지원으로 구성되며, 주거, 고용, 교육분야 예산은 간접지원으로 분류됨(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1. 3. 30.).
- 상기 기준으로 바탕으로 앞서 살펴본 2021년 저출산 분야의 예산 규모를 OECD 분류에 의하여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가족지출(직접지원) 예산이 약 17.9조원이며 그 외 주거·고용·교육 등 간접지원이 약 28.7조원으로 6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4〉 2021년 기준 OECD 분류별 중앙부처 저출산 분야 세부 예산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2021년 예산	비율
현금	직접지원	179,399	24.7
		61,791	8.5
	육아휴직급여(기존+신규)	12,869	1.8
	출산휴가급여(기존+신규)	3,169	0.4

구분		2021년 예산	비율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지원), 첫만남꾸러미2	15,518	2.1
	...		
서비스		114,570	15.8
	아이돌봄 지원	3,956	0.5
	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 지원(공보육 50% 확충)	1,523	0.2
	...		
의료비		3,038	0.4
	임산부, 영아 건강관리	2,205	0.3
	...		
간접지원		287,446	39.5
고용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저축계좌	14,355	2.0
주거			
	신혼부부, 아동 양육가구 주거 지원	80,069	11.0
	...		
교육		6,496	0.9
	교육급여	1,246	0.2
	...		
기타		8,919	1.2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3. 3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약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eDetail.do?articleId=127&listLen=10&searchKeyword=&position=M>에서 2021. 9. 30. 인출, p.7.

□ 전문가 조사 주요 결과

○ 상기 기준을 적용한 분류 체계와 저출산 분야 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견해

- 직접지원 내 현금, 서비스 구분은 (보편적인) 지원 방식 관련 구분인 반면, 간접지원 내 고용, 주거, 교육 등은 정책 영역 구분이므로, 두 영역 내 구분 기준은 성격 등이 상이함. 이에 구분 기준과 구분 범주의 성격이 우선적으로 일관성 있게 구성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1차적으로는 정책 사업 범주별로 구분하고 2차적으로 현금/현물/서비스 등 지원 방식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직접/간접 지원 구분의 기준이 모호한 특성이 있는데, 수요 측면 이용자 지원은 모두 직접 지원으로, 인프라 및 공급 측면 지원은 간접 지원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유사한 맥락에서, 출산, 양육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대상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현금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직접지원으로, 출산과 양육의 직접 대상자는 아니지만(잠재적 대상자 포함)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서비스 및 여건 조성의 경우 간접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음. 중요한 쟁점은 이러한 간접지원과 관련하여, 이를 어느 정도 범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임.

- 직접/간접 예산, 현금/서비스 등의 구분은 정책 공급자(정부 부처)의 편의가 고려된 시각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관련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수급자의 생애 주기별 필요(수요자 관점)에서의 예산 분류 체계 구축이 필요함. 수혜자의 범주, 즉 개인, 가족, 기관별로 지원 방식(현금, 서비스, 제도 등)의 구분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저출산 예산 구성(OECD에서 구분하고 있는 가족 지출 이외에도 주거, 고용 정책 관련 예산이 모두 포함(출산과 직,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 정책 분야를 모두 망라)되어 있는 특성) 무분별한 OECD 구분 기준을 준용하는 것은 예산집행, 제도 추진 체감도 및 공감대가 더욱 낮아질 개연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요구됨.
-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저축계좌”, “교육급여 부문”은 각각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으로 고용증대 및 임금격차 감소, 저소득 계층 지원을 목표로 하는 정책으로서 저출산 영역에 포함되는 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저출산 원인, 결과 분석 및 성과 평가를 보다 심도 있게 수행하여 예산계획과 배분이 이루어질 필요, 김은정, 오신휘, 장인수, 정종석, 전주열(2020)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목표 달성과 관련된 예산 집행에 대한 영향 분석 및 정책 평가 등의 환류 과정을 통한 증거 기반 자료 구축 과정”이 중요함. “이는 향후 예산 수립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환류 과정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유사한 맥락에서 직접/간접 지원 구분이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할 때 더욱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 영역에 얼마나 사용되었고, 어떠한 방식으로 평가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체계와 도식 구축이 선결될 필요가 있음.
- 직접, 간접 지원 구분과 무관하게, 저출산과 관련된 국가 또는 사회 전체의 정서 및 가치가 가지는 효과가 존재하며, 이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조명되어야 할 국가 전체의 거시정책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지표가 개발, 적용될 필요

○ 저출산 분야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OECD 분류에 의한 직/간접지원 기준 예산 구분에 대한 조사대상 전문가 의견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14명(35.0%)으로 가장 많았고, “적절하다”는 의견이 12명(30.0%)인 것으로 나타남.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를 합친 적절하다는 의견은 18명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적절하다는 의견을 합친 적절하다는 의견(15명)에 비하여 많은 것으로 나타남. 요컨대, 전문가 견해는 일관되지 않고, 양분된 특징을 띠고 있음.

〈표 4-5〉 저출산 분야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OECD 분류에 의한 직/간접지원 기준 예산 구분에 대한 조사대상 전문가 견해의 분포

(단위: 명, %)

매우 부적절하다	부적절하다	보통이다	적절하다	매우 적절하다
1 (2.5)	14 (35.0)	7 (17.5)	12 (30.0%)	6 (15.0)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 조사 결과를 취합 정리하여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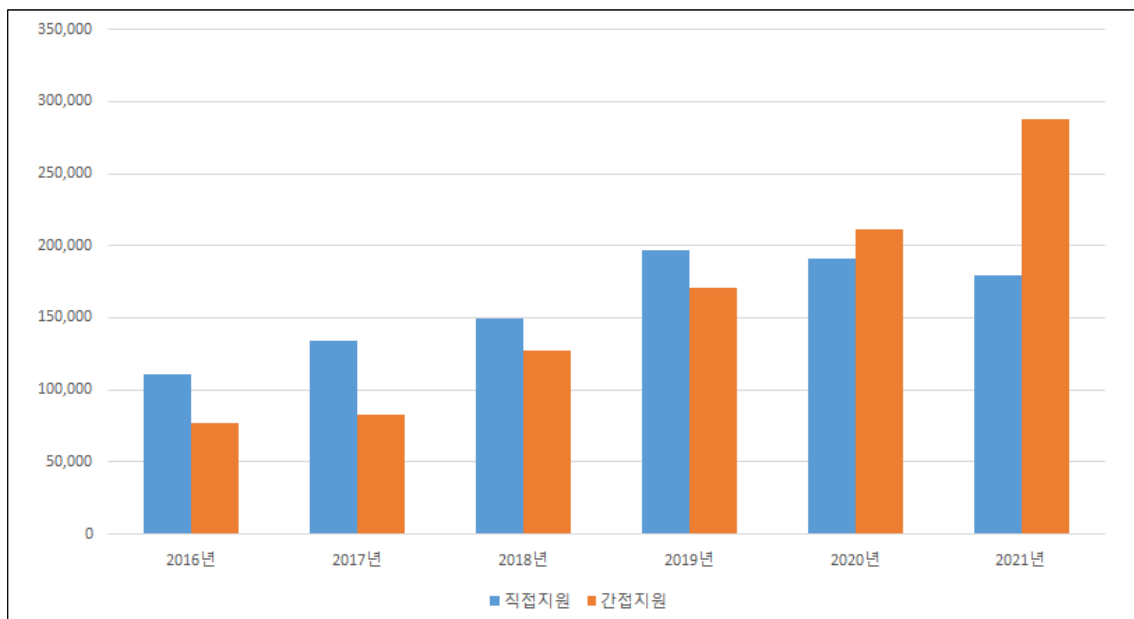
2. OECD 저출산 정책 예산 분류 기준 준용시 범주별 예산 규모

- OECD 분류 기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3. 30.)에 따라 2016-2021년 기간의 저출산 정책 예산을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직접지원 예산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 증가하였다가 2020년부터 감소한 특성을 띠고 있음.
- 간접지원 예산은 관측기간 동안 지속 증가하였으며, 제4차 기본계획이 시작된 2021년 크게 증가한 특성이 나타나고 있음.
- 2016-2019년의 기간 동안 직접지원 예산이 간접지원 예산에 비하여 컸지만, 2020년부터는 간접지원 예산이 직접지원 예산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4-6〉 저출산 분야의 직/간접 지원별 예산현황

(단위: 억 원, 비율)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직접지원	110,986 (59.23)	133,640 (61.8)	149,851 (54.03)	197,092 (53.52)	190,591 (47.43)	179,399 (38.4)
간접지원	76,410.5 (40.77)	82,594 (38.2)	127,495 (45.97)	171,159 (46.48)	211,213 (52.57)	287,446 (61.6)



자료: 이소영, 강은나, 백혜연, 변수정, 장인수(2017). 2016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이소영, 백혜연, 변수정, 장인수(2018). 2017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박종서, 이소영, 황남희, 장인수(2019). 2018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이석원, 손호성, 신재은, 김덕수, 박경량, 김난유, 고승범(2020). 2019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대한민국정부(202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1. 3. 3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약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eDetail.do?articleId=127&listLen=10&searchKeyword=&position=M>에서 2021. 9. 30. 인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전문가 조사 주요 결과

○ 직접/간접지원 예산의 규모 변화와 정책의 실효성 제고, 향후 추진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분야별 예산 규모 변화 필요성

- 간접지원 예산의 경우 직접지원 예산과 비교하여 볼 때, 구성 상 예산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두 범주 간 명목적인 예산 규모 비교보다는 수혜자 규모 혹은 전체 정책대상자 대비 수혜자 비율을 고려하여 비교할 필요
- 주거 지원 중심의 간접지원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주택건축비, 주택관련 대출금 등에 기인하고 있음. 이것이 실질적인 저출산 예산 지출이라고 단언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 부담분을 별도로 고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 유사한 맥락에서 간접 지원 중 주거 관련 예산의 비중이 크게 높은 특징이 있는데, 여러 선행연구 사례에서 경험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불안정한 주거 여건이 저출산 양상과 연관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지만, 이렇듯 저출산 예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준으로의 구성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하여 엄밀하고 정교하게 검증할 필요, 유사한 맥락에서, 주거 지원은 출산 장려가 주된 목적이라도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혜자 비율과 지원 규모 등의 복합적인 검토를 통해 청년, 신혼부부 등 지원대상의 수혜 욕구 충족도를 고려하여 이를 기준으로 확대, 축소하는 방향을 생각해 볼 필요
- 직/간접 예산 규모 증가와 정책의 실효성 간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저출산 원인에 대한 규명이 선결될 필요
- 직접 지원 예산 규모가 감소한 여러 원인 중 하나로, 크게 감소한 출생아 수 수준을 들 수 있음. 저출산 현상은 장기적인 인구 변동이자, 인구 고령화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서, 직/간접 예산이 선택과 집중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향후 저출산 정책에서는 결혼 및 출산 의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젊은 층에게 지원할 수 있는 간접지원 대상과 내용 확대(신혼부부 주거 지원 등), 결혼하여 출산한 일하는 여성들이 추가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 확대, 일 가정 양립 정책의 확대 등의 정책이 확대되고, 이와 관련된 예산 수준이 증대될 필요
- 직접지원이 각 유자녀 가구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획기적으로 확대될 필요. 현금과 서비스 지원의 수준과 양이 절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현재의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 방향으로 판단됨.
- 저출산 대응 정책의 출산율 제고 목표를 상기하면, 가족지원 확대, 사회구조적 문제 완화 측면에서의 정책 대응과 이에 따른 예산 변화가 바람직함. 구체적으로, “임신 및 출산” 예산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중요, 또한 지속적으로 높은 출산 수준을 유지하는 OECD 국가(예를 들어, 프랑스, 스웨덴 등의 유럽 국가)의 아동 가족수당, 육아휴직수당

규모가 큰 특징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역시 이를 점진적으로 확충할 필요, 또한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보육, 양육 관련 예산의 확충은 정책 확대와 더불어 국민 체감도,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음.

- 저출산 분야와 관련하여, 저출산 대응을 위한 보다 직접적인 정책이 포함될 필요. 가령,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안정장려금, 근로환경개선, 인재양성 및 훈련지원, 청년 구직활동 및 창업지원 등은 출산 지원과 무관하게 수혜하는, 소위 출산 무관 정책으로 이해됨. 따라서, 저출산 대응과의 관련성을 먼저 엄밀하고 정교하게 파악하는 작업이 선결될 필요
- 지역의 저출산 정책과 관련하여, 이들 정책의 대부분이 출산 전후의 현금지원 정책이므로, 국가/지방 간 역할 분담 체계 구축과 관련된 보다 실질적 정책 방향이 필요
-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요약하면, 직접지원 예산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논의는 주로 출산 수준의 증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출산양육과 관련된 대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논거에 기인하고 있으며, 간접지원 예산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논의는 개인이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가 주로 교육, 주거, 고용 등 사회구조적 인프라 문제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의 정책 방향을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거에 기인하고 있음.
- 또한, 예산 규모의 변화는 직접/간접 지원의 효과성을 철저하게 평가하고, 이러한 과정으로부터 도출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함. 예산 규모의 증가/감소가 인구 변동에 의한 것인지, 정책 효과인지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필요함. 단적으로 2015년 이후 출생아 수가 크게 급감하는 양상에 따라 직접 지원 규모가 감소하였을 개연성을 생각해 보면, 직접 예산 규모 변화가 정책 방향인지, 상기 출생아 수 감소와 같은 인구 변동에 기인하고 있는지 엄밀하게 구분하는 분석이 필요

○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의 각 분류된 예산 규모 변화에 대한 조사대상 전문가 응답은 직접지원 예산의 경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비하여 약간 많은 특징이 나타났으며, 간접지원 예산은 예산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4-7〉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의 각 분류된 예산 규모 변화(증가)에 대한 조사대상 전문가 견해의 분포

(단위: 명, %)

구분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보통이다	바람직하다	매우 바람직하다
직접지원 예산	4 (10.0)	15 (37.5)	8 (20.0)	12 (30.0)	1 (2.5)
간접지원 예산	4 (10.0)	8 (20.0)	8 (20.0)	18 (45.0)	2 (5.0)

자료: 본 연구의 전문가 조사 결과를 취합 정리하여 작성함.

제4절 소결: 예산 분류 체계 개선 방향

□ 관련 쟁점과 예산 분류 체계 개선안

- 지금까지의 논의를 살펴볼 때, 예산 분류와 관련된 쟁점은 예산 분류 기준이 다소 일관적이지 못하고 모호한 특성, 이러한 모호한 기준에 의하여 일부 예산 분류 결과가 타당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특성, OECD의 가족지출(family expenditure) 범위를 넘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관련 예산 구조에 따른 직접지원, 간접지원 구분과 관련된 사항으로 요약할 수 있음.
- 보다 구체적으로, 상기 쟁점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면 다음과 같음. 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 주거, 고용 등의 일반적인 정책 영역 구분과 현금, 서비스 등의 정책 지원 방식 구분이 혼재되어 예산 분류 항목의 특성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바로 그러한 점임. 또한, 우리나라의 저출산 관련 예산은 OECD의 가족지출에서 다루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Social Expenditure database) 내 주거(housing), 실업(unemployment), 보건(health), 적극적 노동시장프로그램(AML: Active Labour Market Programmes) 등의 영역 예산을 망라하고 있어 직접/간접 지원과 같이 정책 수혜자(대상자) 특성을 바탕으로 한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임. 고령사회 분야 예산은 SOCX의 “노인”, “보건”, “주거”, “기타 사회정책” 예산 범주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표 4-8〉 OECD 사회정책 분야 지원유형별 공공, 민간 의무 프로그램 분류

노인	가족
현금 급여 연금 조기퇴직연금 기타 현금 급여 현물 급여 거주 돌봄/재가 서비스 기타 현금 급여	현금 급여 가족수당(양육수당) 출산 및 육아휴직 기타 현금 급여 현물 급여 조기 아동 교육 및 보육(ECEC) 재가 서비스 등
유족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현금 급여 연금 기타 현금 급여 현물 급여 장례비용 기타 현금 급여	공공 고용 서비스(Public Employment Services:PES) 관리 직업훈련 고용 인센티브 보호, 지원 고용 및 자활 창업 지원 스타트업 인센티브
무능력 관련 급여	실업
현금 급여 장애연금 산재연금 산재유급휴가 기타 유급휴가	현금 급여 실업수당/퇴직금 해고(조기퇴직) 관련 급여 현물 급여

기타 현금 급여	주거
현물 급여 거주 돌봄/재가 서비스 재활 서비스 기타 현물 급여	현물 급여 주거 지원 기타 현물 급여.
보건	기타 사회정책
현물 급여	현금 급여 소득 유지(소득 보전) 기타 현금 급여 현물 급여 사회 부조 기타 현물 급여

자료: OECD(2019). The OECD SOCX Manual 2019 Edition. A guide to the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https://www.oecd.org/social/soc/SOCX_Manuel_2019.pdf, p. 16에서 2021.10.1.에 인출한 자료를 번역하여 제시함.

○ 이러한 쟁점을 고려할 때, 특히 각 분야별 예산 분류는 예산 분류 기준을 단계별로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 구분해 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저출산 분야) 첫 번째 단계로 1) OECD SOCX에서 제시되고 있는 정책 영역 구분을 준용하여,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실업, 주거 영역으로 구분함. 2)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내 “1.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의 중영역 구분을 준용하면, 근로환경(여건)(1.모두가 누리는 워라벨, 2.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보육/돌봄(3.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4.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 출산/양육/보건(5. 생애 전반 성·재생산권 보장)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이후 두 번째 단계로, 첫 번째 단계에서 구분한 각각의 세부 영역별 현금(현물 포함), 서비스와 같은 지원방식으로 추가 구분함. 이때, 현금, 서비스로 분류된 세부사업들은 직접 지원 사업이 되고, 분류되지 않은 나머지 세부사업들은 간접 지원 사업이 됨.
- (고령사회 분야) 저출산 분야와 마찬가지로 1) OECD SOCX에서 제시되고 있는 정책 영역 구분을 준용하여, 노인, 보건, 주거, 기타 사회정책 영역으로 구분함. 2)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내 “2.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의 중영역 구분을 준용하면, 소득보장(1. 소득공백 없는 노후생활보장체계), 보건(2.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돌봄(3.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주거(4.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기타 사회정책(5.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특히,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은 이전의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20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과 비교하여 볼 때, “3.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분야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저출산, 고령사회 분야와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회경제적 인프라 조성 사업으로 이해됨. 이 역시도 정책 영역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청소년(1.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 노인(2.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청년(3. 청년기 삶의 기반 강화: 이행기 지원), 여성(4. 여성의 경력 유지 및 성장기반 강화), 신중년(5.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참여)로 구분할 수 있음. 이들 정책 영역 중 청소년, 청년, 여성의 저출산 분야로, 노인, 신중년은 고령사회 분야로 구분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영역은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분야”,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정책 영역과는 성격이 다른 영역 구분이기 때문에 상기 정책 영역은 별도로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상기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각 분야별 예산 분류 체계 개선안을 두 가지로 제시함.
- 이는 정책 영역을 SOCX 정책 영역 범주를 준용한 개선안,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21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정책 영역(중영역) 범주를 준용한 개선안임.

〈표 4-9〉 저출산/고령사회 예산 분류 체계 개선안(1)

저출산 분야	고령사회 분야	지원방식	직접/간접
정책 영역			
보건	노인	현금	직접
		서비스	
		그외	간접
가족	보건	현금	직접
		서비스	
		그외	간접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주거	현금	직접
		서비스	
		그외	간접
실업	기타 사회영역	현금	직접
		서비스	
		그외	간접
주거	<div></div>	현금	직접
		서비스	
		그외	간접

주: 1) OECD SOCX 정책 영역 범주를 준용한 것임.

2) 세제 지원은 현금 지원으로 구분함.

자료: 저자 작성

〈표 4-10〉 저출산/고령사회 예산 분류 체계 개선안(2)

저출산 분야	고령사회 분야	지원방식	직접/간접
정책 영역 1			
근로환경(여건)	소득보장	현금	직접
		서비스	
		그외	간접
보육/돌봄	보건	현금	직접
		서비스	
		그외	간접
출산/양육/보건	돌봄	현금	직접
		서비스	
		그외	간접
	주거	현금	직접
		서비스	
		그외	간접
	기타 사회정책	현금	직접
		서비스	
		그외	간접
정책 영역 2		지원방식	직접/간접
청소년	노인	현금	직접
		서비스	
		그외	간접
청년	신증년	현금	직접
		서비스	
		그외	간접
여성		현금	직접
		서비스	
		그외	간접

주: 1) 정책 영역 1은 2021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분야 정책 영역 세부 범주를, 정책 영역 2는 2021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내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분야 정책 영역 세부 범주를 각각 준용한 것임.

2) 세제 지원은 현금 지원으로 구분함.

3) 정책 영역 2는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저출산, 고령사회 분야와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회경제적 인프라 조성 사업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현금, 서비스가 아닌 그 외의 간접 지원일 것으로 이해됨.

자료: 저자 작성

- 이러한 저출산 예산 분류 체계 개선안은 일관성 있는 구분 기준에 따라 체계적인 예산 영역 분류가 가능하고, OECD 국제 비교도 가능한 특징이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 예산 분류 체계 개선안 1안, 2안은 각 분야별 예산은 정책 영역 1, 2와 지원 방식 구분에 따른 직접, 간접 지원 방식이 엄밀하게 구분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 다만, 1안, 2안은 각각 국제 비교가 가능한 장점, 우리나라 정책 영역별 현황을 살펴보기 용이한 장점이 각각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안의 경우 OECD SOCX에 포함되는 과제와 시행계획에 포함되는 과제가 상이하여 예산 분류 체계 구축 및 적용이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2안의 경우 국제비교 적용이 불가능한 단점이 존재함.

○ 이에, 저출산, 고령사회 분야별 가족(family) 영역과 노인(old) 영역은 OECD SOCX를 준용하고, 다른 과제는 우리나라 정책 영역으로 구분하는 3안을 도출함. 다만, 가족과 노인 영역 역시 OECD SOCX와 시행계획(우리나라 사업) 간 괴리가 있을 개연성을 고려하여, 가족/노인 영역을 각각 “가족(OECD)/가족”, “노인(OECD)/노인”으로 구분함. 전자는 OECD SOCX와 우리나라 사업이 일치하는 경우를, 후자는 그렇지 않는 경우를 각각 포함하는 범주임.

〈표 4-11〉 저출산·고령사회 예산 분류 체계 개선안(3안: 1+2안 절충안)

저출산 분야	고령사회 분야	지원방식	직접/간접
정책 영역			
가족(OECD)	노인(OECD)	현금	직접
		현물, 서비스	
가족	노인	그외	간접
보건	보건	현금	직접
		현물, 서비스	
		그외	간접
주거	주거	현금	직접
		현물, 서비스	
		그외	간접
고용	고용	현금	직접
		현물, 서비스	
		그외	간접
교육	교육	현금	직접
		현물, 서비스	
		그외	간접
기타	기타	현금	직접
		현물, 서비스	
		그외	간접

자료: 저자 작성.

□ 예산 분류 체계 개선안과 합의

- 상기 분야별 예산 분류 체계는 저출산/고령사회 분야에 대한 예산 분류 기준의 모호성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직접/간접 지원 방식별 예산 규모를 더욱 명확하게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특히 3안은 정책 영역을 OECD SOCX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분야별 예산 규모에 대한 국제 비교 시 용이한 측면이 있는 동시에 정책 영역을 우리나라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5장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향후 평가 개선 방향

제5장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향후 평가 개선 방향

1. 서론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4차 기본계획)은 기존의 출산을 제고 위주의 정책(예: 출산장려금)에서 탈피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라는 비전하에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계층·세대 간 통합과 연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기본 관점을 전환하고자 함.

○ 저출산·고령화의 두 축에서 벗어나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 전체의 역량 제고와 사회 혁신을 강조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정책목표 → 거시 정책과제 → 핵심과제 → 추진과제 → 구체적인 세부 정책과제의 체계를 확립하고 있음.

○ 우선 4차 기본계획은 (1) 개인의 삶의 질 향상, (2) 성평등 및 공정한 사회, (3)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사회 혁신이라는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위 3개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4가지 거시 정책과제와 각 정책의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음.

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1) 모두가 누리는 워라밸; (2)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3)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4)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 (5) 생애 전반 성·재생산권 보장

2.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1) 소득공백 없는 노후생활보장체계; (2)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3)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4)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5)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3.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1)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 (2)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3) 여성의 경력유지 및 성장기반 강화; (4)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

4.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적응: (1)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2)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 (3) 전 국민 사회안전망 강화; (4) 지역상생 기반 구축; (5) 고령친화사회로의 도약

○ 또한 각 핵심과제별로 다수의 추진 과제와 구체적인 세부 정책과제들을 설정하고 있음.

○ 위와 같은 거시 정책과제에서 구체적 정책과제에 이르는 체계의 하나의 예는 다음과 같음.

-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 모두가 누리는 워라밸 → 일-양육 병행 가능한 노동 환경 실현 →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확산 및 육아휴직 사용 문화 정착 → 부모 모두 육

아휴직 사용시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최대 월 200-300만원까지 지원

- 따라서 4차 기본계획의 성과평가 체계 또한 위의 정책과제 추진 체계와 연계하여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첫째, 정책 평가 전반에 있어 고려해야 할 문제 및 도전에 대해 검토하고, 둘째, 이전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3차 기본계획)에 대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체계를 수정 및 보완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하며, 셋째, 이를 바탕으로 4차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성과평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하고자 할 때 요구되는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함.
- 아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주제들은 다음과 같음.
 1. 증거영향 정책(evidence-informed policy) 성과평가 체계의 확립 및 주요 고려사항
 2. 4차 기본계획의 기본 관점 전환에 대한 평가
 3. 4차 기본계획의 정책과제에 대한 증거영향 정책 성과평가의 가능성
 4. 4차 기본계획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지표의 기준
 5. 향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체계 구축의 방향

2. 증거영향 정책 성과평가 체계의 확립 및 주요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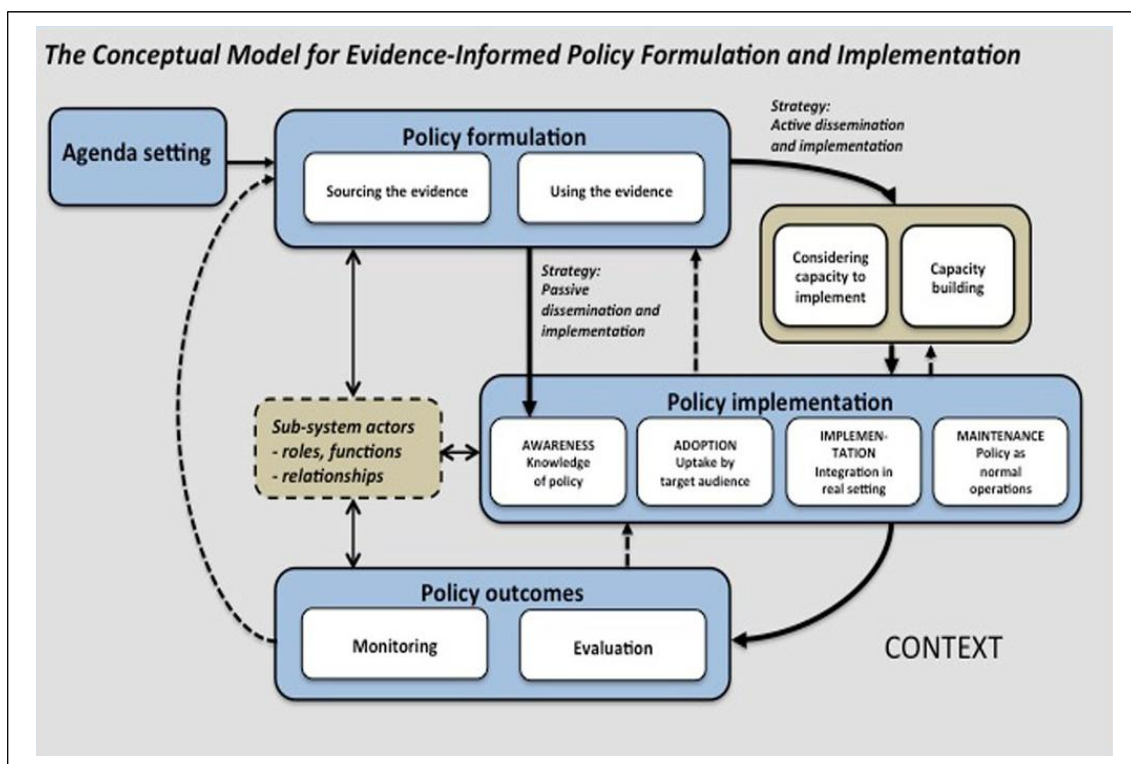
-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결정에 있어서 정책 효과에 대한 증거의 확보 및 활용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함.
- 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기존의 이데올로기나 신념에 기반한 정책(ideology- or faith-based policy) 설계에 대한 대안으로서 증거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 수립에 대한 요구가 증대해 왔음(Head, 2010).
- 증거기반 정책 성과평가 체계는 성과평가의 제도화, 성과평가의 질 향상, 성과평가 결과의 실질적 활용을 전제로 구축되어야 함.
- 증거기반 정책 성과평가 체계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정치적으로 정책 결정권자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독립적이고 투명하며 책임성(accountability)을 갖춘 성과평가 기관의 존재
 - 양질의 정보가 유통될 수 있는 토대 마련
 - 정책 성과평가 능력을 갖춘 인적 자원의 확보를 통한 정책평가 전문가 양성

- 정책 생애주기의 핵심 부분으로서 정책 성과평가 과정이 엄밀하고 체계적이며 항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체계 구축
 - 정책 결정권자가 성과평가의 결과를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공중에 공개할 수 있는 체계 구축(Lázaro, 2015)
- 그러나 신현실주의(new realism)의 시각에 따르면, 위와 같은 증거기반 정책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정책 수립 및 실행은 증거기반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연구 결과에 언제나 우선적으로 의존하지는 않음(Head, 2010).
- 증거기반 정책의 관점을 반영하여 얻어진 정책연구 결과를 정책이 실제로 실행되는 현장 조직에서 적용하는 것은 단순한 일원적 과정이 아님을 직시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현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해 지속되는 경향이 있음.
- 증거기반 정책평가의 기초를 이루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의 제반 환경 및 토대가 여전히 미약함.
 - 정책결정 과정은 증거기반 정책에 대한 요구 이외에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
 - 증거기반 정책평가의 결과가 시의성, 경제성, 정치적 실행가능성 등의 이유로 인해 정책 결정자 및 정책실행자들의 실질적 필요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 관련 정책분야 당사자들의 전문 지식(professional knowledge)이 지니는 가치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음.
 - 관련 정책이 논쟁의 여지가 크고 정치적 결정에 의지할 개연성이 클수록 그 정책이 증거에 기반하여 설계되고 실행될 가능성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증거기반 정책평가 체계의 확립과 확산을 위해서는 정책결정 및 실행과정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와 증거에 대한 정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음.
- 관련 정책의 실행자, 연구자, 정책 결정자 각각의 역할에 대한 상호이해의 중요성
 - 정치적 지식(political knowledge): 모든 이해당사자가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과 정책 수립 및 실행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킬 필요
 - 전문적·기술적 지식(professional and technological knowledge): 정책 실행자들이 실제로 정책을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례들을 축적함으로써 정책 효과성에 대한 현실주의적 이해도를 높일 필요
 - 경험적 지식(experiential knowledge): 서비스 이용자 및 정책 당사자들이 해당 정책의 이행과정에서 습득한 실질적 경험이 정책이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를 설정하는데 필수적으로 반영될 필요

- 증거기반 정책 수립의 활성화를 위한 정치적·조직적 유인책(incentive)의 제도화
 - 증거기반 정책평가 체계 확립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투자 의지
 - 정책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책 실행자 및 이해 당사자들의 위험회피(risk aversion) 경향을 탈피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책과 제도적 보호(protection)가 필수적
 - 특히 정책 성과평가의 결과가 예산 책정에 적절히 반영되는 체계 구축
 - 정책 안정성(policy stability)과 장기간에 걸친 성과평가 체계 확립
 - 하지만 많은 경우 이러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음.
 - 영국의 사례를 예를 들면, 정부 정책연구 예산의 약 60%가 정치적 혹은 행정적 수요에 부응하는 단기 프로젝트에 집중되어 있음(British Academy, 2008).
 - 따라서 증거기반 정책 성과평가 체계를 수립함에 있어 단기 성과평가뿐만 아니라 중·장기간에 걸쳐 정책과제 및 실행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증거에 기반하여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해 보임.
- 증거기반 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체계는 나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거시적인 수준에서 전략적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OECD, 2020).
-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증거기반 정책 수립 및 실행을 제약하는 요인들의 영향력은 한국의 상황에서 보다 강력할 것으로 파악됨.
- 정책 결정자들의 정치적 고려가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과제의 설정에 여전히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정책과제 설정에 있어 객관적이고 경험적 근거보다는 이론적이고 이데올로기적 근거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경향이 있음.
 - 정책 실행자 및 서비스 이용자들의 실천적 지식(practical knowledge)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재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감사원, 보건사회연구원 등이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평가 기관의 역할을 나름대로 수행해왔다고 볼 수 있으나 대체로 예산 배정 및 활용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정책평가의 내용이 서로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 증거기반 정책 수립에 대한 제도적이고 경제적인 유인책이 상대적으로 부재하고 정책과제 설정 및 실행에 대한 책임성이 적절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 하향식(top-down) 정책실행 방식이 상향식(bottom-up) 정책실행 방식을 압도하는 경향이 있음.
 - 정책시행 기관들이 서로 고립된 채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경향이 여전히 강한 편임.

- 결과적으로 한국의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증거기반 정책의 확립을 위한 제도적 토대는 여전히 취약하다고 볼 수 있음.

[그림 5-1] 증거영향 정책의 공식화 및 실행에 대한 개념적 모형



자료: Strehlenert, H., Richter-Sundberg, L., Nyström, M. E., & Hasson, H. (2015). Evidence-informed policy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a comparative case study of two national policies for improving health and social care in Sweden. *Implementation Science*, 10(1), 1-10, p. 8에서 인출한 자료를 원자료 그대로 제시하고 있음.

- 이상의 논의에 비추어볼 때,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의 성과평가 체계는 증거기반 정책의 관점을 확장하여 증거영향 정책(evidence-informed policy)의 관점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증거영향 정책은 활용가능성이 가장 높은 연구기반 증거가 정책결정에 체계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접근으로 정의할 수 있음(Oxman et al., 2009).
 - 경험적, 실증적, 양적 접근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산출된 증거의 수동적 보급에 치중하는 증거기반 정책 체계와 달리 증거영향 정책 체계는 증거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정책 설계 및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 문제들에 주목함.
- [그림 5-1]은 증거영향 정책의 관점에서 정책평가 체계를 구축하고자 할 때 고려해볼 수 있는 개념적 모형의 한 예를 제시하고 있음(Strehlenert et al., 2015).

- [그림 5-1]은 증거가 활용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와 맥락적 요인(contextual factor)에 대한 고려가 필수불가결한 차원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
 - 또한 과학적 연구에 기반하지 않은 증거들, 즉 관련 정책의 이해 당사자들의 시각 및 정책이 설계되고 실행될 때 발생하는 실질적인 문제들을 성과평가 체계에 적극적으로 포함하고자 함.
- 증거영향 정책의 관점에 근거한 정책평가 체계는 다음의 단계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Bowen and Zwi, 2005; Strehlenert et al., 2015).
- 의제 설정(agenda setting): 저출산 및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된 원인 및 향후 영향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관심은 충분히 높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적 접근에 대한 요구 또한 강하다고 볼 수 있음.
 - 정책의 공식화(policy formulation)
 - 증거 확보(sourcing the evidence): 체계적인 관련 문헌 리뷰를 통해 증거의 특질을 파악하고, 경험적 증거와 정치적·사회적 가치 간의 합의점을 도출하는 단계
 - 증거 활용(using the evidence): 증거의 과학적 근거, 비용 대비 효과, 윤리적 고려 등을 기준으로 정책 설계에 활용될 증거를 채택하고 수립된 정책의 보급 및 실행에 대한 전략을 확립하는 단계
 - 정책의 보급 및 실행 전략: 수립된 정책을 단순히 보급하는 수동적(passive) 접근을 취하거나 수립된 정책의 이해, 채택, 실행 및 유지 능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전략을 포함하는 적극적(active) 접근을 취할 수 있음.
 - 정책 실행 능력(capacity to implement policy): 정책 실행자의 이해도 수준,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 문제를 확인하는 능력, 정책실행 기관의 조직화 수준 등을 의미함.
 - 정책 실행(policy implementation)
 - 이해(awareness): 정책 실행자들의 정책 자체에 대한 이해 및 정책수립 기관과 정책 실행 기관 간의 상호이해를 뜻함.
 - 채택(adoption): 정책과제가 정책실행 기관—중앙정부 부처, 지방정부, 서비스 실행 기관 등—의 자기이해(self-interest)와 상치되는 경우에도 실행하기로 결정할 가능성을 의미
 - 실행(implementation): 정책실행 과정에 필요한 지식, 기술, 제반 조건 등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가리킴.
 - 유지(maintenance): 정책이행의 주체를 분권화하고 성과지표를 구체화하며 관련 정책에 대한 데이터 구축 및 분석 등을 통해 정책 활용이 정책실행 기관의 조직 운영에서 핵심 차원이 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뜻함.

- 정책 결과물(policy outcomes)
 - 모니터링: 관련 정책이 계획된 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상시적으로 확인
 - 평가(evaluation): 관련 정책이 목표로 삼고 있는 결과물에 인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
- 하부체계 행위자들(sub-system actors)
 -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의 당사자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중앙정부 부처, 지방정부, 서비스 실행기관, 학계, 국책연구원, 정책수혜자 등—의 역할 및 기능과 정책당사자들 간의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는 증거영향 정책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차원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이상의 단계들로 구성되는 증거영향 정책평가 체계에서 주목할 바는 다음과 같음.

- [그림 5-1]이 보여주고 있듯이 대부분의 단계들은 일방향적으로 서로 연계되는 방식을 따르기 보다는 쌍방향적이고 환류(feedback)의 방식을 따르고 있음.
- 예를 들어 정책의 보급 및 실행전략에 대한 적극적 접근은 정책실행 능력에 대한 평가 및 향상 단계와 실제 정책실행 단계 간의 환류를 강조하고 있으며, 하부체계 행위자들의 역할, 기능,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과 정책의 공식화, 정책실행, 정책의 결과물과 같은 단계들 간의 관계는 서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영향을 받기도 하는 쌍방향적인 관계로 설정되어 있음.
- 이와 같은 증거영향 정책평가 체계의 특성은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에 있어서도 의제 설정에서 정책 결과물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단계들 간 연계과정을 성과평가의 핵심적인 요소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함.

○ 따라서 4차 기본계획에 대한 성과평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논의한 증거영향 정책평가의 관점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4차 기본계획의 기본 관점 전환에 대한 평가

○ 이전까지 진행되어왔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구별되는 4차 기본계획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기본 관점의 전환에 있는 것으로 보임.

- 고령화 관련 정책목표는 이전 기본계획의 심화·확대의 양상을 보이는 반면, 저출산과 관련된 정책목표는 보다 질적인 전환을 추구하는 것으로 파악됨.
- 즉, 개인의 가족구성 및 출산 행위의 변화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들 행위의 근접 요인(proximate factor)들로 간주되는 사회적 제반 조건들의 향상 혹은 재조직화에 강조점을 두고 있음.

- 이러한 정책목표의 질적 전환은 다음과 같은 사회 및 인구변동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단기간에 급속도로 진행되어온 초저출생 추세의 지속 및 고령화 진행 속도의 가속
 - 연령별 인구구조가 생산가능인구수의 감소 및 생산연령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마름모 형태에서 역삼각형 형태로 변화하고 가구구조가 비혼 및 무자녀 가구의 증대로 다변화
 - 연령, 성차, 지역 등에 따른 불평등의 심화: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불안정 고용, 임금상승률 둔화, 성차 불평등, 교육경쟁 심화, 주거비용의 급격한 상승, 수도권 인구집중,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
 - 세대 간 상대적 사회이동성의 점진적 약화—자녀 세대의 경제적 조건에 대한 부모 세대의 경제적 조건의 예측력 증대—및 세대 간 절대적 사회이동성의 하락—부모 세대의 경제적 수준보다 자녀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낮아질 개연성 증대
 - 가족구성 및 출산에 대한 규범 및 가치추구의 재정향(reorientation)
 - 이들 근접요인들의 구조적 관성화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됨에 따라 개인의 가족구성 및 출산 행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정책들의 효과성 및 적실성에 대한 회의가 증대되어온 것으로 보임.
- 이상의 사회 및 인구변동을 고려해볼 때, 정책목표의 질적 전환은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됨(Andersson, 2008).
- 4차 기본계획은 개인의 가족구성 및 출산과 연관되어 있는 이들 근접요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초저출화 및 고령화에 대한 사회 전반의 적응력을 높이려는 시도로 파악됨.
 - 기존의 편향된 인적자본 확충 체계에서 벗어나 여성 및 고령인구의 인적 역량 활용을 통해 노동생산성의 고도화를 추구
 - 생애단계 전반에 걸쳐 돌봄의 사회화를 확대
 - 불평등의 제반 양상 중 특히 성차(gender) 불평등의 완화에 초점
- 하지만 정책목표의 질적 전환이 가지는 전반적 타당성과 시의적절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다층적이고 심층적인 평가 또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기본 관점의 질적 전환을 평가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전 기본계획과 4차 기본계획 간의 연계성에 대한 고려 부족
 - 4차 기본계획의 이전 정책들에 대한 평가에서 제시되어 있듯이, 기존 저출산 관련 정책의 핵심적인 한계 중 하나는 양육지원 정책의 불충분함과 이들 정책에 대한 잠재적 수혜자들의 낮은 체감도에 있음.

- 그림에도 불구하고 4차 기본계획에서는 이에 대한 정책적 일관성 및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 및 정책 개발이 대체로 부재하고 있음.
 - 사회구조적, 문화적 요인들에 강조점을 둠으로 인해 방향성 제시 차원에 그치는 정책과제들이 다수 존재
 - 예: 연령통합 및 생애연령 기준을 재정립한다는 추진 과제에 따른 구체적 정책과제들은 인구통계상 연령기준을 재검토하고 다양한 사회제도의 연령통합적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식의 논의 수준에 머물고 있음.
 - 각 정책목표 및 핵심과제와 가지는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모호하거나 미약한 정책과제들이 여전히 존재
 - 예: 교육 공공성 강화 및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의 중요성은 의심할 바 없었으나 이 추진 과제가 하향 평준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없이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라는 거시 정책과제 하의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이라는 핵심 정책과제, 즉 인적 자본의 확충 및 고도화와 어떻게 부합될 수 있는지 의심스러움.
 - 다수의 구체적인 세부 정책과제들이 부처의 고유사업으로 설정되어 있음으로 인해 객관적으로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움.
 - 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부와 기업 및 시민사회 간 소통 및 협업을 통한 거버넌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소영, 2020)
 - 다수의 정책과제들이 개인의 가족구성 및 출산 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되는 근접요인들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간주하는 경향으로 인해 근접요인들이 개인의 가족구성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는 정책과제들은 상대적으로 부재
- 위와 같은 고려사항에 기초해서 4차 기본계획의 정책 목표 전환에 대한 종합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한편으로 기존 핵심 정책과제 및 구체적인 정책 자체의 타당성 부족으로 인해 전환을 요구하는 경우와, 다른 한편으로 기존 정책 자체의 방향성은 타당하나 정책의 능률성에 대해서는 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여 이를 성과평가에 반영
 - 방향성 제시 차원에 그치고 있는 정책과제들의 구체화 정도를 성과평가에 반영
 - 4차 기본계획의 정책 목표 및 핵심과제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정책과제들은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요구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배제할 필요가 있음.
 - 기본관점의 질적 전환에 따른 정책목표 변화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에 근거한 정책과제 설계 및 실행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거버넌스의 향상을 성과평가에 반영
 - 4차 기본계획의 주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관점의 전환에 부응하여 기존의 단기적 성과평가 체계에 중·장기적 성과평가 체계를 통합하려는 노력이 시급해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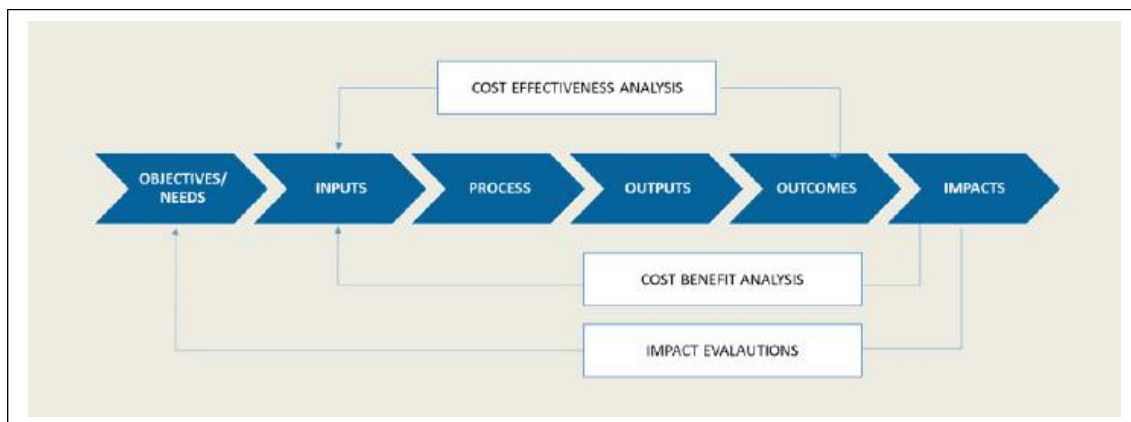
- 연간 단위의 정책목표 달성 여부 및 달성도와 그에 대한 성과평가 체계가 5개년 단위로 설정되는 기본계획의 거시 정책과제 실행에 대한 성과평가 체계와 연동될 필요가 있음.
- 정책 실행의 성숙도와 효과의 발현 속도 등을 고려하여 각 정책과제에 대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개인의 가족구성 및 출산과 그에 대한 근접요인 간의 관계를 면밀히 추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과제의 개발을 성과평가에 반영
-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이들 정책과제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때 근접요인들이 개인의 가족구성 및 출산에 즉각적 혹은 단기적인 효과를 가지느냐에 따라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임.
- 근접요인들과 개인의 가족구성 및 출산 간의 관계 양상을 장기적으로 추적하고 인과추론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자료 구축 및 공개를 주요 성과지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4. 4차 기본계획의 정책과제에 대한 증거영향 정책 성과평가의 가능성

- 이전 3차 기본계획에 대해 제안된 성과평가 체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정책목적(policy goal)에 따른 결과물(outcome)—장기간에 걸친 최종 달성 정도를 뜻하는 정책의 효과성(efficacy)—과 정책목표(policy objective)에 따른 산출물(output)—단기적인 성과 측정을 통한 정책 실행의 능률성(efficiency)—을 구분
 - 개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주로 산출물 수준에서 개발된 성과지표에 따른 목표 달성도를 평가함으로써 이루어짐.
 - 성과평가 과정은 추진과정 모니터링, 영역별 성과지표 평가, 심층평가 등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제안된 구체적인 절차는 평가지침 작성 및 추진실적 자료 요청 → 추진실적 취합 → 추진실적 검토 → 추진실적 평가 및 핵심 성과지표에 대한 정성평가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 및 확정 → 성과평가 결과 환류(feedback)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성과평가는 목표설정의 적절성, 정책의 충분성, 지표의 적절성을 기준으로 아래의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음.
 - 목표달성률 및 예산집행률 등을 통해 추진실적 평가(기초평가)
 - 시계열적 추세 분석, 달성률에 대한 정성 분석, 국제비교 분석 등을 통해 핵심 성과지표 평가
 - 종합분석 평가

- 이상과 같은 성과평가 체계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주로 실적 달성 여부 및 달성도에 대한 평가와 성과 부진 과제의 경우 부진의 근거를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음(이소영, 2020).

[그림 5-2] 정책 연쇄 주기(policy chain cycle)의 예



자료: OECD. (2020), How Can Governments Leverage Policy Evaluation to Improve Evidence Informed Policy Making?, p. 12에서 인출한 자료 원자료 그대로 제시함.

- 기존의 성과평가 체계는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의 산출물에 대한 평가 체계로서는 여러 장점이 있겠으나 정책과제 추진 체계와의 통합성은 높지 않다는 측면에서 제고가 필요함.
- 이를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기존의 성과평가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증거영향 정책평가의 관점에서 심화하고 확장할 필요가 있음.
 - [그림 5-2]는 정책 연쇄 주기(policy chain cycle)에서 정책과제의 실행에 핵심적인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음(OECD, 2020).
 - 3차 기본계획에 따른 제안된 성과평가 체계에서 이용된 용어와 중첩되는 경향은 있으나 각 요소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음.
 - 투입(input):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원(예: 인력, 예산, 시간, 기자재 등)
 - 과정(process): 정책과제 실행 활동
 - 산출물(output): 실행된 정책에 의해 일차적으로 산출된 직접적인 결과
 - 결과물(outcome): 실행된 정책이 중기에 걸쳐 산출한 결과
 - 영향(impact): 정책과제의 장기적인 성과
 - [그림 5-2]는 또한 이러한 정책 연쇄 주기에서 필수적으로 수행되는 성과평가의 종류를 제시하고 있음.
 - 비용 대비 능률성 분석(cost efficiency analysis): 투입과 산출물 간의 관계 검증
 - 비용 효과 분석(cost effectiveness analysis): 투입과 결과물 간의 관계 검증

- 비용-편익 분석(cost benefit analysis): 투입과 영향 간의 관계 검증
- 영향 평가(impact evaluation): 정책과제와 영향 간의 관계 검증

○ [그림 5-2]에 비추어 볼 때,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 실행에 대한 기존의 성과평가 체계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편될 필요가 있음.

- 산출물 평가와 결과물 및 영향 평가 간의 불일치
- 단기적인 성과 중심의 정책과제들과 중·장기 추진 정책과제들에 대한 차별적 성과평가 체계 부재
- 저출산·고령화 관련 데이터 구축 및 정책평가 모형 개발 필요
- 정책 개발 및 추진 부처들 간의 연계 활동에 대한 평가 필요
- 정책 수요자 및 이해 당사자에 대한 체계적 접근 필요

○ 산출물 평가와 결과물 및 영향 평가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는 방안의 모색

- 기존의 성과평가 체계는 산출물에 대한 평가, 즉 비용 대비 능률성 분석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일면적인 경향을 보임.
- 산출물에 대한 목표치 설정이 대체로 관련 정책과제 담당자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인해 근거 설정의 정당성 및 현실정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이소영, 2020).
- 핵심 성과지표에 대한 시계열 분석 및 국제 비교는 각 성과지표가 관련 정책과제의 산출물과 어떠한 인과관계를 가지는지 확인하기 보다는 성과지표 자체의 변동 양상을 보여주는 데 그치는 경향이 있음.
- 이러한 경향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함.
 - 3차 기본계획에 대한 성과평가에 따르면 상당수의 정책과제가 정책목표를 측정하는 연도별 목표치 달성률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하지만 3차 기본계획의 핵심 성과지표에 대한 전문가 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들 지표의 적절성과 충분성은 대체로 평균을 약간 상회하거나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이러한 경향은 고령화 관련 정책보다는 저출산 관련 정책에서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정책목표를 측정하는 산출물의 목표 달성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연계되어 있다고 간주되는 정책목적측을 측정하는 결과물과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 효과가 미약하거나 부재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함.
- 산출물의 방향성을 재설정하거나 결과물 및 영향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거나 양자를 모두 고려하여 산출물과 결과물 및 영향 간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산출물 평가를 위한 정책과제 목표치 산정의 근거가 모호하거나 부재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책과제 목표치 산정의 합리적·경험적 근거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해 보임.

○ 단기 정책과제와 중·장기 정책과제에 대한 차별적 성과평가 체계 확립

- 4차 기본계획은 한편으로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사업 중심 정책과제들과 다른 한편으로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과제들을 포함하고 있음.
- 사업 중심 정책과제들은 단기적인 성과 측정 및 평가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반면, 기반 조성 및 법령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과제들은 중·장기적으로 성과가 측정되고 평가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이를 반영하는 차별적 성과평가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 사업 중심 정책과제들의 경우, 결과물과의 연계성이 적절히 확보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연도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기반 조성 및 법령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과제들의 경우, 중·장기적 목표치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기반해서 최종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저출산·고령화 관련 행정(administrative)데이터 구축 및 공개와 이를 활용한 정책평가 모형 개발

- 4차 기본계획에 대한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저출산·고령사회와 관련된 행정데이터에 기초한 분석이 성과평가의 핵심적인 차원이어야 한다는 것임.
- 3차 기본계획에 대한 성과평가 체계에서는 산출물 중심의 성과평가—목표치 달성률—와 핵심 성과지표에 근거한 성과평가가 다소 유리된 채 이루어진 경향이 있음.
- 만약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경우 산출물과 결과물 및 영향 간의 연계 여부 및 그에 대한 인과성(causality)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해짐으로 인해 4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목적의 달성도를 가늠하기가 어려워짐.
- 따라서 위 양자 간의 관계에 대한 인과추론에 근거한 경험적 증거 축적을 성과평가 체계의 핵심적인 차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행정데이터의 구축 및 활용이 절실하다고 하겠음.
-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행정데이터의 구축 및 활용이 쉽지 않아 보임.
 - 한국은 공공데이터 공개에 있어서 세계 최상위권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행정데이터 구축을 위한 정책적 시도—데이터 3법 입법—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하지만 행정데이터의 정책연구 활용은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고 산발적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통합 체계 구축은 초보 단계에 머물고 있음(유종성 외, 2020).
 - 다수의 행정데이터가 여전히 기관별로 파편화되어 있고 이들을 통합하여 일체화하는(harmonizing) 시도는 아직 전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유종성 외, 2020).
 - 핵심 성과지표에 대한 행정데이터가 거시적인 수준, 즉 광역지자체나 국가 수준에서는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반면, 개인 혹은 가구 수준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로 접근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
- 이로 인해 그나마 이용 가능한 행정데이터를 분석한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평가 연구들이 정책과제 개발 및 향상에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겠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성과평가 기능 강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관련 행정데이터 구축, 공개, 활용 체계를 확립하는 권한과 실행력 부여
 -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정책평가 분석을 정부, 국책연구원, 학계, 민간연구기관 등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엄밀히 준수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행정데이터에 의존하는 분석과 더불어, 정책 효과의 방향성이 불분명할 경우 행정데이터와 조사(survey)데이터를 결합하여 정책수혜집단과 통제집단을 무작위로 구분하여 정책 효과를 측정하는 무작위통제실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과 같은 실험설계(experimental design)에 기반한 분석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겠음.
 - 이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과제들과 핵심 성과지표들 간의 인과관계 추론을 최대한 추구하면서 그 결과를 각 정책과제에 대한 성과평가 및 재정립에 반영
-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 개발 및 추진 부처들 간의 연계 활동에 대한 성과평가
- 4차 기본계획에서 적절히 지적하고 있듯이 다수의 정책과제들이 다른 정책과제들과 중첩되어 있음.
- 이를 반영하여 각 정책과제에 대한 성과평가는 그 과제와 다른 정책과제들이 결부되는 제도적 맥락을 고려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육아휴직 정책은 아동수당 및 아동돌봄기관 관련 정책들과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큼.
 - 육아휴직 이용률은 아동수당 증가 및 아동돌봄기관 이용과 만족도 증대에 따라 높아질 수 있음.
 - 이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을 비롯한 다양한 부처들의 협업 및 조정(cooperation and coordination)이 정책과제의 달성에 있어 매우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함.

-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연계 강화는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과제 수행의 핵심적인 차원이라 할 수 있음.
- 보편지향적 중앙정부 주도 정책과 지역특수적 지방정부 주도 정책 간의 조정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 필요불가결함.
- 따라서 정책 개발 및 추진 부처 및 기관 간,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연계 활동을 촉진하고 그에 따른 상승효과(synergy)를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 수요자 및 이해 당사자에 대한 체계적 접근 확립

- 개인 및 가구
 -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의 최종 수혜자는 개인 및 가구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각 정책이 개인 및 가구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정책의 성과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이전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관한 성과평가에서 적절히 지적했듯이 개인 및 가구의 정책 체감도 및 이용도에 대한 증거 확보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예 1: 아동수당의 적정 수준을 책정하는 기준은 지금까지 가용한 예산 규모에 초점을 맞추어 설정되어왔던 반면, 아동수당 수혜자들이 기대하는 수당의 평균적 적정 수준을 아동수당 정책의 목표치에 반영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재해 왔음.
 - 예 2: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운영시간의 확대는 여전히 국공립 어린이집의 이용자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국공립 어린이집의 양적 확대와 질적 내실화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관련 정책과제의 핵심 목표로 설정될 필요가 있음.
 - 요컨대, 잠재적 정책 수혜자로 간주될 수 있는 개인 및 가구의 정책 체감도 및 이용도를 정책과제의 목표치 설정에 현실성 있게 반영하는 정도를 정책의 성과평가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기업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상당 부분은 기업을 주요 행위자로 전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기업의 반응 양태와 수용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에 내재하고 있는 복지의 측면과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산업 및 노동 체제의 측면이 종종 상충되는 현실을 인식
 - 예 1: 남성의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법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이용도는 여전히

낮은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기업의 인력재배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고려가 관련 정책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 예 2: 직장 어린이집의 확충은 일과 보육의 불균형을 감소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기업 규모 및 역량에 따른 정책 수용도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대체로 작업장 ‘내’ 어린이집의 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유인책을 적극적으로 개발 및 활용할 필요가 있고, 이를 정책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

- 중앙 및 지방정부 정책실행 기관과 서비스 운영기관

- 앞서 논의했듯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실행 기관들은 주로 관련 정책에 배정된 예산 지출을 목표 달성치의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강함.
- 관련 정책과제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문제들에 대한 확인 및 개선과 관련 정책이 목표로 삼고 있는 대상의 정책 이용도 향상이 성과평가의 요소로 포함될 필요
- 또한 많은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들이 서비스 제공의 형태를 띠고 실행됨에 따라 정책실행의 상당 부분이 서비스 운영기관으로 위탁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는 정부 내 정책실행 기관과 서비스 운영기관 간 소통과 상호이해가 현실성 있는 정책과제 추진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뜻함.

- 다른 한편으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수요자 및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체계적 접근은 다음의 이점을 가지고 있음.

- 비록 4차 기본계획은 전국민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수요자로 상정하고 있으나 개별 정책들은 대체로 나름의 정책 수요자를 설정하고 있음.
- 이는 정책의 효과성을 인과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목표로 삼고 있는 대상을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뜻함.
- 정책의 수혜 기회와 실제 수혜 여부에 따라 4가지 집단을 구분할 수 있음(Angrist, Imbens, and Rubin, 1996).
- 항상수용집단(always-takers): 정책의 수혜 기회의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정책의 수혜를 받는 집단
- 순응집단(compliers): 정책의 수혜 기회가 주어지면 정책의 수혜를 받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수혜를 받지 않는 집단
- 절대불참집단(never-takers): 정책의 수혜 기회의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나 정책의 수혜를 받지 않는 집단

- 반항집단(defiers): 정책의 수혜 기회가 주어지면 정책의 수혜를 받지 않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수혜를 받는 집단
- 위 4가지 집단 중 정책의 수혜를 통해 정책 의도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행위 및 태도를 변화할 가능성이 가장 큰 집단, 즉 정책 수혜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집단은 순응집단임.
- 어떤 특성을 가지는 개인 및 집단을 순응집단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정책의 효과성을 검정하는 데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정책의 수정 방향을 확립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음.
- 4차 기본계획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들은 보편적 수혜의 관점에서 수립되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많은 정책들이 잠재적 정책 수요자들의 수혜자격 심사(means test)를 통해 실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특정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정책 수요자들의 체감도 및 이용도가 낮은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을 수 있음.
- 수혜 지급의 방식으로 수혜자격 심사 이외에 수혜 이전(benefit transfer)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음.
- 예를 들어, 출산지원금이나 육아기본수당의 경우 기존의 신청방식보다는 고지방식을 취하되 주민등록제도를 통한 인구동태통계시스템(civil registration and vital statistics) 자료의 이용을 통해 수혜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을 개발함으로써 이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임.

5. 4차 기본계획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지표의 기준

○ 근접요인 지표(핵심 성과지표) 체계화

- 3차 기본계획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체계에서 사업별 성과지표보다는 영역별 핵심 성과지표를 강조하는 관점은 대체로 타당해 보이며 4차 기본계획 추진 과정에서 지속될 필요가 있어 보임.
- 4차 기본계획에 대한 핵심 성과지표는 3차 기본계획에 대한 핵심 성과지표를 부분적으로 수정 및 보완함으로써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관련 정책 목표와 핵심 성과지표 간의 관련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저출산 관련 정책 목표로 제시된 출산 및 양육비 부담의 최소화를 측정하는 핵심 성과지표로 임신유지율 혹은 건강한 출산 비율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 지표가 관련 정책 목표와 가지는 관련성은 매우 불명확함.

- 대부분의 핵심 성과지표들이 산출 지표와 결과 지표로 구분되어 있는데, 각 정책영역 별로 산출 지표와 결과 지표 간의 연계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대안적으로 산출 지표와 결과 지표를 단기와 중·장기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겠음.

○ 실질적 대체 효과 측정 지표의 필요성

- 기존의 핵심 성과지표와 더불어 각 핵심 지표별로 실질적 대체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의 개발 가능성 탐색
- 현재 제시되어 있는 핵심 성과지표들은 주로 관련 정책과제의 달성도를 양적으로 측정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실질적 대체 효과 측정 지표들은 정책 목표 달성도를 질적으로 측정하는 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음.
- 예 1: 아동수당 지급액의 점진적 증가율과 함께 가구별로 전체 양육비 대비 아동수당의 비중을 측정함으로써 돌봄 및 양육의 사회적 책임 강화라는 정책과제의 달성도를 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
- 예 2: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과 함께 개인별 전체 소득 대비 국민연금 수급액을 측정함으로써 고령층에서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
- 예 3: 육아휴직율과 함께 육아휴직자 중 직장 복귀자의 비율 혹은 노동시장 재진입 비율 등을 측정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이라는 정책과제의 달성도를 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

○ 연령별 및 성별 의식 추적 지표의 필요성

- 4차 기본계획의 기본 관점 전환으로 인해 상당수의 핵심 성과지표가 중·장기 성과지표로 분류될 개연성이 커 보임.
- 즉, 이들 핵심 성과지표들에 근거한 연도별 성과평가는 관련 정책과제의 추진 양상을 정확하게 드러내기 어려울 수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저출산·고령화 관련 의식 및 태도를 정기적으로 추적하여 핵심 성과지표의 추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의식 및 태도의 추세를 파악은 주로 사회조사, 한국종합사회조사, 출산력 조사, 그리고 각종 조사 자료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이들 데이터들은 조사 시기 간의 간격이 크거나 일회성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으로 인해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의식 및 태도의 추세를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적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를 점진적으로나마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들 데이터들을 연도별로 취합하여 일체화하는 작업을 필수적으로 요구됨.

- 특히 청년층의 가족구성 및 출산 의도, 고령층의 고령사회에 대한 태도, 여성 및 남성의 일-가정 양립 및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 등을 엄밀하게 추적할 필요가 있음.
- 이들 의식 및 태도 지표의 추이를 관련 정책과제에 대한 간접적인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정책 평가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임.

6. 소결: 향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체계 구축의 방향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4차 기본계획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체계의 구축 방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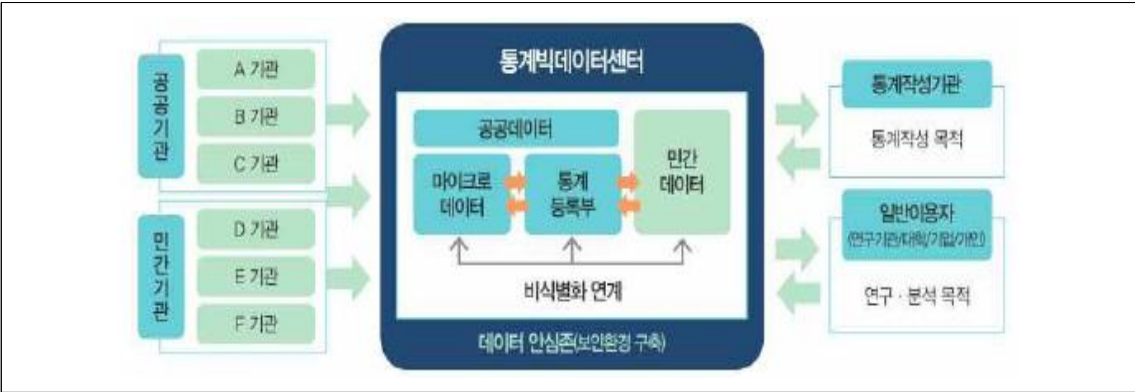
- 증거기반 정책 평가에서 나아가 증거영향 정책 평가의 관점을 채택할 필요
- 이는 정책실행 과정에 대한 보다 면밀한 이해와 정책결정권자, 정책실행자, 정책의 이해 당사자들 간의 상호작용에 보다 심도 있는 관심을 기울일 것을 의미함.
- 따라서 정책실행 과정이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들의 목표 달성에 순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향상시키는 과제를 성과평가의 주요한 요소로 포함할 필요
- 4차 기본계획의 기본 관점 전환에 따른 저출산·고령화의 근접요인에 대한 강조가 가족구성 및 출산 행위와 고령사회 적응력의 측면과 연계되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
- 증거영향 정책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산출물 중심의 성과평가 체계를 결과물에 대한 평가 체계와 유기적으로 통합
- 증거영향 정책 평가 체계의 선순환을 위한 증거 확보의 핵심적인 축으로 행정데이터의 구축 및 활용과 인과추론 모형의 적용
- 영역별 핵심 성과지표 개발의 정교화, 정책실행을 통한 실질적 대체 효과를 측정하는 대안적 질적 지표의 개발, 의식 및 태도 관련 데이터의 분석을 통한 추세 확인의 필요성

○ 증거영향 정책 평가의 관점에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체계를 확립하고자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정책평가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데 있음.

- 증거의 활용을 촉진시키거나 가로막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증거영향 정책과 현장 실행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집행력을 담보한 기구의 필요성
- 유럽 집행위원회 산하 공동연구센터(Joint Research Center at the European Commission)를 모델로 고려해볼 수 있음(OECD, 2017).
- 이들 기구는 정책 설계, 실행, 효과성 등에 대한 포괄적 리뷰 체계(comprehensive review system)를 구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 행위자들 간의 조정 및 협업을 강제하는 역할을 수행

- 이러한 기능과 더불어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평가의 컨트롤 타워는 행정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거나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기능 또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그림 5-3]이 제시하고 있는 행정데이터의 구축, 통합 및 활용을 피상적인 수준이 아닌 실질적인 수준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증거기반 정보센터(clearing house)의 수립을 고려해볼 수 있음.

[그림 5-3] 통계청 통계빅데이터센터 개념도



자료: 통계교육원. 통계청 통계빅데이터센터 개념도, http://sti.kostat.go.kr/window/2018b/main/2018_winter_16.html에서 2021. 9.30. 인출한 자료를 그대로 제시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성과평가 체계의 제도화를 통해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의 현실적합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감사원. (2021). 감사보고서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서울: 감사원.
- 강동수, 김미곤, 이소영, 이상림, 이경희, 박미선, ...권오용. (2020). 저출산에 대응한 통합적 정책방안.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개발연구원.
-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2019, 2020년도 공공임대 신혼부부 지원물량.
- 김우림(2021). 저출산 대응 사업 분석·평가.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 김은정, 이상림, 강은나, 김대중, 김종훈, 박종서, ...이지혜. (2018).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7년 모니터링.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은정, 오신휘, 장인수, 정종석, 전주열. (2020). 저출산 대응 재정지원 방안 연구: 저출산특별회계를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대한민국정부. (2005).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대한민국정부. (20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대한민국정부. (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대한민국정부. (2017).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8년도 시행계획.
- 대한민국정부. (202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
- 대한민국정부. (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대한민국정부.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 도로교통공단. (2020). 2020년판(2018년 통계),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 원주: 도로교통공단.
- 도로교통공단. (2021). 연령층별 노인 사상자[데이터파일]. http://taas.koroad.or.kr/sta/acs/exs/typical.do?menuId=WEB_KMP_OVT_UAS_ASA에서 2021. 10.6. 인출.
- 박종서, 이소영, 황남희, 장인수. (2019). 2018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서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2018). 보육통계(2017. 12월 말 기준).
- 보건복지부. (2019). 보육통계(2018년 12월 말 기준).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2017). 보육통계(2016년 12월 말 기준).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2020). 보육통계(2019년 12월 말 기준).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2021). 보육통계(2020년 12월 말 기준).
- 유종성, 전병유, 신광영, 이도훈, 최성수. (2020). 증거기반 정책연구를 위한 행정자료의 활용. 한국사회정책, 27(1), 5-37.
- 이석원, 손호성, 신재은, 김덕수, 박경량, 김난유, 고승범. (2020). 2019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서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이소영, 강은나, 백혜연, 변수정, 장인수. (2017). 2016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소영, 백혜연, 변수정, 장인수. (2018). 2017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서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소영. (2020).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변화 과정 및 현황과 저출산 대책 평가체계 분석 in 강동수, 김미곤, 이

- 소영, 이상림, 이경희, 박미선, ..., 권오용, (2020). 저출산에 대응한 통합적 정책방안(pp. 68-87).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개발연구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88호 (2017).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법률 제12449호 (2014).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3. 3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약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eDetail.do?articleId=127&listLen=10&searchKeyword=&position=M>에서 2021. 9. 30. 인출.
- 통계교육원. 통계청 통계빅데이터센터 개념도. http://sti.kostat.go.kr/window/2018b/main/2018_winter_16.html에서 2021.9.30. 인출.
- 통계청. (2019).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전국[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I2에서 2021.10.6. 인출.
- 통계청. (2020a). e-나라지표. 합계출산율.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8에서 2021.7.1. 인출.
- 통계청. (2020b). 출생아 100명당 당해연도 육아휴직자 수[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CC2019B001&conn_path=I2에서 2021.10.6. 인출.
- 통계청. (2020c). 학교급별 사교육비 총액[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E003&conn_path=I2에서 2021.10.6. 인출.
- 통계청. (2020d).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E201&conn_path=I2에서 2021.10.6. 인출.
- 통계청. (2020e). 건강수준별 기대여명[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46&conn_path=I2에서 2021.10.5. 인출.
- 통계청. (2020f). 완전생명표(1세별)[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42&conn_path=I2에서 2021.10.5. 인출.
- 통계청. (2021a). 시도/부부의 혼인종류별 혼인[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11&conn_path=I2에서 2021.10.6. 인출.
- 통계청. (2021b).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총괄[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2S&conn_path=I2에서 2021.10.6. 인출.
- 통계청. (2021c). e-나라지표.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데이터파일].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04에서 2021.10.6. 인출.
- 통계청. (2021d). 학교급별 사교육비 총액[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PE002&conn_path=I2에서 2021.10.6. 인출.
- 통계청. (2021e). 학교급 및 특성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데이터파일].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PE101&conn_path=I2에서 2021.10.6. 인출.
- 통계청. (2021f). e-나라지표. 여성 고용동향[데이터파일].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97에서 2021.10.6. 인출.
- 통계청. (2021g). e-나라지표. 고령자 고용동향[데이터파일].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96에서 2021.10.6. 인출.

- Andersson, G. (2008). A review of policies and practices related to the 'highest-low' fertility of Sweden.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89-102.
- Angrist, J. D., Imbens, G. W., & Rubin, D. B. (1996). Identification of causal effects using instrumental variable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91(434), 444-455.
- Bowen, S., & Zwi, A. B. (2005). Pathways to "evidence-informed" policy and practice: A framework for action. *PLoS Medicine*, 2(7), e166.
- British Academy. (2008). *Annual Report 2007/08*. London: The British Academy. Retrieved from <https://www.thebritishacademy.ac.uk/documents/11/Annual-Report-2007-2008.pdf> 2021.9.1.
- Head, B. W. (2010). Reconsidering evidence-based policy: Key issues and challenges. *Policy and Society*, 29(2), 77-94.
- Lázaro, B. (2015). *Comparative study on the institutionalisation of evaluation in Europe and Latin America*. Programme for Social Cohesion in Latin America,
- OECD. (2017). *Governing Better through Evidence-Informed Policy Making*. Agenda. Retrieved from <https://www.oecd.org/gov/Agenda-Governing-better-through-evidence-informed-policy-making.pdf> 2021.9.1.
- OECD. (2019). *The OECD SOCX Manual 2019 Edition. A guide to the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Retrieved from https://www.oecd.org/social/soc/SOCX_Manuel_2019.pdf. 2021.10.1.
- OECD. (2020). *How Can Governments Leverage Policy Evaluation to Improve Evidence Informed Policy Making?*. Highlights from an OECD comparative study. Paris: OECD. Retrieved from <https://www.oecd.org/gov/policy-evaluation-comparative-study-highlights.pdf> 2021. 9.1.
- OECD. *Average annual hours actually worked[datafile]*. Retrieved from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ANHRS>. 2021.10.12.
- OECD. *By age and road user[datafile]*. Retrieved from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IRTAD_CASUAL_BY_AGE. 2021.10.12.
- OECD. *Demographic References: Population age structure[datafile]*. Retrieved from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30130>. 2021.10.7.
- OECD. *Employment: Employment/population ratio, by sex and age group[datafile]*. Retrieved from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54742#>. 2021.10.12.
- OECD. *Fertility rates[datafile]*. Retrieved from <https://data.oecd.org/pop/fertility-rates.htm>. 2021.10.7.
- OECD. *Health Status: Life expectancy[datafile]*. Retrieved from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30114>. 2021.10.7.
-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by country-POVERTY[datafile]*.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66670>. 2021.10.12.
- Oxman, A. D., Lavis, J. N., Lewin, S., & Fretheim, A. (2009). SUPPORT tools for evidence-informed

health policymaking (STP) 1: What is evidence-informed policymaking?. *Health Research and Policy Systems* 7(Supplement 1): 1-7.

Strehlenert, H., Richter-Sundberg, L., Nyström, M. E., & Hasson, H. (2015). Evidence-informed policy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a comparative case study of two national policies for improving health and social care in Sweden. *Implementation Science*, 10(1), 1-10.

WHO. *Healty life expectancy(HALE) at birth(years)[datafile]*. Retrieved from <https://www.who.int/data/gho/data/indicators/indicator-details/GHO/gho-ghe-hale-healthy-life-expectancy-at-birth>. 2021.10.7.



부록. 전문가 조사 설문지

응답자 ID

--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예산 분류 및 핵심성과지표 관련 전문가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2020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예산 분류 및 핵심성과지표 관련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오직 해당 연구를 진행하는 데에만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작성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제34조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오직 연구 분석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모쪼록 시간을 내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담당자 : 장인수 부연구위원(044-287-8311)
정찬우 연구원(044-287-8298)

2021년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응답자 일반 사항

1. 전공		2. 관심 연구분야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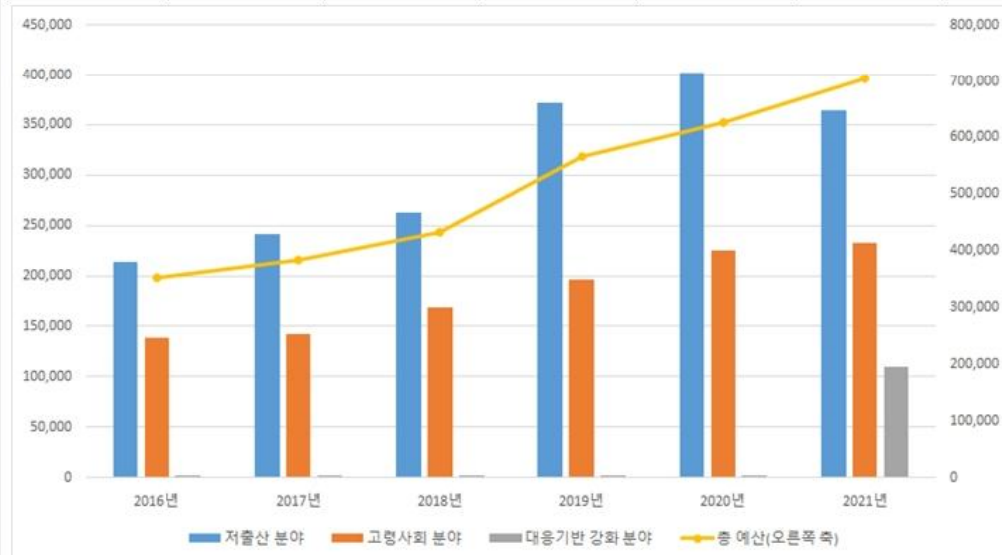
저출산/고령사회 등 분야별 예산 규모

다음에서 보실 수 있는 것과 같이, 2016~2021년 중앙정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분야별, 연도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연도별 총 예산은 지속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체적으로 저출산 분야 예산이 고령사회 분야 예산보다 많으며, 이러한 추세는 모든 기간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예산은 제3차 기본계획의 기간(2016~2020년)동안 지속 증가하였다가 4차 기본계획이 시작된 2021년 약 3.5조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저출산/고령사회 분야 예산 규모가 다소 감소한 반면, 대응기반 강화 분야의 예산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분야별, 연도별 예산 규모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저출산 분야	214,173 (60.8)	241,150 (62.8)	263,189 (61.0)	371,297 (65.5)	401,906 (64.12)	364,027 (51.59)
고령사회 분야	138,232 (39.2)	142,780 (37.2)	168,105 (39.0)	195,638 (34.5)	224,734 (35.86)	232,130 (32.90)
대응기반 강화 분야	112 (0.03)	108 (0.03)	99 (0.02)	108 (0.02)	115 (0.02)	109,446 (15.51)
총 예산	352,517 (100.0)	384,038 (100.0)	431,393 (100.0)	567,043 (100.0)	626,755 (100.0)	705,603 (100.0)



주: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20),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21)=저출산 영역,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20),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21)=고령사회 영역, 인구변화 적극 대비('20),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21)=대응기반 강화
 자료: 대한민국정부, (2017),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8년도 시행계획, p.4.; 대한민국정부, (202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 p.4.; 대한민국정부, (202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2025, p.193.

문1-1. 2016-2021년 동안의 **저출산 분야의 예산 규모**는 현재의 저출산 현상의 흐름을 상기할 때,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매우 작다	보통이다			매우 크다 →
①	②	③	④	⑤

문1-2. 2016-2021년 동안의 **고령사회 분야의 예산 규모**는 현재의 고령사회 현상의 흐름을 상기할 때,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매우 작다	보통이다			매우 크다 →
①	②	③	④	⑤

문1-3. 2021년의 **대응기반 강화 분야의 예산 규모**는 현재의 인구 구조 변화의 흐름을 상기할 때,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매우 작다	보통이다			매우 크다 →
①	②	③	④	⑤

문1-4. 상기 문1-1~1-3에서 답변해 주신 응답과 같이 생각하시는 이유와 저출산/고령사회/기타 영역의 예산 규모에 대해서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정책 예산의 분류 기준

저출산 정책 예산은 저출산 분야 정책의 다양성과 모호한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상기와 같이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에 앞서 살펴본 2021년 저출산 분야의 예산 규모를 OECD 분류에 의하여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가족지출(직접지원) 예산이 약 17.9조원이며 그 외 주거·고용·교육 등 간접지원이 약 28.7조원으로 6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때 OECD 가족 지출로 표현되는 직접지원은 가족·아동에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현금·서비스·세제지원으로 구성되며, 주거, 고용, 교육분야 예산은 간접지원으로 분류됩니다.

〈2021년 기준 OECD 분류별 중앙부처 저출산 분야 세부 예산 현황〉

(단위: 억 원, %)

구분		2021년 예산	비율
직접지원		179,399	24.7
현금		61,791	8.5
	육아휴직급여(기존+산균)	12,869	1.8
	출산휴가급여(기존+산균)	3,169	0.4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지원), 첫만남푸러미2	15,518	2.1
	...		
서비스		114,570	15.8
	아이돌봄 지원	3,956	0.5
	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 지원(공보육 50% 확충)	1,523	0.2
	...		
의료비		3,038	0.4
	임산부, 영아 건강관리	2,205	0.3
	...		
간접지원		287,446	39.5
고용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저축계좌	14,355	2.0
	...		
주거		229,833	31.6
	신혼부부, 아동 양육가구 주거 지원	80,069	11.0
	...		
교육		6,496	0.9
	교육급여	1,246	0.2
	...		
기타		8,919	1.2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3. 3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약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문2-1. 상기 OECD 분류에 의한 직/간접지원 기준 예산 구분은 저출산 분야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측면에서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매우 부적절하다	보통이다			매우 적절하다 →
①	②	③	④	⑤

문2-2. 위의 2-1에서 그렇게 응답하신 이유와 함께 저출산 분야 예산 구분을 위한 다른 기준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해 주십시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핵심성과지표 대체 지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13개 핵심성과지표를 통해 저출산고령사회 분야 정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핵심적으로 추적, 관리하여야 하는 요인을 설정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핵심성과지표가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 관리할 만한 효용성이 있는지, 또한 핵심적으로 추적할 만한 가치와 대표성을 띠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핵심성과지표 개선(안)이 2018년 연구 사례(김은정 외, 2018,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7년 모니터링,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안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핵심성과지표가 존재하지 않아 정책의 목표와 성과 측면에서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할 요인 부재 측면에서 한계점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핵심성과지표 개선(안)을 참고하여 제4차 기본계획에서 관리될 필요성이 있는 핵심성과지표를 개발하는 것은 향후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성과지표, 핵심성과지표 개선(안)〉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성과지표		기본계획 핵심성과지표 개선(안)	
성과지표	출처	성과지표	출처
신혼부부 임대주택 수혜율	국토부 행정통계	실질 청년 취업률	통계청 신규 개발 필요 (구직 포기/유보자 포함)
임신유지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조사	혼인 이행률	통계청 신규 개발 필요 (혼인건수/미혼자 인구)
청년고용률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국토부 주거실태 조사 개선 (혼인연도 항목 추가)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율	고용부 고용보험 D/B	청년 비정규직 비율	고용부 고용통계
국공립 등 민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복지부 보육정책 D/B	합계 출산율	통계청 출산 통계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	OECD 통계	출산 기타 지표	통계청 신규 개발 필요 (유배우 출산율, 조정합계출산율)
사교육비 부담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결과	보육수준 만족도	보육실태 조사 항목
노인 상대빈곤율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연령별/혼인상태별 고용률	통계청「경제활동 인구조사」 (가구 정보 항목 추가 필요)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	통계청 생명표 및 WHO 건강수명	유자녀 부모 고용률	통계청「경제활동 인구조사」 (가구 정보 항목 추가 필요)
노인교통사망률	경찰청 내부자료	노인 사고사율	통계청 사망 원인 통계
여성고용률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노인 자살율	통계청 사망 원인 통계
-	-	일반 만족도	복지부 저출산 고령화 국민의식 조사

문3. 상기 제3차 기본계획의 핵심성과지표(좌측)와 핵심성과지표 개선안(우측)을 보시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활용할 필요성이 높거나, 기존 지표보다 적합한 **대체 지표**(지표의 산식, 필요성 등)에 대한 고견을 자유롭게 제시해 주십시오.

*** 조사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응답자 ID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예산 분류 및 핵심성과지표 관련 전문가 조사(추가)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2020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예산 분류 및 핵심성과지표 관련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오직 해당 연구를 진행하는 데에만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작성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제34조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오직 연구 분석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모쪼록 시간을 내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담당자 : 장인수 부연구위원(044-287-8311)
정찬우 연구원(044-287-8298)

2021년 8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응답자 일반 사항			
1. 전공		2. 관심 연구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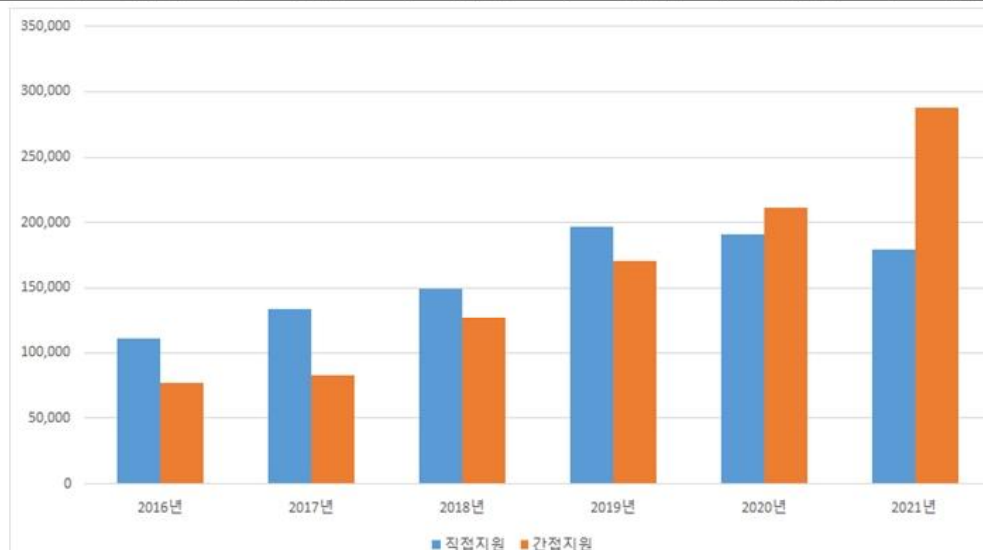
OECD 저출산 정책 예산 분류 기준 준용시 범주별 예산 규모

OECD 기준에 따라 2016~2021년 기간의 저출산 정책 예산을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직접지원 예산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 증가하였다가 2020년부터 감소한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간접지원 예산은 관측기간 동안 지속 증가하였으며, 제4차 기본계획이 시작된 2021년 크게 증가한 특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6~2019년의 기간 동안 직접지원 예산이 간접지원 예산에 비하여 컸지만, 2020년부터는 간접지원 예산이 직접지원 예산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OECD 분류 기준 저출산 분야의 직/간접 지원별 예산현황〉

(단위: 억 원, 비율)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직접지원	110,986 (59.23)	133,640 (61.8)	149,851 (54.03)	197,092 (53.52)	190,591 (47.43)	179,399 (38.4)
간접지원	76,410.5 (40.77)	82,594 (38.2)	127,495 (45.97)	171,159 (46.48)	211,213 (52.57)	287,446 (61.6)



자료: 이소영 외. (2017). 2016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이소영 외. (2018). 2017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박종서 외. (2019). 2018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이석원 외. (2020). 2019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대한민국정부. (202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0년도 시행계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1. 3. 3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자질없는 이행을 약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문1-1. 상기 **직접지원 예산의 규모 변화**는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바람직하다 →
①	②	③	④	⑤

문1-2. 상기 **간접지원 예산의 규모 변화**는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바람직하다 →
①	②	③	④	⑤

문1-3. 위의 1-1, 1-2에서 그렇게 응답하신 이유와 함께 향후 추진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개선 방향(증가, 감소가 필요한 범주)**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주시시오(‘OECD 분류별 중앙부처 저출산 분야 세부 예산 현황’
참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핵심성과지표 평가

핵심성과지표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여러 중영역, 소영역별 세부과제를 아우르는 동시에, 중요하게 관측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추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발, 제안되었습니다. 이에 2016년 저출산고령사회 성과평가부터 아래의 13개 핵심성과지표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여 핵심적인 사업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표의 경우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성장동력) 각 영역에서 본질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측면에서의 낮은 대표성을 포함하여, 측정방법의 모호성, 추적/관리의 비연속성 등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성과 지표 현황〉

성과지표	현재 (2014년)	목표 (2020년)	출처	설정근거	측정방법	관련과제
신혼부부 임대주택 수혜율	4.8%	10%	국토부 행정통계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정책효과	국민임대, 5년 10년 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신혼부부 지원 물량/연간 초혼부부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확대 신혼부부 주택자금지원 현실화
임신유지율	77.6%	82%	보사연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실태 조사	연평균 유산, 임신중절비율 두 배 이상(1.1%p) 감소 목표	유배우 부인 임신자수 - 유산, 임신중절 등 규모/15~44세 유배우 부인 임신자수 *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위험 산모 신생아 의료지원 확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 생명존중 분위기 확산
청년고용률	40.7%	48%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OECD 평균치	15~29세 청년 취업자/청년 경제활동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고용대책 노동개혁 과제 일 학습 병행 등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율	5% (2015.7)	15%	고용부 고용보험 D/B	최근 증가세, 정책효과 반영	(남성육아휴직자/전체 육아휴직자) ×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육아휴직제도 내실화 남성육아참여 문화 확산
국공립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26%	37% (2025년까지 45%)	복지부 보육정책 D/B	정책 목표치	평균 국공립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평균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맞춤형 돌봄 확대·교육개혁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	2,057시간 (2014년)	1,800 시간대	OECD 통계	OECD 평균수준 도달	연간 전체 근로시간/전체 근로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가정양립 지원·홍보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사교육비 부담	18.2조 원	17조 원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결과	매년 2천 억 이상 감소	초·중·고생 총 사교육비(명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교육 경감 공교육 정상화 능력중심사회 구현
노인 상대빈곤율	49.6%	39%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기초연금, 국민연금 성숙, 주택연금 등 역모기지 확산 효과 반영	중위소득 50%이하 노인 수/전체 노인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 1연금체계 구축 기초연금 내실화 퇴직·개인연금 활성화 주택·농지연금 활성화 노후준비 여건 조성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	8.4년 (2012년)	7.5년	통계청 생명표 및 WHO 건강수명	건강수명 증가추세, 정책효과 등 반영	0세에서의 기대수명-건강수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 신체활동 증진 고령자 질병예방·관리강화 노인의료·돌봄 체계 내실화 장기요양보험제도 고도화 치매에 대한 체계적 대응
노인교통사망률	28.4명	20명	경찰청 내부자료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수 총량 감소 수준 설정	65세 이상 교통사고 사망자수/ 65세 이상 인구수 × 10만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운전자 안전 강화 고령보행자 안전 환경 조성

여성고용률	55.4%	62%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OECD 평균 수준 도달	15~64세 여성고용률	◦여성 재취업지원 ◦시간선택제 일자리, 유연근로 활성화 등
고령자 고용률	65.6%	70%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매년 1%p 증가 목표	고령자 취업자/ 고령자(55~64세) 인구	◦정년제도 개선 ◦고령자 재취업 지원 과제 전환
고령친화산업 비중	5.4% (2013년)	10%	연구기관 발표자료, 신규 통계 생산 필요	일본 수준 목표	실버산업 관련 총 생산/GDP	◦고령친화산업 생태계 조성 ◦유망 산업·서비스 육성 ◦R&D 종합지원체계 구축

자료: 대한민국정부(2015). 2016~2020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p.44.

문2-1. 상기 13개 핵심성과지표는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성장동력)의 각 영역별 목표의 대표성 측면에서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바람직하다 →
①	②	③	④	⑤

문2-2. 상기 13개 핵심성과지표는 측정방법의 효율성, 간편성 측면에서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바람직하다 →
①	②	③	④	⑤

문2-3. 상기 13개 핵심성과지표는 지속적인 추적 관리의 가능성 측면에서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바람직하다 →
①	②	③	④	⑤

*** 조사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